지역 2.0 연구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

(152–83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120(구로동 26–1)
Tel. **02-760-4842** Fax. **02-760-4589** **www.karaa.kr**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발간된 책자입니다.

지역 2.0 연구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지역2.0연구

2013. 04

연구주관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책임연구원 : 오 양 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 흥 재 (추계예술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윤 성 진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조연구원 : 박 연 진 (추계예술대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과정)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지역 2.0’ 연구

연구 개요

제 1 장 서 론
제 2 장 1기 지역협력형사업 내역 및 외국 사례
제 3 장 현행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와 개편 방향
제 4 장 ‘지역 2.0’ 계획의 환경과 전략
제 5 장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지역 2.0’ 계획
제 6 장 결 론

제 1 장 서 론

○ 2009년 지역협력형사업을 시행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의 해소, 새 정부 공약사항인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개선, 그리고 「아르코 비전 2020」이 설정한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2.0' 계획(2014~2018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계획)을 연구하게 되었음.

○ 이번 '지역 2.0' 계획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성장과 고유성이 분출하는 지역문화의 생성,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과 경쟁력 강화, 예술위·지역 간, 지역 상호간 교류·협력 및 유대 강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 또한 지역의 예산 및 사업 재량권 부여로 예술위·지역 간 상생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1기 성과를 바탕으로 한 2기('지역 2.0')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지원사업 틀 재구축 등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 2.0' 계획의 환경과 전략방안, 사업, 재정, 인력, 운영체계를 다루고 있으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의 도출을 목표로 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외에 각종 회의와 워크숍 개최 및 참관,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대상 1~2차 설문조사, 1~2차 전문가 심층면접(FGI), 각종 외부 토론회와 세미나 참관 등 다양한 유형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음.

제 2 장 1기 지역협력형사업 내역 및 외국 사례

○ 17개 광역시·도 중 현재 12개 시·도에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북 등 5개 시·도가 미 설립 지역임.

○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1998년 10월 강릉문화재단의 설립을 필두로 하여 2013년 1월을 시점으로 39개의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
-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이 12개로 가장 많고 서울·강원이 각 5개, 경남 4개, 대구 3개, 충남·전북·전남 각 2개, 인천·울산·충북·경북이 각 1개씩 설립되어 있음.
- 최근 충남 당진군 등 상당수 지자체가 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음.

○ 오늘날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역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 '98년 1개, '99년 1개, 2001년 3개, '03년 1개, '04년 4개, '05년 3개, '06년 4개, '07년 3개, '08년 7개, '09년 8개, '10년 4개, '11년 5개, '12년 5개, '13년 1개가 설립되었으며,
- 특히 2004년 이후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지역협력형사업의 기금예산(배분액)은 '09년 18,300백만 원, '10년 19,300백만 원, '11년 16,600백만 원, '12년 및 '13년은 17,900백만 원임.

2012~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단위사업별 기금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새(세)부사업	2012년	2013년	증감	비고
• 지역문예활동지원	9,890	9,890	–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으로 통합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7,390	–		
– 시·도기획지원	1,100	–		
– 우리가락 우리마당지원	700	–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700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010	8,010	–	
계	17,900	17,900		

○ 2013년도 시·도별 기금배분 기준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의 12.5%를 서울시에 배분한 후,
– 서울 외 시·도는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 배분기준 개선안을 적용했고,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역시 한지협 배분기준 개선안을 적용함.

○ 지방비 매칭 비율은 특성화지원사업의 경우, '12년 기준 재정자립도 70% 이상인 지역(서울/인천)은 의무매칭을 1:2 이상으로, 그리고 70% 미만인 지역은 1:1 이상으로 함.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50:50으로, 비수도권은 70:30으로 함.

○ NEA의 지역협력형사업은 Challenge America라는 전국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예술에 대한 접근성 증진, 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예술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공과 민간 등 지역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실시한 혁신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장려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지방정부의 협력은 지역예술위원회를 위한 통합적인 틀로서 창조적인 경제, 건강한 지역사회, 활기찬 마을, 청소년 참여 확대라는 선결과제를 제시함.
– 목표 및 전략은 예술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가치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삶의 질적 향상에 예술의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

○ 일본은 1980년대 들어서 "지방의 시대·문화의 시대" 경향에 따라 지방문화와 지역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 과거 중앙정부가 결정한 획일적인 기준 아래에서의 지역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파손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 경제의 발전과 맞물려 이전 시대에서 간과되어 왔던 삶의 질의 가치, 개별 자치단체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식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음.
– 2001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본법'(Fundamental Law for the Promotion Culture and Arts)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제의 제도가 강조되었으며,

- 다양한 이해관계자(행정, 시민, 기업, NPO) 간 협력을 통한 지방문화 발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과 도시 간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인재 육성, 시스템 형성, 공공 공간 만들기 등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제 3 장 현행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와 개편 방향

○ 제3장 1, 2절에서는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 구성, 기금배분 기준과 매칭 시스템, 지역의 기획·추진 역량, 사업운영체계와 네트워크, 지역문화협력관제, 사업실적 평가·환류체계에 대한 평가에 이어,
- 3절에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및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 4절에서는 앞서의 사업 평가와 1~2차 설문조사, 그리고 워크숍, 1~2차 FGI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과 지원프로세스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종합하고, 제3장의 소결론으로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 2.0' 시대 '지역문화 특화사업'(현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 방향으로 제시된 내용은,
- 첫째, 지역 맞춤형 지원 설계와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문화기획 역량의 강화와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함.
  - 지역문화 특화(고유성 계발)사업과 지역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범주별로 제시한 후, 지역이 이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예산(진흥기금 및 지역매칭액)을 자율적으로 배정·시행하는 방안
  - 지역의 사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계획기간(2014~2018) 중에 시·도 대상의 공개경쟁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점차 그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방안

- 둘째, 사업 구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시·도별 기금배분도 새 정부의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2.0' 시대의 '지역문화 특화사업' 시행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해야 함.
  - 기금배분 기준이 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사업 형태의 개편과 함께 일원화 하는 방안
  - 현행 기금배분 기준 중 시·도별 인구수는 편차('13년 20.7배 차이)가 너무 심하므로, 인구수를 등급화 하여 인구수가 매우 적은 시·도의 기금 배정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려하는 방안
  - 시·도 매칭의 경우 재정자립도, 수도권 여부에 따라 매칭비율을 달리 했으나, 수도권의 불만을 받아들여 이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1:1 이상'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 셋째, 장기적으로 예술위원회 전체 사업을 지역협력형으로 재구조화하여 지역문화예술 지원 영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야 하며, 평가 및 환류체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함.
  - 현재와 같은 1년 단위 예산제도 하에서는 차기연도 예산 확보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업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위와 지역문화재단 간 3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예산 확보를 보장하는 방안

• 매년 평가결과가 상/중/하 그룹으로 고정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평가항목으로 전년 대비 '개선도'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주체를 예술위원회로 변경하여 평가 과정 및 사후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 넷째,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직, 수평적 교류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활동을 장려해 나가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국제문화교류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과 함께 지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협력관 제도의 확대 개편, 한지협의 법인화 방안
• 예술위원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협력체계의 효율적 관리 및 총괄기능, 지역문화 특화사업(지역협력형사업) 및 문화복지 모니터링 및 전달체계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다섯째, 지역 예술인(단체)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생태계 강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사업별 지원을 넘어 창작인력, 매개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지원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예술단체 지원이 그 핵심으로, 현재와 같은 분절화 된 지원구조(따라서 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에 동시에 지원 신청해야 하는 구조)를 개편하여 통합지원 하는 방안
• 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과 함께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분담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하며, 국가단위(예술위)에서는 국가대표 직업적 전문예술단체 육성, 광역단위(17개 시·도)에서는 지역단위 전문 예술활동 지원, 기초단위(시·군·구)에서는 풀뿌리 예술활동(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 지역의 매개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예술위원회 내에 설치한 별도 기구에서 지역의 예술행정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존 인력의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방안

제 4 장 '지역 2.0' 계획의 환경과 전략

○ 전환기 지역 환경은 수요측면에서 창조성 넘치는 환경, 문화자원 발굴과 활용 전략, 지역변화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일상화가 중요함.
- 공급측면에서는 지역개성 발휘, 지역문화 부가가치 제고, 인문사회 문화콘텐츠 발굴과 활용, 문화예술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육성·보호·조성이 늘 것임.

○ 앞으로는 그 동안 축적된 보편적 문화소비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사회에 맞는 생활 속 문화정책을 펼치고, 중앙의지와 차별화된 지역중심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가 지역 내에 보다 직접적으로 가시화 될 것임.
-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유지를 위해 지역 내 크리에이티브 리더들의 양성이 중요함.

○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방향 전환에 맞는 새로운 전략 구축이 필요함.

지역문화경영 평가와 향후 전략

	지난 20년 성과	향후 예상 방향
정책형태	지원, 육성, 보호, 조성	• 자율성장
전략방향	지역발전 지역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연관성	• 문화예술의 고유가치, 소통가치
주체와 이해관계자 (인간)	행정 중심적 관심 있는 소수를 위한 프로관계자의 활동	• NPO, 주민 중심적 • 모두를 위한 • 프로튜어(proteur) 및 모두의 활동
공간의 수준 (공간)	특정 예술 공간 오프라인 중심 문화영토의 권역 내 국한	• 생활공간 어디에서나 • 온라인 병행 • 문화영토의 광역화, 글로벌화
시간의 배치 (시간)	복고에 의한 정체성 확보 유행성 이벤트	• 미래지향적 보편성 확보 • 중기 안정적 문화자산화

○ 지역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예술위원회가 할 일

- 첫째,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문화단체, 행정체계, 문화교육 기관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를 구축하고, 위원회가 네트워크 관련자들에게 심층 서비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줌.
- 둘째, 분권사회형 지역문화 개성발휘를 위한 문화 활동력(돈, 인력, 정보)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재정을 발굴 확보하고, 미래수요에 맞춰 주력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조리더를 육성하여 지역에 내보내고, 온라인 디지털 문화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각종 콘텐츠 DB, 정보력을 제고함.
- 셋째, 지역문화력 제고 공진화 플랫폼(co－evolution platform) 구축을 위해 문화 관련단체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사회관계자본(social capital) 증진으로 품격 높은 문화사회로 가도록 지역문화 '소비자의 생산자화 역량'을 제고시킴.
- 넷째, 지역별 글로벌문화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정책으로 기초단체의 글로벌 문화활동과 우리 문화영토 세계화 정책을 위원회가 개발하여, 개별 지역들이 글로벌리더의 노드(node)로 활동케 함.
- 다섯째,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실험' 장르에 대해 재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이 도전하도록 글로벌 트렌드 문화사업을 지역에 소개하여 지역화 가능한 사업 매개역할을 담당함.

○ '지역 2.0'의 핵심전략 : '지역 2.0'에서는 새 환경변화와 수요, 위원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방식과는 다른 논리로 접근해야 함.

- 첫째, 사업은 영역 재구조화에 따라 지역개성사업,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함.
- 둘째, 재정은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재정 기조에서 중기 재원계획과 매칭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함.
- 셋째, 인력은 문화행정 거버넌스를 위한 자립성장형 인력을 확보하는 기조로 지역문화력과 창조력, 기획역량인력을 키움.
- 넷째, 운영체계는 네트워크 기반의 자율운영체계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 지역사업 운영체계의 자율과 재량권 강화, 한지협 사무국과 지역문화협력컨설턴트 및 성과평가체계 및 환류 개선이 중요함.

전략 개편의 논리 구조

분야	논리	중점 전략
사업	영역의 재구조화	•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 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정	역할 분담에 따른 공동재정	• 수요 규모 추정 및 중기 재원 계획 • 기금 배분 방식 및 매칭 시스템 개혁 방안
인력	자립성장형 인력확보	• 지역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 방안 • 지역의 기획·추진 역량 강화 방안
운영	네트워크기반의 자율운영체계	• 외부네트워크: 예술위원회, 사도, 지역문화재단간 역할분담 • 지역사업 운영체계: 자율과 재량권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 • 조직 및 기능 개편: 한지협 사무국, 지역문화협력관제 등 • 성과평가체계 및 환류

제 5 장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지역 2.0' 계획

제 1 절 '지역 2.0' 시대의 사업

○ '지역 2.0' 시대 사업개편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5대 기본전략과 11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기본전략 및 추진전략은 '지역2.0'시대의 환경과 전략을 기본 전제로 하여 마련하였으며,

- 16개 시·도 대상 설문조사와 예술인들에 대한 인터뷰,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음.

○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특화사업이 지역협력형사업의 대표사업으로 기존의 육성지원, 레지던스, 상주사업, 기획지원사업을 특화사업과 상주사업으로 크게 구분하고,

- 지역의 기획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고유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특화사업 기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영역을 3대 사업목표에 따라 8개의 사업분야로 범주화하여 예시하였으며,

- 이중에서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은 100% 기금을 지원하는 공모경쟁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분야는 지역매칭에 따른 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성을 강화함.
- 또한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 및 시상제도 운영과 특화사업 전시·워크숍 개최, 국가대표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예술위-지역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함.

특화사업 목표	특화사업 분야	특화사업의 내용	사업 예시
Ⅰ. 예술창작활성화 및 지역예술창작 역량 강화	1. 창조예술인 육성사업	지역예술창작역량강화 · 신진예술가육성지원 · 지역 및 국제간 교류 활성화 관련사업	• 지역문화창조여건 개선사업 (예술인·예술단체 국제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 • 청년 예술가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 전문예술가 ·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2. 창조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역예술창작 지원 및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	• 우수 창작레퍼토리 지원사업 • 신진예술가 실험예술활동 지원사업 • 장르 및 기술융합형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Ⅱ. 예술의 사회적 기여 및 지역문화 생태계 강화	3. 창조문화공간 사업	지역 문화시설·문화공간 활성화 관련 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지역문화 특화공간 개발사업 • 지역특화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4. 창조문화도시 사업	도시문화재생·공동체회복·커뮤니티아트·문화마을·공공예술 관련사업	• 문화예술 거버넌스 지원사업 • 원도심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커뮤니티아트 지원사업 등
	5. 창조문화인재 양성 사업	지역문화기획전문가육성·문화기업·예술교육 관련 사업	• 지역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사업 • 2030 미래 예술가 양성 지원사업 (청소년대상) • 지역창조문화기업 육성 및 컨설팅사업 등
	6. 창조문화마케팅 지원사업	지역예술축제·문화유통·문화관광 관련사업	• 지역문화유통 지원사업 • 지역문화마케팅 지원사업 • 지역예술축제 지원사업 등
	7. 창조시민 문화 활동 지원사업	시민예술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관련사업	• 예술창조사회 지원사업 (시민예술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오픈스튜디오 지원사업 (아티스트와 시민들의 만남 지원) • 시민·동아리 중심의 시민예술축제 지원사업 등
Ⅲ. 지역창조문화 브랜드 육성 및 강화	8. 지역창조문화 브랜드 사업	지역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육성사업	• 다문화·산학예 연계형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 농산어촌 고유자원을 소재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 지역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기획 브랜드 사업 • 기타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등

○ 공연장 상주사업은 ‘지역2.0’ 중기계획이 적용되는 2018년까지 ‘지역문화 특화사업’과는 분리하여 추진하되 사업을 소폭확대로 제한하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2년 지속사업을 2차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년간의 지원을 받은 공연단체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상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교류협력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2.0' 중기계획이 추진되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지역특화 문화사업과는 별도로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예산의 3~5% 범위 내에서 공모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교류협력형 사업을 지역매칭 사업으로 추진함.

- 교류협력형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워크숍 활성화, 지역-국제 간의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함.

○ 지역문화 특화사업 - 공연장 상주사업 - 교류협력형사업을 구분하여 '지역 2.0' 중기계획 추진기간 동안의 문화재정 2.0%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예산에 맞춰 연차별 예산 분배 계획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함.

(단위 : 백만원)

지역협력형 사업 구분		사업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17년 및 '18년	
		연차별 기금지원목표액	29,600	100%	44,600	100%	69,400	100%	89,300	100%
지역 특화 문화 사업	지역특화사업 합계		19,240	65.0%	32,112	72.0%	53,091	76.5%	73,226	82.0%
	지역특화사업 A (지역매칭) (사업목표 Ⅰ, Ⅱ 해당)		17,316	58.5%	25,690	57.6%	37,164	53.6%	51,258	57.4%
	지역특화사업 B (비매칭) (사업목표 Ⅲ. 지역창조문화브랜드 강화사업)		1,924 (특화사업의 10%)	6.5%	6,422 (특화사업의 20%)	14.4%	15,927 (특화사업의 30%)	22.9%	21,968 (특화사업의 30%)	24.6%
교류협력형사업 (지역매칭 / 한시사업)			1,480	5.0%	1,784	4.0%	2,429	3.5%	2,679	3.0%
공연장 상주사업			8,880	30.0%	10,704	24.0%	13,880	20.0%	13,395	15.0%

제 2 절 '지역 2.0' 시대의 재정

○ 재정부문에서는 먼저 지역문예진흥 기금배분의 연혁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 본 후, 앞으로의 '지역문화 특화사업' 수요 규모를 추정해 보고 중기 재원계획을 다루고 있음.

- 16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대상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 상태에서의 기금 수요 규모는 최소 29,252백만 원으로, 300억 원 정도의 기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그러나 이는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구도 하에서의 기금 수요로서, 2014년 이후 각 지역의 고유성 계발을 통한 지역문화의 진흥 발전을 목표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금 배분액이 대폭 증가하는 '문화재정 2%' 시대, '지역 2.0' 시대에는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재정법」에 의거 작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에 의하면,

- 지역협력형사업(‘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지원 규모를 ’14년 실천계획 29,740백만 원(중기사업계획 296억 원), ’15년 43,019백만 원(446억 원), ’16년 62,227백만 원(694억 원), ’17년 90,011백만 원(893억 원) 규모로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불투명한 문예진흥기금 수지 전망과 적립금 감소 추세로 볼 때, ‘지역문화 특화사업’ 지원 규모의 대폭적인 확충은,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국고 보조나 복권기금 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2013년 지역협력형사업의 시·도별 기금배분 기준과 2014년 이후 ‘지역 2.0’ 시대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배분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2013년 및 2014년 이후 기금배분 기준 비교

배분 기준	2013년 반영비율(%)		‘지역 2.0’ 반영비율(%)*
	특성화지원	상주단체육성	일원화
시 · 도 ‘성과평가결과’ (11년 지역협력형사업 시 · 도별 평가 결과 반영)	20	20	20
시 · 도 ‘인구 수’(2011년 말 주민등록 기준)	30	–	40
시 · 도 ‘공연장 수’	–	10	–
시 · 도 ‘공연예술 단체수’	–	30	–
시 · 도 ‘재정의존도’ (2012년 당초 예산 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산출)	30	20	20
시 · 도 ‘매칭정도’ (2012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시 · 도의 매칭률)	20	20	20
계	100	100	100

* 위 표의 ‘지역 2.0’ 반영비율은 2014년에 적용 예정인 비율로, 2015년 이후에는 ‘성과평가 결과’ 반영 강화 등 그 비율이 변할 수 있음. ‘성과평가 결과’와 ‘인구수’의 경우 5개 등급의 가중치를 두고 있음.

○ ‘지역 2.0’ 기준에 의한 시·도별 기금배분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시·도별 배정 비율에 변화는 있으나 2014년도에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296억 원이 확보될 경우 절대액이 감소하는 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비율과 ‘지역 2.0’ 비율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와 평균편차(mean deviation)를 계산해 본 결과, 각각 2.83→1.73, 1.72→1.46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시·도의 배분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서 평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역공약으로서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문화공약으로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그리고 문화분야 공약 실천계획 중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것임.

제 3 절 '지역 2.0' 시대의 인력

○ 지역의 예술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창조인재의 양성이 중요하게 대두될 '지역 2.0'시대의 핵심 문화창조인력을 양성함.
- 생애주기별 창작지원을 통한 지역 예술창조역량의 지속발전 지원
- 전문예술인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대표 예술단체(예술인) 육성사업
- 장르 복합형, 장르 및 기술 융합형 창작활동 지원 강화
- 시민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한 예술창조역량의 토대구축

○ 생애주기별 창작지원을 통한 지역 예술창조역량의 지속발전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 신진예술가 발굴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컨설팅 둘째, 지역 중견예술가 대표예술인화를 위한 정보DB구축 및 맞춤형 창작지원 셋째, 지역 원로예술인과 신진예술가 매칭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예술전통의 계승 및 세대 간 협력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전문예술인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대표 예술단체(예술인)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전문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 컨설팅, 창작 워크숍 지원사업을 펼치고 둘째, 국내외 전문예술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하며 셋째, 전문예술단체의 법인화 및 행정운영 매뉴얼 구축 및 보급을 지원함.

○ 장르 복합형, 장르 및 기술 융합형 창작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타 장르 이해를 위한 예술인의 타 장르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둘째, 기술 융합형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타 문화예술지원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며 셋째, 우수 융합형 창작활동 사례집 발행 및 교육워크숍을 추진함.

○ 시민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한 예술창조역량의 토대구축을 위해서는, 수용자 계층의 창작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예술동아리 및 시민아티스트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상주사업과 레지던스 사업의 시민연계형,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과 추진을 장려함.

○ 지역의 기획 ·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예술위 차원의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기획 역량강화 교육·워크숍을 추진함.
- 일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코칭을 전제로 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과 내용을 다각화, 현실화하며 국제교류활동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선진 문화예술지원사례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의 해외연수를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 상호 컨설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소통채널을 마련함.

○ 지역문화지원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예술단체의 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예술단체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앙 차원에서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임.

제 4 절 '지역 2.0' 시대의 운영체계

○ 외부 네트워크(예술위,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 역할분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정책 및 정책수단의 동원과 배분에 대해 수시로 조정하여 정책맥락성을 유지하여 자치단체나 하위기관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의 관계는 장려사업에 대하여 협의하고 중장기계획을 확립하고, 문화재단 수행 위원회사업을 정확히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함.
- 기초자치단체 위원회 사업운영에 컨설팅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수행 성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지역사업 운영체계는 자율과 재량권 강화로 개편함. 문예진흥기금 사업 및 운영 체제는 새 정부정책의지에 맞춰 '창작지원', '지역협력', '문화나눔'의 세 가지 축으로 재편함.
- 지역 문화기획 자율성 확대와 문화기획 역량 강화를 병행하며, bottom-up방식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설계방식을 바꿈.
- 또한, 지역 및 단체의 기획역량,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수평적 협력활동의 하나로 국내외 문화교류 · 협력활동을 확대함.

○ 조직 및 기능 가운데 한지협은 지역사업의 품질제고 컨설팅, 위원회 정책 지지 및 신념체계 확산, 지역 내 문화정책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에 대한 객관적 지원 역할에 중점을 둠.
- 이를 위해 '지역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협력형사업 및 문화복지 모니터링 및 전달체계 관리를 통해 신뢰기반의 조정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뉴 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구축하고, 한지협은 법인화하고 외연을 확대함.
- 지역문화협력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고 위원회 나주 이전에 맞춰 전국단위로 숫자를 확대함.

○ 평가 주체를 한지협에서 예술위원회로 변경하여 평가결과를 인센티브로 확실하게 연계활용하고, 평가대상과 사업유형을 지역 또는 사업(배분형과 경쟁형)별로 재정리함.

제 6 장 결 론

○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분야 공약실천계획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 지역문화정책을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2.0' 시대의 사업, 재정, 인력과 운영체계는 중기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
- 먼저 사업부문에서는 사업 수행 상의 재량권과 예산편성 상의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고유성

을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 재정부문에서는 지역문화의 균등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금배분 기준을 설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각 지역 간에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 인력부문에서는 지역의 예술인, 지역 주민의 창조역량 계발뿐 아니라 시·도 문화분야 종사자 및 지역문화재단 직원 등 매개인력의 사업 기획·추진 역량의 계발에도 중점을 둬야 함.
- 또한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 효율화, 예술위/한지협/협력관 조직 및 기능의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등을 통해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지역 2.0'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재정을 대폭 늘리는 일로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17개 시·도와 12개 지역문화재단이 울력하여,
- 공약 실천계획 및 문예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대로 '지역문화 특화사업'을 위한 지역 배당 문예진흥기금이 2017년에는 900억 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국고, 복권기금 출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목차〉

005 **연구 개요**

025 **제 1 장** 서 론

02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02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031 **제 2 장** 1기 지역협력형사업 내역 및 외국 사례

033 제1절 시·도별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034 1. 광역지역 문화재단 현황
037 2. 기초지역 문화재단 현황

039 제2절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실적, 현황 및 계획
039 1. 2009~2011년까지의 지역협력형사업 실적
050 2. 2012년도 지역협력형사업 내역(현황)
054 3.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계획

059 제3절 중앙-지역 간 재정·문화협력 외국 사례
059 1. 미국 NEA와 지역예술기구의 협력
063 2. 영국 ACE와 지역예술위원회의 협력
066 3. 일본의 문화행정체계

073 **제 3 장** 현행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와 개편 방향

075 제1절 사업, 재원 및 역량에 대한 평가
075 1. 지역협력형사업 구성의 적정성
081 2. 기금 배분 기준 및 매칭 시스템
084 3. 지역·선정단체의 기획·추진 역량

085 제2절 지원체계, 협력관제, 성과체계 평가
085 1.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086 2.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 진단
088 3. 사업실적 성과평가 및 환류

091 제3절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1차 및 2차 설문 결과 분석
091 1. 1차 설문 결과 분석
107 2. 2차 설문 결과 분석

109 제4절 문제점 종합 및 개편 방향 제안
109 1. 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110 2. 지원프로세스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112 3.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방향

115 **제 4 장** '지역 2.0' 계획의 환경과 전략

117 제 1 절 지역문화 환경과 전망
117 1. 환경변화와 전망
119 2. 지난 성과와 미래 예상
121 3. 재원
122 4. 위원회 지역이전과 지역밀착화
122 5. 지역 문화정책의 미래

123 제 2 절 '지역 2.0'의 목표와 방향
123 1. 목표
123 2. 지역 문화경영의 새로운 방향
123 3. 지역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가 할 일

125 제 3 절 '지역 2.0'의 핵심 전략
125 1. 사업 : 영역의 재구조화
127 2. 인력 : 자립성장형 인력 확보
128 3. 재정 : 역할분담에 따른 공동재정

131 **제 5 장**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지역 2.0' 계획

133 제 1 절 '지역 2.0' 시대의 사업
133 1. '지역 2.0' 시대 사업개편을 위한 기본전략
137 2.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특화사업
148 3. 지역–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50 제 2 절 '지역 2.0' 시대의 재정
150 1. 지역문예진흥기금 배분 연혁
153 2. 수요 규모 추정 및 중기 재원 계획
156 3. '지역 2.0' 시대의 기금배분 기준
159 4. '지역 2.0' 기준에 의한 사·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164 제 3 절 '지역 2.0' 시대의 인력
164 1. 지역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 방안
167 2. 지역의 기획·추진 역량 강화 방안

169 제 4 절 '지역 2.0' 시대의 운영체계
169 1. 외부 네트워크 : 예술위원회, 사·도, 지역문화재단 간 역할분담
170 2. 지역사업 운영체계 : 자율과 재량권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
171 3. 조직 및 기능 개편
174 4. '지역 2.0' 시대의 평가와 환류체계 개편

177 **제 6 장** 결 론

181 **참고문헌**

185 **부록**

187 ‘지역 2.0’ 연구 경과
193 ‘지역 2.0’ 1차 설문조사서 문항
197 ‘지역 2.0’ 2차 설문조사서 문항
199 ‘지역 2.0’ 1차 설문 결과
224 ‘지역 2.0’ 2차 설문 결과
232 ‘지역 2.0’ 워크숍 발제문(박영정) Ⅰ
236 ‘지역 2.0’ 워크숍 발제문(안이영노) Ⅱ
239 ‘지역 2.0’ 워크숍 발제문(이무용) Ⅲ
244 ‘지역 2.0’ FGI(전문가심층면접) 1차 회의록
249 ‘지역 2.0’ FGI(전문가심층면접) 2차 회의록

〈표목차〉

034 〈표-1〉 광역지역문화재단 현황 1
035 〈표-2〉 광역지역문화재단 현황 2
036 〈표-3〉 광역지역문화재단 현황 3
038 〈표-4〉 기초지역 문화재단 현황
039 〈표-5〉 연도별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2009~2012년)
040 〈표-6〉 지역협력형사업 기금배분 기준 (2009년~2013년)
044 〈표-7〉 지역별 기금배분 내역(안) (2009년~2013년)
044 〈표-8〉 지방비 매칭기준 및 규모 (2009년~2013년)
052 〈표-9〉 '12년 사도 사업별 기금 배분 내역
053 〈표-10〉 '12년 사도별 지방비 기본 (의무) 매칭
058 〈표-11〉 '13년 사도별 지방비 기본 (의무) 매칭
062 〈표-12〉 NEA 조직구조 및 인력현황
068 〈표-13〉 일본 문화청 문화비
071 〈표-14〉 주요국가 문화예술진흥기구 지역협력형사업
077 〈표-15〉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각 사업의 지역별 지원수혜단체 수 비교
080 〈표-16〉 2012년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의 신청건수와 지원건수, 선정률 비교
081 〈표-17〉 2011~2013년 예술위 지원사업 중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비중
083 〈표-18〉 2010~2012년 연차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지역별 매칭율 비교
087 〈표-19〉 지역문화협력관 활동현황
090 〈표-20〉 2009~2011년 지역협력사업 종합평가 결과비교
109 〈표-21〉 지역협력형 지원 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110 〈표-22〉 지역협력형 지원 사업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17 〈표-23〉 사회문화 환경 변화와 지역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118 〈표-24〉 지역문화 정책 대응과 전망
120 〈표-25〉 지역의 문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예상되는 방향
120 〈표-26〉 문화중심의 지역경영 성과와 향후 예상
121 〈표-27〉 추진전략의 성과와 향후 방향
125 〈표-28〉 전략개편의 논리 구조
151 〈표-29〉 2006~08년 '지역배분형'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사도별 기금배분 현황
153 〈표-30〉 2009~13년 지역협력형사업 서울/지방/수도권 기금배분 현황
153 〈표-31〉 문화재단 2차 설문 결과에 따른 기금 수요 추정
154 〈표-32〉 2008~2012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부문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
155 〈표-33〉 2010~2016 문예진흥기금 수지 전망
156 〈표-34〉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소요 산출근거
156 〈표-35〉 2013년 및 2014년 이후 기금배분 기준 비교
157 〈표-36〉 성과평가 결과 '12~'13년 가중치 및 '14년 가중치(안)
158 〈표-37〉 시·도 인구수별 등급화 및 가중치(안)

159 〈표-38〉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Ⅰ(시·도 '성과평가 결과' 20%)
160 〈표-39〉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Ⅱ (시·도 인구수 40%)
160 〈표-40〉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Ⅲ (시·도 재정의존도 20%)
161 〈표-41〉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Ⅳ (시·도 매칭정도 20%)
161 〈표-42〉 2013년 기준 대비 '지역 2.0' 기준 시·도별 배정액 비교
163 〈표-43〉 2014~2018년 사·도별 배정액 전망

〈그림목차〉

048 〈그림-1〉 시·도별 연간 기금규모 추이 (2009년~2011년)
049 〈그림-2〉 지역협력형사업 기금매칭 3개년 추이 (2009년~2011년)
061 〈그림-3〉 미국 문화예술진흥체계
065 〈그림-4〉 영국 문화예술진흥체계
067 〈그림-5〉 일본 문화청의 조직구조
069 〈그림-6〉 예술문화진흥기금의 흐름
089 〈그림-7〉 2010~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프로세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지역협력형사업'이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앙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의무 매칭) 혹은 기금(의무 매칭 초과분)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1999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역배분형 문예진흥사업을 2009년 지역협력형사업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4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공연단체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 시·도 및 문화재단은 공연장 및 공연단체의 여건, 예산 전용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평가가 다수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의 정치계와 상위 행정기관에 의한 배분형 사업화 내지 관례적 지원 등으로 인해 당초의 지역문화 특성화 전략사업으로서의 의의가 퇴색
- 사업 틀이 1+4의 단순구조로 고착돼 있어, 지역예술인 발굴·육성과 해외연수 지원, 지역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직원의 기획역량 강화 등 지역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 틀의 고착화로 인해 각 지역이 지닌 문화적 여건을 신축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 기금예산의 낭비, 사업성과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 지침의 경직화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이 재량적 자율권을 갖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원활하고 성과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자체가 지역협력형사업에 지방비를 우선적으로 매칭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 증가, 지역협력형사업 의존도 심화로 지역 고유사업 기반 약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지역공약으로서의 지역균형 발전, 문화공약으로서의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보다 크게 기여하기 위해 1기 지역협력형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 지역균형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하므로 지역균형·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하여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 추진,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개편, 행정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 등을 공약
- 문화공약 지방문화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 심화, 예술 창조인력의 수도권 집중, 지역기반 창작활동 여건 미흡 등을 문제로 보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재원 총량의 확대를 공약
- 추진과제는 지역문화예술 지원 재원의 확충,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브랜드) 사업 개발 지원, 지역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한지협 법인화, 지역문화협력관 제도 확대) 등임.

○ 「아르코 비전 2020」이 설정한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전략목표, 전략과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기 지역협력형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
- 미션 :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
- 비전 :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 핵심가치 : 3대 핵심가치 'Creativity', 'Share', 'Responsibility'
- 전략목표 : 3대 전략목표 중 '예술현장의 창조역량 강화'
- 전략과제 : 10대 전략과제 중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 실행과제 : 28대 실행과제 중 '지역 특성화사업 활성화' 및 '지역협력체계 강화'

2. 연구의 목적

○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성장과 고유성이 분출하는 지역문화 생성에 기여

○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예술위·지역 간, 지역 상호 간 교류·협력 강화로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 지역의 예산 및 사업 재량권 부여로 예술위·지역 간 상생적 지원체계 구축

○ '지역협력형사업' 중심의 1기(2009~201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기(2014~2018년, '지역 2.0')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지역문예진흥 지원사업 틀 재구축
- 미래 환경 변화와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문화예술사업 개발, 지역 고유브랜드 문화예술사업의 개발을 통한 현행 지역협력형사업의 질적 전환
- 기금배분 기준의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촉진,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권 및 세부지침 제정권 등 자율성 확대 방안, 성과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등 마련
- 예술위원회의 나주혁신도시로 이전에 따른 지역문화협력관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등 사업관리·운영체계 확대 강화 방안, 지역 문화인력의 역량 개발 방안 마련 등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의 도출을 목표로 함.
- 1기 지역협력형사업의 내역 및 외국 사례
- 현행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와 개편 방향
- 시·도 및 1차, 2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지역 2.0' 계획의 환경과 전략 방안
- '지역 2.0' 시대의 사업, 재정, 인력, 운영체계 등

2. 연구 방법

○ '지역 2.0' 연구를 위해 문헌자료 참고 외에 다음과 같은 많은 유형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의 '부록' 해당부분을 참고하기 바람.

○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 2012.9.27.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TF 1차 전체회의, 예술가의집
- 2012.10.4. '지역 2.0' 1차 연구진모임, 추계예술대 이흥재 교수 연구실
- 2012.10.11. 한지협 정책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예술가의집
- 2012.11.6. 예술위원회/한지협/연구진 1차 합동회의, 예술가의집
- 2012.12.17. 중간 보고회 및 검토, 위원회 대회의실
- 2013.2.26. 예술위원회/한지협/연구진 2차 합동회의, 예술가의집
- 2013.3.12.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TF 2차 전체회의, 예술가의집
- 2013.3.15. 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 보고, 예술가의집

○ 워크숍 개최 및 참가
- 2012.10.22.~23.한지협 16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제2차 워크숍 참가, 제주
- 2012.11.26. 제천 상주단체관련 워크숍 발제 (공동연구원 윤성진)
- 2012.12.21. '지역 2.0' 워크숍, 위원회 세미나실
- 2013.1.9. 예술위원회/한지협/연구진 내부 워크숍, 대학로 토즈

○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대상 설문조사
- 2012.11.15.~11.28. 지역문화재단 '지역 2.0' 관련 1차 설문지 취합
- 2012.12.26.~2013.1.4. 지역문화재단 '지역 2.0' 관련 2차 설문지 취합

○ 전문가 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시행
- 2013.1.16. FGI 1차, 예술가의집
- 2013.1.17. FGI 2차, 예술가의집

○ 각종 외부 토론회·세미나 참관
- 2012.10.24. 지역문화재단연합 '차기정부 정책' 토론 참관, 국회 의정원 101호
- 2012.10.30. 「2012년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지역문화창조포럼 참관, 대전
- 2012.10.31. 「2012년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지역문화창조포럼 참관, 광주
- 2012.11.5. 「2012년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지역문화창조포럼 참관, 부산
- 2013.1.18.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문화정책 세미나 참관, 서울시 신청사

제 2 장
1기 지역협력형사업 내역 및 외국 사례

제 1 절 시·도별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1. 광역지역 문화재단 현황
2. 기초지역 문화재단 현황

제 2 절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실적, 현황 및 계획
1. 2009~2012년까지의 지역협력형사업 실적
2. 2012년도 지역협력형사업 내역(현황)
3.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계획

제 3 절 중앙-지역 간 재정·문화협력 외국 사례
1. 미국 NEA와 지역예술기구의 협력
2. 영국 ACE와 지역예술위원회의 협력
3. 일본의 문화행정체계

제1절 시·도별 지역문화재단 설립 현황

○ 2013년 1월 현재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은 광역 12개, 기초 39개 등 총 51개가 설립, 운영되고 있음.

- 17개 광역 지역 중 아직 문화재단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충남 등 5개 지역으로 기초의 경우 최근 서울 영등포구, 충남 당진군 등 상당수 지자체가 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음.

○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을 시작으로 '98년 1개, '99년 1개, 2001년 3개, '03년 1개, '04년 4개, '05년 3개, '06 년 4개, '07년 3개, '08년 7개, '09년 8개, '10년 4개, '11년 5개, '12년 5개, '13년 1개가 설립되었으며, 특히 '04년 이후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 지자체 문화재단들의 총 기금 규모는 4,370억 원이며, 광역지자체 문화재단의 평균 기금 규모는 평균 348억 원 수준임.

- 지역문화재단의 총 '11년 연간 예산액은 광역문화재단 2,130억 원, 기초문화재단 1,953억 원으로 1개소 당 평균 예산액은 광역 178억 원, 기초 59억 원임.
- 지역문화재단의 총 종사인력은 광역 622명, 기초 1,524명으로 1개소 당 평균 인력 수는 광역 52명, 기초 46명 수준임.

○ 광역단위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재단으로서 문화예술사업 뿐 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 초기 사업 구조는 예술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소액다건 위주의 지역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 현재는 지역문화 정책개발, 문화예술진흥지원, 문화예술교육사업, 문화나눔사업 및 문화 시설 운영 및 문화재 발굴 등 다양한 영역의 지역문화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음.

1. 광역지역 문화재단 현황

〈표-1〉 광역지역문화재단 현황 1 (2013.2.21 기준)[1)]

구분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설립일(등기기준)	2004.3.15	2009.1.21	2009.4.16	2004.12.10
최초출연금(억원)	500	113.5	185	396
기금규모(억원)	1,275	224	187	513
이사장(현직위)	김정헌	허남식(부산광역시장)	김범일(대구광역시장)	송영길(인천광역시장)
대표이사	조선희	남송우	김정길	강 광
조직현황	1위원회 1실 4본부 12팀	2실1센터7팀	1처4부1위원회	2본부6팀 1문학관1위탁기관
인력현황	118	44	28	55
설치조례	서울특별시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	부산문화재단설립및 운영지원조례	대구광역시문화재단 설립및운영조례	인천광역시문화재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지자체보조	189	108.9	61	86
국고(기금등)	79	90.3	61	32
자체자금	161	11.6	17	62
기타	45	0.5	4	0
예산현황(계)	474	211.3	143	180
주요사업	· 문화네트워크촉진, 교류활성화 · 예술창작활성화 · 시민창의력개발 · 생활속문화복지 증진 · 문화도시브랜딩 제고 · 문화공간활성화	·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 학예이론도서발간 지원사업 · 부산메세나 촉진사업	· 문화예술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지원 · 대구문화 브랜드 개발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류사업 · 지역축제 · 공연산업	· 문화예술기금지원사업 · 문화예술정책연구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교류사업 · 한국근대문학관 운영 · 아트플랫폼 운영 · 고려강화역사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	12	9	8	16
교육사업	5	8	3	6
시설사업	15	1	1	2
기타사업	11	23	9	27
사업현황(계)	43	41	21	51
사무실(연면적)	자체(2367.41㎡) 외 16 개 공간	문화재단(489.23㎡) 역사관(85.56㎡) 예술교육센터(112.76㎡)	임대(668㎡)	무상임대(177.7㎡)

1) 광역지역문화재단 현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3년 2월에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표-2〉 광역지역문화재단 현황 2 (2013.2.21 기준)

구분	광주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설립일(등기기준)	2010.12.29	2009.9.24	1997.7.3	1999.12.28
최초출연금(억원)	82	89.3	250	52.3
기금규모(억원)	85	108.5	1,220	207.5
이사장(현직위)	강운태(광주광역시장)	염홍철(대전광역시장)	김문수(경기도지사)	신종인
대표이사	노성대	박상언	엄기영	-
조직현황	1처4실12개팀 1센터1문화관	1처6팀	1처(2실)1원(2실) 6관(6실8팀)1단(2팀)	1처3실1연구소
인력현황	75	26	174	48
설치조례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대전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
지자체보조	103	51	242	62.6
국고(기금등)	59	25	20	55.7
자체자금	9	4	137	53.1
기타	0	4	0	0
예산현황(계)	171	84	399	171.4
주요사업	· 문화예술정책개발사업 · 문화예술기금지원사업 · 문화관광진흥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 · 문화예술교류사업 · 축제행사 · 빛고을시민문화관 운용 및 지원사업	· 문화예술창작 학술진흥 · 문화예술인복지지원 · 문화예술사업평가, 컨설팅 · 창작예술 인큐베이터 · 문화지도 제작 및 문화바우처 · 문화예술지표 수요조사	· 문화예술진흥사업 · 도립 박물관, 미술관 운영 · 문화유산발굴 및 보존	· 문화예술진흥사업 · 강원국악예술회관 위탁관리 · 강원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사업	13	13	5	6
교육사업	8	12	1	1
시설사업	2	3	8	0
기타사업	37	14	4	2
사업현황(계)	60	42	18	9
사무실(연면적)	자체(1,057㎡)	임대(446㎡)	자체(1061.4㎡)	임대(640㎡)

〈표-3〉 광역지역문화재단 현황 3 (2013.2.21 기준)

구분	충북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	경남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설립일(등기기준)	2011.11.30	2009.5.29	2010.2.18	2001.1.20
최초출연금(억원)	181	113.5	115	47.1
기금규모(억원)	200	113	150	141
이사장(현직위)	이시종(충청북도지사)	박준영(전라남도지사)	홍준표(경상남도지사)	양영흠(이사장)
대표이사	강형기	–	전정효	–
조직현황	1처3팀	3팀1소1센터	1처4팀	1처3팀
인력현황	18	19	22	23
설치조례	충북문화재단 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전라남도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	경남문화재단 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및육성조례
지자체보조	41.5	38	32	33
국고(기금등)	25.7	34	64	17
자체자금	6.5	13	6	19
기타	199	0	0	0
예산현황(계)	272.7	85	102	69
주요사업	· 문화예술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사업 ·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 도 주요사업 위탁 · 전통예술보급 및 육성 ·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 ·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 · 문화관광상품개발	· 문화예술정책개발 · 문화예술창작활동지원 · 문화향수 제고사업 ·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산업 육성지원 · 전통문화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 문화예술정책개발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지원 · 사랑티켓 및 문화바우처사업 · 문화예술교육사업 · 국제교류사업 · 문화재연구소운영
지원사업	8	4	8	6
교육사업	1	4	4	10
시설사업	1	0	1	0
기타사업	10	4	10	12
사업현황(계)	20	12	23	28
사무실(연면적)	임대(94.5㎡)	임대(342㎡)	임대(235㎡)	자체(786.72㎡)

2. 기초지역 문화재단 현황

○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1998년 10월 16일 강릉문화재단의 설립을 필두로 하여 2012년 3월을 시점으로 39개의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 지역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이 12개로 가장 많고 서울강원이 각 5개, 경남 4개, 대구 3개, 충남·전북·전남 각 2개, 인천·울산·충북·경북이 각 1개씩 설립되어 있음.

○ 기초지역 문화재단들은 지역문화 시설운영을 주로 하고 있으나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강릉문화재단, 춘천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및 성남문화재단 등의 경우에는 지역문화 브랜드 육성과 생활문화 진흥사업 추진을 통해 차별화된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산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부천문화재단 등의 경우에 전문적인 공연예술축제를 수년간 실행하였고, 강릉문화예술재단,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춘천시문화재단은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존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의 창작물이 지역문화와 결합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음.

○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통해 인지도 있는 고급 예술이나 대중문화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공연장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고비용이 드는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를 직접 제작하거나 타 공연장과 공동 분담하여 제작하는 경우 또한 늘어나고 있음.

○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화의 주체이자 문화의 생산자, 생활예술가로서 인식하고 활동하게 된 것도 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성과임.

-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의 비전을 실천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문화예술 네트워크로 사업으로서, 2006년 12월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사랑방 문화 클럽의 발전방향과 세부전략을 3개년(2007~2009년) 계획으로 제시하였음.
- '사랑방문화클럽'은 지역 주민이 문화 브랜드임을 강조하면서 주민 문화동아리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브랜드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선도적 사례가 되고 있으며 현재 172개 문화동아리에서 시민 4천여 명이 활동 중임.

○ '사랑방 문화클럽'은 문화화폐인 '성남문화 통화'를 통해 문화예술 품앗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회원들의 예술적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문화공헌 프로젝트'를 꾸준히 실천하는 등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문화 활동주체로 활동하는 선도적인 시민문화모델을 만들었음.

-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간과 프로그램 중심의 우수지역 문화브랜드 사업들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사업이 문화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한 '2012년 지역·전통문화브랜드' 대상에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이, 우수상에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이 각각 선정되었음.

〈표-4〉 기초지역 문화재단 현황 (2013.1.14 기준)[2)]

지역	구분	설립년도	최초출연금 (억원)	설치조례
서울 (5)	중구문화재단	2004.08.11	41	서울특별시 중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로문화재단	2007.07.24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포문화재단	2007.09.12	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문화재단	2008.10.30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북문화재단	2012.07.31	0.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 (3)	대구광역시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2008.08.29	0.5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수성문화재단	2010.06.28	14.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문화재단	2011.05.17	25	대구광역시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인천	부평구문화재단	2006.12.04	0.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	고래문화재단	2012.03.13	1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경기 (12)	부천문화재단	2001.10.01	0.01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조례
	고양문화재단	2004.01.15	0.1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문화재단	2005.10.13	0.1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문화재단	2006.06.14	7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안산문화재단	2006.11.03	0.1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정부예술의전당	2007.06.13	0.1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화성시문화재단	2008.08.01	11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양문화예술재단	2009.02.26	21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용인문화재단	2011.07.15	0.1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문화재단	2012.01.01	127.9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오산문화재단	2012.07.13	17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군포문화재단	2013.01.04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 (5)	강릉문화재단	1998.10.16	20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 지원 조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2008.09.01	6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춘천시문화재단	2008.12.11	86.1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인제군문화재단	2009.08.19	9	인제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주문화재단	2010.12.03	10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1.12.12	1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충남 (2)	아산문화재단	2008.10.13	2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천안문화재단	2012.02.09	3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 (2)	전주문화재단	2005.12.28	0.5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익산문화재단	2009.06.11	8.8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남 (2)	목포문화재단	2006.06.09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영암문화재단	2011.07.01	1.35	영암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북	경주문화재단	2009.01.16	0.5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경남 (4)	거제시문화예술재단	2003.10.21	11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해문화재단	2005.07.01	90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문화재단	2008.02.20	0.5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사천문화재단	2011.10.28	3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계	51개		581.26	

2) 기초지역문화재단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2013년 1월에 조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제2절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실적, 현황 및 계획

1. 2009~2012년까지의 지역협력형사업 실적

1) '09~'12년 지역협력형사업 실적

〈표-5〉 2009~2012년 연도별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3)]

연도	사업실적 (단위: 백만 원)		
2009	사업명		문예진흥사업예산
	지역문예진흥기금지원 (지역문예진흥지원)		4,800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5,000
	지역협력 사업지원	사·도기획지원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5,000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3,500
	계		18,300
2010	사업명 (세부사업)		문예진흥사업예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4,00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6,8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8,500
	계		19,300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은 2010년 신규사업임		
2011	사업명 (세부사업)		문예진흥사업예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5,800
		사도기획지원	3,500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5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6,800
	계		16,600
2012	사업명 (세부사업)		문예진흥사업예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7,390
		사도기획지원	1,100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700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7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8,010
	계		17,900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으로 통합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참조

2) '09~'13년 지역협력형사업(지역문화예술지원) 기금배분 기준

○ '09년도에는 지역문화예술지원(지역문예진흥기금지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지역협력사업지원[① 시·도기획지원(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②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차등배분 되었음.

○ '10년 사업이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①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②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③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재편성됨.

○ '10년과 '11년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 향유자인 시·도민의 지원금 수요측면, 창작자인 예술가의 지원금 수요측면, 매칭부담자로서의 시·도의 재정여건측면을 고려하여 배분기준을 정함.

○ '12년부터 지역문화예술의 균형과 성장이라는 이원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형사업(지역문예활동지원)과 특화형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차별화된 기금배분 원칙 적용함.

〈표-6〉 2009-2013년 지역협력형사업 기금배분 기준

<table>
<tr><th>년도</th><th>배분기준 및 비율</th></tr>
<tr><td>2009</td><td>
[지역문화예술지원(지역문예진흥기금지원)]
- 15개 지역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균등지원보다는 문예진흥 의지와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투자 장려 및 바람직한 지원체계 성과를 유도함.
-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5개 등급으로 등급마다 1개, 2개, 4개, 4개 4개로 나누어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함.('08년도 기준과 동일, '06년 3등급 → '07년 5등급으로 확대하였음.)
<table>
<tr><th colspan="2">평가기준</th><th colspan="2">등급별 지급계획</th></tr>
<tr><th>평가요소</th><th>비중</th><th>등급 및 지원 금액</th><th>격차비율</th></tr>
<tr><td>문화예술진흥의지
(인구일인당 문예진흥기금사업비 편성수준)</td><td>15%</td><td rowspan="5">1개 처 : 400백만원
2개 처 : 360백만원(90%)
4개 처 : 330백만원(83%)
4개 처 : 310백만원(78%)
4개 처 : 280백만원(70%)</td><td rowspan="5">등급 간
5-10% 차등</td></tr>
<tr><td>지원목표에 따른 선별지원 의지
(지원사업 건당 지원금 평균액)</td><td>15%</td></tr>
<tr><td>지원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지원심의제도 포함)</td><td>40%</td></tr>
<tr><td>지원사업의 평가체계와 평가결과</td><td>30%</td></tr>
<tr><td>계</td><td>100%</td></tr>
</table>
(단위: 백만 원)
<table>
<tr><th>예산항목</th><th>예산액</th><th>사용처 및 비고</th></tr>
<tr><td>자치단체 경상보조</td><td>4,800</td><td>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td></tr>
</table>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단위: 백만 원)
<table>
<tr><th>예산항목</th><th>예산액</th><th>사용처 및 비고</th></tr>
<tr><td>자치단체경상보조</td><td>5,000</td><td>· 서울 : 15억
· 15개 사도: 각 1억~4억6천만원</td></tr>
</table>
</td></tr>
</table>

년도	배분기준 및 비율

[시·도기획지원(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 서울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35억 지원. 서울 외 15개 시·도는 기획 혹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여 1억 원씩 균등 지원함.

(단위: 백만 원)

예산항목	예산액	사용처 및 비고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	· 서울 : 35억 · 15개 시·도 : 15억원(각 1억원씩)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단위: 백만 원)

예산항목	예산액	사용처 및 비고
자치단체경상보조	3,500	· 서울 : 21억 · 15개 시·도: 각 5천만원~1억5천만원

2010

년도	2009년 ➔	2010년
사업명	1. 지역문화예술지원 (지역문예진흥지원)	1.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①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10년 신규) ②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09년 시·도기획지원 및 지역문화예술특화지원 통폐합) ③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09년 지역문화예술지원 및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통폐합)
	2. 지역협력사업지원 ① 시·도기획지원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 ② 공연예술단체육성지원	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육성지원포함)
	3.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단위: %, 백만 원)

배분기준			중앙문예진흥기금배분		
			비율		금액
성과평가 측면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	시·도 '성과평가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별 평가)	20		3,856
기금수요 측면	문화예술수요자 (창조자)	시·도 '인구 수' (2008년말 주민등록 기준)	28 (35)	80 (100)	5,405
	문화예술공급자 (창조자)	시·도 '예술인 수' (2009.8.1 기준 예총 및 민예총의 회원수)	20 (25)		3,861
		시·도 '문예활동 건수' (2008년 문예연감 현황)	8 (10)		1,544
		소계	28 (35)		5,405
	합계		56 (70)		10,810
기금공급 측면	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	시·도 '재정의존도' (2009년 당초 예산 기준 시·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	20 (25)		3,861
		시·도 '중앙문예진흥기금매칭정도' (2009년 중앙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시·도 매칭률)	4(5)		773
	합계		24 (30)		4,634
총계			100		19,300

<table>
<tr><th>년도</th><th>배분기준 및 비율</th></tr>
<tr><td>2011</td><td>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rowspan="2">지역</th><th colspan="3" rowspan="2">배분기준</th><th colspan="2">중앙문예진흥기금배분</th></tr>
<tr><th colspan="2">비율 (%)</th><th>금액</th></tr>
<tr><td>서울</td><td colspan="3">2010년 서울 배분액(4749백만 원)–
{2011년 예산 감소분(2700백만 원)×80%}</td><td colspan="2">–</td><td>2,589</td></tr>
<tr><td rowspan="8">지방</td><td>성과평가 측면</td><td>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td><td>사·도 '성과평가 결과'
(09년 지역협력형사업 사·도별평가결과 반영)</td><td colspan="2">20</td><td>2,780</td></tr>
<tr><td rowspan="5">기금수요 측면</td><td>문화예술수요자 (향유자)</td><td>사·도 '인구수'
(2009년 말 주민등록 기준)</td><td>25</td><td rowspan="6">80</td><td>3,475</td></tr>
<tr><td rowspan="2">문화예술공급자 (창조자)</td><td>사·도 '예술인 수'
(2010.8.1 기준 예총 및 민예총의 회원수)</td><td>10</td><td>1,390</td></tr>
<tr><td>사·도 '문예활동 건수'
(2009년 문예연감 현황)</td><td>5</td><td>695</td></tr>
<tr><td>문예활동활성화 정도</td><td>사·도 '문예활동 활성화지수'
(=문예활동지수÷인구 수)</td><td>5</td><td>695</td></tr>
<tr><td colspan="2">소계</td><td>45</td><td>6,255</td></tr>
<tr><td rowspan="3">기금공급 측면</td><td rowspan="3">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 노력</td><td>사·도 '재정의존도'
(2010년 당초 예산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산출)</td><td>30</td><td>4,170</td></tr>
<tr><td>사·도 '매칭 정도'
(2010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도의 매칭률)</td><td>5</td><td>695</td></tr>
<tr><td colspan="2">소계</td><td>35</td><td>4,865</td></tr>
<tr><td colspan="3">계</td><td colspan="2">100</td><td>13,900*</td></tr>
</table>
* 2010년 서울 이외 지방 배분액 14,011백만 원 중 지역문화협력관 발굴지원을 위한 우선 확보분 111백만 원을 감한 금액임.
</td></tr>
<tr><td>2012</td><td>
*지역문화예술의 균형과 성장이라는 이원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기초형사업(지역문예활동지원)과 특화형사업(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차별화된 기금배분원칙 적용함.

[지역문예활동지원 : 서울 제외]
예산의 16% 서울 배분 후, 서울 외 사·도는 아래 배분기준 적용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colspan="3">배분기준</th><th colspan="2">반영비율(%)</th></tr>
<tr><td>성과평가 측면</td><td>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td><td>사·도 '성과평가 결과'
(10년 지역협력형사업 사·도별 평가 결과 반영)</td><td colspan="2">20</td></tr>
<tr><td rowspan="7">기금수요 측면</td><td>문화예술수요자 (향유자)</td><td>사·도 '인구 수'
(2010년 말 주민등록 기준)</td><td>25</td><td rowspan="6">80</td></tr>
<tr><td rowspan="2">문화예술공급자 (창조자)</td><td>사·도'예술인 수'(2011 기준 예총 및 민예총의 회원 수)</td><td>10</td></tr>
<tr><td>사·도 '문예활동 건수' (2010년 문예연감 현황)</td><td>5</td></tr>
<tr><td>문예활동활성화 정도</td><td>사·도 문예활동 활성화 지수
(=문예활동 건수÷인구 수)</td><td>5</td></tr>
<tr><td colspan="2">소계</td><td>45</td></tr>
<tr><td rowspan="3">기금공급 측면</td><td rowspan="3">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td><td>사·도 '재정의존도'
(2011년 당초 예산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td><td>30</td></tr>
<tr><td>사·도 '매칭 정도'
(2011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도의 매칭률)</td><td>5</td></tr>
<tr><td colspan="2">소계</td><td>35</td></tr>
<tr><td colspan="3">계</td><td colspan="2">10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년도</th><th>배분기준 및 비율</th></tr>
<tr><td>2013</td><td>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울 포함]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colspan="3">배분기준</th><th colspan="2">반영비율(%)</th></tr>
<tr><td>성과평가 측면</td><td>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td><td>시·도 ‘성과평가 결과’
(10년 지역협력형사업 시·도별 평가 결과 반영)</td><td colspan="2">20</td></tr>
<tr><td rowspan="7">기금수요 측면</td><td>문화예술수요자 (향유자)</td><td>시·도 ‘인구 수’
(2010년 말 주민등록 기준)</td><td>15</td><td rowspan="7">80</td></tr>
<tr><td>공연장 수요</td><td>시·도 공공 ‘공연장 수’(2010년 공연장등록현황)</td><td>10</td></tr>
<tr><td rowspan="2">문화예술공급자 (창조자)</td><td>시·도 ‘예술인 수’
(2011년 기준 예총 및 민예총의 회원 수)</td><td>10</td></tr>
<tr><td>시·도 ‘문예활동 건수’ (2010년 문예연감 현황)</td><td>5</td></tr>
<tr><td>문예활동활성화 정도</td><td>시·도 문예활동 활성화 지수
(=문예활동 건수÷인구 수)</td><td>5</td></tr>
<tr><td colspan="2">소계</td><td>45</td></tr>
<tr><td rowspan="3">기금공급 측면</td><td rowspan="2">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td><td>시·도 ‘재정의존도’
(2011년 당초 예산기준 시·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td><td>30</td></tr>
<tr><td>시·도 ‘매칭정도’
(2011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시·도의 매칭률)</td><td>5</td></tr>
<tr><td colspan="2">소계</td><td>35</td></tr>
<tr><td colspan="3">계</td><td colspan="2">100</td></tr>
</table>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서울제외]

예산의 12.5% 서울 배분 후, 서울 외 시·도는 아래 배분기준 적용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colspan="3">배분기준</th><th colspan="2">반영비율(%)</th></tr>
<tr><td>성과평가 측면</td><td>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td><td>시·도 ‘성과평가 결과‘
(11년 지역협력형사업 시·도별 평가 결과 반영)</td><td colspan="2">20</td></tr>
<tr><td rowspan="2">기금수요 측면</td><td>문화예술수요자 (향유자)</td><td>시·도 ‘인구수‘ (2011년 말 주민등록 기준)</td><td>30</td><td rowspan="4">80</td></tr>
<tr><td colspan="2">소계</td><td>30</td></tr>
<tr><td rowspan="3">기금공급 측면</td><td rowspan="2">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td><td>시·도 ‘재정의존도’
(2012년 당초 예산기준 시·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td><td>30</td></tr>
<tr><td>시·도 ‘매칭정도’
(2012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시·도의 매칭률)</td><td>20</td></tr>
<tr><td colspan="2">소계</td><td>50</td></tr>
<tr><td colspan="3">계</td><td colspan="2">100</td></tr>
</table>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울포함]

(단위: 백만 원)
<table>
<tr><th colspan="3">배분기준</th><th colspan="2">반영비율(%)</th></tr>
<tr><td>성과평가 측면</td><td>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td><td>시·도 ‘성과평가 결과’
(11년 지역협력형사업 시·도별 평가 결과 반영)</td><td colspan="2">20</td></tr>
<tr><td rowspan="3">기금수요 측면</td><td>공연장 수요</td><td>시·도 공공 ‘공연장 수’</td><td>10</td><td rowspan="5">80</td></tr>
<tr><td>문화예술공급자(창조자)</td><td>시·도 ‘공연예술 단체 수’</td><td>30</td></tr>
<tr><td colspan="2">소계</td><td>40</td></tr>
<tr><td rowspan="3">기금공급 측면</td><td rowspan="2">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td><td>시·도 ‘재정의존도’
(2012년 당초 예산기준 시·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td><td>20</td></tr>
<tr><td>시·도 ‘매칭 정도’
(2012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시·도의 매칭률)</td><td>20</td></tr>
<tr><td colspan="2">소계</td><td>40</td></tr>
<tr><td colspan="3">계</td><td colspan="2">100</td></tr>
</table>
</td></tr>
</table>

3) '09~'13년 지역별 중앙문예진흥기금 배분내역(안)

〈표-7〉 2009년~2013년 지역별 기금배분 내역(안)

(단위 : 백만 원)

구분	지역	2009년 중앙기금 배분액	2010년 중앙기금 배분액	2011년 중앙기금 배분액	2012년 중앙기금 배분액	2013년(안) 중앙기금 배분액
1	서울	7,030	4,749	2,589	2,928	2,769
2	부산	839	1,068	1,036	1,000	1,116
3	대구	681	996	944	1,071	1,051
4	인천	729	781	754	823	977
5	광주	583	801	829	865	1,000
6	대전	703	708	698	783	811
7	울산	527	581	583	594	608
8	경기	1,220	2,135	1979	1,950	1,934
9	강원	818	917	892	1,049	1,104
10	충북	616	858	800	855	822
11	충남	883	897	844	909	914
12	전북	715	1,051	1,017	1,058	1,067
13	전남	807	985	916	1,004	923
14	경북	737	973	878	986	934
15	경남	757	1,094	1,027	1,040	1,065
16	제주	655	706	705	886	805
계		18,300	19,300	16,491	17,801	17,900

4) '09~'13년 지방비 매칭기준 및 규모

〈표-8〉 2009년~2013년 지방비 매칭기준 및 규모

연도	매칭기준 및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역	'09년 사업별 매칭실적							
		지역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제작		시도기획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중앙기금	사도 매칭액	중앙기금	사도 매칭액	중앙기금	사도 매칭액	중앙기금	사도 매칭액
2009	1 서울	–	–	1,500	1,500	3,500	3,500	2,030	2,100
	2 부산	310	814	349	349	100	100	80	80
	3 대구	330	1,109	201	350	100	100	50	50
	4 인천	360	1,000	219	219	100	100	50	50
	5 광주	310	128	123	123	100	100	50	50
	6 대전	330	370	123	123	100	100	150	50
	7 울산	310	310	117	117	100	100	–	–
	8 경기	400	2,688	460	460	100	100	260	100
	9 강원	330	1,670	268	268	100	100	120	50
	10 충북	280	540	156	156	100	100	80	80
	11 충남	280	465	223	223	100	100	280	80
	12 전북	330	1,430	235	465	50	50	100	100
	13 전남	280	687	327	327	100	100	100	100
	14 경북	280	195	307	307	100	100	50	50
	15 경남	310	500	297	336	100	100	50	50
	16 제주	360	160	95	95	150	150	50	50
계		4,800	12,066	5,000	5,418	5,000	5,000	3,500	3,040
매칭비율		1 : 2.5		1 : 1.0		1 : 1.0		1 : 0.9	

*단위: 지역문예진흥기금과 무대공연작품제작은 천 원, 시도기획지원과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은 백만 원.

연도	매칭기준 및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역	'09년 사도별 매칭실적 및 총사업비			
		중앙기금	사도매칭액	총사업비	매칭비율
1	서울	7,030	7,100	14,130	1.01
2	부산	839	1,343	2,182	1.60
3	대구	681	1,609	2,290	2.36
4	인천	729	1,369	2,098	1.88
5	광주	583	401	984	0.69
6	대전	703	643	1,346	0.91
7	울산	527	527	1,054	1.00
8	경기	1,220	3,348	4,568	2.74
9	강원	818	2,088	2,906	2.55
10	충북	616	876	1,492	1.42
11	충남	883	868	1,751	0.98
12	전북	715	2,045	2,760	2.86
13	전남	807	1,214	2,021	1.50
14	경북	737	652	1,389	0.88
15	경남	757	986	1,743	1.30
16	제주	655	455	1,110	0.69
계		18,300	25,524	43,824	1.39

2010

〈2010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기준 원칙〉

구분	해당 사도	매칭기준 원칙
재정자립도 70%이상인 지역	3개 사도 (서울, 경기, 인천)	중앙기금 기준액 대비 1:2이상 혹은 최소 09년 사업비 총액규모 이상 매칭
재정자립도 70%미만인 지역	5개 사도 (광주, 대전, 충남, 경북, 제주)	예년 매칭규모 1:1미만인 지역 → 1:1이상 매칭
	8개 사도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예년 매칭규모 1:1이상인 지역 → 예년 사업비 총액규모 이상 매칭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역	'10년 매칭실적 및 총사업비			
		중앙기금	사도 매칭액	총사업비	매칭비율
1	서울	4,749	9,320	14,069	1.96
2	부산	1,068	1,690	2,758	1.58
3	대구	996	1,596	2,592	1.60
4	인천	781	1,605	2,386	2.06
5	광주	801	710	1,511	0.89
6	대전	708	758	1,466	1.07
7	울산	581	593	1,174	1.02
8	경기	2,135	2,583	4,718	1.21
9	강원	917	1,953	2,870	2.13
10	충북	858	948	1,806	1.10
11	충남	897	813	1,710	0.91
12	전북	1,051	3,689	4,740	3.51
13	전남	985	1,425	2,410	1.45
14	경북	973	973	1,946	1.00
15	경남	1,094	1,376	2,470	1.26
16	제주	706	706	1,412	1.00
계		19,300	30,738	50,038	1.59

연도	매칭기준 및 규모

2011

〈2011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기준 원칙〉

구분	해당 사도	매칭기준 원칙
재정자립도 70%이상인 지역	2개 사도 (서울, 인천)	중앙기금 기준액 대비 1:2이상 혹은 최소 09년 사업비 총액규모 이상 매칭
재정자립도 70%미만인 지역	3개 사도 (광주, 충남, 경북)	예년 매칭규모 1:1미만인 지역 → 최소 1:1이상 매칭
	11개 사도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예년 매칭규모 1:1이상인 지역 → 예년 사업비 총액규모 이상 매칭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역	'11년 매칭실적 및 총사업비			
		중앙기금	사도매칭액	총사업비	매칭비율
1	서울	2,589	8,538	7,767	3.30
2	부산	1,036	1,722	2,758	1.66
3	대구	944	1,588	2,562	1.68
4	인천	754	1,152	2,262	1.53
5	광주	829	829	1,658	1.00
6	대전	698	958	1,656	1.37
7	울산	583	586	1,187	1.01
8	경기	1,979	2,109	4,718	1.07
9	강원	892	2,008	3,170	2.25
10	충북	800	1,063	1,806	1.33
11	충남	844	844	1,688	1.00
12	전북	1,017	2,723	6,740	2.68
13	전남	916	1,356	2,417	1.48
14	경북	878	878	1,756	1.00
15	경남	1,027	1,256	2,372	1.22
16	제주	705	707	1,412	1.00
계		16,491*	28,317	42,929	1.72

*협력관 발굴지원(우수협력사업)을 위한 선확보분 109백만 원이 빠진 금액임.

2012

[지역문예활동지원]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재정자립도 70%이상	1	2	최소기준 (서울, 경기)
재정자립도 70%미만	1	1	최소기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0	50	
비수도권	70	30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역	'12년 매칭실적 및 총사업비					
		지역문예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총사업비	매칭비율
		중앙기금	지역매칭	중앙기금	지역매칭		
1	서울	1,566	3,132	1,362	1,234	7,294	1.87
2	부산	576	472	424	145	1,617	1.85
3	대구	595	471	476	149	1,691	1.63
4	인천	472	329	351	257	1,409	1.40
5	광주	478	373	387	126	1,364	1.00
6	대전	424	319	359	106	1,208	1.47
7	울산	330	235	264	77	906	0.99

연도	매칭기준 및 규모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역	'12년 매칭실적 및 총사업비					
		지역문예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총사업비	매칭비율
		중앙기금	지역매칭	중앙기금	지역매칭		
8	경기	1,142	2,036	808	697	4,683	1.05
9	강원	554	412	495	157	1,618	1.59
10	충북	466	371	389	130	1,356	0.98
11	충남	482	387	427	147	1,443	1.30
12	전북	576	481	482	166	1,705	2.51
13	전남	540	445	464	159	1,608	1.02
14	경북	532	437	454	158	1,581	0.68
15	경남	584	479	456	159	1,678	1.26
16	제주	474	350	412	129	1,365	0.80
계		9,791	10,729	8,010	3,996	32,526	1.40

* 우수사업 모델발굴을 통한 사업개선, 지역문화협력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예활동 예산 중 1억 원을 선확보한 후 기금배분 되었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산 중 50백만 원은 사업설명회 등 사업운영경비로 지역배분에서 제외됨.

2013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재정자립도 70%이상	1	2	최소기준 (서울, 인천)
재정자립도 70%미만	1	1	최소기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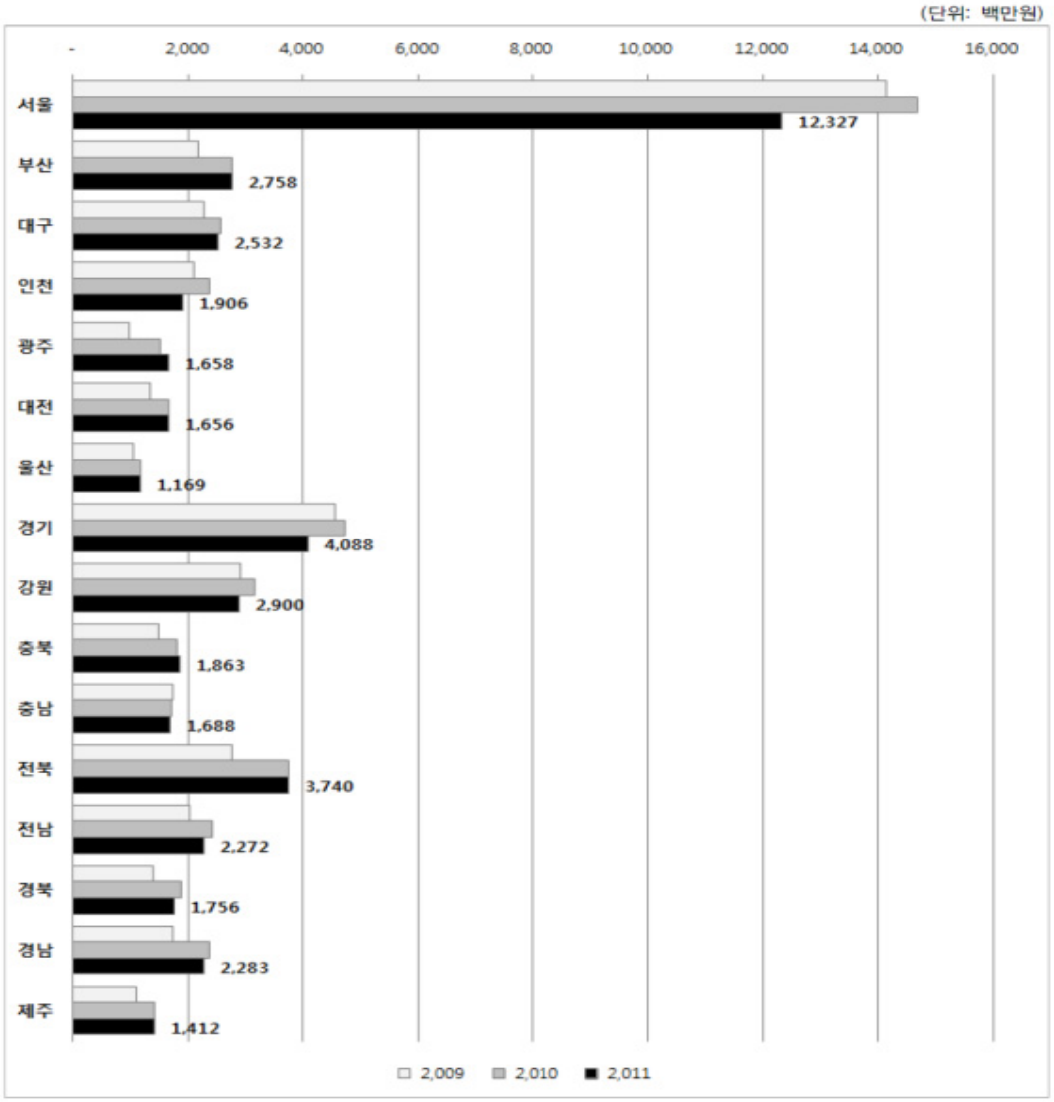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0	50	
비수도권	70	30	

(단위: 백만 원, %)

구분	지역	'13년 매칭계획 및 총사업비(안)					
		지역문예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총사업비	매칭 비율
		중앙기금	지역매칭(안)	중앙기금	지역매칭(안)		
1	서울	1,237	2,474	1,532	1,532	6,775	1.45
2	부산	652	652	464	199	1,967	0.76
3	대구	632	632	419	179	1,862	0.77
4	인천	531	1,062	446	446	2,485	1.54
5	광주	478	478	522	224	1,702	0.70
6	대전	480	480	331	142	1,433	0.77
7	울산	358	358	250	107	1,073	0.76
8	경기	1,076	1,076	858	858	3,868	1.00
9	강원	630	630	474	203	1,937	0.75
10	충북	466	466	356	153	1,441	0.75
11	충남	538	538	376	161	1,613	0.76
12	전북	652	652	415	178	1,897	0.78
13	전남	540	540	383	164	1,627	0.76
14	경북	532	532	402	172	1,638	0.75
15	경남	614	614	451	193	1,872	0.76
16	제주	474	474	331	142	1,421	0.77
계		9,890	11,658	8,010	5,053	34,611	0.93

5) 시·도별 연간 기금규모 및 기금매칭 추이

〈그림-1〉 2009년~2011년 시·도별 연간 기금규모 추이[4)]



○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별 연간 기금규모 추이는 지난 3년간의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지원된 기금 총액의 변화를 보려주는 도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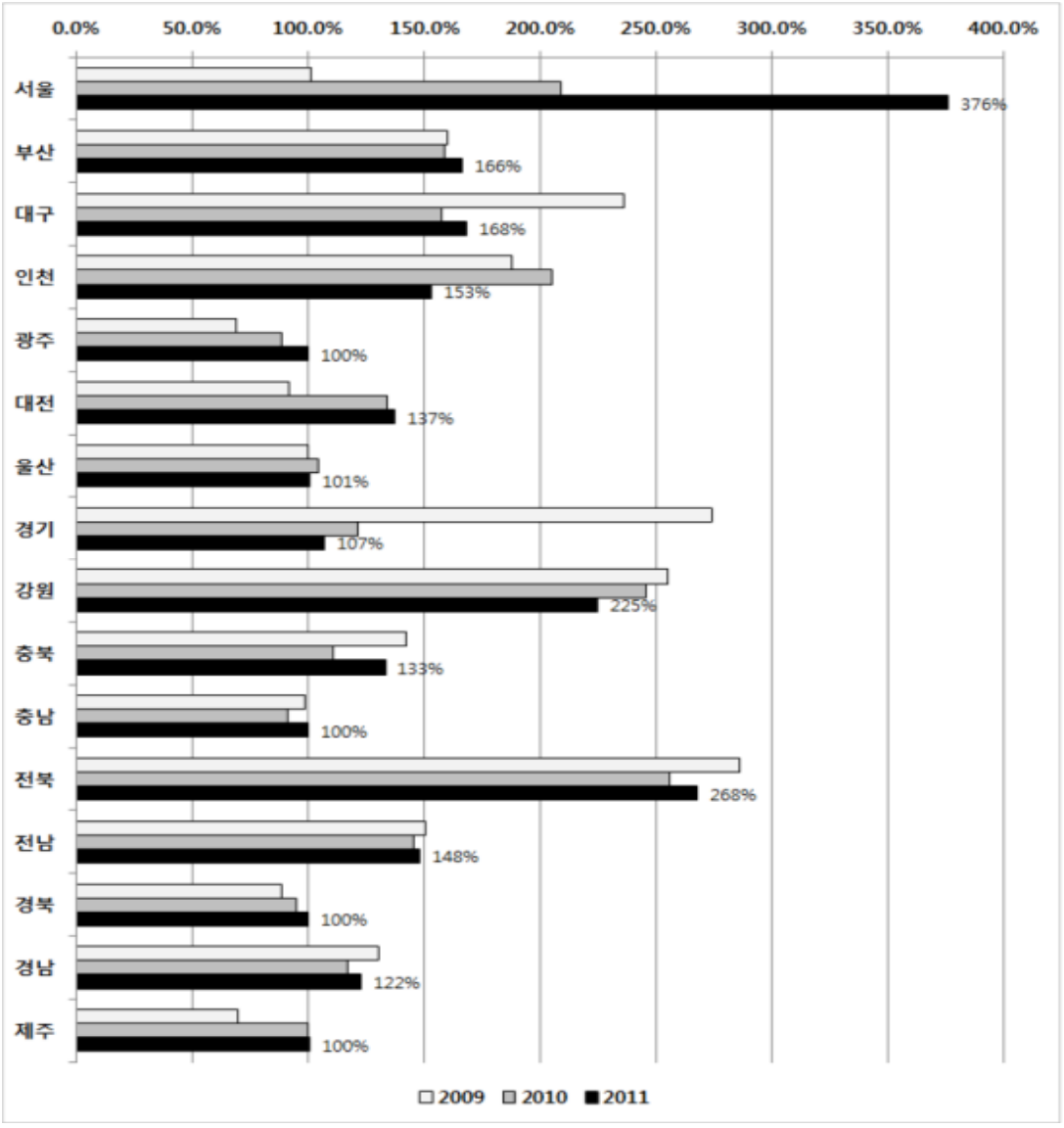
○ 3년 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지역과 기금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기금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의 비교가 가능함.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의 기금이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며,
- 기금규모가 약간이라도 늘어난 곳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며 대개 미미하게 감소하거나 현상유지 상태로 파악되었음.

4)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2. 3

○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강원과 전북의 기금규모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역매칭 규모가 다른 지역의 2배 이상이기 때문으로 파악됨. 2011년 지역매칭비율로 전북이 1위, 강원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2〉 지역협력형사업 기금매칭 3년('09년~'11년) 추이[5)]



○ 연간 매칭비율에서 서울, 광주 등 지속적으로 매칭률이 성장하는 지역이 있으며, 경기, 강원은 조금씩이지만 매칭 비율이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은 예술위원회 지원금이 대폭 감소되어 지역 매칭을 높여서라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결과, 매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며,
- 광주는 재단 설립에 따라 기본 매칭률을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매칭률이 높아짐.

5)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2. 3

○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전북과 강원이 지원금 규모면에서나 매칭률면에서 압도적인 1, 2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 강원은 재정자립도면에서는 전국에서 13위에 그치고 있지만, 매칭률에서는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를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의지에 따라 매칭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함.

○ 대개의 지역이 매칭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2. 2012년도 지역협력형사업 내역(현황)

1) '12년 예산 배분 실적

(단위: 백만 원)

세(세)부 사업	2011년	2012년	증감	비고
• 지역문예활동지원	**9,800**	**9,890**	90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5,800	7,390	1,590	
– 사도기획지원	3,500	1,100	△2,400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700	700	'11년은 공모(1,000백만 원)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500	700	200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800	8,010	1,200	
계	**16,600**	**17,900**	**1,300**	

2) 시·도별 사업별 기금배분 기준

○ 지역문예활동지원은 서울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 비율 16%를 배분하고 서울 외 지역은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배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2010년 사업성과 평가와 기금수요 및 공급요인을 서울을 포함하여 16개 시·도에 공통 적용하여 배분함.

○ 우수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개선, 지역문화협력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예활동 예산 중 1억 원을 선 확보한 후 기금 배분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산 중 50백만 원은 사업설명회 등 사업운영경비(일반수용비)로 지역 배분에서 제외됨.

○ '11년도와 달라진 점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배분기준에서 사업별 목표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수를 적용함. 기금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공공 공연장 수'를 신규 지수로 추가하였음.

○ '12년 지역별 기금 배분 기준은 성과평가 20%, 기금수요 (인구 수, 예술인 수) 45%, 기금공급(재정의존도 등) 35% 의 기준에 의한 기금 배분이 이루어짐.

[지역문예활동지원 : 서울 제외]

– 예산의 16% 서울 배분 후, 서울 외 시·도는 아래 공통 배분기준 적용.

(단위: 백만 원)

배분기준			반영비율(%)	
성과평가 측면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	사도 '성과평가 결과' (10년 지역협력형사업 사도별 평가결과반영)	20	
기금수요 측면	문화예술수요자 (향유자)	사도 '인구 수' (2010년 말 주민등록 기준)	25	80
	문화예술공급자 (창조자)	사도 '예술인 수' (2011 기준 예총 및 민예총의 회원 수)	10	
		사도 '문예활동 건수' (2010년 문예연감 현황)	5	
	문예활동 활성화 정도	사도 문예활동 활성화 지수 (=문예활동 건수÷인구 수)	5	
	소계		45	
기금공급 측면	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	사도 '재정 의존도' (2011년 당초 예산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	30	
		사도 '매칭 정도' (2011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도의 매칭률)	5	
	소계		35	
계			1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울 포함]

(단위: 백만 원)

배분 기준			반영비율(%)	
성과평가 측면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	사도 '성과평가 결과' (10년 지역협력형사업 사도별 평가결과반영)	20	
기금수요 측면	문화예술수요자 (향유자)	사도 '인구 수' (2010년말 주민등록 기준)	15	80
	공연장 수요	사도 '공공 공연장 수' (2010년 공연장등록현황)	10	
	문화예술공급자 (창조자)	사도 '예술인 수' (2011년 기준 예총 및 민예총의 회원 수)	10	
		사도 '문예활동 건수'(2010년 문예연감 현황)	5	
	문예활동 활성화 정도	사도 '문예활동 활성화 지수'(=문예활동 건수÷인구 수)	5	
	소계		45	
기금공급 측면	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	사도 '재정 의존도' (2011년 당초 예산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	30	
		사도 '매칭 정도' (2011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도의 매칭률)	5	
	소계		35	
계			100	

3) 성과평가 적용 기준

○ 성과평가 반영 가중치를 '11년 1.0~1.3 → '12년 1.0~1.5로 확대 적용하여 사업개선과 내실화를 견인함.

구분		'11년 가중치	'12년 가중치
매우 우수	가	1.3	1.5
우수	나	1.2	1.3
보통	다	1.1	1.1
미흡	라	1.0	1.0
매우 미흡	마	–	1.0

4) 시·도별 사업기금 배분내역

○ 지역문예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의 16% 서울 배분 후(1,566백만 원) 서울 외 15개 시·도는 공통 배분기준이 적용되어 총 8,225백만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서울 포함한 16개 시·도 공통기준이 적용되어 총 8,010백만 원의 예산이 배분됨.

〈표-9〉 2012년 16개사·도 사업별 기금 배분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지역	지역문예활동					공연장상주단체육성	기금배분 총액
		육성지원	기획지원	레지던스	우리가락	계		
1	서울	1,566	–	–	–	1,566	1,362	2,928
2	부산	276	100	100	100	576	424	1,000
3	대구	345	100	100	50	595	476	1,071
4	인천	292	50	50	80	472	351	823
5	광주	278	100	100	–	478	387	865
6	대전	214	80	80	50	424	359	783
7	울산	280	–	30	20	330	264	594
8	경기	842	200	100	–	1,142	808	1,950
9	강원	354	100	100	–	554	495	1,049
10	충북	339	22	35	70	466	389	855
11	충남	252	100	50	80	482	427	909
12	전북	286	70	150	70	576	482	1,058
13	전남	300	120	120	–	540	464	1,004
14	경북	222	110	100	100	532	454	986
15	경남	444	40	100	–	584	456	1,040
16	제주	270	135	69	–	474	412	886
계		**6,560**	**1,327**	**1,284**	**620**	**9,791**	**8,010**	**17,801**

5) 지방비 매칭 기준(원칙)

○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역(사·도 및 사·도 문화재단)의 지방비(지역의 예산 및 기금을 통합하여 산정하며 심의 및 평가 관련 이외의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제외) 매칭 비율은 사업별로 차등적용 됨.

- 지역문예활동지원사업의 경우, '11년 기준 재정자립도 70% 이상인 지역 (서울, 경기)은 기금 배분액 대비 지역 매칭액을 최소 1:2 로 유지하고 '11년 기준 재정자립도 70% 미만인 지역은 1:1로 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50:50 으로, 비수도권은 70:30으로 함.

[지역문예활동지원사업]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재정자립도 70%이상	1	2	최소기준 (서울, 경기)
재정자립도 70%미만	1	1	최소기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50	50	
비수도권	70	30	

○ 2012년 사·도별 지방비 기본(의무) 매칭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10〉 2012년 사·도별 지방비 기본(의무) 매칭

(단위: 백만 원)

지역		지역문예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금지원 총액	지역매칭 총액	합계
		중앙기금	시·도매칭	계	중앙기금	시·도매칭	계			
1	서울	1,566	3,132	4,698	1,362	1,234	2,596	2,928	4,366	7,294
2	부산	576	472	1,048	424	145	569	1,000	617	1,617
3	대구	595	471	1,066	476	149	625	1,071	620	1,691
4	인천	472	329	801	351	257	608	823	586	1,409
5	광주	478	373	851	387	126	513	865	499	1,364
6	대전	424	319	743	359	106	465	783	425	1,208
7	울산	330	235	565	264	77	341	594	312	906
8	경기	1,142	2,036	3,178	808	697	1,505	1,950	2,733	4,683
9	강원	554	412	966	495	157	652	1,049	569	1,618
10	충북	466	371	837	389	130	519	855	501	1,356
11	충남	482	387	869	427	147	574	909	534	1,443
12	전북	576	481	1,057	482	166	648	1,058	647	1,705
13	전남	540	445	985	464	159	623	1,004	604	1,608
14	경북	532	437	969	454	158	612	986	595	1,581
15	경남	584	479	1,063	456	159	615	1,040	638	1,678
16	제주	474	350	824	412	129	541	886	479	1,365
계		9,791	10,729	20,520	8,010	3,996	12,006	17,801	14,725	32,526

3.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지역협력형사업) 사업 추진 계획

1) '13년도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세(세)부 사업	2012년	2013년	증감	비고
• 지역문예활동지원	**9,890**	**9,890**	–	2013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으로 통합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7,390	–		
– 사도기획지원	1,100	–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700	–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700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010**	**8,010**	–	
계	**17,900**	**17,900**		

2) 시·도별 사업별 기금배분 기준

○ 기금배분기준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있어 예산의 12.5%를 서울 배분 후,

– 서울 외 시·도는 아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배분기준 개선안을 적용 (전년대비 배분액이 감액되지 않도록 조정, 서울과 경기제외)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역시 한지협 배분기준 개선안이 적용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서울 제외]

– 예산의 12.5% 서울 배분 후, 서울 외 시·도는 아래 공통 배분기준 적용.

(단위: 백만 원)

배분 기준			반영비율(%)	
성과평가 측면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	사도 '성과평가 결과' (11년 지역협력형사업 사도별 평가 결과 반영)	20	
기금수요 측면	문화예술 수요자 (향유자)	사도 '인구 수' (2011년 말 주민등록 기준)	30	80
	소계		30	
기금공급 측면	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	사도 '재정 의존도' (2012년 당초 예산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	30	
		사도 '매칭 정도' (2012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도의 매칭률)	20	
	소계		50	
계			1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울 포함]

(단위: 백만 원)

배분 기준			반영비율(%)	
성과평가 측면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와 보상	사·도 '성과평가 결과' (11년 지역협력형사업 사·도별 평가 결과 반영)	20	
기금수요 측면	공연장 수요	사·도 '공공 공연장 수'	10	
	문화예술 수요자 (향유자)	사·도 '공연예술 단체 수'	30	
	소계		40	
기금공급 측면	광역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확충노력	사·도 '재정 의존도' (2012년 당초 예산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	20	80
		사·도 '매칭 정도' (2012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사·도의 매칭률)	20	
	소계		40	
계			100	

3) 성과평가 적용 기준

○ '12년 1.0~1.5였던 것을 0.75~1.5로 시·도별 성과평가 환류비중(등급간 격차)을 확대함.

구분		'11년 가중치	'12년 가중치	'13년 가중치	비고
매우 우수	가	1.3	1.5	1.50	'11~'12년에는 각각(지역문예지원, 공연장상주지원)의 성과평가 결과 적용
우수	나	1.2	1.3	1.25	
보통	다	1.1	1.1	1.0	
미흡	라	1.0	1.0	0.75	
매우 미흡	마		1.0	0.75	

4) 시·도별 사업기금 배분 예산(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단위: 백만 원, %)

지역	성과 평가 (20%)	인구수 (30%)	재정 의존도 (30%)	매칭 정도 (20%)	산출액	13년배분액 (조정액)(A)	비율 (%)	12년 지원액 (B)	증감액 (A-B)	12년 비율(%)	비율 증감
서울					1,237	1,237	12.51	1,566	(329)	16.0	(3.49)
부산	142	228	135	167	672	652	6.59	576	76	5.88	0.66
대구	170	161	150	152	632	632	6.39	595	37	6.08	0.33
인천	142	180	85	124	530	531	5.36	472	59	4.82	0.54
광주	142	94	168	58	462	478	4.83	478	0	4.88	0.04
대전	114	97	135	146	492	480	4.85	424	56	4.33	0.48

지역	성과 평가 (20%)	인구수 (30%)	재정 의존도 (30%)	매칭 정도 (20%)	산출액	13년배분액 (조정액)(A)	비율 (%)	12년 지원액 (B)	증감액 (A–B)	12년 비율(%)	비율 증감
울산	85	73	104	97	359	358	3.62	330	28	3.37	0.26
경기	142	765	109	59	1,076	1,076	10.88	1,142	(66)	11.66	(0.76)
강원	142	99	221	200	662	630	6.37	554	76	5.66	0.63
충북	85	100	207	62	454	466	4.71	466	0	4.76	(0.03)
충남	85	135	204	115	539	538	5.44	482	56	4.92	0.55
전북	85	120	225	231	662	652	6.59	576	76	5.88	0.66
전남	85	123	244	87	539	540	5.46	540	0	5.52	(0.04)
경북	85	173	221	52	532	532	5.38	532	0	5.43	(0.04)
경남	114	212	181	108	615	614	6.21	584	30	5.97	0.26
제주	114	37	205	73	429	474	4.79	474	0	4.84	(0.04)
합계	**1,731**	**2,596**	**2,596**	**1,731**	**9,890**	**9,890**	**100.0**	**9,791**	**100**	**100**	**0.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단위: 백만 원, %)

지역	성과 평가 (20%)	공공 공연장 (10%)	공연 단체 (30%)	재정 의존도 (20%)	매칭 (20%)	13년 배분액(A)	비율 (%)	12년 지원액 (B)	증감액 (A–B)	12년 비율(%)	비율 증감
서울	144	117	1,072	20	180	1,532	19.13	1,362	170	17.00	2.1
부산	120	23	170	82	70	464	5.79	42	40	5.29	0.5
대구	144	27	87	91	70	419	5.23	476	(57)	5.94	–0.7
인천	120	40	72	52	163	446	5.56	351	95	4.38	1.2
광주	96	36	73	103	215	522	6.52	387	135	4.83	1.7
대전	96	13	71	82	70	331	4.13	359	(28)	4.48	–0.4
울산	72	8	36	63	70	250	3.11	264	(14)	3.30	–0.2
경기	120	148	334	67	189	858	10.71	808	50	10.09	0.6
강원	120	61	89	135	70	474	5.92	495	(21)	6.18	–0.3
충북	72	40	49	126	70	356	4.45	389	(33)	4.86	–0.4
충남	72	50	42	124	87	376	4.69	427	(51)	5.33	–0.6
전북	72	48	88	137	70	415	5.18	482	(67)	6.02	–0.8
전남	72	50	42	149	70	383	4.78	464	(81)	5.79	–1.0
경북	72	63	63	135	70	402	5.02	454	(52)	5.67	–0.6
경남	120	63	88	110	70	451	5.63	456	(5)	5.69	–0.1
제주	96	15	26	125	70	331	4.14	412	(81)	5.14	–1.0
합계	**1,602**	**802**	**2,403**	**1,602**	**1,602**	**8,010**	**100.0**	**8,010**	**100**	**100.0**	

[종합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및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단위: 백만 원, %)

지역	지역문화예술특성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역별 소계			
	13년 배분액	비율 (%)	12년 지원액	증감	13년 배분액	비율 (%)	12년 지원액	증감	13년 배분액	비율 (%)	12년 지원액	증감
서울	1,237	12.5	1,566	△329	1,532	19.1	1,362	170	2,769	15.5	2,928	△159
부산	652	6.6	576	76	464	5.8	424	40	1,116	6.2	1,000	116
대구	632	6.4	595	37	419	5.2	476	△57	1,051	5.9	1,071	△20
인천	531	5.4	472	59	446	2.6	351	95	977	5.5	823	154
광주	478	4.8	478	0	522	6.5	387	135	1,000	5.6	865	135
대전	480	4.9	424	56	331	4.1	359	△28	811	4.5	783	28
울산	358	3.6	330	28	250	3.1	264	△14	608	3.4	594	14
경기	1,076	10.9	1,142	△66	858	10.7	808	50	1,934	10.8	1,950	△16
강원	630	6.4	554	76	474	5.9	495	△21	1,104	6.2	1,049	55
충북	466	4.7	466	0	356	4.5	389	△33	822	4.6	855	△33
충남	538	5.4	482	56	376	4.7	427	△51	914	5.1	909	5
전북	652	6.6	576	76	415	5.2	482	△67	1,067	6.0	1,058	9
전남	540	5.5	540	0	383	4.8	464	△81	923	5.2	1,004	△81
경북	532	5.4	532	0	402	5.0	454	△52	934	5.2	986	△52
경남	614	6.2	584	30	451	5.6	456	△5	1,065	5.9	1,040	△25
제주	474	4.8	474	0	331	4.1	412	△81	805	4.5	886	△81
합계	**9,890**	**100**	**9,791**		**8,010**	**100**	**8,010**		**17,900**	**100**	**17,801**	

5) 지방비 매칭 기준 (원칙)

○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역(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지방비 매칭 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적용됨.

- 지역문예활동지원사업의 경우, '12년 기준 재정자립도 70% 이상인 지역 (서울, 인천)은 기금 배분액 대비지역 매칭액을 최소 1:2 로 유지하고 재정자립도 70% 미만인 지역은 1:1 로 함.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전년도와 동일)은 50:50 으로, 비수도권은 70:30 으로 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재정자립도 70%이상	1	2	최소기준(서울, 인천)
재정자립도 70%미만	1	1	최소기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구분	위원회	해당지역	비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0	50	
비수도권	70	30	

○ 2013년 시·도별 지방비 기본(의무) 매칭 계획은 아래 표와 같음.

〈표-11〉 2013년 시·도별 지방비 기본(의무) 매칭

(단위: 백만 원)

지역	지역문화예술특성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기금지원 총액	지방비 매칭 총액	합계
	기금 배분액	시·도 매칭액	계	기금 배분액	시·도 매칭액	계			
서울	1,237	2,474	3,711	1,532	1,532	3,064	2,769	4,006	6,775
부산	652	652	1,304	464	199	663	1,116	851	1,967
대구	632	632	1,264	419	179	598	1,051	811	1,862
인천	531	1,062	1,593	446	446	892	977	1,508	2,485
광주	478	478	956	522	224	746	1,000	702	1,702
대전	480	480	960	331	142	473	811	622	1,433
울산	358	358	716	250	107	357	608	465	1,073
경기	1,076	1,076	2,152	858	858	1,716	1,934	1,934	3,868
강원	630	630	1,260	474	203	677	1,104	833	1,937
충북	466	466	932	356	153	509	822	619	1,441
충남	538	538	1,076	376	161	537	914	699	1,613
전북	652	652	1,304	415	178	593	1,067	830	1,897
전남	540	540	1,080	383	164	547	923	704	1,627
경북	532	532	1,064	402	172	574	934	704	1,638
경남	614	614	1,228	451	193	644	1,065	807	1,872
제주	474	474	948	331	142	473	805	616	1,421
합계	**9,890**	**11,658**	**21,548**	**8,010**	**5,053**	**13,063**	**17,900**	**16,711**	**34,611**

6) 예산편성 및 집행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구사업명: 지역문예활동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예산은 반드시 분리하여 편성 집행하도록 함.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시·도기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함.

제3절

중앙-지역 간 재정·문화협력 외국 사례

1. 미국 NEA와 지역예술기구의 협력

1) 미국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 NEA)

○ 미국의 문화기관은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을 진행하는 국립예술기금(NEA)에서 7개의 광역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예술기구(Regional Arts Organization), 주단위의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주정부예술진흥기구(SAA), 지방차원의 지방예술진흥기구로 분권화되어있으며,

- 이를 통해 문화정책과 지원, 의회로부터 예산배정을 받는 행정부권 외의 독립기관으로서 공공기금의 지원에 대한 임무를 담당함.

○ 전 미국의 수준에서 보자면 모든 예술단체 수입의 약 5%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NEA의 기금 운용은 의회의 명령에 따라 기금의 40%는 SAAs와 RAOs에 의하여 각 주와 지역의 예술기관에 할당됨.

- 또한 NEA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예술단체들의 자금지원의 75%이상은 SAAs가 담당하고 있음. 기금의 운영의 내용은 주정부, 지역예술기관 및 단체에 대한 매칭펀드 지원, 비영리단체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 지원, 예술가의 창작 진흥을 위한 직접지원비 등임.

○ NEA의 연간 예산은 1996년 크게 삭감되었는데 이는 1996년부터 예술지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NEA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고려된 시기였기에 결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역할이 확대된 계기를 만들게 했음.

○ 최근 문화정책적으로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가 눈에 띔. 국가국립예술기금(NEA)은 2010년 3월, 개인이 향유하는 문화, 예술의 성격과 빈도, 방법을 파악하고자 지방과 도회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형태의 예술참여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현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동네(Our Town)' 프로젝트 역시 2011년 새롭게 추가됨.[6)]
- '우리동네(Our Town)' 프로젝트는 예술의 추상적인 역량보다 예술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화 하여 이를 최대화하는 데 힘쓰겠다는 예술을 통한 경제극복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자긍을 높일 수 있는 예술활동을 후원하는 것임.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공중의 참여와 함께 잠재적으로 나라 전체를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함.

6) 『해외동향분석-문화정책과 사회통합 外』, 기획조정실, 2011, 336~341p참조

- 크게 도시와 교외로 나뉘어, 도시는 예술지구의 개발, 예술활동과 작가를 커뮤니티 홍보계획의 한 요소로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음. 교외지의 경우 디자인 센터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개발하고 과도한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주변 환경, 경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언급함. 지방의 경우 예술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 커뮤니티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지역 단위의 문화예술진흥 체계 및 지원시스템

○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6개의 관할 구역마다 주정부예술진흥기구(SAA: State Arts Agencies)가 있으며 이들 간의 연합인 NASAA(The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가 있다.
- 뉴욕주예술위원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NYSCA)가 진정한 의미로서 최초의 주 예술 기구인데,
- NYSCA가 예술 지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칭 펀드개념을 도입하여 NYSCA가 지원하는 지방 예술단체에 지원금에 상당하는 기금을 모을 것을 요구했다는 점임.

○ 1960년에 설립된 NYSCA는 뉴욕 주에 상주하는 예술가 및 비영리 문화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뉴욕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금지원 기관(funding agency)임.
- 주의회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NYSCA의 사업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주 및 주 내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을 기초로 한 분권화 지원금 사업인데,
- 지역사회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뉴욕주 안의 62개 모든 카운티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1971년에 NYSCA가 설립한 뉴욕주예술재단(New York Foundation for the Arts, NYFA)는 비영리, 비정부 독립재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중점 지원하고 있음.
- NYSCA가 주정부 예산과 NEA의 지원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는 달리 NYFA는 총 수입의 58% 가량을 민간 기부를 통해 충당함. 뉴욕주정부, NEA, 뉴욕시문화국 등으로부터 받는 공적 지원은 34% 내외임.
- 2001년 지출 내역을 보면 예산의 77%를 기금지원 사업에 소요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에 13%, 민간기부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용에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NYSCA가 뉴욕 주 주민의 예술문화 접근성 제고 사업에 주력한다면 NYFA는 예술가의 창조성 및 수월성 제고에 집중함으로써 분업과 협력을 통한 윈윈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NASAA의 역할은 SAA의 개별적이고 공통적인 관심을 대표하고 SAA의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며 기초적 공공이익으로서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임.
- 또 공적지원이 생기는 예술활동들에 대한 평가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서 '국가표준 예술정보교환소(National standard for Arts information Exchange)'를 만

들고 NEA와 SAA의 공동협약을 방식을 통하여 당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함.
-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①미국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의 의미 있는 역할을 발전시킴 ②모든 개인에게 예술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 ③예술은 각 지역의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④국가의 다양성은 예술을 통해 인식되고 증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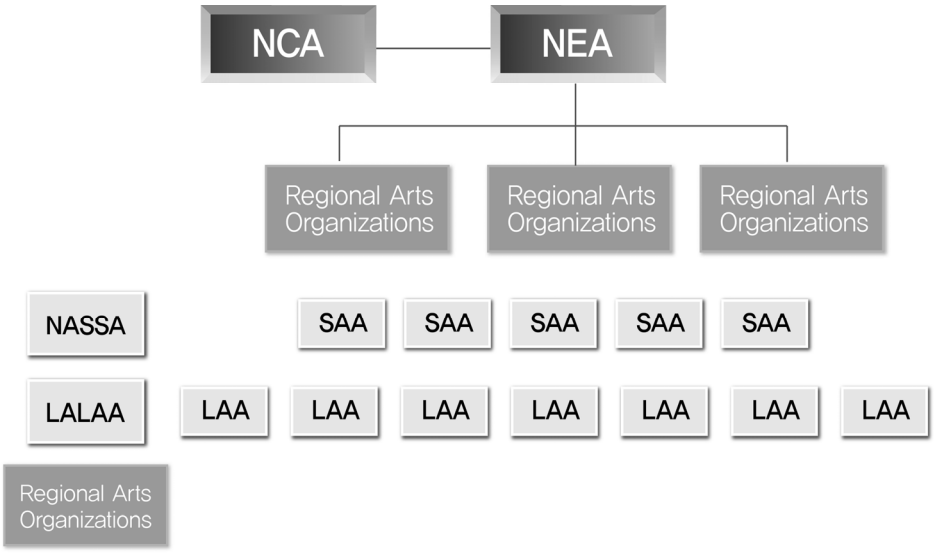
3) 주정부예술진흥기구 (State Arts Agencies, SAA)

○ 역할은 주단위의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 예술의 가치에 대한 홍보를 확대, 예술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문화와 예술의 대중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음. 현재는 지역의 28,000여개의 예술기구가 SAAs와 협력하고 있음.

4) 지방예술기관 (Local Art agency, LAA)

○ 지방예술기관은 지방 정부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문화단체 지원,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봉사, 대중들에게 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LAAs의 역할은 문화프로그램 제공, 기금 조성, 시설관리,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 문화계획(31%의 LAAs가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원금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 예술교육 등임.
-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도시별로는 각 시청의 문화관련 부서가 전담하기도 하고 몇몇 카운티의 경우에는 예술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음.

〈그림-3〉 미국 문화예술진흥체계[7)]



7) 조화연, 『문화예술진흥체계 역할모형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2008.8, 46p

5) NEA의 지역협력형사업

○ Challenge America

- NEA는 교육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와 지역문화와의 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전국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챌린지 아메리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예술 보급과 접근성 증진, 예술교육 활성화, 지역예술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공공과 민간 등 지역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실시한 혁신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장려함. 4개의 하위 프로그램 – 지역예술가와 창작프로젝트지원(Access to the Arts Grants), 어린이 예술교육 및 지역예술개발(Fast Track Grants), 지역과 주립예술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State and Regional Project), 지역의 선도적 사업의 개발(Leadership Initiatives) – 을 통해 지역 재정을 지원함.

○ Partnership Agreements

- NEA Partnership Agreements는 직접적인 지원보다 SAAs와 RAOs를 통해 지역에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의 예술증진을 위한 역할을 함. 협력은 모든 주의 주립기관과 여러 주가 연합하며 NEA는 이들을 지원함.
- 프로그램으로 Access to Artistic Excellence(예술적 우수성을 지원, 미국의 문화적 유산보호, 모든 미국인에게 예술적인 접근을 지원), Learning in the Arts(유소년층을 위한 예술교육 발전), Partnerships for the Arts(새롭거나 기존의 뛰어난 예술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유지)

○ Leadership Initiatives

- Challenge America의 하위 프로그램. 생활 속의 예술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수행함. NEA, 국립예술기관, 비영리예술단체와의 지역기반 예술프로젝트의 전국적인 협력을 지원함.

〈표-12〉 NEA 조직구조 및 인력현황[8)]

부서명	팀명	인원
음악, 오페라, 다원예술, 예술교육부	부서 코디네이터 음악, 오페라팀 예술교육팀 다원예술팀 재즈마스터 프로그램 사업 및 행정지원	1 4 5 2 1 3
챌린지 어메리카 지역예술단체 지원부	부서 코디네이터 챌린지 어메리카 지원 지역예술단체 지원 사업지원	1 2 2 1
무용 및 시각예술부	부서 코디네이터 시각예술팀	1 3

부서명	팀명	인원
	미디어아트팀 디자인 팀 무용예술팀 재즈마스터 프로그램 예술과 방송사업 행정지원	2 2 2 1 1 3
전통예술, 문학, 연극부	부서 코디네이터 연극, 뮤지컬 팀 전통예술 문학지원 행정지원	1 4 2 1 4
주정부 및 지역예술지원기구팀	관련팀	2
사업 본부	소계	49

2. 영국 ACE와 지역예술위원회의 협력

1)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 ACE)

○ 2002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 ACE)는 10개의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Boards)와 합병을 함으로써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라는 새로운 하나의 예술지원과 발전기구로 일원화 됨.

- 새로운 조직에 필요한 9개의 지역 사무소는 정부의 지역구조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9개의 지역 계획과 조화되어 9개 각각의 지역 사무소는 지역 위원회와 의장을 두고 있음.

○ UK 전 지역의 문화지원은 비정부공공기구(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를 통해 이루어지며 잉글랜드 혹은 UK 전 지역에서 활동 중인 NDPBs는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9]를 통해 지원금을 직접 받고 있음.

- 지역의 문화정책은 4개의 DCMS NDPBs를 통해 전달됨. 이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 영국 문화재청(England heritage), 박물관·도서관·문서고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 영국체육재단(Sport England)임.
- 이들은 (정부에 의해 폐지될 위기에 직면한) 지역 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과 지방 정부(local authorities)와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진행함.

8) 이봉호(2011), 『20세기 프랑스와 미국 문화지원정책 연구 : AFAA와 NEA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전공, 54p

9)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예술, 체육, 국민복권, 관광, 도서관, 잉글랜드의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방송, (영화, 음악, 패션디자인, 광고, 예술시장 등을 포함한) 창조산업, 언론출판 자유 및 규제, 면허, 도박 등에 관한 정부정책을 책임지고 있음. 미션은 창조, 커뮤니케이션, 문화, 관광, 레저 등 각 활동 영역에서 장애를 제거하고 모든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95%이상의 부처 예산이 문화부의 전략적 목표를 전달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에 할당됨. 공공단체들이 자유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은 현재 3년에 한 번 정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 일반에게 공개되는 지원내용은 공공단체와 DCMS가 합의한 목적과 목표, 대상을 상세히 밝히도록 되어있음.

○ 2009년 7월, ACE는 행정비용 및 예술부문의 재투자 관련, 연간 650만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는 조직 전반적 구조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함.
- 이 중 정부의 지역구조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9개의 지역 사무소를 4개 지역으로 분류함으로써 간소화 및 능률화 도모함.(North: Midlands and South West: East and South East: London)[10]

○ 최근 정책의 흐름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예술교육과 예술의 다양성(Diversity)의 문제임. ACE와 DCMS가 3년마다 맺고 있는 지원약정서에는 ACE의 5대전략 우선순위에서도 다양성과 예술교육을 각기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일례로 ACE 2003년 연례 보고서 표지 모델로 중국계 여성예술가를 선정한 것은 다양성이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중요한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또한 예술교육을 강조하여 예술계와 교육계의 국가적 연합사업인 'Creative Partnership (창조적 파트너십)' 사업을 중요한 정책 전략적 사업으로 실행하고 있음.[11]

2)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Councils)

○ 2002년 지역예술위원회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통폐합되면서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산하 9개 지역 위원회(Regional Arts Councils)로 재구성 되었으며, 각 지역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위원회의 역할은 예술정책의 큰 틀 아래 지역 차원에서의 예술정책 수립과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정 전략 수립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예술위원회의 사업과 예산의 승인 등 주요사안을 결정.

3)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지방정부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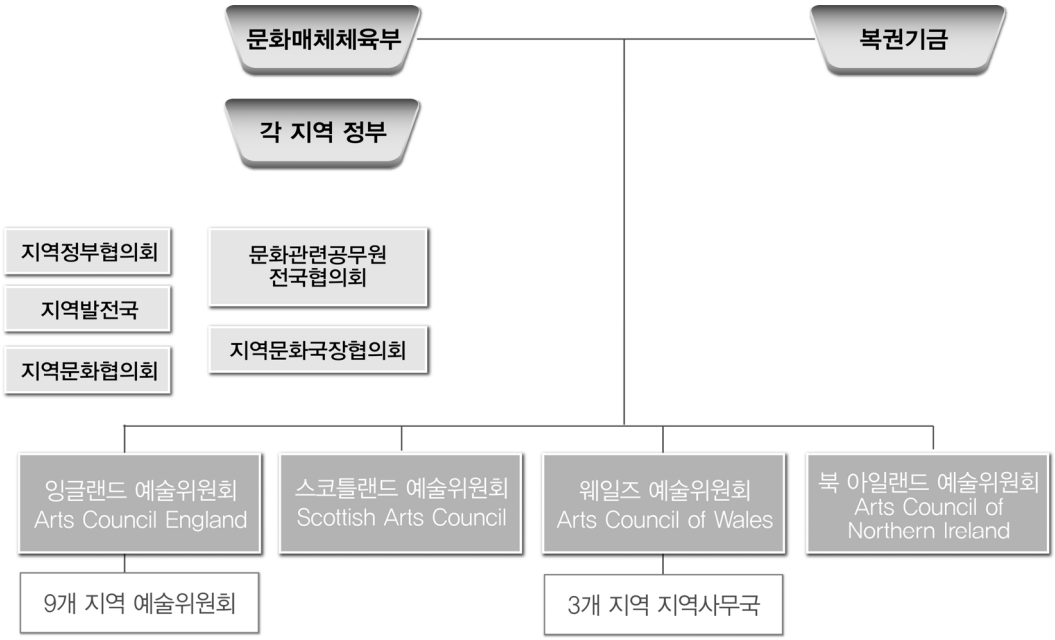
○ 2002년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지역예술위원회가 통합됨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은 단일한 문화예술진흥시스템과 효율적인 기금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됨.
- 잉글랜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지역예술위원회를 위한 통합적인 틀을 제시하였는데, 예술기금 체계와 정책의 공동수립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해 나가는 것임.
- 그것을 위한 4가지 선결과제[12]는 창조적인 경제, 건강한 지역사회, 활기찬 마을, 청소년 참여 확대임.

---

10) 한승준 외. 주요 선진국의 문화예술 지원방식 연구. 한국정책학회. 2009. 99p
11) '분권화 시대의 지역문화발전과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7. 119p 참조
12) 협력플랜 2003-2006의 정책적 목표와 전략을 지역사회와 공유, 협력강화를 위해 2002년 11월에 잉글랜드예술위원회, 지방정부협의회, 전 영국 지방예술공무원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Arts Officials)가

○ 목표 및 전략은 예술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가치와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역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삶의 질적 향상에 예술의 사회적인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임.

〈그림-4〉 영국 문화예술진흥체계[13)]



4)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협력 프로그램

○ 창조적 파트너십: Creative Partnership [잉글랜드예술위원회의 협력 모델: 예술과 교육]

- 건축가, 극단, 박물관, 영화관, 역사유적, 무용 스튜디오, 레코딩 스튜디오, 오케스트라, 웹사이트 디자이너 등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파트너십 형성.
- 문화예술교육 부문에서 문화매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와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의 재정적인 지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제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함.
- 남동부 지역의 예술위원회(브라이튼 지부)예를 들자면, 전체 4,000여개의 학교 중 100여개의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예술교육 프로젝트로서 예술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지역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
- 예술교육의 일종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의 인성이나 행동발달상황을 체크하여 성과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전 지역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창조적 이웃: Creative Neighborhoods [ACE 기금과 지역사회기금의 협력적 조성모델: 예술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했음.

13) 조화연(2008), 『문화예술진흥체계 역할모형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31p.

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함. 기금조성은 예술위원회의 'Challenge/New Audiences' 프로그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New Deal for communities'와 'European Social Fund' 등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음.
- Creative Neighborhoods는 local authorities(지역기관), statutory agency(법정기관), voluntary organizations(자원봉사조직), arts groups(예술단체) 과의 총 6부분의 특화된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2003년 다음의 지역프로그램을 지원하였음. :London boroughs of Barking and Dagenham, Brent, Greenwich, Lambath, Merton, Southwark.

3. 일본의 문화행정체계

○ 1968년 문화청(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이 설립되었으나 1970년 말까지 대개 중앙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답습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일원적인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었음.

-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지방의 시대·문화의 시대" 경향에 따라 지방문화와 지역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중앙정부가 결정한 획일적인 기준 아래에서의 지역개발이 진행되었음.
- 이에 지역사회의 다양성이 파손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경제의 발전과 맞물려 이전 시대에서 간과되어 왔던 삶의 질의 가치, 개별 자치단체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식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와 맥락을 같이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단순 협력 관계가 아닌 상호 경쟁과 협력 및 독자적인 지역 문화 발전노력을 위한 포괄적인 문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하기 시작하였음을 알리고 있음.

○ 1980년대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1990년대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창설 및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을 가능하게 한 '메세나협의회' 발족, 1991년 전통 문화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전통문화예능활용법' 제정 등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2001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본법'(Fundamental Law for the Promotion Culture and Arts)이 제정되어 지방자치제의 제도가 강조되었으며,
- 문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행정, 시민, 기업, NPO)의 협력으로 인한 지방문화 발전,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과 도시간의 아이덴티티 형성과 밀접하게 이어지는 인재육성, 시스템 형성, 공공 공간 만들기 등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있었는데 1990년대 일본은, 거품 경제 붕괴이후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경기대책과 지방의 고용창출을 꾀하기 위하여 기채사업과 보조사업 등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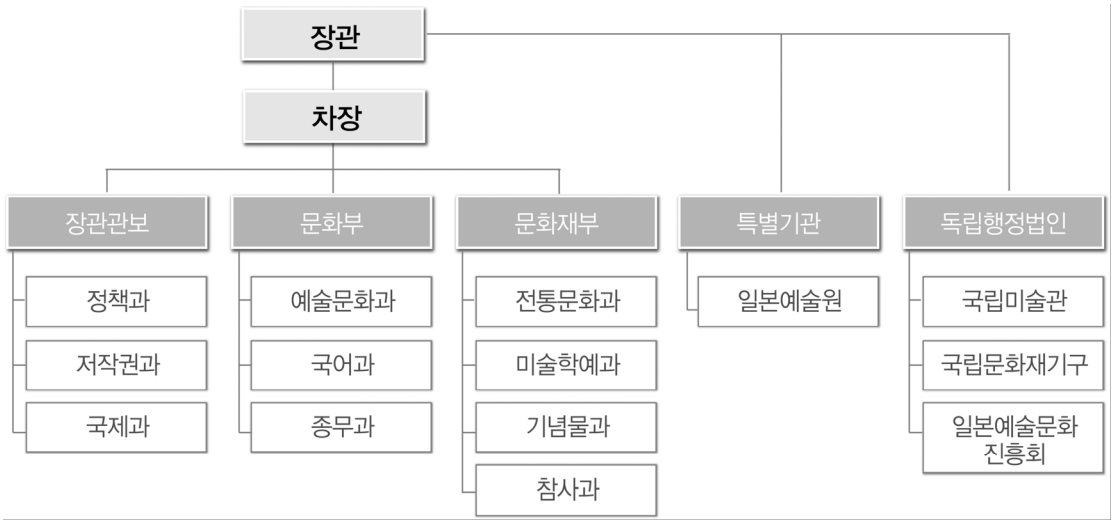
그 결과 일본의 재정적과는 계속 확대되고 장기채무가 급증, 위기적인 상황이 되기도 했음.
- 따라서 국가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삭감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화할 것이 요청되고 지방에서는 세원이양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기반을 공고히 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요구됨.
- 분권개혁은 세원이양과 재정삭감으로 추진 중인데 동시에 국가재정 재건을 위해 국고보조부담금 감축과 지방교부세 삭감 등이 함께 진행 중임.

○ 최근 지역문화정책은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들을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희생과 시민의 연대감 형성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음.

1) 문화청

○ 12개의 중앙행정조직체계 중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 Science and Technology)이 문화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당해부처 내에 문화청(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이 존재하며,
- 문화청은 1968년 문부성 내 문화국(Cultural Bureau of the Ministry of Education)과 문화재보호국(Cultural Ptoperties Protection Commission)의 통합으로 이루어졌음.

〈그림-5〉 일본 문화청의 조직구조[14]



○ 문화청의 행정조직은 장관관보, 문화부, 문화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기관인 일본예술원과 독립행정법인인 국립미술관, 국립문화재기구, 일본예술문화진흥회 등을 두고 있음.

○ 문화청 문화예술 부분에서 중점사업은 ① 문화 예술 창조 활동에 중점 지원 ② 지역의 문화활동 지원 ③ 일본 영화의 진흥 ④ 미디어 예술의 진흥 ⑤ 세계로 웅비하는 신진 예술가 등의 인재 육성 ⑥ 감성 풍부한 문화의 담당자 육성 계획 추진 ⑦ 국제 교류 · 협력 ⑧ 기업 등에 의한 예술문화 활동 지원 ⑨ 문화예술 창조플랜 임.

14) 양혜원(2011), 『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7p

○ 지금까지의 지역문화진흥 시책으로는 ① 무대예술의 매력발견 사업(2009년도 종료) ② 지역인재의 활용에 의한 문화활동 지원사업(2009년도 종료) ③ 진짜 무대예술 체험사업(2010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우수한 공연예술 체험사업"으로 통합) ④ 학교에 예술가 등 파견사업(2010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우수한 공연예술 체험사업"에 통합) ⑤ 문화예술의 창조도시 지원사업(2009년도 종료) ⑥ 지역교육력 재생플랜(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2006년도 종료) ⑦ 지역에서 기획 · 제작되는 영화의 제작지원 ⑧ 어린이 영화감상 보급사업(2009년도 종료) ⑨ 예술경영중점 지원사업(2010년도부터 "예술거점 형성사업"에 통합) ⑩ 지역문화 예술진흥계획 추진사업(2009년) ⑪ 생활문화보급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일본 문화청의 문화비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101,755백만 엔이며 이는 중앙정부 총 예산액인 78,281,690백만 엔의 0.13%에 해당함. 이러한 규모는 2003년 기준 문화청 예산액(101,593백만 엔)이 중앙정부 총 예산액(82,110,925백만 엔)의 0.12%였던 것에 비교하면 별 차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15)]

- 2012년에는 지진 피해 관련한 문화청 특별예산으로 복구부흥대책에 10,257백만 엔을 수립함. 사업내용으로는 ① 문화예술에 의한 피해지역의 '마음의 부흥' 사업 (1,730백만 엔) ② 피해문화재의 복구 등 (4,055백만 엔) ③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방언의 보존과 계승 (153백만 엔) ④ 국립문화시설의 방재 기능 강화(2,889백만 엔)가 있었음.

〈표-13〉 일본 문화청 문화비[16)]

(단위: 백만 엔)

기준년도	중앙정부 예산액	문화청 예산액	비율(%)
2004년	82,110,925	101,593	0.12
2005년	82,182,918	101,605	0.12
2006년	79,686,024	100,648	0.13
2007년	82,908,808	101,655	0.12
2008년	78,281,690	101,755	0.13

2) 일본예술문화진흥회(Japan Arts Council)

○ 독립행정법인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예술문화의 진흥 ·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아울러 일본 전통예능의 보존과 진흥, 현대 무대예술의 진흥과 보급을 도모하고, 기타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1990년 창설된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운용과 국립극장을 관리 운영함.

15) 김세훈(2008),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14p
16) 윤주 외(2008), 『주요외국의 문화예산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실시사업으로는 ① 예술문화 활동에 원조 실시 ② 전통예능의 공개 및 현대 무대 예술의 공연을 실시 ③ 전통예능의 전승자의 양성 및 현대무대예술의 실연가외 관계자의 연수 실시 ④ 전통예능 및 현대 무대 예술에 관해 조사연구를 실시해 자료를 수집 또는 이용에 제공 ⑤ 극장 시설 대출 ⑥ 그 외의 부대업무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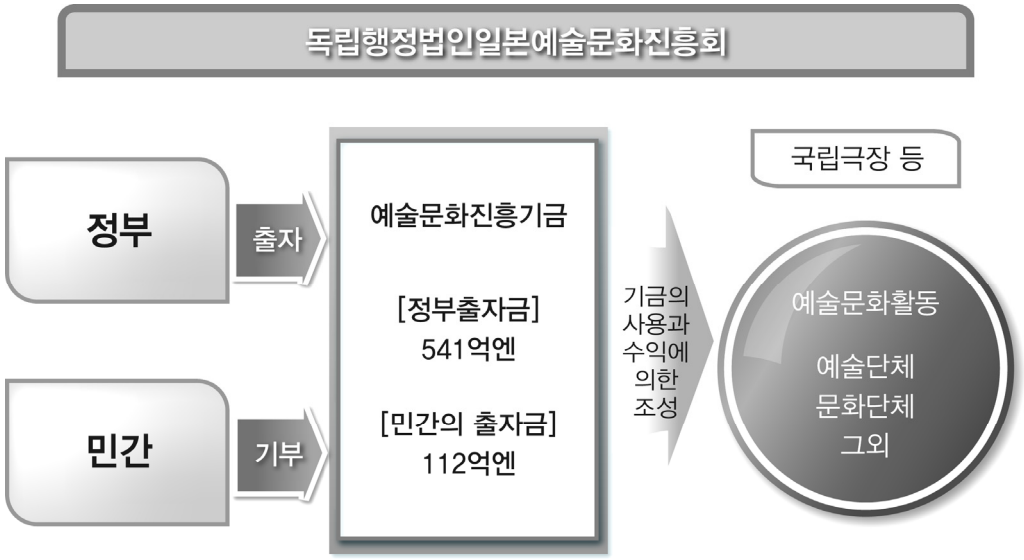
3) 예술문화진흥기금

○ 1989년 12월 예술문화진흥기금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90년 3월 국립극장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창설되었음.
- 지원대상은 예술창조 보급 활동, 지역문화 진흥 활동, 문화진흥보급 단체 활동 등이며 이중에서 70%이상을 예술창조 보급 활동에 지원하고 있음.

○ 예술문화진흥기금은 정부출자금과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데 2001년에는 예술창조 보급활동에 7억 8,465만 엔, 지역문화 진흥활동에 1억 6,580만 엔, 문화진흥보급 단체활동에 1억 5,380만 엔으로 11억 425만 엔을 지원하였음.
- 그러나 기금창설 이후에 금리저하로 인해 지원액은 1991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

○ 지원대상은 ① 예술가 및 예술에 관계된 단체가 실시하는 예술의 창조 또는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②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③ 문화예술에 관한 단체가 실시하는 문화의 진흥 또는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등이 있음.

〈그림-6〉 예술문화진흥기금의 흐름[17]



17)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2.3

4) 사단법인 지역창조

○ 1994년에 지자체 등 지방 공공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치성의 외부단체로 설립된 문화재단임.
- 지역의 문화 · 예술 활동 조성 사업, 지방 공공단체 등의 자체사업의 기획 제작 능력 향상 및 공립문화시설의 활용의 추진 등을 도모하고,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업으로서 그 성과를 널리 환원하고 문화 · 예술의 진흥에 의해 창조성 풍부한 지역 만들기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 · 예술 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음.

○ 대상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4가지 사업이 있음.
- 창조 프로그램 :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전망이 있고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다른 지역의 도움이 되는 저명한 연구가 인정되는 공연, 전시회 사업
- 연계 프로그램 : 혼자 실시하지 못하고, 경비 절감 등 연계하여 처음으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이 본 프로그램을 위해 새롭게 스스로 기획하고 3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제작하는 공연, 전시회 중 "지역 교류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사업
- 연수 프로그램 : 공립문화시설 등의 기획 · 운영에 종사하는 자 및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등 지역의 문화 · 예술 활동을 할 사람의 능력 향상 노하우의 습득 등을 목표로, 지방 공공 단체 등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기획 · 실시하는 실천적인 인재 육성 사업
- 공립문화시설 활성화 계획 프로그램 :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공립문화시설의 역할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등재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 지역창조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① 인재의 육성: 지방단체의 직원, 공립문화시설의 직원연수에 힘을 쏟으며 시·읍·면장과의 교류 도모 ② 재정지원: 지방단체 등의 예술문화 활동을 통한 지역 만들기 조성 ③ 예술가·전문가 파견: 클래식음악 연주가, 현대 춤 연주가들을 공공 공연장에 파견 ④ 공연장·미술관 간의 공동제작 지원: 공립문화시설이 연계된 연극이나 전시회 등의 사업지원 ⑤ 지역 전통예술의 계승 응원: 영상기록이나 계발행사를 재정적으로 지원 ⑥ 예술견본시장 개최: 공연장·극장, 제작자, 아트 컴퍼니가 모이는 견본시장 개최 ⑦ 조사연구: 공립문화시설 등이 지닌 문제들을 연구 ⑧ 출판 홈페이지: 홈페이지, 간행물, 책 등에서 지역의 사례와 정보 제공 ⑨ 데이터베이스: 전국의 공립문화시설의 정도, 인재정보, 전통예술의 영상 등을 발신 ⑩ JAFRA 어워드(총리대신상): 공립문화시설을 기리는 총리대신 표창 시행함.

〈표-14〉 주요국가 문화예술진흥기구 지역협력형사업[18)]

협력의 주체	협력의 대상	협력 방식	사업 및 프로그램
미국국립예술기금(NEA)	· 주/지역정부, 주/지역예술기관, 광역예술기관, 지역문화재단	· 주정부/지역예술기관과 매칭펀드형태 협력 · 예술가창작직접지원	· Challenge America 등 대규모 핵심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별 재정지원(균등교부, 차등, 우선, 선도지원) · 공공-민간-비영리기관의 제휴 활동지원(기금, 협력사업)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와 지역예술위원회	· 중앙-지역간 공동협력 · 예술지원기구 - 지방정부	·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국가적인 협력 (전국단위국가기관, 지역,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 · 지역예술위원회는 지역전문성으로 지역 내 전략사업수행	· 공동지원정책 수립/ 공동예술기금체계수립/ 중앙-지역간연결프로그램 등
일본예술문화진흥회(JAC)	· 지방정부(도도부현), 지역문화재단	· 기금교부 재정지원	·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문화 사업/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

○ 중앙과 지역의 협력형사업의 유형은 협력의 대상(중앙예술위원회-지역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 중앙예술위원회-지방정부, 중앙예술위원회-국가기관 및 행정부처 등), 협력방식(기금의 교부, 매칭펀드, 재정지원 등), 협력형사업의 내용(문화예술창작, 문화예술단체, 문화시설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환경 및 레지던시 구축, 자료정보 구축,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순회 및 투어 프로그램 등), 지원의 형태(공모심의, 프로젝트 개발), 기금교부의 방식(균등배분, 차등배분, 우선배분, 선도사업 지원, 기획 및 전략사업 지원, 특화사업지원 등)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뉨.

18)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10, 54p

제 3장
현행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와 개편 방향

제 1 절 사업, 재원 및 역량에 대한 평가
1. 지역협력형사업 구성의 적정성
2. 기금 배분 기준 및 매칭 시스템
3. 지역·선정단체의 기획·추진 역량

제 2 절 지원체계, 협력관제, 성과체계 평가
1.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2.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 진단
3. 사업실적 성과평가 및 환류

제 3 절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1차 및 2차 설문 결과 분석
1. 1차 설문 결과 분석
2. 2차 설문 결과 분석

제 4 절 문제점 종합 및 개편 방향 제안
1. 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2. 지원프로세스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3.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방향

제1절 사업, 재원 및 역량에 대한 평가

1. 지역협력형사업 구성의 적정성

1) 지역협력형사업의 구성의 변화 및 현황

(1) 연도별 변화과정

○ 지역협력형사업은 기존의 지역배분형사업을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지원행정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업무중복을 개선하고 분권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됨.

○ 지역협력형사업은 2009년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지역협력사업지원(시·도기획지원,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특화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것이,
- 2010년부터는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라는 큰 틀로 나눠지고,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내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으로 구성되어 2012년도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이 추가되면서 사업구성 틀의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옴.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협력형사업의 구성의 큰 틀이 변화 없이 지속된 점은 16개 시·도의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적으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음.

○ 2013년부터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 등 단위사업들이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하나로 묶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4대 사업의 예산 배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됨.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유지됨.

(2) 단위사업별 특징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하 '육성지원사업')
- 육성지원사업은 전통적인 지역문예진흥기금 사업과 2009년까지 지속되어 오던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을 통폐합한 사업으로 '소액다건' 형태로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지역문예지원사업의 토대가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예술인수 대비 지역별 지원신청 건수의 과다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력을 검증해

볼 수 있으며, 선정비율 및 건당지원금을 통해 지원주체의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파악해볼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해낼 수 있음.
- 육성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분야 설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도나 문화재단의 지원서비스 수준 및 지역예술계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 담당여부, 지역예술활동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 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되고 있음.

○ 시·도기획지원사업(이하 '기획지원사업')
- 기획지원사업은 2009년의 '시 · 도 기획지원' 및 '지역문화예술특화지원'사업을 통폐합한 사업으로 지역협력형사업 단위사업 중 지역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기획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사업임.
- 지원금의 지원총액은 적으나 지역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1-2건의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도 생겨나고, 지원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지원하거나, 재단이 주도가 되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적용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기획지원사업은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적인 지원사업 설계와 기획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이하 '레지던스사업')
- 레지던스사업은 2010년 신규로 시작된 정책형 사업으로 지역에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 레지던스 공간을 확대하고, 민간 레지던스 공간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예술인들 간의 교류,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 공연예술단체도 참여하던 단계에서 2012년부터는 시각예술 위주로만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전국에 레지던스 창작공간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가져왔음.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이하 '우리가락우리마당')
- 우리가락우리마당은 시민참여형 전통예술 공연사업으로 공원, 터미널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다수의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공연 프로젝트로서 지역문화활성화와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해 옴.
- 지역의 국악관련 전문공연예술단체 또는 협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연중 상설로 공연이 진행되어 매주 또는 매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각에 국악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일반 대중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생활공감형 문화사업으로 호평을 받고 있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하 '공연장상주사업')
- 공연장상주사업은 2009년까지 시행되어 온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지원 사업을 포괄하며 2010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빠른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임.
- 문화부의 정책성 지원사업으로 지역 공공 공연장 활성화 및 가동률을 제고하고 창작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임.
- 하지만, 예술위원회의 중장기 지원전략과 지역의 공연장 상주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시작된 측면이 있으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지원예산으로 인해 하드웨어가 빈약하고 전문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함.

- 공연장 여건과 전문공연예술단체 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지역에 보다 적합한 성격의 사업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하지만, 2년간 지속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면서 지역에 따라 큰 성과를 내며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공연장 활성화와 공연단체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인해 타 장르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라는 반발은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음.

(3) 지역협력형사업의 계량적 성과

○ 지원 수혜단체 수 비교

- 지원단체 수의 지역별 비교를 통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술단체(예술인)들이 지역협력형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판단해보기 위하여 2011년도와 2012년도의 각 사업별 지원 사업건수를 비교해 보았음.
- 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소액다건'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존재하지만, 점차 지원선정률 권고 기준인 60% 이하에 맞춰 선정하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연차별 지원선정 단체 수가 줄어들고 있음.
- 반면 공연장상주사업은 지원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혜단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

〈표-15〉 2011-2012년도 각 사업별·지역별 지원 수혜단체 수 비교

구분	사업명							
	육성지원		기획지원		레지던스		공연장상주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서울	504	499	–	–	–	–	33	34
부산	391	329	1	1	4	4	5	8
대구	332	304	3	3	2	1	7	8
인천	106	111	3	5	5	3	6	7
광주	198	164	5	5	4	4	6	11
대전	207	201	1	2	3	5	2	6
울산	123	114	1	–	–	2	5	4
경기	553	282	7	13	7	6	14	17
강원	580	508	3	4	5	6	6	8
충북	253	191	18	6	3	3	4	8
충남	361	399	1	2	3	3	3	9
전북	674	635	11	10	4	6	4	11
전남	671	530	0	4	3	6	4	10
경북	278	293	9	8	4	6	4	7
경남	466	375	19	2	8	6	2	9
제주	130	119	5	4	7	4	4	11
합계	**5,827**	**5,054**	**87**	**69**	**62**	**65**	**109**	**168**

2) 현행 지역협력형사업의 구성의 장단점

(1) 단위사업별 사업별 추진 성과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육성지원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토대가 되는 사업으로, 지역예술창작활동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며, 새로운 창작활동을 독려하는 역할을 해왔음.
- 지역협력형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정책과 의지에 따라 1:1매칭에서 1:4매칭까지 매칭이 이뤄져 전국적으로 약 5천여 건에 달하는 사업이 지원을 받아 국내 예술창작활동의 기본 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이 열악하고 영세하여, 지원금에 상당부분 의존 하면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음. 지역별 수혜단체 선정 시 지원 선정률을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 해오고 있으며,
- 재단이 설립된 지역은 대부분 60% 이하의 선정률을 지키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적게는 25%부터 많게는 80% 까지로 큰 편차를 보임.
- 육성지원사업의 세부 지원 분야는 장르별로 구분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지만 몇몇 지역은 사업성격별 구분, 전문예술활동과 시민예술활동의 구분 등으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설계를 시도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2012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원로예술인들의 지원 사업 접근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젊은 예술가들의 지원사업 접근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 시·도기획지원사업

- 기획지원사업 도입 초기에는 각 지역에서 다른 사업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 특혜성 지원을 하거나, 장르별로 집중지원이 필요한 특정장르 중심의 창작활동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음.
- 최근 1~2년 동안 기획사업의 취지가 깊이 있게 공유되면서, 몇몇 시·도에서 기획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가 이슈가 되는 등 지역의 특화된 고유사업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음.
- 2012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의 아티언스 페스티벌, 부산의 청년문화수도 사업과 같이 지역의 강점을 살린 특화된 기획사업이 개발되면서, 지역협력형사업 지원금 외에 시·도의 별도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음.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시·도의 기획력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레지던스 사업 역시 초기에는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는 지역 예술인들과 예술단체가 부족하여 신청자체가 부진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시·도 및 재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으로 점차 지원사업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레지던스 활동을 해왔던 공간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에 그 존재감을 알리는 성과가 나타남.
- 특히, 레지던스 공간별 참여 아티스트 모집 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전국의 예술인들이 서로 교류하거나, 국제 레지던스를 통해 국제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성과가 나타남.
- 레지던스 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시·도나 재단이 직접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시각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함.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형 레지던스사업이 확대 되면서 의미 있는 교류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공연장상주사업은 지역별·주체별로 지원사업의 극단적인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주사업의 여건이 좋지 않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다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상주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내어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모두 성장하는 시너지효과가 발현되고 있으며,
- 특히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2년 사업 종료 후에도 3년~4년까지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생겨나 우수한 사업성과 모델을 만들어낸 점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로 보여 질 수 있음.
- 상주사업 지원과는 별개로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상생적인 결합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양측의 자생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통해 공연장상주사업이 지역의 여건과 잘 맞아떨어질 경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임이 확인됨.

(2) 지역협력형사업 구성의 성과와 한계

○ 4년(2009-2012) 간 육성지원사업, 기획지원사업, 레지던스사업, 공연장상주사업 등으로 나눠져 추진되어온 지역협력형사업은,
- 지역의 예술창작의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 지역 기획력을 성장시키고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시범적 성격의 사업, 시각예술 중심의 창작여건 및 교류여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연장 활성화와 상주 공연단체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 등으로,
- 각각의 사업 취지에 맞게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1.0 시대 지역협력형사업의 대미를 장식하는 성과를 보여 옴.

○ 하지만,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문화예술 창작여건, 지원여건, 향유여건이 비교되기 힘들 정도로 편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 전국 16개 광역 시 · 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양적 배분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일괄적으로 배분해온 방식은 지역의 고유성 · 차별성을 근거로 한 지원역량 강화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이 지적되어 옴[19].

19) 2013.1 개최된 사도 문화재단 대표자 회의 세미나

○ 지역별로 예술인 수, 지자체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수준과 지원의지, 공연장 여건과 활성화 수준, 수요자들의 예술향유 수준과 접근성, 지원주체의 지원역량 등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동일한 사업이 전혀 다른 수준의 성과를 보인 점은,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양적 배분의 관점의 하향식 기획, 지원이 갖는 한계임이 드러남.

○ 지난 4년간 지역문화재단이 6개가 설립되어 16개 시·도 중 4개 지역(충남, 울산, 전북, 경북)을 제외한 12개 지역이 일정 수준에서 경쟁하는 형식적 구도가 만들어졌으나,
- 재단 설립연차에 따른 역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 상황에 따른 재단의 운영방식과 역할에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남.

○ 지역별 고유성과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시행은 지역의 차별화된 지원사업 영역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음.

○ 16개 시·도의 기본 지원사업인 육성지원사업의 지원현황을 비교해보면,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음. 지역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의 설계가 절실히 요구됨.

〈표-16〉 2012년도 시·도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신청건수와 지원건수, 선정률 비교

(단위: 백만 원)

지역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률	선정률 순위
서울	2,182	499	22.9%	1
부산	812	329	40.5%	4
대구	589	304	51.6%	6
인천	330	111	33.6%	3
광주	344	164	47.7%	5
대전	336	201	59.8%	11
울산	211	114	54.0%	8
경기	849	282	33.2%	2
강원	943	508	53.9%	7
충북	336	191	56.8%	9
충남	521	399	76.6%	15
전북	1,034 (956+78)	635 (611+24)	61.4%	13
전남	850	543	63.9%	14
경북	361	293	81.2%	16
경남	644 (515+129)	375 (311+64)	58.2%	10
제주	194	119	61.3%	12
합계	**10,535**	**5,067**	**48.1%**	

2. 기금 배분 기준 및 매칭 시스템

1) 지역협력형사업의 기금지원 구조

○ 지역협력형사업의 기금지원 구조를 통해서 예술위원회의 전체 사업에서 지역문예지원사업이 갖는 비중과 의미를 파악해봄과 동시에 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한 16개 시·도의 역할증대 가능성, 지원금 배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볼 수 있음.

○ 예술위 총 지원사업 중 지역협력형사업 예산의 비중 변화

- 2012년도 예술위 총 지출예산규모 중 지원사업분야에 해당하는 경상사업비 소계 중 지역협력형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총 109,869백만 원 중 20,250백만 원으로 18.4%에 달하고,
- 2013년은 총 108,941백만 원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0억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지역협력형사업의 집행계획은 20,560백만 원으로 3억 원 가량 늘어나 18.9%에 달함.
- 전반적으로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를 통한 생활 속 예술활성화의 지원비중이 매우 높음을 볼 수 있음. 이것은 기금의 성격상 소외계층 문화활성화에 쓰여 지는 목적성 기금인 복권기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17〉 2011~2013년 예술위 지원사업 중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비중

(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11년 (최종)	2012년 (9월 현재)	2013년 계획
경상사업비	108,959	102,376	108,491
	100%	100%	100%
예술창작역량강화	20,771	15,358	20,358
	19.1%	15.0%	18.7%
문화예술공간운영	2,364	1,278	– (타 사업으로 이관)
	2.2%	1.2%	0.0%
생활속예술활성화	48,000	55,520	57,621
	44.1%	54.2%	52.9%
지역문화예술진흥	19,991	20,171	20,560
	18.3%	19.7%	18.9%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17,833	10,049	10,402
	16.4%	9.8%	9.5%

○ 사업별 예산의 차이

- 2012년 지역협력형사업(총액 20,250백만 원)의 단위사업별 기금 배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공연장상주사업의 지원금이 전체사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 9,890백만 원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6,560백만 원 (16개 시·도 지원)
- 시·도기획지원사업 1,426백만 원 (15개 시·도 지원)
-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620백만 원 (16개 시·도 지원)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1,284백만 원 (15개 시·도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060백만 원 (16개 시·도 지원)
– 지자체공연예술활성화지원 2,000백만 원 (9건 지원)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지원 300백만 원 (1건 지원)

2) 지역협력형사업의 배분기준

(1) 지역협력형사업의 배분기준

○ 지역협력형사업의 배분기준은 매년 약간씩의 변화가 있어왔음. 기본적으로 인구수, 재정의존도 역산, 시·도 매칭정도, 예술인수 등 여러 변수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여 예산을 배분하여 왔음.

2010년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배분 기준

소정기준 80%(예술인 수 20% + 문예활동수 8% + 인구수 28% + 재정의존도 20% + 기금매칭노력율 4%) + 평가배분 20%

○ 인구수 및 예술인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지원금 배분이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재정의존도 역산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배분을 해왔으나,
– 그로 인해 서울,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어옴.

○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기존의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배분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뤄지고 있음.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배분은 예산총액(9,890백만 원) 중 서울 12.5%를 배정한 후, 15개 시·도(서울시, 세종시 제외)는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인구수 30%, 재정의존도 역산 30%, 시·도 매칭 정도 20%)에 의해 배분, 단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타 시·도의 배분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줄어들지 않게 조정.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공공공연장수 10%, 공연예술 단체수 30%, 재정의존도 역산 20%, 시·도 매칭 정도 20%)을 적용하여 배분.

3) 지역협력형사업 지원금의 매칭기준 및 현황

○ 지역별로 지원사업에 대한 1:1 매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에 따라 지역의 재정 자립 수준에 따라 매칭기준을 달리 제시하고 있기도 함.

- 공연장상주사업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은 5:5 매칭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지역은 7:3 매칭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연차별('10~'12년)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매칭 기준표는 아래 표 18번과 같음.

○ 2010년부터 3년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총액 중 국고지원금액 대비 지역매칭비율은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그것 보다는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의지가 매칭예산 결정에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전라북도와 강원도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매년 1:2 이상의 매칭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음.

○ 아래 도표는 지난 3년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역별 매칭비율을 확인해보기 위하여 예술위 지원금(중앙 지원금)과 지역매칭예산을 비교해 본 도표임.

〈표-18〉 '10~'12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시도별 매칭율 비교

(단위: 백만 원)

구분	2010				2011				2012			
	합계	중앙지원	지역매칭	매칭비율	합계	중앙지원	지역매칭	매칭비율	합계	중앙지원	지역매칭	매칭비율
서울	14,069	4,749	9,320	1.96	11,127	2,589	8,538	3.30	8,416	2,928	5,488	1.87
부산	2,758	1,068	1,690	1.58	2,758	1,036	1,722	1.66	2,846	1,000	1,846	1.85
대구	2,592	996	1,596	1.60	2,532	944	1,588	1.68	2,820	1,071	1,749	1.63
인천	2,386	781	1,605	2.06	1,906	754	1,152	1.53	1,972	823	1,149	1.40
광주	1,511	801	710	0.89	1,658	829	829	1.00	1,730	865	865	1.00
대전	1,466	708	758	1.07	1,656	698	958	1.37	1,936	783	1,153	1.47
울산	1,174	581	593	1.02	1,169	583	586	1.01	1,180	594	586	0.99
경기	4,718	2,135	2,583	1.21	4,088	1,979	2,109	1.07	4,000	1,950	2,050	1.05
강원	2,870	917	1,953	2.13	2,900	892	2,008	2.25	2,718	1,049	1,669	1.59
충북	1,806	858	948	1.10	1,863	800	1,063	1.33	1,693	855	838	0.98
충남	1,710	897	813	0.91	1,688	844	844	1.00	2,087	909	1,178	1.30
전북	4,740	1,051	3689	3.51	3,740	1,017	2,723	2.68	3,718	1,058	2,660	2.51
전남	2,410	985	1,425	1.45	2,272	916	1,356	1.48	2,031	1,004	1,027	1.02
경북	1,946	973	973	1.00	1,756	878	878	1.00	1,656	986	670	0.68
경남	2,470	1,094	1,376	1.26	2,283	1,027	1,256	1.22	2,355	1,040	1,315	1.26
제주	1,412	706	706	1.00	1,412	705	707	1.00	1,591	886	705	0.80
계	50,038	19,300	30,738	1.59	44,808	16,491	28,317	1.72	42,749	17,801	24,948	1.40

* 중앙지원 = 문예진흥기금 배분액

3. 지역·선정단체의 기획·추진 역량

1) 시·도 및 문화재단의 기획·추진역량

○ 서울 수도권과 광역 시·도, 도 단위 지자체의 기획역량 및 지원사업 추진역량의 편차가 심하며, 서울·수도권 지역의 기획, 추진역량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전국의 지역문예지원사업을 선도하고 있음.

○ 재단 설립지역과 미설립 지역의 편차도 큰 편으로, 2013년 초 현재 17개 시·도(세종시 포함) 중 5개 시·도만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3년 이내에 대부분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 재단이 설립된 지역도 설립 년 수에 따른 역량의 차이가 큰 편이지만, 설립 2~3년차의 재단임에도 상당한 수준의 지원역량을 갖춘 지역도 있음.

○ 기획지원사업의 경우 시·도 및 재단의 자체 기획역량 확보를 통한 추진을 요구받고 있어 시·도 및 재단의 기획역량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 및 재단의 인력이 업무에 비해 부족한 편으로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몇몇 지역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 신설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 안정을 위한 처우개선과 함께 기획역량 확보를 위한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음.

2) 선정단체의 기획 · 추진역량

○ 시·도별로 지원사업 공모 신청 대상 예술단체(예술인)의 지원 조건을 엄격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서 지역 전문예술인과 예술단체 위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문예술단체와 법인에 대한 우대를 명시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전문예술인과 아마추어 예술인이 지원신청 및 심의과정에서 엄격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음.

○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 예총, 민예총 등이 지원 사업을 상당부분 독식해오고 있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선정단체의 기획, 추진역량의 파악을 위해서는 선정, 심의에 보다 평가에 비중을 두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 단체를 선별하여 차기년도 심의과정에 환류를 통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2절

지원체계, 협력관제, 성과체계 평가

1.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1) 사업운영체계

○ 지역협력형사업의 운영체계는 문화체육관광부(정책결정 및 지원방향 확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6개 광역시·도 또는 지역문화재단(세종시 제외)의 체계를 갖고 있음.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20]는 예술위원회의 독립기구로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협력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 조정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예술위원회와 16개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매개 기능을 해오고 있음.

○ 한지협 의장은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 및 광역 지역문화재단이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한지협은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16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 예술위원회의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아울러, 16개 지역의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업무, 워크숍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정부차원에서 지역문화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통된 대응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기구가 구성되었음.

○ 현재 예술위원회,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광역문화재단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기초문화재단협의회) 간에 소통채널은 만들어져있지 않은 상황임.

2) 한지협 운영의 성과 및 개선점

○ 한지협은 16개 시·도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며 예술위원회의 의견과 정책을 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3개 권역(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파견된 지역문화협력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과 예술위와의 소통채널을 민감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성 사업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지협의 기능 확대 및 역할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20) 한지협은 2007년 문예진흥법 제 36조에 의한 지역문화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지역협력형사업의 홍보 및 안내, 협의 및 조정, 평가의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역협력형사업 기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포럼, 정기회의, 해외연수사업,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함.

○ 한지협의 16개 시·도와 예술위의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예술위의 지역협력형사업 추진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는 소극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한지협이 실질적인 협의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갖춰 지역문화지원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2.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 진단

1)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현황

○ 예술위원회에서는 2010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3개 권역에 1명씩의 지역문화협력관을 파견하고 있음.

○ 지역문화협력관은 진흥원시절부터 예술위원회에 근무하여 15년 이상의 근무한 간부급 직원을 파견하여 권역 내 시·도 및 재단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각종 평가, 심의,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중부권 문화협력관은 대전문화재단, 호남권 문화협력관은 광주문화재단, 영남권 문화협력관은 대구문화재단 내에 근무지를 두고 권역 내 지역협력형사업을 포함한 예술위원회 관련업무에 대한 현지 소통채널 역할을 해오고 있음.

○ 한 지역에서 1년~2년 간 근무하고 다시 본부로 돌아가거나 담당권역을 바꿔 교체 순환근무를 하고 있음.

2)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의 성과 및 개선점

(1)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현황

○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의 성과
- 협력관제는 예술위원회가 지역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 30여년의 문예진흥원 시기와 예술위원회 출범 초기가 지역에 대한 의례적 관심과 최소한의 지원을 했던데 비해 지역예술인들과 창작활동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해옴.
- 16개 시·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외부 심의관 역할을 하거나, 전문가평가, 상담 및 컨설팅의 역할을 통해 지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아나가고 있음.
-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전문가로서 시·도 담당자들에 대한 자문, 코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지역 예술계의 현황과 이슈들을 중앙에 전달하여 예술위원회가 지역 문화예술계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촉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지역협력형사업의 현장평가 및 워크숍에 참여하여 지역평가의 정밀도,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파견된 협력관에게는 지역현장을 파악하고, 예술위원회의 정책과 지원설계가 지역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지역과 예술위원회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표-19〉 지역문화협력관 활동현황[21]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전년 대비
지원심의	56	134(14.7%)	239%
사업설명회	13	41(4.5%)	315%
컨설팅	177	179(19.6%)	101%
모니터링	219	271(29.6%)	124%
연구교육	36	95(10.4%)	264%
한지협	49	42(4.6%)	86%
기타	140	152(16.6%)	109%
계	690	914(100.0%)	132%

(2) 지역문화협력관제 개선과제

○ 협력관제의 확대

- 협력관의 지원, 컨설팅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3명의 협력관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권역을 나눠 협력관 파견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문화협력관으로 예술위원회 직원을 파악하는 방안과 중앙의 지역문화전문가들을 협력관으로 위촉하여 기존의 협력관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예술 현장에서 지역밀착형 지원설계의 방향을 도출하고,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소통채널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협력관 역량의 강화와 업무매뉴얼의 마련

- 퇴임직전의 예술위 인력을 협력관으로 파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지원사업 추진경력을 가진 중견 직원들의 파견을 통해 협력관으로 습득한 지역문화 현장의 경험과 정보가 본

21) 지역 2.0 워크숍 참고자료 〈지역문화협력관 활동현황〉

부 복귀후의 지원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협력관의 지역파견 전에 협력관들의 지역문화협력활동 및 파견지역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에 파견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통해 개인적 역량편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문화협력관들이 각각 다른 전문성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 개별 예술가들에 대한 자문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방향제시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원정책과 지원사업 지침 등 공식적이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3명의 협력관이 일관된 예술위원회의 입장에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매뉴얼을 만들거나, 실시간으로 3명의 협력관이 소통하면서 일관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실적 성과평가 및 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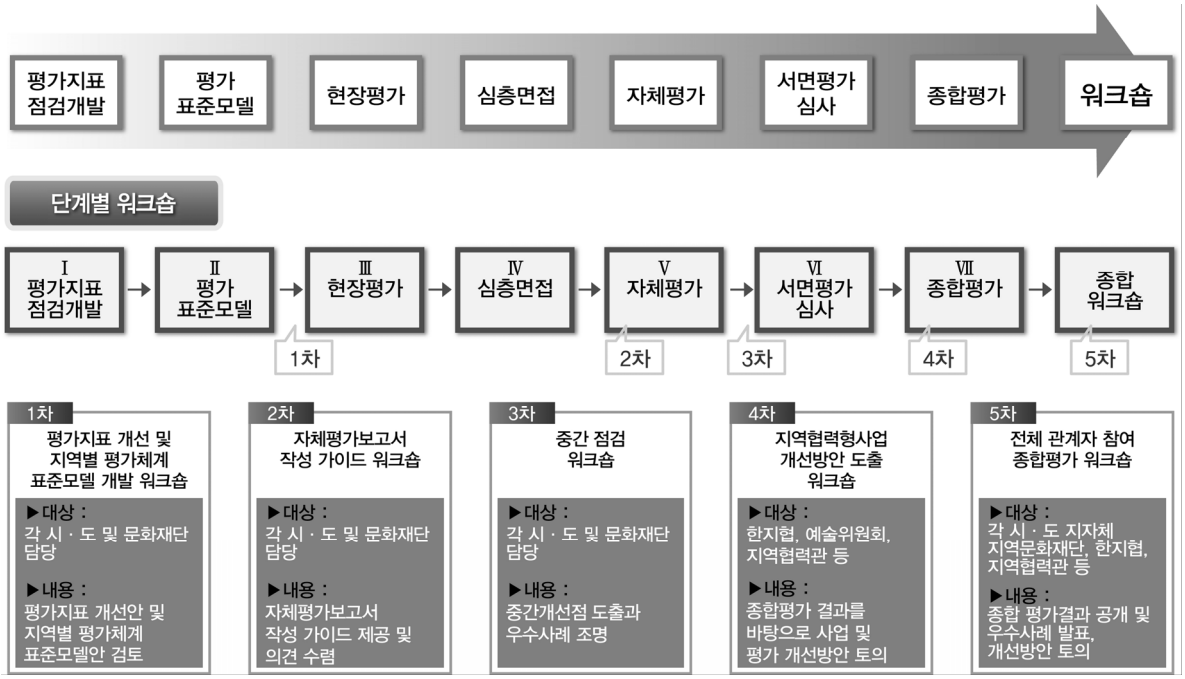
1) 현행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및 환류체계

(1) 현행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의 특징

○ 3년(2010-2012) 간 꾸준히 평가체계의 유지를 통해 사업 평가의 안정적인 기반 확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의 특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음.
  첫째, 현장모니터링 - 심화인터뷰 -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등 단계별 다면평가
  둘째, 등급을 매기기 위한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지원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셋째, 전국 16개 지역을 동일한 포맷으로 빠짐없이 순회하며 평가하는 현장방문 평가
  넷째, 지역별 특화사업을 독려하고 평가항목으로 평가하기 힘든 지역별 특장점을 평가하기 위한 가산점 항목의 운영
  다섯째,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워크숍 개최
  여섯째,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위원단의 높은 전문성
  일곱째, 지역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문화협력관의 참여
  여덟째,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평가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연중 지역문예지원사업의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피드백
  아홉째, 평가결과를 따른 지원금 배분에 반영하는 평가 인센티브제 운영의 평가 환류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연간 지원사업의 평가 프로세스
- 평가프로세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0개월이 넘는 장기간의 평가기간 중 5차례의 평가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지원역량의 동반상승을 목표로 한 컨설팅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7〉 2010~2012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프로세스



2) 평가결과 (2009년~2011년까지의 평가결과 종합)

(1) 연차별 평가결과 종합

○ 도입기 : 2009년

- 2009년은 예술위원회가 자체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과 지표를 설계하고 4개월여의 기간 동안 현장평가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 평가환류 및 우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어 평가과정에 대한 지역의 이해나 관심, 협조가 부족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외부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음.

○ 정착기 : 2010년~현재까지의 평가

- 2010년부터는 외부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음.
- 2010년부터는 현장평가, 심화인터뷰, 자체평가보고서 평가 등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됨.
- 2010년까지 3년 간 동일한 평가시스템이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평가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3년 간 평가 종합

- 지난 3년간의 평가결과, 재단이 설립된 지역과 수도권지역의 지원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점차 지역의 지원역량이 동반상승하면서 지원체계의 형식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20〉 2009~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종합평가 결과비교

등급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가등급	대구, 부산, 서울, 인천	강원, 서울, 인천	대구, 서울
나등급	경기, 전북, 제주, 충북	경기, 대구, 제주	강원, 경기, 광주, 부산, 인천
다등급	경남,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광주, 대전, 부산	경남, 대전, 제주
라등급	강원, 경북, 충남	전남, 전북, 울산	울산, 전남, 전북
마등급	-	경북, 충남, 충북	경북, 충남, 충북

3) 개선과제

(1) 현행 평가체계의 개선과제

○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과정평가에서 성과평가로의 전환
- 지난 3년간의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시스템은 주로 지역의 지원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평가의 측면이 강했으며, 선정률, 매칭률 등 정량적인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16개 시·도의 기본적인 지원역량이 일정한 수준에 달해 과정평가로는 지역별 변별력을 평가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질적평가와 성과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평가 항목과 지표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평가시스템의 개선
-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일 진행되는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연중 지역별로 1~2차례 사업현장 참관하고 사업 참관객과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현장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함.
- 현장평가 시 방대한 서류를 출력하고 복사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파일화된 자료를 검토해볼 수 있는 PC를 준비하여 페이퍼 없는 현장평가를 진행하여 지역 담당자들의 준비시간을 최소화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임.
- 2012년부터 도입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공유와 개선점 토의를 위한 워크숍을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 함.

○ 평가환류의 개선
- 당해 연도의 평가환류가 차기년도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차차기 년도에 반영되는 것을 보완하고 평가환류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 지역에는 차기년도 교육,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의 환류장치를 마련함.
- 2012년도부터 각 지역 예술인 인터뷰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강하고, 지역 대표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보고서에 예술인 의견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제3절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1차 및 2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1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012년 11월 13일부터 11월 28일까지 4개 시·도(울산·충남·전북·경남)와 12개 광역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15개 분야 19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접수함.

○ 아래의 내용은 문항별 답변 내용을 요약(부록 참조)한 후, 답변 내용별로 총괄하고 이를 종합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본 장 제1절 및 제2절의 내용과 함께 제4절에 반영하였음.

■ 예술위원회 지역 문예진흥사업의 방향성

○ **종합 분석 :** 설문 01과 02는 예술위원회 지역 문예진흥사업의 방향성에 관한 설문으로,
- 지역문화재단은 예술진흥과 문화향수·복지,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모두 시행하고 있으므로, 예술위원회가 중앙 차원의 지역문화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 지역 예술인(단체) 발굴·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 시·도 간 문화 교류·협력의 허브 역할,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지원 강화, 전문 예술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시행 등이 필요
- 국가위원회로서의 지위권을 확보하여 중앙 차원의 조율과 문화기관 통폐합을 주도하는 한편, 사업의 지역 이관과 지역문화재단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0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중앙정부, 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다양한 차원(예술가 지원, 시민문화향수권 확대, 예술복지_바우처, 예술교육, 도시 활성화 등)에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예술위원회가 현재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맡고 있는 기능·역할(기금지원,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 사업 평가, 한지협 운영 지원 등)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기능(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및 〈2〉 답변 총괄**
- **지역문화사업 통합 및 연계 필요(8)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교육사업과 문화복지사업의 기능과 통합 및 연계, 문화부 및 문화부 산하단체의 지역문화사업들을 통합하여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대구), 문화부 산하 타 기관과 역할 분담 및 협력체 구성 등 기관 간 협력모델이 필요(광주),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통합전략이 반드시 필요(대전), 문예진흥, 문예

교육, 문화복지의 긴밀히 연계집행 주도(경기/경남), 문화부 산하단체 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확한 역할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단체 간 사업연계가 필요(강원), 산하단체 간 사업 연계가 필요(충북), 산하단체 간 유사 중복사업과 동일 예술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전남)

- **지역 예술가·단체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7) :** 지역의 유망예술가(단체) 발굴·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서울), 지역의 우수한 인력과 작품을 지원과 해외 소개·진출 지원이 필요(대구), 단순한 교류지원을 넘어선 해외문화예술행사와 연계된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광주), 지역예술가(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과 인프라지원 강화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개발 육성(대전), 창작역량강화 사업에 집중하여, 지역예술인 발굴과 함께 보다 나은 창작기반 조성사업에 역량을 결집(전북), 예술분야의 주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열악한 예술 환경에 처해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경북), 신진작가·예술가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제교류의 매개 역할(제주)
- **시·도간 문화교류 활성화 사업(5) :** 시·도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획형 지원사업(서울), 지역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육성(대전),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개발(강원), 시·군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필요(충남), 지역 간 교류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전남)
- **중앙 차원의 조율과 조직 통폐합 역할(4)** : 국가위원회로서의 명실상부한 좌장 역할(재원조성, 정책·모델개발, 평가·환류, 사례연구와 제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및 정책혼선과 예산낭비를 조정하기 위한 문화기관의 통폐합을 주도(부산), 다양한 사업 확대보다는 내실 있고 확고한 지위권 확보가 중요(울산), 교육진흥원은 예술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경기), 지자체와 정부의 문화정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조율과 지원(제주)
- **사업의 지역 이관과 재량권 부여(4)** : 예술위원회 전체 지원사업을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과감한 지역이관으로 지역의 자율성 및 자생력 확보(부산), 지역문화재단의 경영 자율성 확대방안 마련 및 추진,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육성·활성화 지원 및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지역협력형사업 폐지(대전), 지역재단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세부사업으로 전환 사용토록 함.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축소하여 지역재단으로 분산(충북), 각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지원 확대(전남)
- **재단 역량 강화 프로그램(3)** : 지역문화재단의 전문 예술행정 역량 강화 지원(대전), 지역문화재단 실무자 역량 강화를 장기 프로그램(실무자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이 필요(강원), 재단 신규직원들에 대한 문화예술행정 교육 프로그램(전남) – 고유 설립 목적사업에 주력(2) : 예술위원회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강화(광주), 예술위원회 고유사업의 보완·확대로 정책의 틀을 짠 후, 중복되지 않는 신규사업을 추가(충남) – 법적 토대 마련과 재원 확보(2) : 전체 지역협력형사업의 재원확보 노력(서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적 토대의 마련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및 실행 계획 확보(인천) – 컨설팅 및 카운슬링 기능(2) : 정책 제안 및 컨설팅 기능 추가(전북), 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카운슬링(제주) – 지역문화사업 홍보 강화(2) : 지역문화

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언론, 방송,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알리는 홍보기능 강화(서울), 지역문화진흥사업 관련, 예술위원회의 기관 홍보와 사업성과에 대한 이미지 강화(울산)

- **기타 의견(8) :** 지역 우수작품·작가를 보급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서울), 특정 영역의 사업에 대해 재원 및 행정 지원을 집중(인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향유권 확대(문화바우처 포함)에 집중(강원), 문예진흥, 문예교육, 문화복지 3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발전(경기/경남),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면 될 것 같은데, 한지협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경북),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광주), 현 한지협의 평가방식은 있는 집 더 밀어주기식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현행 시·도간의 분별없는 비교에 따른 평가는 지양(충북)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문예진흥사업 운영 방안

○ **종합 분석**

- 현행 운영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7곳)과 지역문화재단에 자율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7곳)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도 네 곳 중 세 곳(울산, 전북, 경북)이 현행 운영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면, 나머지 한 곳(충남)은 체계 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함.

〈03〉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별 기금 배분(사업유형 지정) – 시·도의 지방비 매칭 – 예술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제시 – 지역의 사업 수행 –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지역협력활동 – 지역의 사업성과 보고 – 예술위원회의 사업 평가·환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사업운영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더 바람직한 대안(개선안)이 있다면 어떤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현행 운영방식 유지 필요(7) :** 현행대로 예술위원회의 사업지침은 필요(대구), 기본 프로세스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검토 필요(대전), 현행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운영 형태가 적절(울산),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연말 사업결과 보고서 서식을 간소화 필요(전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경북), 현행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경남), 현재 형태에 대해 만족(전남)
- **지역재단에 자율적인 재량권 부여(7) :** 사업유형 제시와 지역별 전체 사용예산을 배분 후, 자율권 부여(서울),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역에 이관(부산), 지역 현실에 맞고 최대한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는 재정·행정 지침 필요(인천), 지역적 환경 반영을 위한 세부사업 선택의 자율성 필요(광주), 기금수준 결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 자체적으로 사업별 사업비 결정 운영(강원), 사업 규모가 일률적을 설계되어 불

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재단의 자율적인 조절이 가능해져야 함(충북),

- **자율적 운영방식 이원화(1) :** 신생 광역문화재단의 경우에는 현행 방식대로, 설립 5년차 이상의 문화재단은 수도권 문화재단과 같이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경기).
-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은 인식(1) :** 특별한 방안은 없으나, 체계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봄(충남).
- **의견 없음(1, 무응답) :** 제주
- **추가 의견 :** 세부 운영방안·사업지침 작성 시 지역문화재단과 충분한 사전 협의 필요(인천), 위원회, 시·도, 재단 간 역할 분담 및 기금배분의 적합성이 필요(광주), 평가 및 환류제도 개선 및 협력관제도 지역별 배치로 상시 사업관리 및 컨설팅이 필요(강원)

■ 지역의 재량권 부여 문제

○ **종합 분석 :** 설문 04와 05는 지역에 대한 재량권(자율권) 부여에 대한 설문으로,

- (설문 04)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무조건' 재량권 부여(6곳)나 '조건부' 재량권 부여(3곳)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시·도의 경우는 지역별 역량에 따라 재량권 부여를 차등화(울산, 충남 포함 4곳)하거나 현행 방식을 선호(전북, 경북 포함 3곳)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 05)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시·도를 주축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7곳)과 큰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 운영방법에는 각 지역의 재량권 부여해야 한다는 2단계 지침 선호 의견(6곳)이 맞서고 있으며, 지역별로 신축성 있는 지침이 필요(2곳)하다는 의견도 있음.

〈04〉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문화관광부 및 예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특정 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현재의 탑다운 방식의 지역협력형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에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각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추진 역량 간에는 큰 폭의 편차가 있으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무조건 재량권 부여(6) :**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역에 맡겨야(부산). 역량이 부족할 경우라도 재량권을 주어야 성장할 기회가 생기므로 재량권 부여에 찬성(인천), 지역에 현재보다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편에 찬성(대구),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광주), 사업에 대한 재량권 부여가 필요(강원), 지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동의(전남)
- **재량권 부여 차등화(4) :** 지역 간 기획·추진 역량의 편차가 크므로, (차등화하여)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일부 필요(울산), 설립 5년차 이상의 광역문화재단에는 큰 폭의 재량권을 주고, 5년차 미만의 광역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 미설립 지자체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경기), 재량권 부여에 동의하나 신생문화재단이나 역량이 약한 지역은 시기상조(충북),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시행에 애로가 있으나 신규사업 기획에는 역량의 한계(충남)

- **조건부 재량권 부여(3) :**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기준은 제시하되 사업과 예산 운영의 자율권을 좀 더 보장(서울), 공동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될 필요(제주), 지침 자체가 시·도의 행정적 간섭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매우 크므로, 적절히 안배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대전).
- **현행 유지 선호(3) :** 예술위원회가 각 사업별로 의도했던 소기의 의도와 성과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지원방식의 유지가 바람직(전북),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경남),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중앙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경북).

※ **보완책 :** 평가시 원칙(기준)을 지키며 사업을 하는 시·도에 평가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서울), 중앙기금은 중앙부처 정책사업, 시비출연금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지역 공통사업을 제시하여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광주), 지역문화재단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강원), 지방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약한 곳은 예술위의 세부/명확한 지침과 전국 비교현황 제시가 필요(충북), 예술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안(충남), 사업추진 기본프로세스 제시와 지역문화협력관 파견으로 지역재단의 역량 강화가 지원(전남), 평가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없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경북), 국가정책 입안 시 지역의 특성과 추진역량이 고려될 수 있는 장치 필요(제주)

〈05〉 한편 지역의 자율성 확대 의견과 동시에 지역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술위원회의 세부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원회가 어떤 사업운영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세부적 지침 필요(7) :** 공통기준 마련과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침 필요(광주), 세부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만들어 보낼 필요(울산),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강원), 현장행정에서는 구속력 있는 지침이 필요하며,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해 나가야(충남), 민간단체와 대응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전남), 중앙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지역의 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경북), 사업취지와 목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되고, 좀 더 구속력 있는 세부지침 필요(경남)
- **2단계 지침 필요(6) :** 큰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 운영방법에는 각 지역의 재량권 부여(서울), 간섭·통제가 아닌 지방정부의 의무인 예술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지침이 필요(부산), 구속력 있

는 '최소화된' 지침이 바람직(인천), 사업 취지와 목적을 보존하는 차원의 지침은 필요하나, 지나치게 재단을 구속하는 세부지침 제시는 지양(경기), 예술위는 큰 틀에서 제시하고, 세부지침은 지역실정에 맞게(전북), 추진매뉴얼이 필요하지만 획일적인 매뉴얼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재량권 부여(제주)

- **지역별 신축성 있는 지침 필요(2) :** 시·도 상황에 맞지 않는 지침도 있어 시·도의 사업 추진 계획을 위원회가 승인·조정한 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대구), 사업 관련 공문, 차기년도 기금 배분표 작성 시 사전 협의 등 지역 상황에 맞는 행정 지원 필요(대전)
- **의견 없음(1) :** 충북

※ **추가 의견 :** 세부지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각 재단 및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단서조항들로 인해 민원을 받거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도 있음(서울), 사업운영을 구속하기보다는 행정적 수행을 돕는 지침이 필요(인천), 수정 혹은 강화가 필요한 지침도 있다(광주, 요지※ 참조), 제주는 교통비, 체재비 등 타 지역보다 사업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재량권 부여 필요(제주)

■ 지역협력형사업의 구성

○ **종합 분석**

- 기금을 통으로 배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 배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9곳)과 사업을 이분화하여 동일 사업군 내에서는 예산의 자율 배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5곳) 등 지역의 예산의 자율 배분권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06〉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2년 연속지원)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등 1+4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성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지역 위주의 재량권 부여(9) :** 유형에 상관없이 지역 특성에 맡기되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개선 필요(부산), 지역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한 개선방안(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지역 재량권 보장 필요(대전), 통예산을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 배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경기), 1+4 형태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강원), 다년도 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모든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충북), 예술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역이 선택(충남, 요지 참조), 1+4 형태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전남), 1+4 형태는 큰 의미가 없고 사업구조를 조정하여 지역 현실에 맞춰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제주).

- **사업 및 재량권의 이원화(5) :** 현행 사업을 이분화하여 동일 사업군 내에서는 예산상의 재량권 부여(서울, 요지 참조), '우리가락'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역별 현실을 반영한 지침 필요(대구, 요지 참조), 중앙기금 정책사업과 시비출연 지역특화사업으로 이원화가 바람직(광주, 요지 참조), 기초형과 특화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 편성의 자율권 부여(울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전체 실링만 정해주고 세부사업비는 지역특색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경북).
- **성질별 사업구조 재편성(1) :** 공연장상주와 레지던스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육성지원과 기획지원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그리고 '우리가락'은 별도 사업으로 구분(전북)
- **현행 사업 형태 유지(1) :** 현재의 지역협력형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경남).

■ 지역의 사업제안 – 평가 – 3년간 동일 예산규모 지원 – 평가방식에 관한 의견

○ **종합 분석**

- 바람직한 개선 방식이라고 본 지역(6곳)은 모두 지역문화재단으로, 지역문화재단이 없는 시·도 4곳 모두를 포함하여 지역문화재단 5곳이 지역별로 역량 편차가 있어 시기상조이므로 일단은 현행 방식을 고수(9곳)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07〉 현재의 1년 단위로 예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매년 지원규모 변동) – 협력 및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사업 및 성과목표 제안 – 예술위원회, 지역 및 전문가 공동 검토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MOU 체결 – 사업 시행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협력 – 예술위원회의 사업 평가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역량 편차가 있어 시기상조(9) :** 바람직하나 역량 상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현재의 형태 유지 필요(서울, 요지 참조), 자칫 자율성에 따른 책임감만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광주, 요지 참조), 재단이 없고 인력 부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도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방식(울산), 자율적 사업 개발·운영에는 변수가 많으며, 역량 편차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경기), 시·도가 지역에서 추진할 전체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은 시기상조(충남, 요지 참조), 재단이 없는 곳은 인력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전북), 현재의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함(경북), 역량 상 지역 편차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경남), 현재의 평가방식(사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이며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 필요(제주)

- **바람직한 개선방식(6) :** 매우 바람직한 개선방안(부산), 바람직한 방식(대구),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최종 평가는 예술위원회가 담당(인천), 공모 또는 제안 형태로 지역 특화브랜드 사업 등 지역 기획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세스는 매우 적절함(대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과정을 내실화함으로서 사업 기대효과가 긍정적(강원),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충북)
- **현행 방식과 병행 필요(1) :**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가방식(사업방식)을 병행할 필요(전남)

※ 추가 의견 : 신규사업을 1개 정도 발굴하되 나머지는 기존사업을 선택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충남)

■ 기금 배분 방안과 기준

○ **종합 분석** : 설문 08과 09는 지역에 대한 기금 배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설문으로,

- (설문 08) 2013년도 기금배분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거나 개선안을 제시한 지역(6곳)과 2013년도 기금배분 방식을 합리적으로 본 지역(5곳), 그리고 무응답 지역(5곳)이 비슷한 비율임.
- (설문 09) 2014년도 이후 '지역 2.0'에서의 기금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고수(1곳), 한지협에 일임(1곳), 무응답(6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양한 방식을 제시(8곳)하고 있음.

〈08〉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기금배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배분 방안 및 기준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배분은 예산총액(9,890백만 원) 중 서울 12.5%를 배정한 후, 15개 시·도(서울시, 세종시 제외)는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인구수 30%,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 역산) 30%, 시·도 매칭 정도 20%)에 의해 배분, 단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타 시·도의 배분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줄어들지 않게 조정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공공공연장수 10%, 공연예술 단체수 30%,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 역산) 20%, 시·도 매칭 정도 20%)을 적용하여 배분

○ **답변 총괄**

- **2013 방식에 대한 개선안 제시(6) :** 2013년부터 예술인 수(10%), 문예활동 건수(5%), 문예활동 활성화 지수(5%) 삭제로 서울지역 역차별 우려(서울),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경기, 경남), 배분기준 마련 시기를 전반기(연초)로 앞당겨 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강원), 기금배분 기준에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사업성과도 제고에 기여(충남), 현재의 평가방식은 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수행만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함(경북)

※ 기타 추가의견 : 지역별 '국민문화총생산(GNC), '지역문화예술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인천)

- **2013 방식은 합리적(5) :** 현행 기금배분 방식에 이의는 없음(인천), 현재의 배분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나, 배분 기준이 되는 기초 인프라 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반드시 필요(대전), 2013년도 개선안이 합리적이긴 하나, 재단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불이익이 발생(울산), 현행 방식이 합리적(전북), 다른 의견 없으며 한지협에 일임(전남)
- **의견 없음(무응답 5) :**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제주

※ **추가 의견 :** 예술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교류협력 유도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문화예산 확대를 위해 재단과 공동 대응해야 한다(서울),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최소예산액을 산정하고, 배분기준에도 불구 필요 최소예산액 이상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울산)

〈09〉 아울러 지역사업의 예산 규모가 대폭 확충되지 않고 현재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지원함에 있어 지역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문예진흥사업에 적합한 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새로운 방식 제시(8) :** 예산을 통합 배분한 뒤 예산편성의 재량권을 주면 지역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서울), 2014년부터 특성화사업에 서울 12.5% 선배정 기준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부산), 특성화사업 및 상주단체 사업 모두 개선해야 한다(광주, 구체적 내용은 요지 참조), 기존 사업 외 신규사업 발굴(지역 간 교류 네트워크사업 등)로 예산 별도책정 방안모색(대전), 지역마다 환경·조건이 다르나 동일한 배분기준으로 기금 배분해야 함(경기/경남), 특성화사업의 경우 매칭비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반영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강원), 시·도 단위별 최고/최저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 편차를 줄어나가야 한다(충북).
- **현행 방식 고수(1) :** 현 상태에 만족한다(전북).
- **한지협에 일임(1) :** 다른 의견 없으며 한지협에 일임(전남)
- **의견 없음(무응답 6) :** 대구, 인천, 울산, 충남, 경북, 제주

■ 시·도 매칭 시스템

○ **종합 분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중심으로 전국 1:1 동일비율 적용 방안이 강력히 제기(6곳) 되고 있으며, 현행 매칭 비율이 적정하다는 지역(6곳)도 대등한 비율을 이루고 있음.

〈10〉 아시다시피 지역협력형사업은 기금 배분에 있어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시·도 매칭 비율은 지역문화예술지원은 재정자립도 70%를 기준으로 1:1 혹은

1:2 이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수도권은 50 : 50, 비수도권은 70 : 30 입니다. 현행 매칭 비율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도/문화재단 매칭 비율을 약화 또는 강화시켜야 하는지 의견과 함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전국 1:1 동일비율 적용(6) :** 재정의존도(30%) 반영 후, 재정자립도(70%) 기준 1:2 매칭의 무화는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재정악화가 심각한 서울시 상황을 고려하여 매칭비율을 1:1 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서울), 재정자립도 기준 매칭비율 설정에는 이의 없으나, 상주단체사업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매칭비율을 높이는 것(70:30 → 50:50)은 불합리(인천),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분기준으로 예산배분하고, 1:1 이상인 지자체에 가산점(경기/경남), 매칭비율을 모든 사업에 5:5 로 의무화해야 함(전북), 모든 사업에서 1:1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며,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되지 않는 매칭장치 필요(제주)
- **현행 매칭 비율 적정(6) :** 적정하다고 보며 수도권도 70:30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부산), 현행 매칭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대구), 지역협력형사업의 현행 매칭 비율은 적정(울산), 현행 매칭 비율 유지하되, 지역여건을 고려 탄력적 운용(상주 비수도권 50~70 : 30~50 등)(강원), 현행 매칭 비율 적정(충남), 다른 의견 없으며, 현재 매칭 비율 적정(전남)
- **매칭 비율 강화 필요(2) :** 현재 기금 규모 수준에서 1(기금) : 2(시 · 도)로 매칭될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단계적 개선 필요(대전), 가능한 한 시·도 매칭을 강화해야 하며, 매칭 자율권 부여나 약한 규제는 지역의 문화예산을 낮추는 현상을 가져올 뿐(충북)
- **매칭 비율 약화 필요(1) :** 지역협력형사업 전체 매칭을 70 : 30(중앙 :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경북)
- **좀 더 강제적인 기준 필요(1) :** 시·도의 매칭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낮아 조금 더 강제성 있는 기준이 필요(광주)

※ **추가 의견 :** 현행 지원방식에서 기획지원사업만 확대해 주면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어 좋을 것(전북), 지역문화예술지원 3개 사업 예산배분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배분돼야 함(제주).

■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 **종합 분석** : 설문 11과 12는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한지협과 타 지역문화협의체와의 관계 내지 역할에 관한 설문으로,

- (설문 11) 현재의 한지협 역할에 만족하고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5곳)과 함께 협의체 구성, 네트워크 형성 촉진 등 운영체계, 역할, 기능에 대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설문 12) 한지협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곳)과 지역문화협의체들의 통합이

필요(4곳, 이중 3곳은 한지협 중심의 통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한지협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2곳)과 함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1곳)도 있었음.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시·도,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한지협 역할 만족 및 기능 확대 필요(5) :** 지역 간 소통과 만날 기회 제공 허브역할에 긍정적 효과(인천), 한지협의 인력 확충 필요(광주), 한지협의 조정·협력 기능의 강화가 필요(대전), 한지협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함(울산), 기존 활동에 크게 공감(전남)
- **다양한 의견들(6) :** 네트워크 형성 촉진으로 광역시·도내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협력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했으면 함(경기/경남), 대의적 기관으로서 한지협의 정체성 확립, 지역재단 의사를 대변하는 역량 강화 필요, 각 지역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우수정책 개발·공유 기능 필요(강원), 위원회 기능과 기금을 대폭 재단에 이양·이관하고 예술위도 참석하는 지역재단협의회를 공식화해야 함(충북), 워크숍, 세미나 개최 시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한 후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충남), 예술교육·문화복지 등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제주) ※ 추가 의견 : 한지협이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에 규정집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인천), 해외 현장탐방 기회는 매우 큰 의미, 세부사업 담당자 간 의견수렴 공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간 필요, 사업별 워크숍 상·하반기 분산 등 시기별 조정 필요(광주), 한지협 주도로 재단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대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컨설팅과 사업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를 확대, 재단 간 재정·역량 차를 고려하여 열악한 재단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전남)
- **의견 없음(무응답, 5) :** 서울, 부산, 대구, 전북, 경북

〈12〉 현재 지역문화재단대표자협의체, 기초문화재단협의체 및 지역문화진흥법안상의 지역협의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협의체 등 많은 지역문화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역할(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발전적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한지협의 역할·기능 강화 필요(5) :** 한지협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넘어 관련 법안 등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대구), 한지협은 예술위 산하기구 역할을 벗어나 조직의 규모나 위상을 키워나가야 할 것(인천), 다양한 협의체의 활동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의 창구를 마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확대하고, 전국의 지역재단과 협업관계와 더불어 각종 국비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함(광주), 한지협이 주도하여 재단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대전), 한지협은 인원 확충과 조직 개편을 통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울산)

- **한지협 중심 일원화 필요(3) :** 한지협을 중심으로 문화지원기관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경기), 한지협으로 일원화 될 필요(전북), 한지협을 중심으로 문화지원기관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경남)
- **지역문화협의체 통합 필요(1) :**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계속 만들어지는 느낌으로 협의체를 통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고, 시·도 공무원 참여도 늘려가야 함(서울).
- **한지협은 여전히 필요(2) :** 한지협은 여전히 필요하며, 한지협 내 정책협력위와 실무소위를 통합하여 그 구성원을 각 지역 의사결정그룹으로 하는 개편이 필요(부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찬반 의견을 묻거나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충남)
- **한지협의 필요성에 의문(1) :** 너무 많은 협의체가 상존하며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임(경북).
- **의견 없음(4, 무응답) :** 강원, 충북, 전남, 제주

■ 성과평가 및 환류 제도

○ **종합 분석**

- 현행 성과평가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8곳)과 함께 불합리하다는 의견(6곳)도 많았으며, 중도적인 입장(1곳)과 함께 무응답 지역(1곳)도 있었음.
- 불합리 의견의 내용으로는 재단 설치여부 기준 삭제 필요, 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한 제도, 설립연혁 짧은 재단 배려 및 반영 비율 하향 조정, 각종 절차 간편화 요망, 차기연도 반영 및 사업별 우수지역 인센티브제 시행 등임.

〈13〉 현행 성과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행 환류제도(차차기 연도 기금 배분기준으로 20% 반영)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현행 제도 합리적(8) :** 평가결과의 차차기 연도 반영은 불가피하고, 배분기준 20% 반영 또한 적당한 수준(서울), 합리적이며, 평가환류는 과감한 지역이관을 전제로 강화할 필요(부산), 현행 성과평가제도의 합리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해외연수 참가인원 차등화 등 평가결과의 확대 적용 필요(대구), 현행 평가제도는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성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표와 공유 기회, 성과와 과정에 대한 소개 책자 발간, 다양한 형식의 쇼케이스가 필요함(대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광주), 성과평가제도가 해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경기/경남),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결과보고서 양식 간소화와 보고서 제출시기 조절(3월) 필요(전북)

- **중도적인 입장(1) :** 성과평가체제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리적인 환류제도로 판단될 것이다(충남).
- **현행 제도 불합리(6) :** 재단설치 여부가 반영되는 기준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울산), 현재 같은 기금배분 방식에서 성과평가·환류제도는 무의미하며 성과평가 결과 적극(상향) 반영 필요(강원),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 제도이므로 시정돼야 함(충북), 인원이 부족하고 설립연도가 짧은 재단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배분기준 20%를 (하향) 조정할 필요(전남), 현행 성과평가제도는 보고서 작성도 어렵고 평가과정도 힘이 들어, 각종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으면 함(경북). 차기연도 반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이 합리적(제주)
- **의견 없음(1, 무응답) :** 인천

※ **기타 추가 의견 :** 지역별 추진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격려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가 이뤄지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제주).

■ 지역문화협력관제

○ 종합 분석

- 지역문화협력관 제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70%가량인 11개 지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적한 지역이 2곳,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역이 3곳으로 나타났음.

〈14〉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지역문화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 규모(3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관할 지역문화협력관에게 바라는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긍정적 답변(11) :** 현재의 운영 규모가 적절하며 큰 틀의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특정지역에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서울), 협력관 수 확대는 반가운 일로 지역의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대구), 대다수 협력관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인천),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의 경우 지역문화협력관제는 그 실효성이 매우 큼(대전), 긴밀한 협의와 컨설팅을 위한 시간·공간적 제한이 많아 협력관제 확대가 요구됨(울산), 협력관 역할을 예술교육, 문화복지까지 확대하고 협력관 수도 증원했으면 한다(경기, 단계별 역할은 요지 참조), 권역별 협력관 수 증원이 필요하며,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필요(강원), 지역의 입장에서 위원회와의 조율을 이루는 협력관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며 지역 사정을 위원회에 전달·관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충북), 재단이 있는 곳과 없는 곳

과는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전북), 협력관제는 중앙과의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며, 기존활동에 크게 만족한다(전남), 협력관 역할을 예술교육, 문화복지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경남)

- **긍정적/부정적 답변(2) :** 효과와 역할도 크지만 경계해야 할 사항도 있다(광주, 구체적인 내용은 요지 참조), 시·도별로 배정이 필요하며,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은 다소 부족한 듯하다(충남).
- **부정적 답변(3) :** 부산지역은 협력관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부정적인 행태가 많은 것 같다(부산, 구체적인 내용은 요지 참조), 지역협력형사업에 전적으로 치중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사료됨(경북). 물리적 거리감 때문인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현실적인 카운슬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제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

○ **종합 분석**

- 서울(예술가의집) 등지에 권역별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6곳으로 나타났음.

〈15〉 정부 방침에 따라 예술위원회는 2014년 상반기에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지역협력형사업)의 운영체계나 위원회-지역 간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개편,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권역별 사무소(거점) 필요(6) :** 한지협 사무국의 서울지역 잔류가 바람직하며 서울예술인들의 심리적 위축와 기금지원 축소 및 소통창구 실종이 우려됨(서울), 위원회와 지역재단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하여 기본적인 지원 심의, 회의 등 서울 중심 활동거점이 필요함(대전), 서울에 예술위원회의 분사무소가 있기를 희망하며 한지협을 통한 지역협력형사업의 기조가 유지 희망(경기),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권역별 대표 재단 선정 등)하여 지역협력형사업 운영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강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협력관제 확대 운영과 지역 거점을 설정 필요(전남), 예술위원회의 권역별 분소가 있기를 희망하며 한지협을 통한 지역협력형사업의 기조 유지 희망(경남)
- **현재와 별다른 차이 없을 것(6) :** 모든 구성원·공간이 이동·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지역 이관이 선행된다면 고민할 사항은 아님(부산), 예술위가 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님(인천),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광주), 크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울산), 지역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음(경북), 이전으로 인해 개편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보나, 문화부-예술위-지역 간 원활한 협력시스템을 구축이 필요(제주)

- **기타 시·도의 의견(3) :** 이전 시 왕래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며 각 시·도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주기 바람(대구), 이전을 계기로 한지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협력관도 그 차원에서 배치해야 함(충북), 물리적·심리적의 거리가 가까워져 전북과는 회의 체계나 사업의 공동추진이 훨씬 용이해 질 것(전북)
- **의견 없음(무응답, 1) :** 충남

※ **기타 추가 의견 :** '대학로 연극센터', '예술가의집'을 중심으로 분야별 소통 확대기회 필요(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 지역문화재단 사랑방 상설 운영 등 검토(대전)

■ '지역 2.0'에 관한 의견

〈16〉 '지역 2.0'이라 부르는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2014~2018) 전략」에서 꼭 다루어 져야 할 항목이라든가 중점적인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 또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시·도별 요지(부록) 참조

■ 문화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17〉 기존에 발간된 많은 연구보고서가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 지역문화재단, 민간지원단체 간에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와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중앙정부의 역할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문화재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적 장치를 마련한 후, 기업들과의 협력(충북)
- **예술위원회의 역할 :** 자체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수행했던 역할 중 일부를 지역재단들에게 이관,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역별 예산 증액 및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일괄위탁방식 검토, 지역 간 우수공연 교류사업 기획·운영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주력(서울), 문화부나 위원회는 정책 가이드라인과 성과달성 환류체계를 제시(대구),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데 주력(인천), 위원회는 지역예산 및 사업 지원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등 플랫폼 역할(대전), 예술가·예술단체의 해외소개

와 국제교류, 해외 한국학 연구분야 중 문화예술 연구부문을 뒷받침하고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노력에 중점(경기), 문화부와 예술위원회는 사업방침 수립, 예산편성을 담당(강원), 광역재단이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전남), 지역협력형 사업은 중앙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경북)

-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의 역할 :** 세부선정과 지원방법, 평가지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행(대구),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데 주력(광주, 요지 참조), 지역재단은 사업 추진 및 우수 기획사업, 신인예술가를 발굴하여 위원회와 협력으로 전국적, 국제적 공동 육성(대전), 전문예술가·교육자, 전문예술교육단체 지원에 중점(경기/경남),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 편성으로 시·도 매칭 등 자율성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강원),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전남), 사업비를 지역에 분배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평가 없이 실링만 정해주어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경북)
-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 문예동아리 발굴과 간접지원, 문예동아리와 전문예술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동네 예술생활협동조합 생성 촉진에 중점(경기/경남)
- **역할분담 방식 :** 중앙정부 주도로 '문화예술지원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조정(부산), 지역단체와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 필요(울산)
- **의견 없음(무응답)** : 충남, 전북, 제주

■ 기금 수요 규모

〈18〉 만일 지역문화 지원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1:1 매칭을 전제로 귀 시·도나 지역문화재단의 요구액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문예진흥기금(단, 1:1 매칭을 전제로 함)을 요구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시·도별 요지(부록) 참조

■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19〉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지협 사무국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언급하는 분야나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총괄**

- 시·도별 요지(부록) 참조

2. 2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4개 시·도(울산·충남·전북·경남)와 12개 광역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8개 분야 10개 문항의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접수함.

○ 문항별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및 지역문화재단의 답변 내용을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시·도별 상세 답변 내용은 부록 참조).

1. 예술위원회와 지역사업 운영방안	현재 지역협력형사업 형태는 적절하다. (기금배분-지방비매칭-운영방안제시-지역사업수행-지역협력활동-사업성과보고-사업평가환류)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8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6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제주)	2 (부산, 경북)

2-1. 지역의 재량권 문제	탑다운 방식의 지역협력형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에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0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제주)	5 (대구, 광주, 대전, 충남, 전북)	1 (경남)

2-2. 지역의 재량권 문제	현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1+4의 형태는 합리적이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 (경남)	3 (대구, 강원, 충남)	12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3. 지역사업제안-3년간 동일예산 규모 지원-평가방식에 관한 의견	예술위 제시의 매년 지원규모가 변동되는 '기금지원-협력-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사업 및 성과목표 제안 - 예술위원회, 지역전문가 공동검토-예술위와 지역의 MOU체결-사업시행-협력-예술위평가시행〉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6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제주)	5 (서울, 광주, 울산, 충남, 전남)	5 (대구, 경기, 전북, 경북, 경남)

4. 기금배분 방안	2013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서울 12.5% 배정 후 15개 시 · 도 한지협 배분기준 적용)과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배분기준이 적절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8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4 (대구, 광주, 대전, 제주)	4 (부산, 울산, 충북, 경북)

5.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현행성과평가제도와 환류제도 (차차기연도 기금배분기준 20% 반영)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7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7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2 (경북, 제주)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이전	2104년 예술위원회 나주 이전(예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운영체계와 위원회-지역간의 네트워크에는 권역별사무소(거점)가 필요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9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남, 경남)	1 (충북)	6 (부산, 광주, 충남, 전북, 경북, 제주)

7-1. 사도매칭 시스템	기금배분 매칭비율 – 재정자립도 70% 기준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1:1 혹은 1:2 은 적정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0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3 (광주, 충북, 제주)	3 (서울, 경기, 경북)

7-2. 사도매칭 시스템	기금배분 매칭비율 –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수도권 50:50, 비수도권 70:30 은 적정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3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2 (광주, 경북)	1 (인천)

8. 기금수요 규모	만일 지역문화 기금이 충분하여 1:1 매칭 전제로 요구한다면, 어느 규모로 요구하시겠습니까?	
	① 현재 이하	1 (경북)
	② 현재 수준	8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③ 현재 × 2	5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경남)
	④ 현재 × 3	
	⑤ 현재 × 3배 이상	2 (인천, 강원)

제4절 문제점 종합 및 개편 방향 제안

1. 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 지역협력형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국가 문화정책에 있어서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과 전략을 근거로 지역협력형사업이 출발했다기보다는, 중앙과 지역의 기금 중복지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지역에 대한 양적 균등배분과 시혜적 측면에서 사업이 만들어져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문화기본법」 마련을 통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고유성·차별성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지원체계를 개선하며, 지방이전으로 달라질 예술위원회의 지원 환경에 따른 지역에 대한 관점 전환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이 필요함.
- 정부 문화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잦은 지원정책의 변화로 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지역 자율성과 재량권 불인정으로 인한 지역별 자율 성장의 저해, 지역문화 지원사업이 지역의 고유한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시혜성 사업처럼 틀이 잡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 설계가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함.

○ 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 지원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21〉 지역협력형 단위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향

사업명	문제점	개선 방향
육성지원 사업	· 지역별 지원사업 세부설계 내용의 차이가 큼. · 개별단체 건당 지원금 규모 상향조정 필요 · 예총·민예총 등 예술인단체가 주관하는 추진사업의 성과 미비 · 심의위원 풀제가 미비하고 심의체계 공정성 시비 소지 많음.	· 지역별 지원사업 세부지원분야 설계 모델을 공유 · OCR카드를 활용한 객관적 심사제 확대 ·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줄 수 있도록 선정단체 건당 지원금액 확인 및 증액 권장
기획지원 사업	· 사도 및 재단 기획력 향상 필요 · 기획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 재단 기획력 강화 교육 추진 · 우수 기획사업 발표회 개최 · 사업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기획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
레지던스 사업	· 지역 내 레지던스 공간 부족 · 국제레지던스 추진정보 부족	· 지역 내 창작공간확대 분위기 조성 · 지역 내 레지던스 공간을 재단이 직접 운영
공연장상주 사업	· 공공 공연장의 사업 참여 부족	· 한문연과 예술위 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 공연장 참여 확대 · 연 1회 상주사업 종합축제 개최

○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세종시 제외)를 대상으로 한 1~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12개 지역이 현행 1+4(공연장상주/육성지원, 기획지원, 레지던스, 우리가락마당) 사업 형태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어('보통'은 3, '합리적'은 1), 전면적인 단위사업 개편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10개 지역이 현행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큰 폭의 단위사업 선택 상의 재량권과 사업예산 배정 상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보통'은 5, '아니다'는 1),
- 각 지방 고유의 특색을 지닌 지역문화의 진흥 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여러 개의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그 중 각 지역이 해당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선택하도록 하며, 선택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함.
- 현재 지역이 선호하는 사업 유형은, 지역 예술인(단체) 발굴·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재단직원의 전문예술행정 역량강화프로그램, 시·도 간 문화교류·협력 프로그램 등임.
- 아직까지는 현행 사업방식(기금배분-지방비매칭-운영방안제시-지역사업수행-지역협력활동-사업성과보고-사업평가환류)을 '적절'(8곳)하다고 보고 있으나('보통'는 6, '아니다'는 2),
- 새로운 사업방식(지역의 사업개발 및 성과목표 제시-예술위/지역전문가 공동검토-예술위/지역 간 MOU 체결-사업수행 및 협력활동-예술위의 평가)에 대한 '선호'(6곳) 비율도 높아('보통'은 5, '아니다'는 5),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2. 지원프로세스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지원 주체의 관점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프로세스별로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간단히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설계 및 재원조성 - 공모 - 심의 선정 - 예산교부 및 사업실행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평가환류의 일련의 과정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개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

〈표-22〉 지역협력형사업 프로세스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지원사업 지원과정	활동 주체	문제점	개선 방안
기금마련 및 지원사업설계	예술위, 사·도(재단), 지역 문예진흥위원	· 기금조성의 한계로 한정된 재원 · Top down방식의 공급자 관점의 지원설계	· 중앙과 지역의 재원조성 공동노력 · 지역맞춤형 지원설계 · 사·도(재단)의 지원설계 역량 강화
사업공모 및 신청접수	사·도(재단) 사무국	· 홍보 부족 · 신진예술인들의 지원접근성 떨어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신진예술인 발굴 및 지원 상담 ·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지원사업 지원과정	활동 주체	문제점	개선 방안
심의 선정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구성 시 해당지역 편중현상 여전 · 심의 공정성 확보의 한계 · 심의위원 풀 부족 · 신청서 검토기간 부족	· 권역별 심의위원 풀을 구성 · 객관적 심사제도 도입(OCR카드 등)으로 심의 공정성 강화 · 적절한 심의비용 책정 · 지원사업 심사매뉴얼 마련
예산 교부	사도(재단) 사무국	· 예산 교부시점의 지연 · 사후지원의 실효성 약화	· 예산 조기집행 원칙 준수 · 평가를 통한 엄격한 평가환류(패널티 부여)로 사후지원 대체
사업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	모니터링단, 평가단	· 평가, 모니터링의 형식적 진행 · 평가/모니터링단 전문성 부족 · 평가결과 피드백 부족	· 실효성 있는 평가, 모니터링 추진 ·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추진 · 지역별 여건에 맞는 평가결과 피드백 방식 개발
결과 및 정산보고 평가	사도(재단) 사무국	· 지원금집행 정산과정의 복잡성 · 수행단체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부실 · 매년 평가결과의 상/중/하 그룹 고정화 경향	· 수행단체의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에 반영 · 자체평가보고서 작성매뉴얼 제작 배포 · 지원금집행 정산교육 지속 · 전년대비 '개선도' 항목 추가 · 평가 과정 및 사후 컨설팅 기능 강화
평가환류	사도(재단) 사무국	· 형식적 평가환류로 평가실효성 저하 · 평가결과에 대한 반영 방식이 1차적임.	· 선정보다 평가가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실질적인 평가환류로 확실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 · 사업설명회, 정산설명회에서 평가의 중요성 과 평가환류에 대해 지속적인 공지 · 평가결과를 다양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반영

○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세종시 제외)를 대상으로 한 1~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2013년도 기금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8곳)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보통'은 4, '아니다'는 4), 이는 현행 사업구도 속에서의 의견으로, '지역 2.0'에서 전면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경우 이에 적합한 새로운 기금배분 기준이 필요함.
  ※ 2013년도 기금배분 기준 : 특성화지원사업 – 서울 12.5% 배정 후, 성과평가결과/시·도매칭 각 20%, 인구수/재정의존도 각 30% 적용, 공연장상주사업 – 공공 공연장수 10%, 성과평가결과/재정의존도/시·도 매칭 각 20%, 공연단체수 30% 반영
- 시·도 매칭시스템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중심으로 현행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전국 1:1 동일비율 적용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대체적으로 현행 매칭 비율이 적정하다는 의견임.
  ※ 현행 시·도 매칭 최소기준 : 특성화지원사업 – 재정자립도 70% 미만 1:1 및 70% 이상(서울, 인천) 1:2, 공연장상주사업 – 수도권 5:5, 비수도권 7:3
- 현행 성과평가 및 환류 제도(차차기연도 기금배분에 20% 반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각 지역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의견을 달리 하고 있음.

※ 1차 조사와 2차 조사의 초점이 다름 : 1차 조사 – 평가·환류제도 자체의 합리성 여부('합리적' 8, '불합리' 6, '기타' 2), 2차 조사 – 성과평가 결과의 기금배분 20% 반영에 관한 의견('바람직' 7, '보통' 7, '아니다' 2), 1차 조사 시 불합리 의견으로는, 재단 설치여부 기준 삭제 필요, 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 부익부 빈익빈의 불합리한 제도, 설립연혁 짧은 재단 배려 및 반영비율 하향 조정, 각종 절차 간편화 필요, 차기연도 반영 및 사업별 우수지역 인센티브제 도입 등임.

- 성과평가/환류 제도는 각 시·도 및 문화재단의 지역협력형사업('지역 2.0' 에서의 '지역문화 특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사업성과 달성에 대한 의욕을 견인하는 제도이자,
-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에 대해서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제도로서, 기금배분 기준으로서의 객관적인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반영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한편, 예술위원회의 지역(나주) 이전에 따라 권역별 사무소(거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필요' 9, '보통' 1, '불필요' 6), 지역문화협력관 제도에 대해서는 11개 지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지협에 대해서도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5곳)과 지역문화협의체들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4곳, 이중 3곳은 한지협 중심의 통합을 주장)이 다수 의견이며, 한지협의 필요성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은 1곳뿐 임.

3.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방향

○ 지원 사업 각각에 대한 개선은 지역협력형사업 체계와 지역문화지원 사업의 전략적 전환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있음.

○ '지역 2.0'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협력형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개편방향을 제시하며, 개편방향에 따른 세부 개선방안은 제5장 '지역 2.0'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함.

- 첫째, 지역 맞춤형 지원 설계와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문화기획 역량의 강화와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함.
  - 지역문화 특화(고유성 계발)사업과 지역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범주별로 제시한 후, 지역이 이 중 몇 개를 선택하여 예산(진흥기금 및 지역매칭액)을 자율적으로 배정·시행하는 방안
  - 지역의 사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계획기간(2014~2018년) 중에 시·도 대상의 공개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점차 그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방안
- 둘째, 사업 구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시·도별 기금배분도 새 정부의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 2.0'시대의 '지역문화 특화사업' 시행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해야 함.
  - 기금배분 기준이 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사업 형태의 개편과 함께 일원화 하는 방안

- 현행 기금배분 기준 중 시·도별 인구수는 편차('13년 20.7배 차이)가 너무 심하므로, 인구수를 등급화 하여 인구수가 매우 적은 시·도의 기금 배정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배려하는 방안
- 시·도 매칭의 경우 재정자립도, 수도권 여부에 따라 매칭비율을 달리 했으나, 수도권의 불만을 받아들여 이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1:1 이상'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 셋째, 장기적으로 예술위원회 전체 사업을 지역협력형으로 재구조화하여 지역문화예술 지원영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여 사업성과를 높여 나가야 하며, 평가 및 환류체계를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함.

- 현재와 같은 1년 단위 예산제도 하에서는 차기연도 예산 확보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사업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예술위와 지역문화재단 간 3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예산 확보를 보장하는 방안
- 매년 평가결과가 상/중/하 그룹으로 고정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평가항목으로 전년 대비 '개선도' 항목을 추가하고, 평가 주체를 예술위원회로 변경하여 평가 과정 및 사후 컨설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 2009~2011년 시·도별 평가 결과(등급) : 서울(가,가,가), 부산(가,다,나), 대구(가,나,가), 인천(가,가,나), 광주(다,다,나), 대전(다,다,다), 울산(다,라,라), 경기(나,나,나), 강원(라,가,나), 충북(나,마,마), 충남(라,마,마), 전북(나,라,라), 전남(다,라,라), 경북(라,마,마), 경남(다,다,다), 제주(나,나,다)

– 넷째,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직, 수평적 교류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활동을 장려해 나가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국제문화교류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과 함께 지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화협력관 제도의 확대 개편, 한지협의 법인화 방안
- 예술위원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지역협력체계의 효율적 관리 및 총괄기능, 지역문화 특화사업(지역협력형사업) 및 문화복지 모니터링 및 전달체계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다섯째, 지역 예술인(단체)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생태계 강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사업별 지원을 넘어 창작인력·매개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지원 관점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예술단체 지원이 그 핵심으로, 현재와 같은 분절화된 지원구조(따라서 한 단체가 여러 가지 사업에 동시에 지원 신청해야 하는 구조)를 개편하여 통합지원 하는 방안
- 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과 함께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분담을 보다 확실히 해야 하며, 국가단위(예술위)에서는 국가대표 직업적 전문예술단체 육성, 광역단위(17개 시·도)에서는 지역단위 전문 예술활동 지원, 기초단위(시·군·구)에서는 풀뿌리 예술활동(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 지역의 매개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예술위원회 내에 설치한 별도 기구에서 지역의 예술행정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존 인력의 기획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전담하는 방안

제 4 장
'지역 2.0' 계획의 환경과 전략

제 1 절 지역문화 환경과 전망
1. 환경변화와 전망
2. 지난 성과와 미래 예상
3. 재원
4. 위원회 지역이전과 지역밀착화
5. 지역 문화정책의 미래

제 2 절 '지역 2.0'의 목표와 방향
1. 목표
2. 지역 문화경영의 새로운 방향
3. 지역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가 할 일

제 3 절 '지역 2.0'의 핵심 전략
1. 사업 : 영역의 재구조화
2. 인력 : 자립성장형 인력 확보
3. 재정 : 역할분담에 따른 공동재정

제1절 지역문화 환경과 전망

1. 환경변화와 전망

○ 오늘날 문화예술 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전에 없이 급속히 변하며, 이 변화 속에서 지역의 문화환경도 새로운 여건을 맞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대한 반동과 미래에 대한 낙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됨.

1) 지역문화 환경

○ 이 같은 전환기적 사회 문화환경 변화는 구체적으로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음.

- 수요측면의 변화는 미래가치로서 창조성의 확산, 모듬비빔의 성격을 갖는 융합융화적인 문화예술 발전, 스마트기술 중심 환경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개개인의 절대행복에 대한 강열한 추구와 그에 따른 생활 속 문화복지의 보편화, 네트워크 자본과 노노드(Know Node)시대의 도래를 들 수 있음.[22)]
- 공급측면에서는 모든 사회활동에 대한 문화예술의 접착 보편화, 소용돌이 환경 속 문화가치들의 증식, 문화콘텐츠의 제왕적 특징, 문화폭발 현상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이러한 새로운 문화환경은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지역문화 환경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수요측면에서는 지역을 창조환경으로 개발하고, 지역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와 예술적 삶의 공진화를 이루는 것을 발전 기조로 삼음.
- 공급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개성을 최대한 발휘케 하고, 지역문화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며,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 극대화를 꾀함.

○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23〉 사회문화 환경 변화와 지역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전환기적 사회 문화환경 ➡	지역 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요측면	· 창조성 확산	· 창조지역을 만들고 가꾸기
	· 모듬비빔의 융합융화	·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추구
	· 스마트환경	· 스마트사회에 적응하는 지역문화 만들기

22) Know Where 시대를 넘어 Know Node 시대가 되면서 지식정보와 문화예술이 모여 있는 결절지, 연결점, 집약지, 길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 졌다.

	· 절대행복과 생활 속 문화	· 주민의 생활문화복지를 최대화함
	· 네트워크 자본과 노노드(Know Node)시대	·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하여 활용함
공급측면	· 문화접착	· 문화중심의 지역개발 전략
	· 소용돌이 환경 속 문화가치증식	· 문화가치 제고 사업에 관심을 가짐
	· 콘텐츠 제왕적 특징	·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화를 도모함
	· 문화폭발 현상	· 다채로운 문화예술 사업을 개발함

2) 지역문화정책 대응과 전망

○ 이러한 전환기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새로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음.

- 수요측면에서 지역을 창조성 넘치는 환경으로 개발하고, 문화자원의 새로운 발굴과 활용에 중점을 둔 전략,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일상화
- 공급측면에서는 지역개성을 찾고 발휘함, 지역문화가 갖는 부가가치를 최대화하고 제고시킴, 인문사회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활용,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육성·보호·조성임.

○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문화예술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기대되는 전망과 기대가치는 다음과 같음.

- 지역선도 문화예술(leading art) 발전 → 지역 이미지가치의 실현
- 문화예술의 생활문화복지화 확산 → 인본가치의 실현
- 문화중심적 지역창조와 재생 → 소통가치의 실현
- 지역자원의 문화콘텐츠화 → 부가가치의 실현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지역고유가치의 실현

○ 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24〉 지역문화 정책 대응과 전망

	지역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책 대응	전망	기대가치 실현
수요측면	창조지역 만들기	지역을 창조환경으로 개발	지역선도 문화예술	이미지가치
	지역문화 다양성	지역문화자원		
	스마트사회적응 지역문화			
	주민생활 문화복지	사회변화와 주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공진화	문화예술의 생활문화복지화 확산	인본가치
	지역자원 연계 활용	지역개성 발휘	문화중심적 지역창조와 재생	소통가치
공급측면	문화중심 지역개발			
	문화가치 제고사업 관심	지역문화 부가가치 제고		
	지역문화자원의 콘텐츠화	문화콘텐츠 발굴활용	지역자원의 문화콘텐츠화	부가가치
	다채로운 문화예술	문화예술지원, 육성, 보호, 조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고유가치

2. 지난 성과와 미래 예상

○ 과거에 대한 반동과 미래에 대한 낙관의 관점에서 지난 20년의 성과와 미래의 방향을 살펴 봄.
- 문화정책, 지역경영, 추진전략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 봄.

1) 지역문화정책의 성과와 미래

○ 지난 20년간 지역문화정책의 특징
- 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문화활동력(돈과 사람)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종 문화정책의 수단을 개발하고 동원했으며, 문화정책의 도구화라는 의심을 받음.
- 정책주체는 중앙정부의 상의하달식, 지도적인 정책활동이었음. 이에 대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이 상부지시를 집행 중심으로 따르는 방식이었음.
- 문화사업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개발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 지역이 충실히 따라가는 방식이었음.
-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면서 저액집행 관행 등이 변화 중임. 지방자치단체가 명목상 주축이 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이뤄짐.
- 사업내용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트렌드를 지역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

○ 지난 20년간의 정책성과
- 문화가 소비적이고 특권층의 여가활동이라는 기존의 그릇된 인식을 벗어냄. 문화예술이 생활의 일부이며 비전문적인 일상 활동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상당히 개선됨.
- 정책주체인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이 여전히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불안정적인 동원, 형식적 배분 때문에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채 임기대응적인 수준에서 만족을 하는 실정임.
- 문화생산 및 소비활동은 여전히 특수 관심층에서만 여유 있게 즐기는 활동으로 간주됨.

○ 향후 예상 방향
- 20년 전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임. 그동안 축적된 문화소비의 보편화 현상을 바탕으로 지방분권사회에 알맞은 생활 속 문화정책을 더욱 활발하게 펼치게 될 것임.
- 이러한 문화보편화 추세는 중앙의지와 차별화되고 좀 더 지역중심으로 펼쳐지며, 그 효과가 지역 내에 보다 직접적으로 가시화 될 것임.
- 다른 무엇보다도 더 문화를 지역창조의 중점기조로 삼을 것임.
- 지역문화를 이끌어 갈 안정적인 문화재정의 동원과 효율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고, 지역을 이끌어 갈 인력을 안정적·실질적으로 동원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화할 것임.
-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내 크리에이티브 리더들의 양성과 활동에 대하여 기대함.

○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25〉 지역의 문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예상되는 방향

구분		지난 20년의 성과	향후 예상 방향
문화인식		· 산업발전 견인차인식 수준 · 문화의 산업화 중시	· 문화중심의 지역창조경영 · 문화콘텐츠 개발, 활용
돈, 사람	예산, 기금	· 적정 수준 확보 노력 · 정치적 결정 · 불안정한 동원 · 형식적 배분	· 전략목표 부합, 확보 노력 · 시스템적 결정 · 안정적 동원 · 실질적 배분
	사람	· 특수관심자의 활동으로 간주	· 지역 크리에이티브 리더들

2) 문화중심적 지역경영의 성과와 미래

○ 실질적 분권화에 맞춰 지역은 이제 지방자치를 정치적 활동에서 지역경영 활동으로 새롭게 인식하며 지역경영 전략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무엇을 지렛대로 삼아 경영할 것인가에 주목할 것인데, 대부분 문화를 주축으로 삼는 이른바 '문화중심 지역경영'을 추진함.

○ 지난 20년간 지역경영목표와 경영수단은 중앙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지역 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음.

○ 앞으로는 지역의 자주적인 도약활동으로 지역맞춤 문화활동에 중점을 둘 것임.

○ 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음.

〈표-26〉 문화중심의 지역경영 성과와 향후 예상

구분	지난 20년 성과	향후 예상 방향
경영목표	· 기반형성 목표 수립 · 재정목표치 정치적 결정	· 지역창조프로젝트(CP)수립 · 재정계획 수립
경영수단	· 중앙정부 예산의존 · 지자체, 민간 미흡	· '문화울력' 재정 확보[23] · 내실 있는 제도화
경영성과	· 문화경쟁력 기반구축	· 도약기반 구축예상

3) 전략관점의 지역문화정책 성과와 미래

○ 이러한 방향 전환은 사회환경과 지역문화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전략적으로 구축해야 함.

23) '울력'이란 시급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역공동체가 상부상조하는 우리의 전통적 생활방식을 말함.

- 지금은 이런 점에서 전환기라고 할 수 있고, '지역 2.0'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됨.

○ 지역의 문화중심 발전전략은 정책의 형태, 전략방향, 주체와 이해관계자, 향후 공간의 수준 등이 많이 달라져야 정책 적실성이 높아질 것임.

○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27〉 추진전략의 성과와 향후 방향

구분	지난 20년 성과	향후 예상 방향
정책 형태	· 지원, 육성, 보호, 조성	· 자율성장
전략 방향	· 지역발전 · 지역이미지 제고 · 지역경제 연관성	· 문화예술의 고유가치, 소통가치
주체와 이해관계자 (인간)	· 행정중심적 · 관심 있는 소수를 위한 · 프로관계자의 활동	· NPO, 주민 중심적 · 모두를 위한 · 프로튜어(proteur)[24] 및 모두의 활동
공간의 수준 (공간)	· 특정 예술 공간 · 오프라인 중심 · 문화영토의 권역 내 국한	· 생활공간 어디에서나 · 온라인 병행 · 문화영토의 광역화, 글로벌화
시간의 배치 (시간)	· 복고에 의한 정체성 확보 · 유행성 이벤트	· 미래지향적 보편성 확보 · 중기 안정적 문화자산화

3. 재원

○ 문화접착 시대에 필요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원의 수요 급증
- 문화향유자를 위한 문화예술 감상단체나 비영리문화조직이 양적으로 늘어남.
- 여가, 자기실현욕구 증대로 인해 문화예술 수요가 급증함.
- 창조지원을 위한 사회의 자원배분을 개선
- 공공부문의 적극 역할에 대한 요구가 팽배됨.

○ 정책적 대응
- 재원확보 대책 및 문화재정 고갈방지 문제를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함.
- 중앙정부의 문화재정, 지방의 문화예산, 민간지원, 문화 관련기금의 동향을 감안해서 사업과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함.
- 재원배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중기 재정기금 배분계획 수립

24) 프로튜어(proteur): 전문가 같은 아마추어. 프로페셔널(professional)과 아마추어(amateur)의 합성어. 웹 2.0이 일반화되면서 일반 네티즌이 정보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 주체로 떠오르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전문가 못지않은 식견을 가진 사람을 말함.

4. 위원회의 지역이전과 지역밀착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나주 이전이 몇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나주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위원회가 관리하는 기본적인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역의 문화정책 담당자나 문화재단들의 위원회 의존적인 성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지방정부나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키우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그 가운데서 특히 서울, 수도권은 그 동안에 비해 상대적, 심리적으로 국가대표성을 유지하는데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어,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할 것임.

○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이전을 계기로 광역권 문화재단들이 독립적 활동을 위한 재정나누기를 시도하고 위원회에 대하여 새로운 재정분담을 요구하거나, 사업에 대한 접근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음.
- 결국, 위원회가 나주로 이전하면서 전국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간주되면서 문화지원 관련 단체들의 경쟁력 강화,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발족과 위원회의 역할 재조정 요구가 생겨날 수 있음.

○ 위원회의 지역 밀착화와 동시에 사무국 존재방식의 변경 가능성이 있음.
- 위원회가 지역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역문화정책의 현실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임.
- 그런 맥락에서 지역 밀착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예술위원회의 사무국 존재방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각 지역에 협력관을 파견한다든지, 서울 소재 업무협의 연락실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임.

5. 지역문화정책의 미래

○ 지역문화정책의 미래는 위와 같은 분석들을 통한 '과거에 대한 반동과 미래에 대한 낙관'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패러다임의 전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상당한 부분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정책에 변화를 주고,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이런 현상은 전환기적 환경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며, 모든 미래 문화정책 문제들과 맥락성(contextuality)을 가지므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함.
- 문화예술의 생활문화 복지화 확산
- 문화에 의한 지역창조와 재생
- 지역자원의 문화콘텐츠화
-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제2절

'지역 2.0'의 목표와 방향

1. 목표

○ 지역문화정책의 미래에 중점을 둔 지역문화 2.0 목표를 설정함.
○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함.

목적	목표
세상을 이끄는 큰 예술	지역을 이끌어 가는 문화예술
세상을 돌보는 착한 예술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예술
세상을 맑게 밝히는 새 예술	개성 넘치는 지역문화예술

2. 지역 문화경영의 새로운 방향

○ 지역의 자율적 성장을 꾀함.
- 중앙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지역의 신규 문화예술 수요에 맞추고
- 자체역량에 바탕을 두고 지역의 잠재역량 및 현실적인 문화예술의 힘을 바탕으로
- 모방이 아닌 지역다움을 실현하는 지역맞춤 문화정책을 추진함.

○ 책임지원, 책임관리로 나아감.
- 지원은 많이 받되 간섭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지원과 관여 사이의 패러독스'를 뛰어 넘는 적극 지원과 책임관리
- 집행책임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개발과 구현에 대한 책임을 가짐.

○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극대화
- 문화예술이 갖는 고유가치, 이미지가치, 소통가치, 부가가치, 인본가치의 궁극적인 실현
- 문화예술의 가치들을 사회 안에 융합·융화시켜 지역사회에 확산함.
- 사회적 배제가 아닌 사회를 돌보는 사회통합의 문화정책을 펼침.

3. 지역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가 할 일

1)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네트워크 사회에 알맞게 문화단체, 행정체계, 문화교육 기관 사이에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끼리 시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일하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함.

○ 기존 문화프로그램 뱅크를 최대한 구축하고 이를 네트워크 관련자들에게 서비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줌.

2) 분권사회형 지역문화 개성발휘를 위한 문화활동력(돈, 인력, 정보) 뒷받침

○ 점차 소진되어가는 문화재정을 발굴하고 확보하여 책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창조사회를 이끌어 가는 문화예술 창조리더의 육성을 위원회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함.

○ 지식정보사회의 문화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각종 콘텐츠 DB, 정보력을 제고

3) 지역문화력 제고 공진화 플랫폼 구축

○ 문화재단 등 관련단체와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종적 횡적 정책네트워크를 효율화

○ 품격 높은 문화사회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소비자를 생산자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생비자(生費者, prosumer)들의 역량을 제고시킴.

4) 지역발 글로벌문화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유수)정책

○ 기초단체의 글로벌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우리 문화영토를 넓히고 이를 이끌어 내는 정책을 위원회가 개발하여 지역이 글로벌리더로 활동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

○ 국내에 유입되어 장기 또는 단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외의 유명 문화예술인을 지역에도 적극 연계시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해 줌. 위원회가 해당 지역 문화재단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됨.

○ 글로벌 수준의 지역문화마케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의 글로벌 진출을 도움.

5) '창조적 실험' 장르에 대한 지역지원

○ 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전문 인력이 없어서 소홀했던 특별장르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원하여 지역도 다양한 예술실험을 거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장르를 발굴하여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펼치도록 지역을 리드하는 역할로서 중요함.

○ 글로벌트렌드 문화사업을 지역에 소개해주고, 지역들이 이를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예술로 창조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역화 가능한 사업 매개역할을 담당함.

제3절 '지역 2.0'의 핵심 전략

○ '지역 2.0' 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환경변화, 이에 대한 지역의 새로운 수요, 현질적인 위원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사업방식과는 다른 접근으로 나아가야 함.

○ 우선 이러한 사업전략의 전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접근논리가 필요함.

〈표-28〉 전략개편의 논리 구조

분야	논리	중점 전략
사업	영역의 재구조화	·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 강화를 위한 사업 · 지역-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정	역할분담에 따른 공동 재정	· 수요 규모 추정 및 중기 재원 계획 · 기금 배분 방식 및 매칭 시스템 개혁 방안
인력	자립성장형 인력확보	· 지역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 방안 · 지역의 기획·추진 역량 강화 방안
운영	네트워크기반의 자율운영체계	· 외부네트워크 : 예술위원회, 사·도, 지역문화재단 간 역할분담 · 지역사업 운영체계 : 자율과 재량권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 · 조직 및 기능 개편 : 한지협사무국, 지역문화협력관제 등 · 성과평가체계 및 환류

1. 사업 : 영역의 재구조화

1) 기존에 중점 두던 주요 지원사업 영역의 지속추진

○ 기존에 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 사업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문화활동의 장(場) 정비 및 이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지원과 관리
- 지역문화 특성콘텐츠의 집중적인 발굴과 육성에 대한 지원
- 국민 개개인의 복지적 문화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관련 사업을 위한 외부재원의 확보
- 예술단체 및 예술가 지원의 제도화 및 실상에 대한 파악과 정책 피드백
- 지방문화의 활성화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 기관(단체)간 연계협력 리드
- 지역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련된 문화사업 연계방안 지원

○ 기존 지역문화 사업방식인 '지역 1.0'이 이러한 기본사업에 대한 설계와 제시 및 주도적 역할이었다면, '지역 2.0'에서는 이를 다른 사업과 연결시키거나 다른 사업주체들과 연계시켜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지발전 시켜야 함.
- 이는 분권시대 문화거버넌스를 실천하는 방법과 내용의 혁신임.

○ 이 사업들은 위원회에 대한 상위평가에서 바탕이 되므로 사업 자체평가 지표로 꾸준히 관리해야 할 것임.

2) 신규 사업선정 기준과 중점 영역 정리

○ '지역 2.0'에서 우선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기존 문화사업 내용 가운데서 특히 지역적 파급력이 높아 강조해야 할 사업
- 문화정책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수요가 있는 사업
-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으로 선정하여 공급해야 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 '지역 2.0'에서 우선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미래시대에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문화사업의 발굴
- 지역창조형 문화예술로서 지역 브랜드전략에 적합한 사업
- 생활 속 문화생활을 단지 소외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시범사업을 넘어서 생활문화사업을 '품격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사업화
- 문예진흥에 활용될 기금의 쇠진은 위원회의 위상으로 연결되므로 문화예술부분 재정(기금)의 안정적 동원과 배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동원할 원천의 지속적 발굴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함.
- 지역사회 여러 영역에서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소속기업이나 단체의 혁신을 주도해 갈 크리에이티브 리더(창조리더)의 육성

○ '지역 1.0'에서 그 동안 해오던 사업 중 선택적으로 지원 비중을 낮춰야 할 사항
- 관행에 따라 이뤄지던 지원의존성향 사업의 형식적 배분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가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점차 낮춰야 함.
- 정치적 결정으로 이뤄진 중앙매칭 이벤트성 문화사업은 과감히 배제함.
- 지방정부의 형식적 매칭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지역에도 부담이 되므로 지역과 협의하여 비중을 낮추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시켜야 함.
- 생활밀착적인 문화사업 중 지방정부의 고유역할에 가까운 사업은 지역에 넘겨주고 위원회의 고유사업에 집중하도록 조정함.
- 지역산업의 문화화에 관련된 사업은 지역에서 자체재원으로 자주기획으로 추진하도록 넘겨주고, 기존의 사업들은 졸업시켜야 함.

2. 인력 : 자립성장형 인력 확보

1) 문화행정 거버넌스의 구축

○ 지역문화행정은 그 동안 기술전문가(techno-crat)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제는 예술마인드 전문가(art-crat)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신규 공무원, 신규 문화재단 직원, 신규 문화단체 채용자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마인드를 바꿔가야 함.

○ 공공문화재단 중심적 지역문화주체의 시스템화는 불가피한 추세로 위원회가 이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지역 거버넌스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원회는 지역문화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면서 역량을 키우고(capability building), 지속성장 가능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도와줌 .

2) 문화울력(단체, 행정, 주민)의 보편화

○ 지역의 문화리더들이 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교류하면서 또 다른 새 정보를 재생산 재분배하도록 위원회 보유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정보시스템을 형식적 운영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운영함.

○ 네트워크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화네트워크의 개별 노드(node)가 갖는 특징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개방적인 활동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을 소중하게 추진함으로서 '총체적 참여'의 장점을 이끌어 냄.

○ 특정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단체의 특정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참여시키는 분석적 정책논증 바탕의 정책집행이 필요함.

○ 지역문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본 · 정보 · 고도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반역량을 함께 키워주고 장기적으로 자립시키는 전략으로 활용

3) 문화예술 시장 활성자 역할(facilitator)에 맞는 플랫폼으로 전환

○ 지역문화예술 관련 대상자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여 '지역 2.0'에 알맞게 재편해야 함.

○ 정책 공급자인 지역문화행정, 주민, 문화향유자는 지역문화의 공동창조자(co-creator) 또는 프로슈머(prosumer)로 기능을 재설정하고 '더불어 함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념적 역할 설정

○ 지역문화 가치사슬(value chain)은 문화정책으로 생겨나는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치 네트워크(value network)로 구성

○ 지역문화의 브랜드가치는 지역총합적인 성과를 엮어내는 지역네트워크를 가치로 해야 함.

○ 지역문화정책 주체간의 단순한 협력은 이제 일정한 성과를 염두에 두고 협력적으로 경쟁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복잡한 협력적 경쟁(co-competition) 또는 공진화(co-evolution)로 이념적 틀을 재편

3. 재정 : 역할분담에 따른 공동재정

○ 지역문화의 윤활유가 되는 재정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이 개편함.
- 공동재정 시스템화
- 매칭그랜트의 새로운 포맷 형성 필요
- 효율성 높은 방식으로 개편

1) 공동재정 시스템화

○ 지역문화예술에 활용할 재정의 한계를 감안하고, 책임 있는 문화예술 발전지원을 위해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재원 마련 방법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재원 전략'을 모색해야 함.
- 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재정철학은 다른 민간지원을 자극하거나 지렛대 역할을 하는 대응보조(matching grants)의 다양화 및 확대 정책임.

○ 대응보조(matching grants) 전략은 재정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이에 상응하는 특정한 비율로 다른 자금원천을 마련해야만 지급이 결정되는 보조금이므로 이 정신을 지속적으로 살려야 함.
  * 재정지원과 확보에 관련된 NEA와 우리의 차이: NEA는 출범 때부터 공동재원 마련을 규칙으로 정했음. 그 이유는 정부통제를 억제하고, 재원에 대한 습관적 낭비를 막으며, 민간재원 대체에 대한 우려 등과 같은 다분히 미국적인 배경이 깔려 있음.
- 우리의 경우, 정부 주도적인 행정역사 관행 때문에 정부가 지방에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 했고, 재원이 고갈되면서부터 위기의식을 느끼며 공동재원 마련을 대책으로 고려하는 수준임. 이제는 재원한계를 극복하고 책임 있게 집행한다는 논리를 세워서 다른 차원에서 공동재원 마련이 절실함.

○ 챌린지 보조 프로그램(challenge grant program)에 대한 지원
- 특정 창조프로젝트의 경우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1:3의 재원마련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원칙임.
- 이러한 원칙은 특히 공모사업과 중장기적 계속성 사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당연히

고려할 필요 큼.

○ 역대응보조금(reverse matching grant)에 대한 우선지원 방안
- 지방 또는 민간부문의 예술기부에 대한 증가분에 상응하게 기금이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
- 지방이나 민간으로부터 먼저 사업과 이를 추진할 재원 확보를 갖추어서 제의할 경우, 위원회의 재정을 역으로 지원한다는 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존의 대응보조와는 다름.
  * 이러한 방식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슈스터(J. Mark Davidson Schuster)가 그 효과를 연구한 적이 있음.

2) 수요와 능력에 알맞은 매칭정책 방향의 설정

○ 지역의 수요와 매칭능력에 알맞고 신중하게 지원하는 전략
- 지역이 사업수요는 있는데 재정 매칭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결국 재정과 사업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지역 문화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선택지를 다양하게 만들어 지원함.
- 매칭비율을 지역 또는 사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아야 함.
- 사업에 따라서 비율을 차등화 하고, 지역재정력과 매칭능력을 감안해서 비율을 다양하게 결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

제 5 장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지역 2.0' 계획

제 1 절 '지역 2.0' 시대의 사업
1. '지역 2.0' 시대 사업개편을 위한 기본전략
2.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특화사업
3. 지역–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 2 절 '지역 2.0' 시대의 재정
1. 지역문예진흥기금 배분 연혁
2. 수요 규모 추정 및 중기 재원 계획
3. '지역 2.0' 시대의 기금배분 기준
4. '지역 2.0' 기준에 의한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제 3 절 '지역 2.0' 시대의 인력
1. 지역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 방안
2. 지역의 기획·추진 역량 강화 방안

제 4 절 '지역 2.0' 시대의 운영체계
1. 외부 네트워크 : 예술위원회,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 역할분담
2. 지역사업 운영체계 : 자율과 재량권 강화를 위한 개편 방안
3. 조직 및 기능 개편
4. '지역 2.0' 시대의 평가와 환류체계 개편

제1절 '지역 2.0' 시대의 사업

1. '지역 2.0' 시대 사업개편을 위한 기본전략

○ 제4장 '지역 2.0'계획의 환경과 전략을 기본 전제로 하여 '지역 2.0'시대 사업개편을 위한 5가지 기본 전략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11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 11개의 추진전략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지역협력형사업 평가 결과, 16개 시·도 예술인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을 포함하여 설정한 사업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지역 문화기획 역량의 강화와 자율성의 확대

(1) 지역의 자율성 확대

○ 지역맞춤형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설계를 위한 지역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기획 역량 강화를 촉진함.

○ top down 방식에서 bottom up 방식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사업 설계의 변화를 통해 지역자율권을 확대함.

(2) 지역 및 단체의 기획역량, 운영역량의 강화

○ 예술위가 주축이 되어 재단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워크숍 등 재단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재단의 문화기획아카데미 개설 지원

○ 예술위 차원의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적인 기획컨설팅 지원 체계를 마련

○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세종시 제외) 대상 1~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지역문예진흥사업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무조건 재량권 부여(6)와 재량권 부여 차등화(4), 조건부 재량권 부여(3), 현행 유지가 바람직(3)으로 지역의 자율성 확대에 대한 의견-재량권 부여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중 지역의 기획·지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2)과 지역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예술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간 비교현황을 제시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2)는 의견이 있었음.

2) 지역문화생태계의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1) 예술인,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 개인 후원인 모집, 매니아 클럽 조직, 전문예술단체로의 육성 등 예술인,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 전업 예술가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예술인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생태계의 개선

○ 사업 지원금 지원이 아닌 창작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의 확대로 지원수혜자층의 다각화 및 확대를 도모

(2) 지역특화 문화활동의 촉진을 통한 지역 고유성 강화

○ 지역고유성에 기반한 지역별 문화브랜드의 육성 및 지역특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 지역의 문화자원 및 역량에 근거한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개발 및 추진

○ 지원사업의 다각화를 통한 지역문화활성화 및 지역문화생태계의 강화

○ 새 정부 문화분야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문화가 있는 삶」 의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 문화재정 2% 확대를 통한 활용방안에 '예술인 창작역량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방안으로,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확대(852억 원),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조성(479억 원),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지원 강화(2,668억 원) 등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16개 공약 중 하나인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지방 문화격차 해소' 과제 중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 지원,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도모,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문화예술지원 확대 등 새 정부 문화분야 과제에서도 지역문화의 특화 발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지역의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성화사업 개발 지원과제에서는 2017년까지 시·도별 고유브랜드사업의 발굴육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수직, 수평적 교류 협력활동의 강화

(1) 국내외 교류·협력활동의 확대

○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강화

○ 정부-예술위-광역-기초 문화지원기관 간의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창작력 제고, 미래지향적 통합장르의 육성, 예술장르 간 경쟁력 강화를 꾀함.

○ 지역 및 재단에서 교류·협력활동 사례집 발간 및 교류·협력 매개 지원 역할 담당

○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확대 및 지역수혜단체의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세종시 제외) 대상 1~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예술위 지역문화예술사업의 방향성 및 예술위원회의 새로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질문을 종합한 결과 지역 예술가· 단체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의견(7)과 시·도간 문화교류 활성화(5)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시·도간 수평적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획형 지원사업과 교류 프로그램 개발 육성 등 예술위원회가 지역의 수평적, 수직적 교류는 물론 국제교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2) 예술위-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간 역할분담

○ 예술위와 광역-기초 문화재단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국가예산 중복집행 가능성 배제

○ 예술위원회는 연구, 국제화, 전문예술인 집중지원, 교류협력 매개,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 사업모델개발 등 전문화된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

○ 문화예술지원기구 간 역할조정 및 재정립을 위한 한지협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간 TFT구성 필요

○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세종시 제외) 대상 1~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는데, 예술위가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면서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협력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한지협의 주도로 재단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수 있었음.

4) 문화예술 지원영역의 다각화 및 효율화

(1) 간접지원 영역 개발 및 확대

○ 사업비 직접지원방식의 지원이 아닌 지역의 간접 지원인프라 구축에 대한 권고, 평가, 독려

○ 다양한 간접지원방식에 대한 수요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 지역 창작공간 마련, 통합홍보채널 개설 및 매체개발, 기획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류협력을 위한 매개지원, 지역 문화예술정보 DB구축, 지역 대표문화상품 발굴 및 인증, 대표문화상품의 국내외 유통지원 등 다양한 간접지원 방식의 개발 및 적용

(2) 지원수혜 활동의 다각화 : 사업에서 연구, 교류, 촉진, 역량강화 등으로 지원활동의 확대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사업'중심의 지원에서 '연구활동', '교류활동', '역량강화 활동', '기초조사 활동', '네트워킹 활동' 등 창작활동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기본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영역을 확장

(3) 단기, 일회성 지원에서 다년간 지속지원 제도 도입

○ 현재 공연장상주사업만 2년 연속지원사업으로 다년지원을 통한 집중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향후 2~3년의 창작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는 지역문화재단이 주도하는 기획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따라 다년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을 유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에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 지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차별화된 지원사업이 기획, 개발될 수 있기 위해서는,
- 매년 기금이 변동되는 방식의 기금지원 방식이 아니라 최소 3년 단위의 중기재정 지원 방식의 기금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함.
- 중기재정 지원 방식의 기금지원 설계가 전체 사업분야에 적용될 수 없다면 일부 사업에라도 중기재정 지원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5) 사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예술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

(1) 전문예술인, 전문예술단체의 육성

○ 아마추어예술인, 시민예술단체와 차별화된 전문예술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서 '예술의 수월성 강화'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함.

○ 예술위원회는 전국대표 전문예술단체의 육성, 16개 시·도와 광역재단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시민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인 육성은 기초문화재단의 기능으로 역할 분담
○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개념에 부응하여 '전문예술인' 인증을 위한 인증체계 개발

(2) 신진예술인의 지원접근성 증대

○ 예술전공자들의 전문예술인으로의 육성을 인큐베이팅 하는 신진예술가 육성 시스템의 개발 필요

○ 예술전공자들의 지원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대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예술위원회와 재단의 기능을 설명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설명회 지속 개최

○ 지역출신 예술인들의 지역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개발 독려

○ 지역별 특정장르, 특정분야 신진예술가들의 집중적인 육성을 위한 특화된 인큐베이팅 마련도 가능

○ 새정부 문화분야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문화가 있는 삶」의 실천계획을 살펴보면,
-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직업 전문예술단체 육성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음.
- 연간 7개 장르별로 20개 전문예술단체를 연간 3억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여 연간 140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맞춤형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전문예술단체 육성에만 연간 420억 원씩 4년간 1,680억 규모의 지원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2.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특화사업

1)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추진방식 및 사업분야 예시

(1) '지역 2.0' 시대의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추진방식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사업체계를 탈피하여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모든 지원사업을 '지역문화 특화사업'으로 칭함.[25]

○ 지역에서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지원사업 분야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들과 아래 예시된 다양한 사업분야들 중 지역여건에 적합하며, 지역문화진흥과 예술창작활성화 및 예술의 사회적

25) '지역 2.0'에서는 지역협력형사업을 '지역문화 특화사업'으로 호칭하기로, 2013.1.9 ARKO-한지협-연구진 내부워크숍에서 합의'

기여를 위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역문화 특화사업'으로 추진함.

○ 예술위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지원사업 기획을 가이드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고유성 계발'의 측면에서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30여개 사업들을 3대 사업목표 8개 사업분야로 구분하여 지역문화 특화사업을 예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방향을 제시함.
- 지역에서는 이 사업범주 중 몇 개 사업을 선택하거나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들로 예산(문예진흥기금 + 매칭액)을 자율적으로 배정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단, 공연장 상주사업은 정책지원사업으로 '지역 2.0' 사업계획 기간인 2018년까지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며, 교류협력형 사업도 2018년까지만 특화사업과 분리하여 한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함.

○ 8개 사업범주 중 지역창조문화브랜드 사업의 경우 지역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사업들로,
- 특화사업 예산의 일정 부분을 별도로 배정하여 매칭방식이 아닌 100% 중앙 지원방식의 공개경쟁형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되,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경쟁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함.
- 2014년부터 3년간에 걸쳐 10%씩 상향조정을 통해 2016년까지 전체 지역문화 특화사업 예산의 30%대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상주사업의 경우 사업수혜단체와 공연장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성과도 비교적 타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지역 2.0' 중기계획이 적용되는 2018년까지 '지역문화 특화사업' 분야에 포함시키지 않고 현행 지원금 총액을 소폭 확대하는 선으로 별도 사업으로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상주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2017년까지의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2018년 이후의 추진계획을 수립함. 지역 맞춤형 추진방안 및 상주사업 이후의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절 3)항에서 공연장 상주사업의 발전적 추진방안을 제시함.

(2)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사업목표 및 사업분야 예시

○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16개 시·도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FGI 및 연구원 워크숍 등 다양한 의견수렴 장치를 통해 도출된 지역문화 특화를 위한 사업들을 3대 사업목표에 맞춰 유사사업들끼리 묶어 8개 사업분야로 나눠 범주화하고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예시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새 정부 문화분야 국정과제[26] 중 '지역별 특화된 문화예술도시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과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강화로 예술창작 진흥'을

26)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 중 문화분야 공약집을 참조함.

위한 정책방안을 반영하여 3대 사업목표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8개의 사업분야를 제시함.
- 3대 사업목표로는 첫째, 예술창작활성화를 통한 지역예술창작역량 강화 둘째, 예술의 사회적 기여 및 지역문화생태계 강화 셋째, 지역창조문화브랜드 육성 및 강화 세 가지로 정함.
- 3대 사업목표 중에서도 특히, 예술창작 진흥 및 예술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목표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문예진흥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 분야가 지역예술창작활성화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임.

○ 8개의 사업분야를 범주화하고 각 분야별로 3~4개의 사업내용을 예시한 것은 다양한 사업들의 성격을 범주화해서 참고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적인 사업범주 구분은 아니며,
- 다양한 사업분야들과 사업내용의 예시를 통해 지역별로 더 차별화된 사업 기획을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 맵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사업목표 Ⅰ. 예술창작 활성화 및 지역예술창작역량 강화
- 특화사업 분야 1. 창조예술인 육성사업: 지역예술창작역량강화 · 신진예술가육성지원 · 지역 및 국제간 교류 활성화 관련사업
  - 지역문화창조여건 개선사업 (예술인 · 예술단체 국제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
  - 청년 예술가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 전문예술가 · 예술단체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
- 특화사업 분야 2. 창조예술활동 지원사업 : 지역예술창작 지원 및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
  - 우수 창작레퍼토리 지원사업
  - 신진예술가 실험예술활동 지원사업
  - 장르 및 기술융합형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 사업목표 Ⅱ. 예술의 사회적 기여 및 지역문화생태계 강화
- 특화사업 분야 3. 창조문화공간 사업 : 지역 문화시설 · 문화공간 활성화 관련 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지역문화 특화공간 개발사업
  - 지역특화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 특화사업 분야 4. 창조문화도시 사업 : 도시문화재생 · 공동체회복 · 커뮤니티아트 · 문화마을
  - 공공예술 관련사업
  - 문화예술 거버넌스 지원사업
  - 원도심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커뮤니티아트 지원사업 등
- 특화사업 분야 5. 창조문화인재 양성 사업 : 지역문화기획전문가육성 · 문화기업 · 예술교육 관련 사업

• 지역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사업
• 2030 미래 예술가 양성 지원사업(청소년 대상)
• 지역창조문화기업 육성 및 컨설팅 사업 등

– 특화사업 분야 6. 창조문화마케팅 지원사업 : 지역예술축제 · 문화유통 · 문화관광 관련사업
• 지역문화유통 지원사업
• 지역문화마케팅 지원사업
• 지역예술축제 지원사업 등

– 특화사업 분야 7. 창조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 시민예술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관련사업
• 예술창조사회 지원사업 (시민예술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오픈스튜디오 지원사업 (아티스트와 시민들의 만남 지원)
• 시민·동아리 중심의 시민예술축제 지원사업 등

○ 사업목표 Ⅲ. 지역창조문화브랜드 육성 및 강화
– 특화사업 분야 8. 지역창조문화브랜드 사업 : 지역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육성사업.
• 다문화 · 산학예 연계형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 농산어촌 고유자원을 소재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 지역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기획 브랜드 사업
• 기타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등

특화사업 목표	특화사업 분야	특화사업의 내용	사업예시
Ⅰ. 예술창작 활성화 및 지역예술 창작역량 강화	1. 창조예술인 육성사업	지역예술창작역량강화·신진예술가 육성지원·지역 및 국제간 교류 활성화 관련사업	• 지역문화창조여건 개선사업 (예술인 · 예술단체 국제교류 및 조사연구 사업) • 청년 예술가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 전문예술가 ·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2. 창조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역예술창작 지원 및 전문예술활동 지원사업	• 우수 창작레퍼토리 지원사업 • 신진예술가 실험예술활동 지원사업 • 장르 및 기술융합형 예술활동 지원사업 등
Ⅱ. 예술의 사회적기여 및 지역문화 생태계 강화	3. 창조문화공간 사업	지역 문화시설 · 문화공간 활성화 관련 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지역문화 특화공간 개발사업 • 지역특화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
	4. 창조문화도시 사업	도시문화재생 · 공동체회복 · 커뮤니티아트 · 문화마을 · 공공예술 관련사업	• 문화예술 거버넌스 지원사업 • 원도심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커뮤니티아트 지원사업 등
	5. 창조문화인재 양성사업	지역문화기획전문가육성· 문화기업 · 예술교육 관련 사업	• 지역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사업 • 2030 미래 예술가 양성 지원사업 (청소년대상) • 지역창조문화기업 육성 및 컨설팅사업 등

특화사업 목표	특화사업 분야	특화사업의 내용	사업예시
	6. 창조문화마케팅 지원사업	지역예술축제 · 문화유통 · 문화관광 관련사업	• 지역문화유통 지원사업 • 지역문화마케팅 지원사업 • 지역예술축제 지원사업 등
	7. 창조시민 문화활동 지원사업	시민예술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관련사업	• 예술창조사회 지원사업 (시민예술활동 및 예술동아리 지원) • 오픈스튜디오 지원사업 (아티스트와 시민들의 만남 지원) • 시민·동아리 중심의 시민예술축제 지원사업 등
Ⅲ. 지역창조문화 브랜드 육성 및 강화	8. 지역창조 문화브랜드 사업	지역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육성사업	• 다문화 · 산학예 연계형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 농산어촌 고유자원을 소재로한 지역문화 브랜드 사업 • 지역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기획 브랜드 사업 • 기타 지역고유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등

2) 지역문화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활동

(1) 인증 및 시상제도 운영

○ 지역문화 특화사업 우수기관 인증을 통한 경쟁 및 기획역량 강화를 유도

○ 지역문화 특화사업 시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모델 개발 및 특화사업 조기 확대를 유도함.

○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7대 중점과제인 '지역고유문화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함.

(2) 지역문화 특화사업 전시·워크숍 개최

○ 지역문화 특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정례적인 전시회 개최함.

○ 전시회와 병행하거나 별도로 지역문화 특화사업 성과 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특화사업 추진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의 추진역량을 강화함.

(3) 국가 대표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예술위–지역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 예술위와 지역문화재단 등 시·도와의 협력을 통한 국가 대표문화상품 개발함.

○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인, 예술단체를 국가 대표 예술인, 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 예술위원회는 국가 대표예술인 육성을 담당함.

○ 지역 대표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및 예술인 · 예술단체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원함.

○ 국가 대표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16개 시·도 협력사업에 대한 제안공모 추진을 통한 예술위-지역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3) 공연장 상주사업의 개선 및 발전방안

(1) 공연장 상주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역별 추진 여건

○ 2012년 추진된 공연장 상주사업에 대한 예술위원회의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 상주사업 수혜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의 관점에서는 전체 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만족도와 정량적 사업성과를 보여주는 지역협력형사업으로 확인됨.[27)]

○ 상주공연단체는 이 사업을 통해 '안정된 창작환경을 확보'하고, '공연단체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안정된 창작환경 확보 92.8%, 창작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93.5%. '매우 긍정'도 각각 57.3%, 64.5%),
- 공연장의 경우에도 '관객개발', '공연 콘텐츠(프로그램)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며, '가동률 향상'에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응답했음('관객개발' 92.03%, 상주단체 제공 공연 콘텐츠(프로그램)에 만족 88.5%, '가동률 향상' 84.1%. '매우 긍정'도 각각 47.8%, 48.7%, 40.7%).

○ 예술위에서 실시한 16개 시· 도 상주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지원대상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며(공연장의 87.6%, 공연단체의 90.6%가 합리적이라고 응답-부정적인 응답은 각각 1.7%, 1.4%),
-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응답한 공연장의 93%, 공연단체의 98.6%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특히 공연장의 62.8%, 공연단체의 81.2%가 '매우 긍정'에 응답하였으며, '매우 긍정'에 응답한 비율은 공연단체가 공연장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연단체측이 이 사업의 지속 시행을 더욱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주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 지원사업 기간에 대한 문제(지원사업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한 공연장의 50.5%, 공연단체의 43.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

27) 예술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연장 상주사업에 대한 공연장 및 공연단체 설문조사 결과 공연장과 공연단체 모두 상주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 공연장의 90.3%, 공연단체의 9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매우 긍정에 답한 공연장도 39.8%, 공연단체는 36.2%에 달함. 부정적인 응답은 공연장의 1.8%에 불과했음.

- 지원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응답한 공연장은 '보통'이 38.1%로 가장 많고, 긍정, 약간 긍정, 매우 긍정을 합한 긍정적 응답은 48.7%임. 공연단체도 '보통'이 30.4%로 가장 많고, 긍정적 응답은 43.5%로 나타났음.)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 상주사업 지원종료 이후의 후속 지원대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상주사업 수혜 공연장과 공연단체와는 달리 지원주체인 16개 시·도(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상주사업의 예산지원규모가 과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지역이 16개 지역 중 7개에 달했으며, 향후 상주사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려 12개 지역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음.
- 이는 지역의 지원금 규모에서 상주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타 예술장르의 지원이 줄어들고, 육성지원사업과 같은 소액다건형 지원사업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따른 지원주체의 현실적 부담감을 반영한 입장으로 파악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국정과제(78-4 : 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대폭 확대) 관리 차원에서 상주사업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 16개 시·도의 입장과 비수혜 공연단체 및 타 장르 예술인의 부정적 입장을 고려해볼 때, 상주사업 지원예산의 규모를 늘리거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확대로 제한하면서, 상주사업이 아닌 특화사업 지원금을 늘려 상주사업 지원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주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주사업이 지역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광역도의 차별화된 공연장 및 공연단체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주사업의 추진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공연장 가동률 등 공연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연단체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주된 목적으로 보고, 공연장 활성화는 사업의 효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광역도의 경우에는 공연장 가동률 제고와 공연장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추진이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2) 공연장 상주사업의 발전방안

○ 공연장의 지역 내 역할에 따른 공연장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공연장이 전문예술 중심의 공연장으로서 발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공연장은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반영한 지역 커뮤니티형 공연장으로서 발전이 적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연장의 입지적 여건, 지역문화계와 시민들의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공연장의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전문예술중심의 공연장 : 공연장 자체의 기획, 홍보, 마케팅 역량이 우수하고 고급예술장르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충분한 공연장으로, 주로 수도권지역과 광역시에 위치한 공공 공연장과

대형 민간 공연장이 해당됨. 상주사업 추진 시 장르별 우수 상주단체를 매칭하거나, 또는 특정 장르에 한정하여 수준 높은 전문공연예술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상주사업 추진이 가능함.

- 지역 커뮤니티형 공연장 : 전문예술분야에 대한 공연장 자체의 기획, 홍보, 마케팅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공연단체와의 결합으로 인한 공연장 활성화 효과가 높은 공연장으로, 전문공연예술장르를 중심으로 한 고급 공연물보다는 커뮤니티 아트센터로서의 시민친화형 공연물이 더 큰 호응을 얻는 지역밀착형 공연장이 해당됨. 여러 장르의 상주공연단체가 협력하는 형태, 또는 다양한 장르적 실험이 가능한 복합장르의 단일 공연단체가 상주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상주단체를 선정하며, 장기적으로는 협력 상주단체로의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공연장 여건, 전문공연예술단체의 활동여건을 고려한 상주사업 추진

- 수도권 지역은 공연장 여건 및 상주 가능한 전문공연예술단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주사업의 추진성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비수도권 중 광역시의 경우에는 공공 공연장이 부족한 경우에도 공연장간의 네트워크와 상주사업 참여단체들 간의 공동마케팅 등의 통합 활동을 통해 상주사업의 성과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주사업 추진여건이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함.
- 광역도의 경우에는 공연장 여건도 열악하고, 도청소재지 시·군을 제외하고는 상주 가능한 공연예술단체를 참여시키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상주사업의 추진방식을 지역 맞춤형으로 자율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방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상주사업 추진방안 예시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 공공 공연장 외에 민간 공연장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상주사업 종료 후 협력상주단체 형태로 공연장과의 지속적인 결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함. 상주사업의 목적을 공연장 활성화보다는 상주공연예술단체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시권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공공 공연장이 중심이 된 상주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공연장의 활성화 수준과 지역에서의 역할에 따라 상주사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 공연장 활성화보다는 공연예술단체의 창작여건 개선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공연장의 지역 내 역할에 따라 전문예술공연장과 지역커뮤니티형 공연장으로 나뉠 수 있으며, 공연장의 역할에 따른 상주단체 매칭이 필요함. 특히, 구 단위 지역밀착형 공공 공연장의 경우 커뮤니티 아트센터로서의 발전방향을 갖고 공연단체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도권 : 공공 공연장이 중심이 된 상주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며, 상주사업의 추진목적으로 공연장 활성화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연장 가동률 제고와 공연장의 활성화를 고려한 상주예술단체 선정이 필요함. 상주사업 규모의 확대보다는 성공 모델화가 가능한 공연장과 전문공연예술단체의 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상주여건이 되지 않는 공연장과 상주공연단체의 무리한 결합보다는 지역여건에 맞춰 공연장과 전문공연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창작레퍼토리의 공동제작, 광역도내 창작공연유통을 위한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협력, 지역대표 공연상품 제작을 위한 공동협력 등 상주사업의 지역맞춤형 운영의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고 허용될 필요가 있음.

○ 상주사업 지원 종료 후 후속지원사업 추진

- 상주사업 수혜 공연예술단체는 상주사업 수혜 기간이 2년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공연단체의 43.5%, 공연장의 50.5% 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부정적인 응답은 공연장 19.5%, 공연단체 33.3% 임.).
- 특히 공연단체의 경우에 부정적 의견이 높은데, 상주사업 참여 공연단체들을 지역의 대표적인 전문공연예술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지원사업, 후속대책이 필요함.
- 2년 수혜기간을 종료한 단체도 추가로 2년까지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4년까지의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공연장과의 협력상주단체, 프로그램 전속협력단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역공연장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8)]
- 상주단체 종료 후 협력상주단체로 발전하게 되는 전문공연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예술위 차원에서 창작레퍼토리 개발 지원, 공연물 유통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연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 상주공연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기획,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최장 4년간의 상주사업 수혜 기간 이후에는,
- 관객 멤버십제도 운영, 지역 후원회원 확보, 후원금 모금활동을 위한 전문적 역량 확보, 공연의 국내외 유통 및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네트워킹, 아트페어 등 공연마켓 참여를 위한 자료DB구축 등 공연단체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새 정부 문화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29)]에도 민간 우수 공연프로그램 풀을 확대하고 소외지역 및 소외시설에 대한 공연순회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 제정, 후원인증단체 지원, 문화예술 기부금 제도 개선 등 문화예술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순수 기초예술분야 창작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민간 전문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연간 140개 단체(문학,전시,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 장르별로 20개씩)를 집중 지원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 새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8)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의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과천시민회관의 '서울발레시어터',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상주사례가 모델이 될 수 있음. 협력상주단체는 공연장에서 상주단체에 일정 공간을 무상임대 또는 공연 계약에 따른 무상사용, 공연의 공동제작 등 공공지원 없이도 공연장과 공연단체와의 협력에 의해 상주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형태를 지칭함.

29) 새정부 문화분야 공약 세부실천계획 참조

4) 지역창조문화 브랜드사업

○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은 지역특화 문화사업 3대 목표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사업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지역 고유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고유의 핵심 문화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새 정부 문화분야 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된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육성'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여 연계 가능한 특화사업 분야임.

○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은 다문화 및 산(産)·학(學)·예(藝) 연계형 사업, 농산어촌 고유자원을 소재로 한 사업, 지역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창의기획 브랜드사업 등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브랜드 사업을 포괄하며,
-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문화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 특화된 사업을 장기간 집중 육성하는 지원사업 분야임.

○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은 지역협력형사업 중 유일하게 사업예산을 100%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개경쟁형 공모사업으로 추진됨.
- 장기적으로는 16개 시·도를 넘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역문화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은 새로운 사업들이 개발되어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 기존의 다른 특화사업 분야에 포함되는 사업들 중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중장기 지속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 가능한 사업들을 브랜드 사업으로 확대, 심화시켜 참여할 수 있음.

○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은 지역의 특화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며, 단기지원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3년 이내의 연차별 지원을 통해 브랜드로 육성 가능한 사업들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기재정지원 방식의 기금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창조문화브랜드 육성 강화를 위한 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지역창조문화브랜드사업의 예산은 지역특화 문화사업 지원규모의 30%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 매년 10%씩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2016년 지역특화 문화사업 지원 총 예산의 30%선까지 확대한 후 30%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함.

5) 지역문화 특화사업 및 공연장 상주사업 연차별 예산확대(안)에 따른 사업별 예산 분배 계획

○ 문화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문화예술지원금의 규모를 단

계적으로 늘려 2017년까지 약 900억 원 수준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200여억 원에 불과한 기금의 단계별 확대계획에 따라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지원금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임.
- 상대적으로 공연장상주사업의 지원 규모는 소폭 확대로 제한할 경우 전체 지원금 내에서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아래 도표는 2018년까지의 지역협력형사업 예산의 연차별 배분계획으로 지역문화창조브랜드 사업(사업목표 III)만 100% 기금지원사업으로 지역매칭 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사업들은 1:1 이상의 지역매칭을 전제로 한 기금지원 계획임.

(단위 : 백만원)

지역협력형 사업 구분		사업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17년 및 '18년	
		연차별 기금지원목표액	29,600	100%	44,600	100%	69,400	100%	89,300	100%
지역 특화 문화 사업	지역특화사업 합계		19,240	65.0%	32,112	72.0%	53,091	76.5%	73,226	82.0%
	지역특화사업 A (지역매칭) (사업목표 Ⅰ, Ⅱ 해당)		17,316	58.5%	25,690	57.6%	37,164	53.6%	51,258	57.4%
	지역특화사업 B (비매칭) (사업목표 Ⅲ. 지역창조문화브랜드 강화사업)		1,924 (특화사업의 10%)	6.5%	6,422 (특화사업의 20%)	14.4%	15,927 (특화사업의 30%)	22.9%	21,968 (특화사업의 30%)	24.6%
교류협력형사업 (지역매칭 / 한시사업)			1,480	5.0%	1,784	4.0%	2,429	3.5%	2,679	3.0%
공연장 상주사업			8,880	30.0%	10,704	24.0%	13,880	20.0%	13,395	15.0%

○ 지역협력형사업 전체 기금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의 지원규모도 연차별로 증가하여 2014년도 19,240백만 원에서 2017년 73,226백만 원으로 늘어나며 지원금 총액 대비 65%에서 82%로 증가됨.

- 상대적으로 공연장 상주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 총액은 늘어나지만, 전체 지원금 대비 지원비율은 30%에서 15%로 감소함.
- 교류협력형 사업은 지역매칭형 한시지원 사업으로 5년 간 3~5%의 특별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하며, 5년 후에는 특화사업으로 수용되는 것으로 함.

3. 지역-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1) 우수 지역 교류·협력 사업 특별지원 체계 마련

(1)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특별지원공모 사업 운영

○ 지역문화 특화사업과는 별도로 지역 공모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교류협력형사업 지원제도를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 지역별 우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인증하고 특별 지원하는 인증제도,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모델사례를 확산시키고 동기를 부여함.

○ 교류협력형 사업의 지원규모는 전체 지역협력형사업의 3~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며 1:1 이상의 지역매칭을 전제로 한 사업임.

2) 교류·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활성화

(1) 교류·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자료집 발행 추진

○ 매년 교류·협력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하여 시상기관과 사업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사례집에 게재하여 성과를 공유, 확산함.

○ 지역 내 타 부처 지원사업과의 연계협력 추진사례도 발굴하여 우수 사례는 시상을 통해 격려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함.

(2) 교류·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워크숍 추진

○ 사도 기획인력에 대한 교류·협력사업 기획역량 강화 교육 워크숍 실시하고, 지역의 요구에 따라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함.

○ 해외의 우수 교류·협력 추진사례를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통해 공유하고, 우수 교류·협력사례 추진 기관에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함.

(3) 수평적, 수직적 교류의 활성화 지원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간의 수직적 교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할분담에 따른 통합사업, 협력사업의 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함.

○ 기초문화재단간의 수평적 교류·협력 외에 문화재단과 문화원, 공연장, 문화예술교육 지역센터 등과의 수평적 교류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생태계의 고유한 상생협력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

3) 지역-국제간의 교류·협력사업 촉진

(1) 지역-국제 간 교류협력사업 사례 및 지원수요 파악 및 컨설팅 지원

○ 지역과 세계가 직접 만나는 Glocalization(세방화) 전략이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으므로,
- 지역이 각 분야별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유사한 세계 각국의 사업, 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예술위원회 자체적으로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교류지원 등 간접지원의 형태로 지역-국제간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전문적인 국제교류 역량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문화부 산하 국제교류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에 국제교류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의 국제교류 지원요청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지역 2.0' 시대의 재정

1. 지역문예진흥기금 배분 연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신(前身)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1973년 당시 문예진흥원은 거의 전국에서 유일한 문화예술지원기관으로서,

- 전국단위뿐 아니라 오늘날 시·도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내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까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음.

○ 이후 지역문예진흥기금 창설을 위한 종자금(seed money)으로 1984년부터 '90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 9억 7,500만원씩, 그리고 대전('90년)과 울산('98년)에 각 6억 2,500만 원씩 출연하여,

- 2012년 11월 현재 12개 광역문화재단의 기금(또는 기본재산) 적립 총액은 4,213억 1,200만원(지역별로는 85억 수준에서 1,275억이 넘는 규모까지 다양)에 이르고 있음.[3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04년 말 5,272억 원에 달하였으나, 매년 수백 억 원씩 사업비로 기금을 잠식하여 현재 3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임.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배분형' 사업이라 부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문예진흥원(현 예술위원회)이 직접 추진해 오던 소규모 지역성 사업인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 등 9개사업을,

- 1999년부터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후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과 묶어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로 통칭)으로 묶어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이관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지역배분형'으로 시행한 2006~2008년도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시·도별 배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서울시(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15.3~18.4%,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0.0~32.9%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1999년 IMF 위기상황 하에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으로 국고 20억 원을 긴급 반영하여 지역 매칭으로 '04년까지 추진하였고, 이를 '05년부터 예술위원회가 이관 받아 추진했음.

○ 1997년 이후 각 시·도에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03년경부터 (중앙)문예진흥기금, 지역 문예진흥기금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07년 10월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한지협)가 발족하였고,

- 지역 고유의 문화 발굴·육성과 시·도 간 균형발전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09년에

30) 2008년 12월 말 현재 16개 시·도의 지역문예진흥기금 적립 총액은 4,008억 3,900만원이었음.

예술위원회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2개 지역배분형 사업 98억 원('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48억 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50억 원) 외에 새로이 3개 사업 92억 원을 '지역협력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함으로써,

- 2009년도 지역협력형 5개 사업(190억 원)은,[31] 지역 매칭액(248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38억 2,400만 원의 사업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음.

○ 2009년에 새로이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전환한 3개 사업은,

- 1974년부터 추진 해오던 '예술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50억 원, '사·도기획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2006년부터 추진해 오던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35억 원, 수도권의 경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시범 실시도 일부 포함),
- 그리고 시·도 추천을 거쳐 심의·결정하고 예술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7억 원, 구 '문화의달행사지원' 대체) 등임.

※ 이와 같은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외에 당시 지역매칭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 복권기금을 전입 받아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한 '사랑티켓'('09년 기금 20억 원 및 매칭 17억 8,000만원), '문화바우처'('09년 40억 원 및 서울시 매칭 2억 원), '지역문예회관특별공연프로그램지원'('09년 40억 원 및 매칭 47억 7,000만원) 등이 있으며,
- '작은도서관조성사업'('08년 50억 원 및 지역매칭)은 '09년부터 국고사업으로 전환되었음.

〈표-29〉 2006~2008년 '지역배분형'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시·도별 기금배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6년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계		
	기금	지역매칭	소계	기금	지역매칭	소계	기금	지역매칭	총계
서울	-	-	-	2,000	2,000	4,000	2,000	2,000	4,000
부산	295	730	1,025	400	400	800	695	1,130	1,825
대구	295	172	467	200	270	470	495	442	937
인천	400	747	1,147	250	250	500	650	997	1,647
광주	295	123	418	140	140	280	435	263	698
대전	347	275	622	140	140	280	487	415	902
울산	295	295	590	140	140	280	435	435	870
경기	400	1,920	2,320	527	527	1,054	927	2,447	3,374
강원	347	1,913	2,260	306	306	612	653	2,219	2,872
충북	295	302	597	187	187	374	482	489	971
충남	295	390	685	255	255	510	550	645	1,195
전북	347	946	1,293	238	238	476	585	1,184	1,769
전남	295	540	835	357	377	734	652	917	1,569
경북	295	170	465	391	391	782	686	561	1,247
경남	347	560	907	340	340	680	687	900	1,587
제주	347	193	540	112	112	224	459	305	764
계	4,895	9,276	14,171	5,983	6,073	12,056	10,878	15,349	26,227

* 2006년도 서울시 기금 배분 비율 18.4%,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금 배분 비율 32.9%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31) 예술위원회 직접 사업인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 7억 원을 제외하면, 2009년도 지역 배분기금 총액은 183억 원임.

(단위: 백만 원)

구분	2007년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계		
	기금	지역매칭	소계	기금	지역매칭	소계	기금	지역매칭	총계
서울	–	–	–	1,500	1,500	3,000	1,500	1,500	3,000
부산	330	793	1,123	349	417	766	679	1,210	1,889
대구	310	768	1,078	175	300	475	485	1,068	1,553
인천	400	597	997	219	230	449	619	827	1,446
광주	280	185	465	123	123	246	403	308	711
대전	330	300	630	123	140	263	453	440	893
울산	310	280	590	123	123	246	433	403	836
경기	360	2,213	2,573	460	515	975	820	2,728	3,548
강원	330	1,601	1,931	268	268	536	598	1,869	2,467
충북	310	370	680	164	164	328	474	534	1,008
충남	280	405	685	223	223	446	503	628	1,131
전북	330	919	1,249	208	319	527	538	1,238	1,776
전남	280	550	830	327	347	674	607	897	1,504
경북	280	161	441	341	341	682	621	502	1,123
경남	310	530	840	297	297	594	607	827	1,434
제주	360	150	510	100	101	201	460	251	711
계	4,800	9,822	14,622	5,000	5,408	10,408	9,800	15,230	25,030

* 2007년도 서울시 기금 배분 비율 15.3%,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금 배분 비율 30.0%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단위: 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분	2008년								
	지역문예진흥기금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계		
	기금	지역매칭	소계	기금	지역매칭	소계	기금	지역매칭	총계
서울	–	–	–	1,500	1,500	3,000	1,500	1,500	3,000
부산	330	795	1,125	349	350	699	679	1,145	1,824
대구	330	1,026	1,356	175	350	525	505	1,376	1,881
인천	400	2,013	2,413	219	219	438	619	2,232	2,851
광주	310	206	516	123	123	246	433	329	762
대전	310	320	630	123	123	246	433	443	876
울산	310	295	605	123	123	246	433	418	851
경기	360	2,260	2,620	460	460	920	820	2,720	3,540
강원	330	1,840	2,170	268	268	536	598	2,108	2,706
충북	280	420	700	164	164	328	444	584	1,028
충남	280	460	740	223	223	446	503	683	1,186
전북	360	1,270	1,630	208	400	608	568	1,670	2,238
전남	280	681	961	327	347	674	607	1,028	1,635
경북	280	145	425	341	341	682	621	486	1,107
경남	310	530	840	297	297	594	607	827	1,434
제주	330	190	520	100	100	200	430	290	720
계	4,800	12,451	17,251	5,000	5,388	10,388	9,800	17,839	27,639

* 2008년도 서울시 기금 배분 비율 15.3%,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금 배분 비율 30.0%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표-30〉 '09~'13년 지역협력형사업 서울/지방/수도권 기금배분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기금액	비중	기금액	비중	기금액	비중	기금액	비중	기금액	비중
서울	7,030	38.4	4,749	24.6	2,589	15.7	2,928	16.4	2,769	15.5
지방	11,270	61.6	14,551	75.4	13,902	84.3	14,873	83.6	15,131	84.5
계 (수도권)	18,300 (8,979)	100.0 (49.1)	19,300 (7,665)	100.0 (39.7)	16,491 (5,322)	100.0 (32.3)	17,801 (5,701)	100.0 (32.0)	17,900 (5,680)	100.0 (31.7)

* 지역문화협력관 발굴 사업비('10년 111백만 원, '11년 109백만 원, '12년 100백만 원) 제외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를 재구성

2. 수요 규모 추정 및 중기 재원 계획

1) '지역문화 특화사업' 수요 규모 추정

○ 16개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대상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문예진흥기금 수요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설문 내용 : 만일 지역문화 기금이 충분하여 1:1 매칭을 전제로 요구한다면, 어느 규모로 요구하시겠습니까 ?
- 응답 결과에 따른 기금 수요 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29,252백만 원으로, 300억 원 이상의 기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는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 구도 하에서의 기금 수요로서, 후술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2014년도 지원 규모 296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임.
- 2014년 이후 각 지역의 고유성 계발을 통한 지역문화의 진흥 발전을 목표로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금 배분액이 대폭 증가하는 '문화재정 2%'시대인 '지역 2.0' 시대에는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래 표를 보면 지역문화재단 미 설립 시·도의 경우, '현재 이하'(경북), '현재 수준'(울산, 충남, 전북) 등 대체적으로 요구 수준이 낮음. 이는 문화재단이 없어 지역협력형사업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표-31〉 문화재단 2차 설문 결과에 따른 기금 수요 추정

응답	계산식	기금수요 (백만 원)
현재 이하	경북 : 934백만 원 x 0.5 (편의를 위해 0.5배로 계산)	467
현재 수준	서울 : 체크는 '현재 수준'으로 했으나, 4,500백만 원('3년 2,769백만 원의 1.6배)을 요구	4,500
현재 수준	대구('3년 1,051), 울산(608), 충북(822), 충남(914), 전북(1,067), 전남(923), 제주(805)	6,190
현재×2	부산('3년 1,116), 광주(1,000), 대전(811), 경기(1,934), 경남(1,065) x 2.0	11,852
현재×3		–
현재×3배 이상	인천(977), 강원(1,104) x 3.0 (편의를 위해 3배로 계산)	6,243
계	16개 시·도	29,252

- 서울 : "서울의 경우 최근 4년(2009~2012)간 서울시 배분금액 평균액인 4,500백만 원 수준이 적당함. 이 금액은 서울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직전인 2010년도 당시 서울시 배분금액(4,749백만원)을 회복하는 수준임."
- 광주 : "광주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종자돈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함. 재단 내 자체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포함 또는 확장에 대한 계획 없음. 지원사업의 경우 1:1 매칭 이상을 만들어 낼 재원이 없음으로 1 : 2~3으로 시비의 포지션이 커질 수 있기를 희망함."
- 제주 : "현재의 규모보다 축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수준이 적정하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고 또는 지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문화예술부문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일반 및 특별 회계)를 보면 아래 도표와 같음.

- 2012년도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은 2008년도에 비해 23.3% 증가했으나, 문화예술부문은 절대규모는 거의 변동이 없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를 2008년 이후 7개 지역문화재단('09년 4개, '10년 2개, '11년 1개)의 설립에 따른 문화예술 재원의 분할에 의한 영향이라고는 볼 수 없음.
- 이는 2011년도 위 7개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총액 885억 원의 구성, 즉 지자체 보조 470억 원(53.1%), 국고(기금 등) 183억 원(20.7%), 자체자금 44억 원(5.0%), 기타 188억 원(21.2%, 충북문화재단은 전체 예산 181억 원을 '기타'로 분류)을 보면 알 수 있음.[32]

〈표-32〉 2008~2012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부문 세출 총계예산 총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문화예술부문(A)*	11,970	N.A.	11,057	10,532	11,217
전체 (B)	832,847	N.A.	948,796	958,057	1,026,972
A/B (%)	1.44	–	1.17	1.10	1.09

*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 관광부문, 체육부문, 문화재부문, 문화및관광 일반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2010~2012년도 「지방재정연감」 해당부분을 참고하여 재구성

○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부문 예산 총액의 정체성은, '문화재정 2%' 시대인 '지역 2.0'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기금 규모를 대폭 증액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임.

32) 12개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총액 2,129.8억 원의 구성을 보면, 지자체 보조 957.4억 원(44.9%), 국고(기금 등) 321.9억 원(15.1%), 자체자금 365.9억 원(17.2%), 기타 484.6억 원(22.8%, 경기문화재단 285억 원 및 충북문화재단은 181억 원 포함) 임.

2) 중기 재원 계획

○ 문예진흥기금 수지 전망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자체로 진단한 문예진흥기금 수지 전망에 따르면, 매년 250~300억 원 대의 경륜·경정수익금 전입에도 불구하고,
-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180억 원 대의 적자가 불가피하여 2012년 3,000억 원 대였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이 2016년에는 2,300억 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시중 금리(2012년 정기예금 금리 3.4%)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재원(財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적립금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33〉 2010~2016년 문예진흥기금 수지 전망

구분	'10실적	'11실적	'12전망	'13전망	'14전망	'15전망	'16전망
순수입(A)	638	832	1,130	993	1,089	1,208	1,267
순지출(B)	1,258	1,190	1,355	1,470	1,531	1,646	1,747
경륜/경정수익전입금(C)	243	254	262	269	278	286	294
적립금 증감액(A-B+C)	△377	△104	37	△208	△164	△152	△186
적립금 잔액	3,362	3,258	3,095	3,087	2,923	2,771	2,585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지역문화 특화사업' 재정 확충 계획

-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가재정법」에 의거 작성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에 의하면,
- 지역협력형사업('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지원 규모를 '14년 실천계획 29,740백만 원(중기사업계획 296억 원), '15년 43,019백만 원(446억 원), '16년 62,227백만 원(694억 원), '17년 90,011백만 원(893억 원) 규모로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8년 이후에는 '17년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33)]
- 그러나 앞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지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지역문화 특화사업' 지원 규모의 대폭적인 확충은,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국고 보조나 복권기금 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전망임.

  ※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에 의한 2014년 이후 중기소요 산출근거는 다음 표와 같음.

33) '새 정부 문화공약 실천계획' 및 '예술위원회 공약 이행'에는 지역협력형사업 지원 규모를 '13년 206억 원, '14년 250억 원, '15년 300억 원, '16년 350억 원, '17년 400억 원 규모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표-34〉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소요 산출근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18 이후
• 지역문예활동지원	29,600	44,600	69,400	89,300	2017년도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	400	400	600	700	사업 규모 유지
- 사업 운영 및 평가	150	150	250	300	
-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원	250	250	350	400	

*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서」 49쪽을 재구성

3. '지역 2.0' 시대의 기금배분 기준

1) 기금배분 기준 총괄

○ 2014년 이후 '지역 2.0'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도별 기금배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배분형'이라 부른 2008년 이전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과 '지역협력형'이라 부른 2009년 이후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여러 차례 시·도별 기금배분 기준이 변해 왔음.[34)]
- 아래의 '지역 2.0' 시대 기금배분 기준은 그간 여러 차례 개최된 한지협 회의, 연구진 회의, 워크숍, 외부 세미나, 1~2차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설문조사에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고,
- 예술위-한지협-연구진 내부 워크숍(2013.1.9 10:00~17:00)에서 장시간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임.

○ 설명의 편의를 위해 먼저 2013년 '지역협력형' 사업의 시·도별 기금배분 기준과 2014년 이후 '지역 2.0' 시대 '지역문화특화사업'의 배분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순서대로 설명해 나가고자 함.

〈표-35〉 2013년 및 2014년 이후 기금배분 기준 비교

배분 기준	'13년 반영비율(%)		'14년 이후 반영비율(%)*
	특성화지원	상주단체육성	일원화
시 · 도 '성과평가 결과' (11년 지역협력형사업 시 · 도별 평가 결과 반영)	20	20	20
시 · 도 '인구 수' (2011년 말 주민등록 기준)	30	-	40
시 · 도 '공연장 수'	-	10	-
시 · 도 '공연예술 단체 수'	-	30	-
시 · 도 '재정의존도' (2012년 당초 예산 기준 사도별 재정자립도 역산 산출)	30	20	20
시 · 도 '매칭정도' (2012년 중앙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시 · 도의 매칭률)	20	20	20
계	100	100	100

* 2014년에 적용 예정인 비율로, 2015년 이후에는 '성과평가 결과' 반영 강화 등 그 비율이 변할 수 있음.

34) '지역협력형'으로 바뀐 2009년 이후의 시·도별 기금배분 기준은 제2장 제2절 참조

2) 기금배분 기준별 설명

○ **기금배분 기준의 일원화 :** 2013년 이전에는 기금배분 기준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 함.

- 1차 설문조사 : 지역문예지원사업에 서울 12.5% 선배정 기준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봄(부산), 지역마다 환경·조건이 다르나 동일 배분기준으로 기금 배분해야 함(경기/경남).
- 지역문예지원사업 배분기준을 상주단체지원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부산), 전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함.(2차 설문조사, 울산)

○ **시·도 '성과평가 결과' 20% :** 2014년의 경우 기존 20%를 유지하되, 등급 간 편차(차등화)를 현재보다 크게 높이도록 함.

- '지역문화 특화사업' 성과의 개선을 위해 기금배분 기준으로 성과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강력히 제시되었으나, '지역 2.0' 첫 해(2014년)는 20%로 하고 등급 간 편차(차등화)만 현재보다 크게 높이도록 함.
- 이에 따라 등급 간 편차를 2012년 1.5배 → 2013년 2배 → 2014년 4배로 높이기로 했으며, 2015년 이후 성과평가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지침을 각 시·도에 통보하여 미리 이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임.

〈표-36〉 성과평가 결과 '12~'13년 가중치 및 '14년 가중치(안)

구분	'12년(가중치)	'13년(가중치)	'14년(가중치 안)
매우 우수	1.5	1.50	2.0
우수	1.3	1.25	1.5
보통	1.1	1.0	1.0
미흡	1.0	0.75	0.5
매우 미흡	1.0	0.75	0.5

※ 성과평가 반영 비율 조정 문제

- 성과평가 결과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하향 조정, 상향 조정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사업성과 개선 촉진을 위해 등급 간 편차를 높이고 반영 비율을 높여 나가기로 함.
- 1차 설문조사 : 특성화·상주단체 공통 개선과제 - 성과평가 결과 % 상향 조정(광주), 현재 같은 기금배분 방식에서 성과평가·환류제도는 무의미하며, 성과평가 결과 적극(상향) 반영 필요(강원)
- 2차 설문조사 :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평가결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대구), 연간 사업 진행 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고 판단됨. 20% 이상의 상향 조정 필요(광주)
- '지역 2.0' 워크숍('12.12.21) : 지역활동의 성과에 다른 차등적 기금배분 방식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안이영노)

○ 시·도 인구수 40% : 기존 30%(특성화사업만 해당, 상주단체사업은 비 해당)에서 40%로 늘리되, 인구수를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간 가중치 편차를 4배로 함.
- 2013년의 경우 절대인구수를 적용한 결과, 동급의 광역 시·도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인구수에 따른 기금배분액 차이가 20.7배(경기 765백만 원, 제주 37백만 원)에 이름.
- 시·도별 절대인구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인구수를 5등급으로 나눠 인구수가 매우 적은 시·도의 기금 배정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호하고,
- 비수도권 기금배정 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 지역 고유의 특성화 사업 개발이라는 본 사업의 근본 취지를 살려 나가고자 함.

〈표-37〉 시·도 인구수별 등급화 및 가중치(안)

구분	인구수 기준	해당 시·도	가중치(안)
1등급	1000만 명 초과	경기, 서울	2.0
2등급	300만 초과 ~ 1000만 미만	부산, 경남	1.5
3등급	200만 초과 ~ 300만 미만	대구, 인천, 충남, 경북	1.0
4등급	100만 초과 ~ 200만 미만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0.5
5등급	100만 명 미만	제주	0.5

○ **공연장 수, 공연예술단체 수 기준 폐지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만 적용했던 시·도 공연장 수, 시·도 공연예술단체 수는 기준 자체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금배분 기준에서 삭제
-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은 시설 인프라나 활동예술인 비율이 약세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매칭비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1차 설문조사, 인천)
-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지방 간 편차가 큰 공공 공연장수나 공연예술단체수 기준을 철폐해야 함(1차 설문조사, 광주).

○ **시·도 재정의존도 20% :** 2013년도의 경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3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0%였던 것을 2014년도부터 20%로 일원화 함.
- 시·도 재정자립도를 역산한 재정의존도를 배분기준 일원화 방침에 따라 20%로 조정

○ **시·도 매칭 정도 20% :** 시·도 매칭 정도 20%는 그대로 유지하되, 모든 시·도의 최소 의무 매칭비율을 1:1 이상으로 규정
- 2013년의 경우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모두 20% 였음.
- 2013년에는 시·도 매칭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소 의무 매칭비율을 달리 했으나, '지역 2.0' 지역문화 특화사업은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매칭비율 1:1 이상'으로 규정
  ※ 2013년 특성화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 70%(서울/인천)를 기준으로 그 미만은 최소의무 매칭비율 1:1, 그 이상은 1:2 로 하였고, 상주단체사업의 경우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50:50, 비수도권은 70:30 으로 하였으나, 수도권의 불만이 많았음.
- 1차 설문조사 : 재정의존도 반영 후,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1:2 매칭의무화는 이중부담을 주

는 것으로, 매칭비율을 1:1 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서울), 상주단체사업의 경우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매칭비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인천),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분기준으로 예산배분하고 1:1 매칭 이상인 지자체에 가산점(경기/경남), 매칭비율을 모든 사업에 5:5로 의무화해야 함(전북), 모든 사업에서 1:1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며,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되지 않는 매칭장치 필요(제주)

- 2차 설문조사 : 재정의존도를 30%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70% 이상인 경우 1:2 매칭을 의무화하는 것은 동일 사항에 대한 이중평가며, 서울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서울), 상주단체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동일시하기 보다는 타 광역시와의 형평에 맞춰 매칭비율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천), 공연장상주단체의 경우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없이 동일하게 해야 함(광주), 매칭비율 5:5로 의무화 필요(전북)
- 1차 FGI('13.1.16) : 서울의 국채 상황이나 역차별, 투자대비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의 매칭비율은 1:1로 가야 한다(김경욱).

4. '지역 2.0' 기준에 의한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1) 기금배분 기준별 시·도 배정액 산출 내역

○ '지역 2.0' 기준에 의한 시·도별 기금배분을 시뮬레이션 해 보고자 함. 2013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2013년 시·도별 기금배분에 사용한 수치를 활용했고,

- 예산총액도 2013년도와 동일수준(17,900백만 원)으로 설정하였음. 다만 매칭율은 2013년 계획이 아닌 2013년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시·도 '성과평가 결과' 20% : 배정액 3,580백만 원

〈표-38〉 사·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Ⅰ(시·도 '성과평가 결과' 20%)

(단위: 백만 원)

등급	등급별 총액	가중치	지역수	산출액	해당 지역
1등급 (매우 우수)	818.3	2.0	2	409	서울, 대구
2등급 (우수)	1,534.3	1.5	5	307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3등급 (보통)	613.7	1.0	3	205	대전, 경남, 제주
4등급 (미흡)	306.9	0.5	3	102	울산, 전북, 전남
5등급 (매우 미흡)	306.9	0.5	3	102	충북, 충남, 경북
계	3,580.1	-	16	3,580	16개 지역

* 자료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 시·도 인구수 40% : 배정액 7,160백만 원

〈표-39〉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II (시·도 인구수 40%)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총인구수	등급	가중치	산출액
서울특별시	10,249,679	1	2.0	954
부산광역시	3,550,963	2	1.5	716
대구광역시	2,507,271	3	1.0	477
인천광역시	2,801,274	3	1.0	477
광주광역시	1,463,464	4	0.5	239
대전광역시	1,515,603	4	0.5	239
울산광역시	1,135,494	4	0.5	239
경기도	11,937,415	1	2.0	954
강원도	1,536,448	4	0.5	239
충청북도	1,562,903	4	0.5	239
충청남도	2,101,284	3	1.0	477
전라북도	1,874,031	4	0.5	239
전라남도	1,914,339	4	0.5	239
경상북도	2,699,195	3	1.0	477
경상남도	3,308,765	2	1.5	716
제주특별자치도	576,156	5	0.5	239
계	50,734,284	-	15.0	7,160

* 자료 : 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 시·도 재정의존도 20% : 배정액 3,580백만 원

〈표-40〉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III (시·도 재정의존도 20%)

(단위: %,백만 원)

시·도	자립도	의존도	합계	적용비율	산출액
서울특별시	88.7	11.3	100	1.22	44
부산광역시	52.9	47.1	100	5.12	183
대구광역시	47.6	52.4	100	5.70	204
인천광역시	70.4	29.6	100	3.21	115
광주광역시	41.1	58.9	100	6.41	229
대전광역시	52.7	47.3	100	5.14	184
울산광역시	63.6	36.4	100	3.95	141
경기도	61.7	38.3	100	4.16	149
강원도	22.5	77.5	100	8.43	302
충청북도	27.6	72.4	100	7.88	282
충청남도	28.6	71.4	100	7.77	278
전라북도	21.1	78.9	100	8.58	307
전라남도	14.6	85.4	100	9.29	333
경상북도	22.5	77.5	100	8.43	302
경상남도	36.6	63.4	100	6.90	247
제주특별자치도	28.2	71.8	100	7.81	280
계	680.4	919.6	1,600	100.00	3,580

※ 시·도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자치단체예산규모로 광역 시·도 본청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2012 행정안전통계연보」

○ 시·도 매칭 정도 20% : 배정액 3,580백만 원

〈표-41〉 시·도별 기금배분 시뮬레이션 IV (시·도 매칭정도 20%)

(단위: %,백만 원)

지역	2013년 매칭실적 및 총사업비							
	지역문예활동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총사업비	매칭율	적용비율	산출액
	중앙기금	지역매칭	중앙기금	지역매칭				
서울	1,237	2,474	1,532	1,532	6,775	1.45	10.48	375
부산	652	652	464	199	1,967	0.76	5.50	197
대구	632	632	419	179	1,862	0.77	5.57	199
인천	531	1,062	446	446	2,485	1.54	11.13	399
광주	478	478	522	224	1,702	0.70	5.06	181
대전	480	480	331	142	1,433	0.77	5.57	199
울산	358	358	250	107	1,073	0.76	5.50	197
경기	1,076	1,076	858	858	3,868	1.00	7.23	259
강원	630	630	474	203	1,937	0.75	5.42	194
충북	466	466	356	153	1,441	0.75	5.42	194
충남	538	538	376	161	1,613	0.76	5.50	197
전북	652	652	415	178	1,897	0.78	5.64	202
전남	540	540	383	164	1,627	0.76	5.50	197
경북	532	532	402	172	1,638	0.75	5.42	194
경남	614	614	451	193	1,872	0.76	5.50	197
제주	474	474	331	142	1,421	0.77	5.57	199
계	9,890	11,658	8,010	5,053	34,611	13.83	100.00	3,580

2) 기준별 시·도 배정액 산출 내역 총괄

○ 2013년 기준 대비 '지역 2.0' 기준 시·도별 배정액 비교

- 예산총액을 2013년도와 동일한 수준(17,900백만 원)으로 설정한 경우임.

〈표-42〉 2013년 기준 대비 '지역 2.0' 기준 시·도별 배정액 비교

(단위: %, 백만 원)

지역	특성화지원		상주단체 지원		2013 배정액		'지역 2.0' 기준에 의한 배정액						증감 (B-A)	
	13년 배분	배정 비율	13년 배분	배정 비율	계(A)	배정 비율	성과 평가 (20%)	인구수 (40%)	의존도 (20%)	매칭율 (20%)	계(B)	배정 비율	액수	증감 비율
서울	1,237	12.5	1,532	19.1	2,769	15.5	409	954	44	375	1,782	10.0	△987	△35.6
부산	652	6.6	464	5.8	1,116	6.2	307	716	183	197	1,403	7.8	287	25.7
대구	632	6.4	419	5.2	1,051	5.9	409	477	204	199	1,289	7.2	238	22.6
인천	531	5.4	446	5.6	977	5.5	307	477	115	399	1,298	7.3	321	32.9
광주	478	4.8	522	6.5	1,000	5.6	307	239	229	181	956	5.3	△44	△4.4

지역	특성화지원		상주단체 지원		2013 배정액		'지역 2.0' 기준에 의한 배정액						증감 (B-A)	
	13년 배분	배정 비율	13년 배분	배정 비율	계(A)	배정 비율	성과 평가 (20%)	인구수 (40%)	의존도 (20%)	매칭율 (20%)	계(B)	배정 비율	액수	증감 비율
대전	480	4.9	331	4.1	811	4.5	205	239	184	199	827	4.6	16	2.0
울산	358	3.6	250	3.1	608	3.4	102	239	141	197	679	3.8	71	11.7
경기	1,076	10.9	858	10.7	1,934	10.8	307	954	149	259	1,669	9.3	△265	△13.7
강원	630	6.4	474	5.9	1,104	6.2	307	239	302	194	1,042	5.8	△62	△5.6
충북	466	4.7	356	4.5	822	4.6	102	239	282	194	817	4.6	△5	△0.6
충남	538	5.4	376	4.7	914	5.1	102	477	278	197	1,054	5.9	140	15.3
전북	652	6.6	415	5.2	1,067	6.0	102	239	307	202	850	4.7	△217	△20.3
전남	540	5.5	383	4.8	923	5.2	102	239	333	197	871	4.9	△52	△5.6
경북	532	5.4	402	5.0	934	5.2	102	477	302	194	1,075	6.0	141	15.1
경남	614	6.2	451	5.6	1,065	5.9	205	716	247	197	1,365	7.6	300	28.2
제주	474	4.8	331	4.1	805	4.5	205	239	280	199	923	5.2	118	14.7
계	9,890	100.0	8,010	100	17,900	100.0	3,580	7,160	3,580	3,580	17,900	100.0	0	5.15

○ **'지역 2.0' 기준의 시·도별 기금배분 기본구도**

- 인구 수(40%)나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 역산, 20%)는 거의 고정비율로 작용하고 성과평가(20%)와 매칭율(20%)에 따라 배정액에 큰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 전략적으로 시·도로 하여금 성과관리체계 개선 및 지방비 매칭비율 증가에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구도임.

○ **2013년 배분 대 '지역 2.0' 기준의 배분 내역 비교**

- 각 시·도의 배정 비율이 산술 평균치(6.25%)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 비율과 '지역 2.0' 비율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구해 본 결과,
- 2013년도는 2.83, 그리고 '지역 2.0'은 1.73으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각 시·도의 배분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평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참고로 평균편차(mean deviation)는 2013년도는 1.72, '지역 2.0'은 1.46임. 평균편차는 통계학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으나, 개념적으로는 표준편차보다 오히려 보다 명확한 범위의 평준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시·도별 배분비율 평준화 경향은,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역공약으로서의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문화공약으로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그리고 문화분야 공약실천계획 중 '지역문화 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것임.
- 배분기준의 변경으로 배분액 증감율이 전체 평균 5.15% 증가했으며, 증가폭이 가장 큰 시·도는 인천 32.9%(321백만 원), 경남 28.2%(300백만 원), 부산 25.7%(287백만 원), 대구 22.6%(238백만 원) 순이고,
-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는 서울 △35.6%(△987백만 원), 전북 △20.3%(△217백만 원), 경기 △13.7%(△265백만 원)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배정액 비중은 2013년 31.7%(5,680/17,900)에서 2014년 '지역 2.0'에서는 26.5%(4,749/17,900)로 5.2% 감소함.

※ 시·도별 배정액을 조정하는 방법

- '지역 2.0' 기금배분 기준인 성가평가 20%, 인구수 40%, 재정의존도 20%, 매칭률 20%의 비중을 바꾸는 방법
- '성가평가'의 등급별 가중치 폭을 더 높여(예컨대, 현 0.5~2.0 ⇒ 0.5~3.0) 성가평가 1등급(서울, 대구), 2등급(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시·도의 배정액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 '인구수'의 등급별 가중치 폭을 높여(예컨대, 현 0.5~2.0 ⇒ 0.5~3.0) 인구수 1등급(서울, 경기), 2등급(부산, 경남) 시·도의 배정액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

3) '지역 2.0' 시대(2014~2018) 시·도 배정액 전망

○ 2014년도 기금배분 기준 적용 시, 연도별 시·도 배정액 전망

- 일단 2014년도 기금배분 기준을 적용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 및 '대통령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에 의한 연도별 지역협력형사업('지역문화 특화사업') 기금계획에 따른 시·도별 전망치임.

〈표-43〉 2014~2018년 시·도별 배정액 전망

(단위: %, 백만 원)

지역	'14년 비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서울	10.0	2,947	4,440	6,909	8,890	8,890
부산	7.8	2,320	3,496	5,440	6,999	6,999
대구	7.2	2,131	3,212	4,998	6,431	6,431
인천	7.3	2,146	3,234	5,032	6,476	6,476
광주	5.3	1,581	2,382	3,706	4,769	4,769
대전	4.6	1,368	2,061	3,206	4,126	4,126
울산	3.8	1,123	1,692	2,633	3,387	3,387
경기	9.3	2,760	4,158	6,471	8,326	8,326
강원	5.8	1,723	2,596	4,040	5,198	5,198
충북	4.6	1,351	2,036	3,168	4,076	4,076
충남	5.9	1,743	2,626	4,086	5,258	5,258
전북	4.7	1,406	2,118	3,295	4,241	4,241
전남	4.9	1,440	2,170	3,377	4,345	4,345
경북	6.0	1,778	2,678	4,168	5,363	5,363
경남	7.6	2,257	3,401	5,292	6,810	6,810
제주	5.2	1,526	2,300	3,579	4,605	4,605
계	100.0	29,600	44,600	69,400	89,300	89,300

제3절 '지역 2.0' 시대의 인력

1. 지역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 방안

1) 생애주기별 창작지원을 통한 지역 예술창조역량의 지속발전 지원

(1) 지역 신진예술가 발굴 및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컨설팅

○ 지역신진예술가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역의 전문예술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지원시스템과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멘토링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함.

○ 신진예술가들은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한 통로를 마련하여 지원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신진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미래 지역 창조역량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광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2) 지역 중견예술가 대표예술인화를 위한 정보DB구축 및 맞춤형 창작지원

○ 중견예술가 및 지역 전업예술인에 대한 정보화 DB구축을 통해 지원수요에 맞는 적확한 지원사업 및 지원전략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함.

○ 지역의 지원사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창작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지역 원로예술인과 신진예술가 매칭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예술전통의 계승 및 세대간 협력지원

○ 지역 원로예술인 또는 중견예술인과 신진예술가의 멘토링 연계를 통해 신진예술가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지역에 밀착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과 현실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원로예술인-중견예술인-신진예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권장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자산이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전문예술인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지역대표 예술단체(예술인) 육성사업

(1) 전문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 컨설팅, 창작 워크숍 지원사업

○ 전문예술단체 중심의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문예술단체 육성 지원책을 마련함.

○ 전문예술단체의 기획역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워크숍을 지원하고, 간접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 소속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 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작품활동과는 별개의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유도함.

(2) 국내외 전문예술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 전문예술단체의 DB구축과 해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예술단체의 해외진출 및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예술인 단체들 간의 협력, 교류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함.

○ 지역별 또는 권역별 전문예술단체 협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예술인들 간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 협력활동 기획, 대규모 지역 공동사업에의 참여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

(3) 전문예술단체의 법인화 및 행정운영 매뉴얼 지원

○ 법인화가 필요한 전문예술단체의 법인화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예술단체의 행정운영 매뉴얼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함.

○ 전문예술단체가 문화부, 예술위원회 외에 다양한 정부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문화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함.

○ 새 정부 문화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르면「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통해 비영리 문화법인에 대한 인가제도를 도입하고,
- 2017년까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전문 문화시설과 음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 전문단체 2,000 여개의 법인화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3) 장르 복합형, 장르 및 기술 융합형 창작활동 지원 강화

(1) 타 장르 이해를 위한 예술인의 타 장르 재교육프로그램 운영

○ 융합형 창작활동 및 글로벌 창작네트워크가 활발해지는 미래 예술창작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타 장르의 창작 시스템 이해를 위한 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 2012년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사업 등 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과 연계, 협력을 통한 차별화된 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35)]

(2) 기술 융합형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타 문화예술지원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

○ 새정부 R&D 예산확충 및 문화예술분야의 R&D활성화에 따라 기술결합형 창작활동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 문화상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 콘텐츠 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소통 체계를 마련함.

○ 새 정부 문화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경제 혁신' 부문에 콘텐츠 기획·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R&D 예산을 국가 R&D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4년간 총 1조 3,336억 원).

(3) 우수 융합형 창작활동 사례집 발행 및 교육워크숍 추진

○ 장르융합형, 기술융합형 창작활동의 사례집을 발행하고 융합형 창작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예술위원회 차원의 교육, 워크숍을 추진함.

○ 융합형 창작활동 교육. 워크숍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확보함.

4) 시민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을 통한 예술창조역량의 토대구축

○ 지역문화생태계의 강화를 위해서 토대가 되는 수용자 계층의 창작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문화예술동아리 등 시민 아티스트 육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및 기초문화재단 중심의 시민문화활동 지원 체계를 확고히 마련함.

○ 공연장 상주사업, 레지던스 지원사업 등 시민연계형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 추진을 장려하고 우수한 모델들을 발굴, 사례화 함.

35)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취업지원교육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창작능력을 강화하고 직업능력을 활용하여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예술로 일하는" 일자리를 창출 또는 취업활동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들로는 ① 청년예술인 1인 창조기획자 양성과정 ② 중견예술인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③ 예술매개 사회갈등조정자 양성과정이 있음.

2. 지역의 기획·추진 역량 강화 방안

1)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1) 예술위 차원의 지역문화예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예술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역량 및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술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지원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

○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문화행정 및 문화기획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함.

(2)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 시 주요 기능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주도

○ 지역문화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할 경우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 교육을 위해서 예술위, 지역문화지원센터 이외에도 관련 문화지원기관(콘텐츠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원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예술단체의 기획, 홍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추진 제도화

○ 재단의 문화지원 전문인력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전문예술단체에 소속된 기획·홍보 전문인력의 양성과 예술단체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추진함.

○ 예술단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예술위 또는 한지협 차원에서 마련하여 연중 상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필수이수를 권장하며 권장 필수 교육이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함.

2) 교육대상과 내용의 다각화, 현실화

(1) 일회적 교육이 아닌 장기적 코칭을 전제로 한 인력양성 교육

○ 일회적 교육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인 코칭형, 멘토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기별, 년차별,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함.

○ 교육만족도와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신입직원, 팀장급 직원, 간부급 직원, CEO연수 등을 통해 각 직급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함.

(2) 국제교류활동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선진 문화예술지원 사례 조사 및 학습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전문인력 해외연수 정례적으로 추진

○ 지역협력형사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외연수 지원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선진 문화예술 지원사례 학습 기회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 아카이브를 운영하여 다양한 선진사례를 DB화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상호 컨설팅 및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1)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 워크숍 추진

○ 한지협 정례 워크숍의 형식 변화를 통한 자발적 교류, 워크숍 기능 강화

○ 우수지원기관과 신규지원기관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2)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인력 간의 상호컨설팅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 및 협력지원

○ 한지협의 교류·협력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류, 협력 모임의 정례화

○ 한지협 차원의 상시적인 상호 컨설팅을 위한 소통채널의 마련 및 운영

○ 광역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을 포괄한 문화지원 전문인력들 간의 인적 교류 및 정보소통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 및 학술행사 지원

제4절

'지역 2.0' 시대의 운영체계

1. 외부 네트워크 : 예술위,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 역할분담

1) 문화울력의 협동재원 확보 : 논리와 기조

○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문제를 정리
- 지역은 독자적인 문화재정을 운영하고 싶어 함.
- 동시에 중앙에 대한 지원요구도 늘어나는 추세임.
- 결국, 지역문화에 대한 중앙지원과 지방지원의 기준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대두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 동안 논의된 사항은 규범적인 논의들이었음.

○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지원 방향
- 주로 단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함.
- 복수 지역에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
- 지역사회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을 전국적 관점에서 추진함.

○ 지방의 지원사업은 주민관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함.
- 주민밀착적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도록 지원함.
- 프로예술가 보다는 생활 속 문화활동을 즐기는 아마추어 대한 지원
- 해당 지역에 고유한 것으로서 중앙 등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업

2) 위원회 역할 재정립

○ 위원회의 역할은 중앙 · 광역 · 기초자치단체의 고유한 역할에 조화롭게 분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함.

○ 중앙정부와의 관계
- 위원회는 지역에 적용할 정책 및 정책수단 동원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공유해야 함.
- 따라서 정책수단의 동원과 배분에 관련된 일반원칙을 설정함.
- 위원회와 중앙정부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조정하여 정책맥락성을 유지하여 자치단체나 하위기관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 또는 문화재단과의 관계
- 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와 장려사업에 대하여 협의함.
- 위원회는 광역차원에서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

-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위원회사업을 평가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함.

○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
- 위원회는 기초단체에게 사업을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초단체들이 일반적인 운영관리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함.
- 따라서 일정한 기준과 그에 따를 사업수행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역사업과 예술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리함(인수위 보고자료)
- 박근혜 정부는 위원회와 중앙 및 지역 간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사업과의 관계에 맞춰 역할 분담을 꾀하고 있음.
- 중앙과 지역 간 역할 분담
• 국가단위(예술위원회) : 국가대표 직업적 전문예술단체 육성
• 광역단위(17개 시·도) : 지역 단위 전문 예술활동 지원
• 기초단위(시·군·구) : 풀뿌리 예술활동·동호회 예술활동 지원

○ 기금관리 주체의 위치와 역할
- 기금관리 주체로서의 위치와 역할은 정부형태, 중앙진흥기관의 위상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대개 연방국은 연방의 관여정도에 따라 전체지원과 주정부분담이 다름.
- 주요 국가의 사례
• 캐나다 : 주 캐나다평의회와 비슷한 독립된 예술평의회
• 독일 : 주정부가 예술문화정책을 추진하므로 연방권한은 제한적
• 미국 : NEA의 협력기관이 주와 대응교부금으로서 주의 예술기관에 대해 기초적 지원보조금을 지출. 주정부는 자주적으로 결정
• 영국 : 비정부적인 자주조직으로서 지역예술협의회가 활동.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따라 지자체가 공적자금 지원. 1985년 이후 ACE는 권한을 지역예술협회에 위양, 지원결정은 지역예술협회가 수행. 그 뒤 지역별 문화향유격차가 발생되자 예술평의회가 런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금배분에 대해 직접 권고조치를 수행
• 스웨덴 : 전국적 수준의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이 담당하고, 자금의 배분이나 집행은 지방에 권한을 위양하는 '집중적 분권화' 의 모델

2. 지역사업 운영체계 : 자율과 재량권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

○ 새 정부에서는 위원회 지역사업 영역과 내용을 재정리함(인수위 보고자료).
- 문예진흥기금 사업 및 운영 체제를 '창작지원', '지역협력', '문화나눔'의 세 가지 축으로 재편

1) 지역 문화기획 자율성의 확대

○ 지역의 자율성 확대
- 지역맞춤형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설계를 위한 지역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기획 역량 강화를 촉진함.
- top down 방식에서 bottom up방식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사업 설계의 변화를 통해 지역자율권을 확대함.

2) 지역 문화역량의 강화

○ 지역 및 단체의 기획역량, 운영역량의 강화
- 예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재단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워크숍 등 재단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광역재단의 문화기획아카데미 개설 지원
- 예술위원회 차원의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상시적인 기획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

3) 네트워크와 재량권 강화 : 수직, 수평적 협력활동

○ 국내외 교류·협력활동의 확대
- 지역 간 교류를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의 강화
- 정부-예술위원회-광역-기초 문화지원기관 간의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류·협력을 통한 창작력 제고, 미래지향적 통합장르의 육성, 예술 장르간 경쟁력 강화를 꾀함.
- 지역 및 재단에서 교류·협력활동 사례집 발간 및 교류·협력 매개 지원 역할 담당
-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확대 및 지역수혜단체의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 예술위-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간 역할분담
- 예술위와 광역-기초 문화재단간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국가예산 중복집행 가능성 배제
- 예술위원회의 연구, 국제화, 전문예술인 집중지원, 교류협력 매개,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 사업모델개발 등 전문화된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조정
- 문화예술지원기구 간 역할조정 및 재정립을 위한 한지협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간 TFT구성 필요

3. 조직 및 기능 개편

1) '지역 2.0' 시대의 한지협 조직

(1) 한지협 위상 설정

○ 환경 변화 : 한지협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사업의 품질제고 컨설팅 : 각종 심사에 참여하거나 지역정책 현안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등 현장밀착적 시각에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위원회 정책 지지 및 신념체계 확산 : 위원회와 지역 현장사이의 매개자로서 위원회 입장에 대한 설명책임을 질 수 있음.
- 위원회 역할에 대한 연합 형성 : 다양한 문화단체들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가치를 설명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연합형성에 기여함.
- 지역 문화정책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에 대한 객관적 지원 : 지역의 문화네트워크 구성원들의 노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기여하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 : 지역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함.
- 중앙과 지역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위한 예술위원회의 지역협력체계 관리 및 총괄 역할 수행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및 문화복지 모니터링 및 전달체계 관리를 통해 신뢰기반의 조정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구축함.
- 지역 예술경영 전문인력 육성과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냄.
- 지역문화협력관 확대 운영 및 관리에 의한 참여와 합의 중시 및 유도
- '지역문화진흥법(안)'에 의한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움직임에 대한 위원회의 대처 차원임.

(2) 향후 한지협의 발전방안

○ 한지협 법인화 : 한지협을 법인화 함.
- 위원회의 추진 정책을 외적으로 지지함.
- 위원회 중심의 지역사업에 대한 신념체계를 확산하는 실천적 활성자 역할을 함.
- 애매한 조직에 확실한 법인격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높이도록 함.

○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이 선행된 후 후속조치로 필요함.
-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역할과 사고의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이를 담당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함.
- 정부와 위원회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전환하여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기존 조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새롭게 추진기관을 만들어 구성함.
  - 지역의 문화경영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문화정책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는 역할을 함.
  - 중앙과 지역의 관계는 정부차원에서는 시·도와의 직접관계로 이뤄지는데 대한 민간단체들과의 새로운 관계 필요
-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지원 사업을 직접 책임지는 입장에서 보다 소통이 원활한 채널 구축이 필요

- 한지협의 통로역할과 맥을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조직으로 활용

○ 한지협의 외연 확대 : 한지협의 외연을 확대하여 존립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지협이 위원회를 모태로 하지만, 독립적 활동영욕을 확보하고 주체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직의 힘은 사업에서 나오므로 나주지역에 소재할 위원회가 하기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한지협의 사업영역에 포함시킴.
- 새로운 정책환경에서 중요하게 담당해야 할 사업을 한지협 차원에서 미리 선정하여 추진함.

○ 확대대상 사업
- 격차사회의 문제들을 문화예술적 접근으로 해결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바우처 사업
- 창조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서 강조되면서 현실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학교 및 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 다만, 이러한 사업은 '지역문화지원센터' 설립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2) '지역 2.0' 시대의 지역문화협력관 조직

(1) 협력관의 기능과 역할 재설정

○ 지역문화협력관은 배정 기금의 집행·관리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문화 특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역의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 참여 등의 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협력관 활동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협력관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며, 협력관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임.

○ 지역문화협력관의 활동은 위원회와 연관시킨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지역에 부담이 되고, 지역예술단체의 로비가 생길 우려가 있어 현재 수준의 중립적인 활동을 좀 더 지역친화적인 전략으로 접근 확대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함.

(2) 협력관의 수 확대

○ 예술위원회 나주 이전에 따른 지역 차원의 협력관 수 확대
- 예술위의 나주이전은 지리적 거리감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통과 사업추진에서 심리적인 우려를 하므로, 예술위 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전하고 느낄 수 있는 감성적 프랜드십이 필요함.
- 협력관을 지역에 배치한다면, 지역의 입장과 위원회의 입장을 감안하여 적정 수를 선정해야 함. 협력관의 수는 총 8명 정도로 함(서울 1명, 인천·경기 1명, 강원·충북 1명, 대전·세종·충남

1명, 대구·경북 1명, 부산·울산·경남 1명, 전남·전북 1명, 광주·제주 1명)
- 지역문화 협력관을 전문가로 구성하기 위하여 유능한 인재를 공모하는 것을 전제로 함(예: 문화행정 15년 이상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

○ 협력관의 활동은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활동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함.
- 협력관제나 협력관의 활동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지역의 반응이 긍정적임.
- 그러나, 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활동이 보다 개입적이라고 판단되면 지역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제도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음.

4. '지역 2.0' 시대의 평가와 환류체계 개편

1) 평가의 주체

○ 평가의 주체를 한지협에서 예술위원회로 변경함.
- 필요성 :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평가결과를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위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함.
- 장점 : 평가의 신뢰도 제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연계활용이 가능함.
- 단점 : 예술위원회의 다른 지역사업들과의 형평성, 한지협의 위상 강화기회를 상실함.

○ 평가는 주체의 권위와 결과에 대한 승복을 바탕으로 이뤄지며, 평가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수 있어야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술위가 평가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다른 지역사업들의 평가체계가 각각 다르므로 하향 평준화 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함.

2) 평가대상 구분

○ 평가대상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동급대상끼리 평가결과를 비교함.
- 경제 및 사회문화적 수준이 다른 지역들을 동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동일구역에서 등급화 함.
- 인센티브 적용에서 유리한 위치와 불리한 위치가 만성적으로 적용되므로 성과관리와 노력의 결과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평가목표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지역의 구분이 필요함.

○ 대상구분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 문화재단 설립 5년 이상과 미만
- 광역시와 도

○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부정적인 입장은 불합리하다는 점
- 긍정적인 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시스템이 순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

○ 사업을 배분형사업과 경쟁형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경쟁사업은 처음에는 수도권보다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나 어차피 경쟁형사업을 늘려나가야 하므로 전국 단일 경쟁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평가 측정지표

○ 평가 항목으로 '개선도' 항목을 넣어, 전년 대비 점수 상승폭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함.
- 평가의 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다음 사업에 수용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선정도를 지표화 하고 평가해야 할 것임.
- '개선도' 항목을 설정하고 주요항목에서 전년대비 개선정도를 계량 또는 비계량으로 측정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임.

○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도입해야 함.
- 장점은 개선노력을 이끌어 내고, 평가의 권위를 높이며, 강제적 평가보다 개선적 컨설팅으로 순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단점은 평가받는 입장에서 성과목표치를 일부러 낮게 설정하고(톱니효과, ratchet effect), 근시안적인 목표를 제시하며(myopia), 측정하기 쉽고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중심으로 일하기(터널현상, tunnel effect)로 나갈 가능성이 큼.

○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신중해야 함.
-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간접지표를 이미 사용하는 사업이 있음.
- 사업의 결정과 집행 담당자는 전년대비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며, 해당 사업 평가자나 피평가자도 이미 전년대비 개선정도를 관찰하는 평가를 염두에 두고 있음.
- 사업 전체의 전년 대비 발전정도를 평가할 객관적인 지표를 뽑아내기 쉽지 않음.

4) 평가관리

○ 현재 시행 중인 평가과정에서 컨설팅 기능을 특별히 강화해 나가도록 함.
- 평가의 당초 목표는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발전적 효과를 거두는데 있으므로 소극적인 평가만으로 그치지 말고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평가과정에서 일부 컨설팅기능을 병행하고 있지만, 피평가자는 충분히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자칫 다음 사업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으며, 평가자의 컨설팅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면 부작용도 예상됨.
- 결국,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목표설정

에서부터 발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가 완료된 후 낮은 평가를 받은 시·도를 대상으로 별도의 컨설팅단을 취약 지역에 파견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도록 함.

- 컨설팅 단은 주로 평가를 담당했던 위원들로 구성하여 평가결과와 일관성을 갖고, 평가의 피드백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실질화해야 함.
- 컨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여건(소요예산, 컨설팅 방식과 내용, 관련 분야별 전문가 풀)을 먼저 갖춰 충분히 준비한 뒤 추진해야 함.

제 6 장 결 론

○ 2009년 지역협력형사업을 시행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의 해소, 새 정부 공약사항인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개선, 그리고 「아르코 비전 2020」이 설정한 미션, 비전,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2.0' 계획(2014~2018년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계획)을 연구하게 되었음.

○ 이번 '지역 2.0' 계획 연구는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성장과 고유성이 분출하는 지역문화의 생성,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여건 조성과 경쟁력 강화, 예술위·지역 간, 지역 상호간 교류·협력 및 유대 강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 또한 지역의 예산 및 사업 재량권 부여로 예술위·지역 간 상생적인 지원체계의 구축, 1기 성과를 바탕으로 한 2기('지역 2.0')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지원사업 틀 재구축 등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공연 및 기초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현황을 살펴 본 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 실적, 사업 내역과 현황, 추진 계획,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의 지역예술진흥 정책과 구조를 살펴보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 구성, 기금배분 기준과 매칭 시스템, 지역의 기획·추진 역량, 사업운영체계와 네트워크, 지역문화협력관제, 사업실적 평가·환류체계에 대한 평가에 이어,
- 3절에서 사·도 및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및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음.
- 4절에서는 앞서의 사업 평가와 1~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방향과 지원프로세스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종합하고, 제3장의 결론으로 지역협력형사업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제4장은 '지역 2.0' 계획(제5장)의 구상에 앞서 오늘날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환경과 전망을 살펴보고 '지역 2.0'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 2.0' 시대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사업, 인력, 재정의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제5장은 본 연구보고서의 핵심 부분으로, '지역 2.0' 시대의 사업, 재정, 인력, 운영체계를 다루고 있음.
- 사업부문은 기존의 고정화된 사업 패턴에서 여러 가지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각 광역시·도(재단)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큰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했고,
- 재정부문은 재원배분 기준의 일원화와 가중치 조정을 통한 시·도 배분금액 평준화와 시·도의 최저 의무 매칭비율 1:1 이상 일원화로 수도권의 불만 해소를 의도했으며,
- 인력부문은 지역 예술가(단체)의 창조역량 강화와 융합형 창작활동 지원 강화, 시민예술활동 지원 강화 방안과 함께 지역문화 매개인력의 기획·추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 운영체계부문에서는 예술위/시·도/재단 간 역할분담 문제, 재량권 강화를 위한 지역사업 운영

체계 개편, 한지협과 지역문화협력관 조직·기능 개편, 평가·환류체계 개편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이미 언급했듯이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분야 공약실천계획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새 정부의 지역정책, 지역문화정책을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2.0' 시대의 사업, 재정, 인력과 운영체계는 중기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함.
- 먼저 사업부문에서는 사업 수행 상의 재량권과 예산편성 상의 자율성을 갖고 지역의 고유성을 계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 재정부문에서는 지역문화의 균등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금배분 기준을 설정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각 지역 간에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 인력부문에서는 지역의 예술인, 지역 주민의 창조역량 계발뿐 아니라 시·도 문화분야 종사자 및 지역문화재단 직원 등 매개인력의 사업 기획·추진 역량의 계발에도 중점을 둬야 함.
- 또한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 효율화, 예술위/한지협/협력관 조직 및 기능의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등을 통해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지역 2.0'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특화사업'의 재정을 대폭 늘리는 일로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17개 시·도와 12개 지역문화재단이 울력하여,
- 공약 실천계획 및 문예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대로 '지역문화 특화사업'을 위한 지역 배당 문예진흥기금이 2017년에는 900억 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국고 출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단행본

이홍재(2012),『현대사회와 문화예술』, 푸른길

■ 학위논문

김소라(2010),『지방문화행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김완수(2010),『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대구광역시의 주요 공공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 조형대학원 예술행정학과

신해일(2010),『공공 문화재단 현황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양종남(2011),『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제도 연구: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대학원

양효석(2010),『한국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이병일(2011),『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대학원 행정학과 박사논문

이순녀(2008),『참여정부의 문화예술지원정책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서강대 언론대학원

이장민(2010),『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대학원

이재원(2012),『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사업 운영모델개발 연구』,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이호웅(2010),『상주예술단체를 통한 공공 공연장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 대학원

조화연(2008),『문화예술진흥체계 역할모델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희대 경영대학원

추미경(2010),『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한선미(2010),『지역문화재단 역할 정립을 통한 전북지역 문화재단 발전방향 연구』, 단국대 대학원

■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규원(2011),『문화시설투자 및 운영 효율화 방안』, 2011~2015년 국가재정운영계획토론회 자료

김선희 외(2011),『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김양식(2012),『문화예술 동향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충북발전연구원

김재경(2012),『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찬동(2012),『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수준과 관련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찬동(2012),『지방자치 20년의 도시정책성과와 전망 : 서울시 행정관리분야의 지방분권 수준과 관련하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찬동(2012),『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119호
김현호 외(2011),『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2012),『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 정책의 모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외(2011),『창조적 지역발전 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외(2010),『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휘정(2012),『지역주민의 공연예술 향수권의 신장과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류정아(2010),『농촌지역 문화환경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성호 외(2012),『창조산업의 집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박세훈 외(2011),『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양혜원(2011),『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광재(2012),『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대한 연구 : 프랑스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이병량 외(2011),『문화도시는 문화에 돈을 쓰는가?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1호 통권 84호
이병일 외(2011),『지방자치단체 공연문화시설 운영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이성근(2012),『지방분권과 자립적 지역발전』, 대구경북연구원
이소영(2012),『지역발전 동향 및 전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철순(2010),『공공문화예술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연구. 문화기반시설로서 문예회관(art center)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 pp271~305
이호영(2004),『문화 분권화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너울 2월호
이희연 외((2011),『문화자본의 공간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통권 33호
정광렬 외(2012),『미래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 외(2010),『민선 5기의 출범과 지역문화정책의 변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호
_____ 외(2011),『지역문화정책 현재와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_____ 외(2005),『분권시대 지역문화진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성호 외(2011),『지방재정 위기와 로컬 거버넌스의 역할』,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85호
한승준(2011),『주요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연구』, (사)한국정책학회
『2009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0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1년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20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11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제2차포럼』(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년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 지역발전위원회 지식경제부
『2012 공연예술실태조사』(2012), 예술경영지원센터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 기획재정부
『2013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지침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농어촌 문화사업 평가와 비전 연구』(2012), 농어촌희망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국내외 실증사례 연구』(2008), 문화예술위원회
『전국지역문화 지원협의회 중장기 운영방안 연구』(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중장기 운영방안연구』(2011), 문화예술위원회
『주요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 연구』(2011),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지역 공공문화기발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연구』(20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2011), 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법제연구』(2008), 문화예술위원회
『지역공공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2012), 문화체육관광부

■ 심포지엄 및 포럼자료

『차기정부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 자료집(2012),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지역문화고유브랜드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2012), ARKO 미래전략대토론회 지역문화창조포럼 자료집 (대전, 광주, 부산)
『분권화시대의 지역문화발전과 활성화 전략』〈한국의 지역문화 실태 및 지역문화정책방안 연구〉 심포지엄 자료집(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보도자료

『지역문화기반시설 4.7% 증가, 2013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12개 선정』(2012),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지역문화재단 현황(12년 3월 현재)』(2012), 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 사이트

광주문화재단 http://www.gjcf.or.kr
경기문화재단 http://www.ggcf.or.kr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대구경북연구원 http://www.dgi.re.kr
문화체육관광통계포털 http://culturestat.mcst.go.kr
미국국립예술기금 http://www.nea.gov
미국주정부예술기구연합 http://www.nasaa-arts.org
미국지역예술기구연합 http://www.usregionalarts.org
사단법인 지역창조 http://www.jafra.or.jp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http://www.sdi.re.kr
영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tscouncil.org.ukk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www.gokams.or.kr
인천문화재단 http://www.ifac.or.kr
일본문화청 http://www.bunka.go.jp
일본예술문화진흥기금 http://www.ntj.jac.go.jp/kikin/index.html
일본예술문화진흥회 http://www.ntj.jac.go.jp
잉글랜드문화미디어체육부 http://www.culture.gov.uk
지역발전포털 http://www.redis.go.kr
지역정보포털 http://www.oneclick.or.kr
충북발전연구원 http://www.cri.r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http://www.kocaca.or.kr
한국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http://www.krila.re.kr
한국지방정부학회 http://www.klog.or.kr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http://www.karaa.kr

부록

- 지역 '2.0' 연구 경과
- 지역 '2.0' 1차 설문조사 문항
- 지역 '2.0' 2차 설문조사 문항
- 지역 '2.0' 1차 설문 결과
- 지역 '2.0' 2차 설문 결과
- 지역 '2.0' 워크숍 발제문 Ⅰ.Ⅱ.Ⅲ
- 지역 '2.0' FGI 1,2차

부록

지역 '2.0' 연구 경과

○ 2010.9.27 지역문화예술지원중기전략TF 1차 회의, 16:00~17:00, 예술가의집

- **참석**

– 예술위원회 :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 지역문화재단 : 이규석(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차재근(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 경영컨설턴트 : 박정남 KMAC 연구위원('아르코 비전 2020' 연구진 대표)
– 연구진 : 오양열(책임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개요** :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세부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및 논의 (연구 방향성, 내용, 프로세스 등)
- **주요결과** : 지역협력형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지역협력사업의 체계(위원회와 지역 간 협력의 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함. '아르코 비전 2020, 공연장상주단체에 대해 집중모니터링 등의 결과와 함께 보완할 것.

○ 2012.10.4 '지역 2.0' 연구진모임, 10:00~11:30, 이흥재교수 연구실

- **참석 :** 오양열(책임연구원), 이흥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전체 1차회의 논의결과 설명 후 연구진 간 의견 교환, 목차 설정과 연구 진행 방향성 논의
- **주요결과 :** 연구의 핵심인 제5장 사업 방향 및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진 간 의견을 수시로 주고 받아 책임연구원이 세부목차 초안작성 후, 한지협과 1차협의(필요시 연구진과 한지협, 예술위 회의)

○ 2012.10.11 한지협 정책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 16:00~18:00, 예술가의집

- **참석**

– 한지협 정책협력위원 : 차재근(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위원장), 백옥선(전라북도 문화예술과 계장), 이규석(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이태현(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 이희창(충청남도 문화예술과 계장), 조선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진흥팀장)
– 예술위원회 :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 부장), 황치준(지역문화협력관), 조미숙(예술지원부 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오양열(책임연구원)

- **개요 :**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수립방안 설명 및 의견 수렴 등

○ 2012.10.22~23 한지협 제2차 워크숍, 제주(KAL호텔 그랜드볼룸홀)

- **참석**

– 예술위원회 : 이용진(사무처장),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민준홍(지역문화협력관), 황치준(지역문화협력관), 황진수(지역문화협력관), 장계환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이홍재(공동연구원)
– 이외 16개 광역시·도 문화재단 관계자 포함 총 53명

- **개요 :**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수립방안 의견 수렴 등

○ 2012.10.24 지역문화재단연합 '차기정부정책'토론, 15:00~18:00, 국회의정원 101호

- **참석 :** 고준환(사무국장),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18대 대선을 앞두고 역대정부의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 정부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열악한 지역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방안과 아울러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 정책대안을 제시.
- **주요결과 :** 지역문화정책 평가체계개선을 위해「지역문화진흥센터」설립 필요, 지원기능을 평가 기능으로 정책 전환해야(류정아)/「지역문화진흥법」범위와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하드웨어분야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문화관련법령을 소프트콘텐츠 개발자원의 법적 근거로 명시해야 함(유승희 국회의원)/「문화기본법」검토와「지역문화진흥법」제정 추진, 중앙(문예위)-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 정책체계 마련(김보성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정책의 싱크탱크, 지역문화경제의 인큐베이터 역할(강신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 2012.10.30「2012년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지역문화창조포럼], 대전(대전 문화예술의전당)

- **참석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관 :** 2012 ARKO 미래전략포럼준비소위원회
- **개요 :**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및 지역문화 협력체계 구축

  발제 1 : 과학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박상언)

  발제 2 : 공공기관 이전시대 전국의 문화지원정책 네트워크 구축(강형기)

○ 2012.10.31「2012년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지역문화창조포럼, 광주(빛고을시민회관)

- **참석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윤성진(공동연구원)

• **개요**

발제 1 – 아시아문화도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고유문화브랜드 개발 (김광욱)

발제 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이전에 따른 역할 재정립과 지역협력체계 개편(윤성진)

○ 2012.11.5「2012년 아르코 미래전략 대토론회」지역문화창조포럼,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참석 :**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이숙현(한지협 간사)

• **개요**

발제 1 : 청년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정체성 형성 및 발전전략 (이승욱)

발제 2 : 국제교류를 통한 글로컬지역협력체계 구축 (오재환)

○ 2012.11.6: 위원회/한지협/연구진 합동 1차 회의, 13:30~15:30, 예술가의집

• **참석**

– 예술위원회 :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오양열(책임연구원), 이흥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지역 2.0'목차 잠정확정 및 설문문항 확정(한지협, 연구진), 향후 연구일정 협의(한지협, 연구진), 제5장 연구분담 협의(연구진)

• **주요결과 :** 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 지역은 자율성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기존 연구 정리가 아닌 새로운 지역2.0 보고서를 위해 전문가 FGI 진행, 이를 토대로 5장의 결론을 도출하며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임.

○ 2012.11.26 제천 상주단체 관련 워크숍

• **참석 :** 윤성진(공동연구원/발제)

○ 2012.11.15~11.28「지역문화예술진흥 중기전략_지역 2.0 1차 설문」취합

○ 2012.12.26~2013.1.4「지역문화예술진흥 중기전략_지역 2.0 2차 설문」취합

○ 2012.12.17 중간 보고회, 11:00~12:00, 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예술위원회 : 이용진(사무처장),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오양열(책임연구원), 이흥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중간보고서(1차 설문조사)의 검토와 앞으로의 연구 결론도출을 위한 방향성 논의.

- **주요결과 :** 지역2.0 시대의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 중기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지역협력형사업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 설문조사의 차이점이 있기에 사업성의 포지션, 방향성 등 구체적인 안을 도출해야 함.

○ 2012.12.21 '지역 2.0' 워크숍, 14:00~17:00, 위원회 세미나실

- **참석**

– 예술위원회 :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지역문화협력관(황치준, 황진수, 민준홍)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중기전략 TF : 차재근(부산문화재단 실장), 이규석(서울문화재단 본부장), 박경남(KMAC연구위원)
– 외부 전문가 :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안이영노(QX 대표), 이무용(예술위원회 3기 위원, 서면 발제)
–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 서울문화재단(이규석 본부장, 서동진 팀장), 인천문화재단(허은광 본부장, 임원시), 경남문화재단(박희영), 강원문화재단(이정은)
– 연구진 : 오양열(책임연구원), 이흥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중기전략 핵심과제에 대한 외부전문가 발제, 핵심과제에 대한 참여자 상호토론 및 의견수렴
- **주요결과 :** 5개 사업 중 육성지원사업은 지역에게 권한을 넘겨줄 것(박영정)/ 2.0버전의 인력, 창조역량, 생산적 복지, 지역사회적 참여 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구조를 새롭게 구분해볼 필요 있음(안이영노)./ 일방적 배분형식이 아닌 계약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필요, 전문예술인 지원 강화할 것(이규석)

○ 2013.1.9 예술위원회/한지협/연구진 내부 워크숍, 10:00~17:00, 대학로 토즈

- **참석**

– 예술위원회 :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이성겸(예술지원부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 협력관 : 민준홍(지역문화협력관), 황치준(지역문화협력관), 황진수(지역문화협력관)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오양열(책임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차기정부 공약이행 계획, 공연장 상주단체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등 총합하여 연구의 핵심 결론 도출, 지역문화협력관 의견을 통한 지역의 주요사안 점검
- **주요결과**

– 우선은 연구진이 워크숍(1.9)의 결론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안(案)을 담당별로 작성, 한지협에 제출하여, 한지협과 예술위가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주기로 함.
– 워크숍(1.9)의 결론 방향과 한지협 및 예술위가 검토한 결과, 그리고 1, 2차 FGI(1.16, 1.17)를 바탕으로, 논리를 개발하여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최종 연구보고서(안)를 작성하도록 함.
– 예술위원회, 한지협, '지역 2.0 TF' 참석 하에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별도로 지역재단 관

계자들에게 연구결과를 설명한 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
- 당초 연구보고서 목차(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 계획안」은 연구보고서에 넣지 않고, 보고서 발간 후 별도로 작성, 제출하도록 함.

○ 2013.1.16 FGI 1차, 14:00~16:00,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참석**
- 전문가 : 김경욱(문화재단 및 문화재정 전문가, 서울시의회), 신두섭(지역균형발전 전문가, 지방행정연구원), 라도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예술위원회 :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이홍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연구보고서 주요 주제에 관한 논의, 예술위원회와 지역사업 운영방안, 지역의 재량권 문제, 지역사업제안-3년간 동일예산규모 지원-평가방식에 관한 의견, 기금배분 방안,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이전, 시·도 매칭시스템, 기금수요 규모 등
- **주요결과**
- 기본적으로 지역이 재량권 부여는 점차적으로 맞으나 지자체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해서 전문성에 있는 곳에 자율성을 줘야 함(김경욱)./ 1/n 배분이 아닌 지역의 자발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기획 방식이 있어야 함.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함(라도삼)./ 위원회 사업을 중심으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서 재정지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목표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매뉴얼이 필요함. 성과지표로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를 활용하는 게 좋음(신두섭).

○ 2013.1.17 FGI 2차, 15:00~17:00,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참석**
- 전문가 : 이정덕(전북문화재단 설립준비위, 전북대 교수), 신동호(코뮤니타스 대표, (사)인문사회연구소 소장), 임학순(가톨릭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권순석(춘천 바라 대표)
- 예술위원회 :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 연구진 : 이홍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1차와 동일
- **주요결과 :** 지역에게 이관해야 하되 독자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곳은 정확한 지침과 차등된 기준을 가지고 최소단계의 지침을 제시, 부족한 곳은 위원회가 가이드를 강하게 적용해야함(신동호)./ 가이드는 주되 최종결정은 지역에서 하도록 궁극적으로 재량권을 넘겨줘야 함(권순석)/ 경쟁보다는 가급적 특성화 차별화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지원은 기본으로 위원회는 컨설팅, 혁신역량, 지원으로 역할이 바뀌어야 함(임학순)./ 평가에 의해 관리역량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그룹핑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해야 함. 자율권을 나눠본다면 관리역량에 따라 등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평가지표는 필요하며 20%가 적당(이정덕)

○ 2013.1.18 〈시 · 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문화정책세미나, 14:00~17:20, 서울시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

– 예술위원회 : 박두현(예술진흥본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지역문화협력관(황치준, 황진수, 민준홍)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정책담당자, 의회관계자, 문화담당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자, 문화정책 연구자 및 시·도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에 관심 있는 일반인

- **개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안정적 기반 확보 방안
  – 세부주제 1 : 안정적인 지역문화 진흥 재원확보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세부주제 2 : 제휴 · 협력을 통한 자원과 재원의 다변화 및 확충

○ 2013.3.12 지역문화예술중기전략TF 2차 전체회의, 15:00~17:00,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 **참석**

– 지역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이규석, 서동진), 부산문화재단(차재근)
– 예술위원회 : 이성겸(예술지원부부장), 조미숙(예술지원부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오양열(책임연구원), 이흥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 **개요 :** '지역 2.0' 계획 최종 보고서 내용 검토
- **주요결과 :** 서울문화재단 및 부산문화재단의 검토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수정 보완하기로 함. 제4장 중 정책목표의 설정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사업목표와 다소 괴리되어 있음. 지역 특화 7개, 공연장 상주 1개 사업은 '예시'임을 분명히 밝혀 주는 것이 좋겠음. 지역문화협력관 제도 확대의 당위성이 너무 예술위원회의 지역(나주) 이전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른 차원의 당위성도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음.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원치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성과사례도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 예술위원회의 전체 사업 틀을 지역협력형 사업의 틀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장기적 방향으로 제시해 줬으면 함. 창조역량 강화사업은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핵심으로, 현재의 분절화되어 있는 지원사업 틀은 통합지원 체제로 바뀌어야 함. 현재의 지역협력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기 관점에서 기금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3년 단위로 예술위와 지역재단 간 MOU 체결 방식이 필요함.

○ 2013.3.15, 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에 최종 연구 결과 보고, 예술가의집

부록

지역 '2.0' 연구 1차 설문조사 문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 사무국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지협은 2014년부터 시행될 지역 문예진흥사업의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현 지역협력형사업은 지역의 고유 환경과 특성 등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지역 문화정책 환경의 반영 및 지역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지협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 결과는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지역 문예진흥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판단과 검토에 근거해 **시·도(문화재단)의 공식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11월 28일(수)까지 이-메일로 한지협 사무국(jhko@arko.or.kr)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설문에 대한 문의는 전화 02) 760 - 47840(사무국장 고준환)로 부탁드립니다.

2012. 11.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1. 예술위원회 지역 문예진흥사업의 방향성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중앙정부, 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다양한 차원(예술가 지원, 시민문화향수권 확대, 예술복지_바우처, 예술교육, 도시 활성화 등)에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위원회가 현재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맡고 있는 기능·역할(기금지원,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 사업 평가, 한지협 운영 지원 등)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기능(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문예진흥사업 운영 방안

○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별 기금 배분(사업유형 지정) - 시·도의 지방비 매

칭 – 예술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제시 – 지역의 사업 수행 –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지역 협력활동 – 지역의 사업성과 보고 – 예술위원회의 사업 평가·환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재의 사업운영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더 바람직한 대안(개선안)이 있다면 어떤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의 재량권 부여 문제

○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문화관광부 및 예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현재의 탑 다운 방식의 지역협력형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에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각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추진 역량 간에는 큰 폭의 편차가 있으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지역의 자율성 확대 의견과 동시에 지역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술위원회의 세부적 이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원회가 어떤 사업 운영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협력형사업의 구성

○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2년 연속지원)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등 1+4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성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의 사업제안 – 평가 – 3년간 동일 예산규모 지원 – 평가방식에 관한 의견

○ 현재의 1년 단위로 예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매년 지원규모 변동) – 협력 및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사업 및 성과목표 제안 – 예술위원회, 지역 및 전문가 공동 검토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MOU 체결 – 사업 시행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협력 – 예술위원회의 사업 평가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6. 기금 배분 방안과 기준

○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기금 배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분 방안 및 배분 기준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역사업의 예산 규모가 대폭 확충되지 않고 현재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지원함에 있어 지역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14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문예진흥사업에 적합한 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7. 시·도 매칭 시스템

○ 아시다시피 지역협력형사업은 기금 배분에 있어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시·도 매칭 비율은 지역문화예술지원은 재정자립도 70%를 기준으로 1:1 혹은 1:2이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수도권은 50 : 50, 비수도권은 70 : 30입니다. 현행 매칭 비율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도/문화재단 매칭 비율을 약화 또는 강화시켜야 하는지 의견과 함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배분은 예산총액(9,890백만 원) 중 서울 12.5%를 배정한 후, 15개 시·도(서울시, 세종시 제외)는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인구수 30%, 재정의존도 역산 30%, 시·도 매칭 정도 20%)에 의해 배분, 단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타 시·도의 배분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줄어들지 않게 조정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공공공연장수 10%, 공연예술 단체수 30%, 재정의존도 역산 20%, 시·도 매칭 정도 20%)을 적용하여 배분

8.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시·도,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지역문화재단대표자협의체, 기초문화재단협의체 및 지역문화진흥법안상의 지역협의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협의체 등 많은 지역문화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역할(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발전적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성과평가 및 환류 제도

○ 현행 성과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행 환류제도(차차기 연도 기금 배분 기준으로 20% 반영)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지역문화협력관제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지협)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지역문화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 규모(3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관할 지역문화협력관에게 바라는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

○ 정부 방침에 따라 예술위원회는 2014년 상반기에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지역협력형사업)의 운영체계나 위원회-지역 간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개편,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지역 2.0'에 관한 의견

○ '지역 2.0' 이라 부르는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2014~2018) 전략」 에서 꼭 다루어 져야 할 항목이라든가 중점적인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 또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화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 기존에 발간된 많은 연구보고서가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 지역문화재단, 민간지원단체 간에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와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금 수요 규모

○ 만일 지역문화 지원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1:1 매칭을 전제로 귀 시·도나 지역문화재단의 요구액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문예진흥기금(단, 1:1 매칭을 전제로 함)을 요구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사무국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언급하는 분야나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항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출 기관명(부서명) :

□ 답변에 대한 문의처 :

전화 이-메일 직·성명

부록

지역 '2.0' 연구 2차 설문조사 문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 사무국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한지협)은 2014년부터 시행될 "지역 문예진흥사업"의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되는 현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지역 문화정책 환경의 반영 및 지역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예술위원회와 한지협은 지난 11월~12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도(문화재단)의 공식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오며, 1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지역의견을 충실히 반영코자 압축된 핵심 내용의 척도 질문을 준비하였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적극 협조(시·도 및 문화재단의 공식적 의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2013년 1월 4일(금) 까지 한지협 사무국 이-메일 (jhko@arko.or.kr)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설문에 대한 문의는 전화 02) 760 4840(사무국장 고준환)로 부탁드립니다.

2012. 12.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1. 예술위원회와 지역사업운영방안	현재 지역협력형사업 형태는 적절하다. (기금배분-지방비매칭-운영방안제시-지역사업수행-지역협력활동-사업성과보고-사업평가환류)	그렇다 ①	보통이다②	아니다③
	(자유의견기입)			
2. 지역의재량권 문제	탑다운 방식의 지역협력형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에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1+4 의 형태는 합리적이다.			
	(자유의견기입)			
3. 지역사업제안-3년간 동일예산 규모지원-평가방식에관한 의견	예술위 제시의 매년 지원규모가 변동되는 '기금지원-협력-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사업 및 성과목표 제안-예술위원회, 지역전문가 공동검토-예술위와 지역의 MOU체결-사업시행-협력-예술위평가시행〉의 방안이 필요하다.			
	(자유의견기입)			

4. 기금배분 방안	2013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서울12.5% 배정 후 15개 시·도 한지협배분기준 적용)과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배분기준이 적절하다.			
	(자유의견기입)			
5.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현행성과평가제도와 환류제도 (차차기년도 기금배분기준 20% 반영)이 바람직하다.			
	(자유의견기입)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이전	2014년 예술위원회 나주 이전(예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운영체계와 위원회-지역간의 네트워크에는 권역별사무소(거점)가 필요하다.			
7. 사도매칭 시스템	기금배분 매칭비율- 재정자립도 70% 기준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1:1혹은 1:2은 적정하다.			
	기금배분 매칭비율-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수도권 50:50, 비수도권 70:30 은 적정하다.			
	(자유의견기입)			
8. 기금수요 규모	만일 지역문화 기금이 충분하여 1:1 매칭 전제로 요구한다면, 어느 규모로 요구 하시겠습니까?			
	① 현재 이하			
	② 현재 수준			
	③ 현재 × 2			
	④ 현재 × 3			
	⑤ 현재 × 3배 이상			
	(자유의견기입)			

끝 문항까지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출 기관명(부서명) :

□ 답변에 대한 문의처 :

전화 이-메일 직·성명

부록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1차 설문 결과

○ 2012.11.13~11.28 4개 시·도(울산·충남·전북·경남, 세종시 제외)와 12개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15개 분야 19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접수하였으며, 설문 문항 내용 및 시·도별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예술위원회 지역 문예진흥사업의 방향성

〈0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현재 다양한 기관(중앙정부, 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다양한 차원(예술가 지원, 시민문화향수권 확대, 예술복지_바우처, 예술교육, 도시 활성화 등)에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지역의 유망예술가(단체) 발굴·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시·도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획형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발굴한 지역 우수작품(작가)을 지역 생활권 단위로 유통·보급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부산 지역문예사업을 포함한 예술위원회 전체 지원사업을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장기적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과감한 지역 이관으로 지역의 자율성 및 자생력 확보가 필요하다.

대구 광역문화재단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예술위원회가 문화부 및 문화부 산하단체의 지역문화사업들을 통합하여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력과 작품을 지원과 해외 소개·진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천 실효적인 사업의 목적을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특정영역에 대하여 가시화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재원 및 행정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광주 문화부 산하 타 기관과 역할 분담 및 협력체 구성 등 기관 간 협력모델이 필요하고, 예술위원회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 강화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가 요청된다.

대전 지역문화재단의 경영 자율성 확대방안 마련 및 지속 추진,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지역협력형사업 폐지, 지역문화재단의 행정역량 강화 지속 지원,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육성·활성화 지원, 지역 간·국제 교류 프로그램 개발 육성, 다양한 분야 문화예술지원정책의 통합전략이 반드시 필요

울산 예술위원회의 다양한 사업 확대보다는 내실 있고 확고한 지위권 확보가 중요하다.

경기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사업은 문예진흥, 문예교육, 문화복지 3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 소통채널 형성과 정책산출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 문화부 산하단체 간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확한 역할분담과 시너지 효과를 위한 단체 간 사업연계가 필요하며, 기금사업은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향유권 확대(문화바우처 포함)에 집중해야 한다.

충북 산하단체 간 사업 연계가 필요하고, 예술위원회가 큰 항목만 지정하고 지역재단에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세부사업으로 전환 사용토록 함으로써 재단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충남 예술위원회 고유사업의 보완·확대로 정책의 틀을 짠 후, 중복되지 않는 신규사업을 추가로 만드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

전북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예술사업은 창작역량강화 사업에 집중하여, 지역예술인 발굴과 함께 보다 나은 창작기반 조성사업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전남 산하단체 간 유사 중복사업과 동일 예술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을 지양해야 하며, 각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경북 예술분야의 주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열악한 예술 환경에 처해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경남 지역문화예술사업 3영역(문예진흥, 문예교육, 문화복지)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및 소통의 형성과 정책적 산출이 되어야 한다.

제주 여러 가지 여건 상 지역문화재단이 자체 추진하기 어려운 신진작가·예술가 지원, 국제교류 지원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

〈02〉 예술위원회가 현재 지역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맡고 있는 기능·역할(기금지원,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 사업 평가, 한지협 운영 지원 등)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기능(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적정 예산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전체 지역협력형사업의 재원확보 노력과 사업평가를 통해 나타난 우수한 성과를 언론, 방송,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알리는 홍보기능을 강화했으면 한다.

부산 국가위원회로서의 명실상부한 좌장 역할(재원조성, 정책·모델개발, 평가·환류, 사례연구와 제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과 정책혼선과 예산낭비를 조정하기 위한 문화기관의 통폐합을 주도

대구 지역예술지원사업은 교육사업, 문화복지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

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인천 중앙 차원에서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적 토대의 마련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및 실행 계획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과 같이, 전시예술 외 타 장르에서도 단순한 교류지원을 넘어선 해외문화예술행사와 연계된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

대전 예술인력개발원을 활용한 지역재단의 전문예술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행정 교육 기능, 지역 간 교류, 국제교류 등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들 및 여러 사업들의 플랫폼 역할, 지역 예술가(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간접지원, 인프라지원 강화 필요(대전)

울산 지역문화진흥사업 관련, 예술위원회의 기관 홍보와 사업성과에 대해서 이미지 강화가 필요

경기 문예진흥, 문예교육, 문화복지의 긴밀히 연계집행 주도와 특히 문예진흥과 문예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교육진흥원은 예술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강원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문화재단 실무자 역량 강화를 장기 프로그램(실무자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충북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축소하여 지역재단으로 분산해야 하며, 현 한지협의 평가방식은 있는 집 더 밀어주기식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현행 시·도간의 분별없는 비교에 따른 평가는 지양되어야 한다.

충남 현재 시·도 또는 광역문화재단과의 매칭 지원사업만 추구하다 보니 시·군과의 접촉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는 시·군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필요하다.

전북 정책 제안 및 컨설팅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남 현재에 만족하지만, 지역 간 교류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했으면 하며, 재단 신규직원들에 대한 문화예술행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북 문화예술관련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예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면 될 것 같은데, 한지협이라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임.

경남 예술위원회 주도 하의 문예진흥, 문예교육, 문화복지의 통합 운영, 특히 문예진흥과 문예교육 두 영역의 활동은 현장에서 밀착되어 진행되고 있음에도 상호호환이 되지 않고 있다.

제주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국제교류의 매개 역할, 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카운슬링, 지자체와 정부의 문화정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중앙 차원의 조율과 지원(예컨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의 지자체 산하 공연장들과의 협력 문제)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문예진흥사업 운영 방안

〈03〉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예술위원회의 사업별 기금 배분(사업유형 지정) – 시·도의 지방비 매칭 – 예술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 제시 – 지역의 사업 수행 –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지역협력활동 – 지역의 사업성과 보고 – 예술위원회의 사업 평가·환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사업운영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더 바람직한 대안(개선안)이 있다면 어떤 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사업유형 제시와 지역별 전체 사용예산을 배분 후, 사업별 예산액을 제한하지 않고 각 지역 사업별 수요에 따라 안배하여 사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부산 사업유형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역에 이관해야 할 것이다.

대구 기금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대로 예술위원회의 사업지침은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 예술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사업지침 작성 시 지역문화재단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 현실에 맞고 최대한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는 재정·행정 지침이 되어야 한다.

광주 지역적 환경 반영을 위한 세부사업 선택의 자율성, 위원회, 시·도, 재단 간 역할 분담 및 기금배분의 적합성이 필요하다.

대전 기본 프로세스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검토 필요함. 지역 재단들의 줄 세우기와 재단 간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구도 형성이라는 폐단 발생

울산 현행 지역협력형사업의 사업운영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경기 신생 광역문화재단의 경우에는 현행 방식대로, 그리고 설립 5년차 이상의 문화재단은 수도권 문화재단과 같이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강원 배분기준에 따라 기금수준 결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단 자체적으로 사업별 사업비 결정 운영, 평가 및 환류제도 개선 및 협력관제도 지역별 배치로 상시 사업관리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충북 현 지역협력형사업은 크기나 규모가 일률적으로 설계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재단의 자율적인 조절이 가능해져야 한다(특히 상주단체 문제).

충남 특별한 방안은 없으나, 체계를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봄.

전북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연말에 사업결과 보고서 서식을 간소화 했으면 한다.

전남 사업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현재 형태에 대해 만족 한다.

경북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경남 설립 5년차 이상의 문화재단, 수도권 문화재단 모두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 (의견 없음)

■ 지역의 재량권 부여 문제

〈04〉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문화관광부 및 예술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공통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현재의 탑 다운 방식의 지역협력형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에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각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추진 역량 간에는 큰 폭의 편차가 있으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구체적인 추진방안의 기준은 제시하되 사업과 예산 운영의 자율권을 좀 더 보장하고, 평가 시 원칙을 지키며 사업을 하는 시·도에 평가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 발전과 개선, 전문성의 확보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양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보므로, 무조건 지역에 맡겨야 한다.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제대로 함유한 전문성이 바로 역량이다.

대구 지역에 현재보다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개편에 대해 찬성하며,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재량권 부여 후 예측되는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 역량이 부족할 경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야 성장할 기회가 생기므로, 전폭적인 재량권 부여야말로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역량 차이는 있겠지만 자율권을 부여가 좋으며, 중앙기금은 중앙부처 정책사업, 시비출연금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지역 공통사업을 제시하여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대전 적절히 안배하여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원회 지침은 16개 시·도의 의견 수렴 결과로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침 자체가 시·도의 행정적 간섭을 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매우 큼.

울산 큰 폭의 재량권 부여에 동감하나 지역 간 기획·추진 역량의 편차가 크므로, 지역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화하여)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일부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 설립 5년차 이상의 광역문화재단에는 큰 폭의 재량권을 주고, 5년차 미만의 광역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 미설립 지자체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했으면 한다.

강원 사업에 대한 재량권 부여는 필요하다고 보며, 장기적 관점에서 예술위원회 차원의 지역문화재단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 장기적 차원에서 재량권 부여에 동의하나 신생문화재단이나 역량이 약한 지역은 시기상조이며, 지방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이 약한 곳은 예술위의 세부/명확한 지침과 전국 비교현황 제시가 필요하다.

충남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인해 애로가 있고 신규사업 기획도 시·도 역량에 한계가 있어, 예술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안이면 좋겠다.

전북 큰 폭의 재량권을 주는 것은 그 동안 예술위원회가 각 사업별로 의도했던 소기의 의도와 성과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지원방식의 유지가 바람직하다.

전남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고 지역마다 특성과 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동의하나, 사업추진 기본프로세스 제시와 지역문화협력관 파견으로 지역재단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경북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중앙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평가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없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경북의 경우는 예술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편이며,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짧아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름(경북).

경남 현재의 기조를 유지했으면 한다.

제주 공동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국가정책 입안 시 지역의 특성과 추진역량이 고려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05〉 한편 지역의 자율성 확대 의견과 동시에 지역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술위원회의 세부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원회가 어떤 사업 운영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큰 방향은 제시하되 세부 운영방법에는 각 지역의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며, 세부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침이 필요할 경우 각 재단 및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운영지침 중 일부 비현실적인 단서조항들로 인해 민원을 받거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도 있음(서울).

부산 팔길이 원칙에 의한 자율성은 보장하되, 간섭·통제가 아닌 지방정부의 의무인 예술진흥 기반조성(지방재원, 문예진흥조례, 재단 지원·위상, 재교육·선진사례 학습 등)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대구 각 시·도가 처한 상황이나 인프라는 위원회 지침에 따라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도의 사업 추진계획을 위원회가 승인·조정한 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천 구속력 있는 '최소화된' 지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사업운영에 대한 구속력을 가진 지침보다는 심의사례비 지급기준 등 행정적 수행을 돕는 지침이 필요하다.

광주 예술위의 지침은 공통기준 마련과 사업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또 지역 예술인·단체 대상 구체적 추진방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어 필요하나, 수정 혹은 강화가 필요한 지침도 있다.

※ 수정이 필요한 지침 : 지역별로 총예산을 배정(중앙 : 시비) 하고 1~4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확정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은, 지역 매칭이 안 될 때도 있고 시행치 않는 사업도 있어 실효성에 의문(광주)

※ 강화가 필요한 지침 :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민원사례가 높은 사안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은 더욱 세분화, 명확화 필요하다. 예컨대, ① 지원사업 공모 신청, ② 지원불가 기준, ③ 지원사업 심사위원 참여 불가 기준, ④ 집중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중간평가 기준을 통한 제재조치 기준 신설, ⑤ 재단지출 기준 : 시·도별 여건을 고려한 전문가·시민 모니터링 수당, 심사위원 수당·여비·원고료, 강사료 등(광주)

대전 지역문화재단의 협력자적 입장으로 제3자의 입장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행정 지원 필요(사업 관련 공문, 차기년도 기금 배분표 작성 시 사전 협의 등)

울산 예술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원용하여, 세부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만들어 보낼 필요가 있다.

경기 문예진흥공모사업 신청단체의 자격 규정 등 지역협력형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광역문화재단을 구속하는 세부지침 제시는 지양해야 한다.

강원 지역협력형사업 추진 시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정산지침 등 재단 자체적인 판단을 권고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

충북 (의견 없음)

충남 현장행정을 하게 되면 구속력 있는 지침이 필요하며, 실무행정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에서 지침을 개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북 예술위원회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세부지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세우면 될 것이다.

전남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 문화예술단체와 대응 시 적절한 근거 제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경북 지역의 예술단체의 실력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면 지역의 민원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임

경남 문예진흥공모사업 신청단체의 자격 규정 등 지역협력형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좀 더 구속력 있는 세부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 공통사업에는 반드시 추진매뉴얼이 필요하지만, 시·도마다 사업비 집행이나 추진방식이 다

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매뉴얼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지역에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예컨대, 현재 외부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는 교통비, 체재비 등 타 지역보다 사업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되므로 지역 특성에 따른 운영이 가능토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제주).

■ 지역협력형사업의 구성

〈06〉 현재 지역협력형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2년 연속지원)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등 1+4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구성이 합리적인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문예공간 활성화를 위한 '통합예술지원 사업군'과 지역별로 특화된 예술활동의 발굴·육성을 위한'창작지원 사업군'으로 현행 사업을 2분화하고, 동일 사업군 안에서는 예산 상의 재량권 부여(서울).
※ ①'통합예술지원 사업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지원으로 구성(창작 지원금 및 유통·향유를 위한 공간지원) ② '창작지원 사업군'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지원으로 구성(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우수 예술활동의 발굴·육성 지원)

부산 1+4 유형을 막론하고 지역 특성에 맡기되, 예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별 개선 필요

대구 2012년 추가된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사업'은 편의적 편성으로 보이며 특수 별개 목적의 사업으로 추진되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사업들은 시·도 현실을 반영한 지침이 필요하다.
※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은 시·도가 자율성을 갖고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절한 사업이다.

인천 지역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더 적합한 개선방안이다.

광주 1+4 형태에서 지역의 특화 가능성 또는 자율성 부여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중앙기금 추진 사업과 시비출연금 추진사업으로 이원화가 바람직하다.
※ 중앙기금의 경우 중앙부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시비출연금의 경우는 지역의 특화 지원사업으로 계획하며, 지역 공통분모의 사업을 제시하여 자율선택부여 방식 도입해서 지원사업의 응집력이 흐트러짐을 방지하도록 한다(광주).
※ 예컨대, 2개 사업(상주단체육성, 육성지원)은 중앙기금의 정책적 지원사업, 지역공통

추진사업으로 하고, 3개 사업(기획지원, 레지던스, 우리가락)은 자율선택 사업으로 함. 또 시비 매칭 예산 중 일부는 신규 지역별 지원사업, 유형별 발굴 지원사업으로 열어두는 형태로 운영하고, 레지던스사업은 다년간(최소 2~3년) 지원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광주).

대전 예산구조상의 문제 및 공연장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보다 레지던스프로그램 또는 시·도기획프로그램을 특화하고자 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지역 재량권 보장 필요

울산 1+4 형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구성으로, 기초형과 특화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1+4사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경기 1+4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예산 대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예산 비중이 너무 크며, 통예산을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 배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 1+4 형태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사업을 우선 선택하고, 사업별 비중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 다년도 지원에 대한 확대가 바람직하며,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 1+4 형태의 운영은 지역매칭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은 떨어지며, 예술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역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 상주단체육성의 경우, 사업 규모가 큰 것에 비해 상주할 만한 공공 공연장도 없고 수요도 없어, 결국 적격자 부족 상황이 발생, 역량 개발보다는 퍼주기 식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충남).

전북 1+4 형태 구분은 모호하며, 공연장상주와 레지던스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고, 육성지원과 기획지원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그리고 우리가락은 별도 구분하는 것이 사업성격을 이해하기 좋다.

전남 1+4 형태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남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획사업 및 레지던스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희망한다.

경북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단위를 1년으로 해서 전체 실링만 정해주고 세부사업비는 지역특색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경남 통예산으로 배분 후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 배분하는 형태는 사고의 위험(균형적 입장)이 따르므로 현재의 지역협력형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 '우리가락'의 경우 16개 시·도가 공통 추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1+4 형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며, 특성화사업을 각 사업별로 분리하거나 상주단체사업을 하나의 틀에 포함시키는 등, 사업구조 조정을 통해 지역 현실에 맞춰 예산을 배분할 수 있게 하여 지역별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 지역의 사업제안 – 평가 – 3년간 동일 예산규모 지원 – 평가방식에 관한 의견

〈07〉 현재의 1년 단위로 예술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매년 지원규모 변동) – 협력 및 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사업 및 성과목표 제안 – 예술위원회, 지역 및 전문가 공동 검토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MOU 체결 – 사업 시행 – 예술위원회와 지역의 협력 – 예술위원회의 사업 평가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지역별 기획·추진 역량 상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예술위에서 사업유형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현재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특히 2010~2012년 동안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지원의 예산규모를 대폭 키워놓은 상황이므로, 대폭적인 변화는 자칫 그 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위험이 있다(서울).

부산 매우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다.

대구 지역계획을 통해 지역에서 개발한 신규사업들을 위원회가 조정·승인하여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식으로 본다.

인천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지역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예술위원회가 담당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광주 지역사업계획 검토를 통한 예산배정인지, 아니면 예산배정 확정 후 지역사업 계획 검토인지 궁금하며, 자칫 자율성에 따른 책임감만 부과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음.
※ 제안한 방식의 경우 예산배정의 바탕이 되는 지원사업 평가기준이 모호해 질 수 있어 평가를 위한 공통분모가 필요하며, 시비 매칭 없는 중앙기금 전액 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함.

대전 공모 또는 제안 형태로 예술위원회와의 협력(MOU)으로 지역 특화브랜드 사업 등 지역 기획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세스는 매우 적절함. 그러나 많은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울산 전문성을 지닌 문화재단이 있는 시·도에서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재단이 없고 인력 부족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도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라 본다.

경기 예술위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보존하기 위한 지침 없이 자율적 사업 개발과 운영을 하기에는 변수가 많으며, 역량 상 지역 편차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강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과정을 내실화함으로서 사업 기대효과가 긍정적이다. 다만 1회 평가를 통해 3년간 동일 예산규모 지원은 불합리하며,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충북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한다.

충남 신규사업을 1개 정도 발굴하되 나머지는 기존사업을 선택·추진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시·도가 지역에서 추진할 전체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전북 매우 선진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재단이 없는 곳은 인력의 한계(전문성 및 인원 부족)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방식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전남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가방식(사업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자율권이 확대될 경우 재단들의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해야 할 것이다.

경북 현재의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원함.

경남 예술위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보존하기 위한 지침 없이 자율적 사업 개발과 운영을 하기에는 변수가 많으며, 역량 상 지역 편차가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 현재의 평가방식(사업방식)에 대해 긍정적이며, 안정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기금 배분 방안과 기준

〈08〉 2013년도 지역협력형사업에 대한 기금배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배분 방안 및 기준이 합리적이라 생각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배분은 예산총액(9,890백만 원) 중 서울 12.5%를 배정한 후, 15개 시·도(서울시, 세종시 제외)는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인구수 30%,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 역산) 30%, 시·도 매칭 정도 20%)에 의해 배분, 단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타 시·도의 배분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줄어들지 않게 조정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한지협의 배분기준 개선안(2011년 성과평가 결과 20%, 공공 공연장수 10%, 공연예술 단체수 30%,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 역산) 20%, 시·도 매칭 정도 20%)을 적용하여 배분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2013년부터 예술인수(10%), 문예활동 건수(5%), 문예활동 활성화지수(5%) 삭제로 서울지역 역차별 우려가 있고, 지원사업의 효과인 문예활동 활성화지수를 삭제한 것은 평가목적과 모순된다.

※ 예술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교류협력 유도를 위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배분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진정한 '지역협력' 구도의 사업형태를 고민하여 기획·제안해야 할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지역문화예산 확대를 위해 재단과 공동대응해야 한다(서울).

부산 (의견 없음)

대구 (의견 없음)

인천 현행 기금배분 방식에 이의는 없으나, 지역별 '국민문화총생산(GNC)'과 같은 통계수치를 개발·활용하고 예술위원회 주도로 지역문화예술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 (의견 없음)

대전 현재의 배분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나, 배분 기준이 되는 기초 인프라 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반드시 필요

울산 2013년도 개선안이 합리적이긴 하나, 2011년 성과평가 결과(20%)에 재단의 설치여부가 반영되어 재단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 광역단위의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최소예산액을 산정하고, 배분기준에 의한 예산책정액이 필요 최소예산액 이하일 경우에는 필요 최소예산액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울산).

경기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강원 차기연도 기금배분기준 마련 시기를 전반기(연초)로 앞당겨 사전에 기금배분방안에 대해 지역문화재단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충북 (의견 없음)

충남 기금배분기준에 집행실적을 포함하여 사업성과도 제고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북 현행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전남 다른 의견 없으며, 한지협에 일임한다.

경북 현재의 평가방식은 문화재단 유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 조직(재단)의 설치 여부를 떠나 단지 사업수행만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

경남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 (의견 없음)

〈09〉 아울러 지역사업의 예산 규모가 대폭 확충되지 않고 현재 규모의 사업 예산을 지역별로 지원함에 있어 지역 전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역 문예진흥사업에 적합한 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지역문예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예산을 통합 배분한 뒤 예산 편성의 재량권을 주는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부산 2014년부터 특성화사업에 서울 12.5% 선배정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상주단체 사업에서 서울 12.5% 선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적용이 필요하다.

대구 (의견 없음)

인천 (의견 없음)

광주 ① 특성화·상주단체 공통 개선과제 – 성과평가 결과 % 상향 조정, 시·도 매칭비율 상향 조정 ② 특성화사업 – 기금배정액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지 않게 조정, 연간 최소 증가폭 기준 마련 필요(매년 사업별 기금·매칭 합계액이 10%이상 상승되어 재단 경영평가에 유리하도록 조정) ③ 상주단체사업 – 중앙·지방 간 편차가 큰 공공 공연장수나 공연예술단체수 기준 철폐(공연예술단체 수 대비 공연횟수, 공공 공연장수 대비 공연횟수 및 관객수가 더 합리적임)

대전 기존 사업 외 신규사업 발굴(지역우수기획사업, 다년간지속사업의 종료단체 대상 지역간 교류 네트워크사업 등)로 예산 별도 책정 방안 모색

울산 (의견 없음)

경기 지역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나 동일한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기금 배분해야 한다.

강원 전년도 수준 유지 측면이라고 하면 사업평가와 시·도매칭은 무의미하므로, 특성화사업의 경우 매칭비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반영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충북 서울·경인권은 인구/재원/문화시설/문예인구 등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시·도 단위별 최고/최저금액을 설정해 놓고 그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충남 (의견 없음)

전북 현 상태에 만족한다.

전남 다른 의견 없으며 한지협에 일임한다.

경북 (의견 없음)

경남 지역마다 환경과 조건이 다르나 동일한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기금 배분해야 한다.

제주 (의견 없음)

■ 시·도 매칭 시스템

〈10〉 아시다시피 지역협력형사업은 기금 배분에 있어 매칭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시·도 매칭 비율은 지역문화예술지원은 재정자립도 70%를 기준으로 1:1 혹은 1:2 이고,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수도권은 50 : 50, 비수도권은 70 : 30입니다. 현행 매칭 비율이 적정한지, 아니면 시·도/문화재단 매칭 비율을 약화 또는 강화시켜야 하는지 의견과 함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기금배분 기준에 재정의존도(30%) 반영한 후, 다시 재정자립도 70% 이상의 경우 1:2 매칭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중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배분기준으로 재정의존도는 계속 반영하되, 재정악화가 심각한 서울시(2010년 적자 3,129억 원, 2012년 부채 19조원 및 이자 1조원) 상황을 고려하여 매칭비율을 1:1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건의(서울)

부산 적정하다고 보며, 상주단체지원도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하지 말고 수도권도 70:3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 대구시의 경우 급격히 매칭율을 높이기에는 불가능하므로 현행 대구의 매칭비율(특성화사업 1:1, 상주단체사업 70:30)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인천 재정자립도 기준 매칭비율 설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상주단체사업의 경우 인천은 시설 인프라나 활동예술인 비율이 약세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매칭비율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광주 시·도의 매칭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낮아 조금 더 강제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금의 파이를 늘릴 의지가 없는 시·도의 경우, 1:1 또는 70:30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지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 현재 기금 규모 수준에서 1(기금) : 2(시 · 도)로 매칭 될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지원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단, 시 · 도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단계적·연차별 상향 조정 방안이 현실적일 듯함.

울산 지역협력형사업의 현행 매칭 비율은 적정하다고 본다.

경기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분기준으로 예산배분하고, 매칭비율은 1:1 이상으로 지차체에 요구하되 예산 매칭이 1:1 이상 보다 많이 매칭한 지자체에 가산점을 주어 지자체 문예진흥기금 증액을 촉진.

강원 현행 매칭 비율 유지하되, 지역여건을 고려 탄력적 운용(예컨대 상주단체사업의 경우, 비수도권은 50~70 : 30~50 탄력적 운용)

충북 가능한 한 시·도 매칭을 강화해야 하며, 지역 간 편차는 있지만 문화예산이 줄어드는 현상도 보이는 상황에서 매칭 자율권 부여나 약한 규제는 지역의 문화예산을 낮추는 현상을 가져올 뿐이다.

충남 현행 매칭 비율 적정함.

전북 매칭비율을 모든 사업에 5:5로 의무화해야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현행 지원방식에서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만 확대해 주면 매칭비율을 높일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전남 다른 의견 없으며, 현재 매칭 비율 적정

경북 지역의 열악한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협력형사업 전체 매칭을 70 : 30(중앙 :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경남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분기준으로 예산배분하고, 매칭비율은 1:1 이상으로 지차체에 요구하되 예산 매칭이 1:1 이상 보다 많이 매칭한 지자체에 가산점을 주어 지자체 문예진흥기금 증액을 촉진

제주 지역협력성 모든 사업에서 1:1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며, 총액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매칭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 지역문화예술지원 3개 사업 예산배분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고, 사전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과 논의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장치들에 대해 검토했으면 한다(제주).

■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시·도, 지역문화재단)의 사업운영체계 및 네트워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의견 없음)

부산 (의견 없음)

대구 (의견 없음)

인천 한지협이 지역 간 소통과 만날 기회 제공을 위한 허브 역할에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아직도 지역문화재단 간 규정·규칙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지협이 전국의 지역문화재단에 규정집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한지협의 인력 확충 필요, 해외 현장탐방 기회는 매우 큰 의미, 세부사업 담당자 간 의견수렴 공간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간 필요, 사업별 워크숍 상·하반기 분산 등 시기별 조정 필요.

대전 한지협의 조정·협력 기능의 강화 및 한지협 주도로 재단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 예컨대, 한지협 주최 전국 레지던스 비엔날레, 전국 공연장상주 페스티벌 등

울산 네트워크 허브, 협력적 거버넌스로 많은 지역문화협의체가 설립되어 지역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으나, 한지협의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함.

경기 네트워크 형성 촉진으로 광역시·도내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한다.

강원 대의적 기관으로서 한지협의 정체성 확립 및 의사 대변 역량 강화 필요하고, 각 지역의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우수정책을 개발하고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충북 한지협은 기금을 배분하는 협의적 기구로, 재단 차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자회의가 탄생, 위원회 기능과 기금을 대폭 재단에 이양·이관하고 예술위도 참석하는 지역재단협의회를 공식화해야 한다.

충남 워크숍, 세미나를 통한 의견 수렴 시 서면으로 의견을 취합한 후 공통된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전북 (의견 없음)

전남 기존 활동에 크게 공감하며,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컨설팅과 사업성과를 교류하는 자리를 확대하고 재단 간 재정·역량 차를 고려하여 열악한 재단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강화했으면 한다.

경북 (의견 없음)

경남 네트워크 형성 촉진으로 광역시·도내 광역단위 문화재단과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광역시·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한다.

제주 한지협의 경우 지역협력형사업으로 논의가 국한되고 있으나, 예술교육·문화복지 등 재단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

〈12〉 현재 지역문화재단대표자협의체, 기초문화재단협의체 및 지역문화진흥법안상의 지역협의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협의체 등 많은 지역문화협의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역할(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발전적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기존 협의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비슷한 기능의 기구가 계속 만들어지는 느낌으로 협의체를 통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겠고, 시·도 공무원 참여도 늘려가야 한다.

부산 협의체 간의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다르므로 한지협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한지협 내 정책협력위와 실무소위를 통합하여 그 구성원을 각 지역 의사결정그룹으로 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대구 재단이 시·도 위탁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당초의 고유 설립목적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 한지협에서 지역협력형사업의 추진과 협의를 넘어 관련법안 등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 각종 협의체는 중앙·지역 간 파트너십을 위한 것으로 신생 협의체는 얼마든지 생성, 소멸될 수 있다. 한지협은 예술위 산하기구 역할을 벗어나 조직의 규모나 위상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광주 다양한 협의체의 활동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의 창구를 마련하여 구심점 역할을 확대하고, 전국의 지역재단과 협업관계와 더불어 각종 국비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전 한지협의 조정·협력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한지협 주도로 재단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 예컨대, 한지협 주최 전국 레지던스 비엔날레, 전국 공연장상주 페스티벌 등

울산 한지협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실현을 위해 인원 확충과 조직 개편을 통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 한지협을 중심으로 문화지원기관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한지협 내에 지역문화재단대표자회의를 두고 광역시·도내 광역기초문화재단협의체는 광역시·도 지회로 품었으면 한다.

※ 따라서 문화재단 미설립 지역은 예산배분 시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설립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지협이 문화거버넌스조직 협의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선명히 했으면 한다.

강원 (의견 없음)

충북 (의견 없음)

충남 한지협은 재단 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되,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찬반 의견을 묻거나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북 한지협으로 일원화 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담론과 현안을 담아낼 통일기구가 중앙을 대상으로 역할과 기능을 요구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역할을 한지협이 해줘야 한다.

전남 (의견 없음)

경북 너무 많은 협의체가 상존하며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임.

경남 한지협을 중심으로 문화지원기관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한지협 내에 지역문화재단대표자회의를 두어야 한다.

※ 따라서 문화재단 미설립 지역은 예산배분 시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설립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지협이 문화거버넌스조직 협의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선명히 했으면 한다.

제주 (의견 없음)

■ 성과평가 및 환류 제도

〈13〉 현행 성과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현행 환류제도(차차기 연도 기금 배분기준으로 20% 반영)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그 이유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성과평가 결과의 차차기 연도 반영은 불가피하며, 기금 배분기준에 20% 반영 또한 적당한 수준으로 생각한다.

부산 합리적이며, 평가와 환류는 문예지원사업의 과감한 지역이관(이를 통한 지역특성 반영)을 전제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구 현행 성과평가제도의 합리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차차기 연도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차기연도 반영방안 연구가 필요하고, 해외연수 참가인원 차등화 등 평가결과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인천 (의견 없음)

광주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대전 현행 평가제도는 합리적이라 판단됨. 단 성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발표와 공유 기회가 필요하며, 성과와 과정에 대한 소개 책자 발간, 다양한 형식의 쇼케이스가 필요(도큐멘테이션)

울산 현행 성과평가제도(기금 배분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20% 반영)에 재단이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다소 불합리하며, 재단설치 여부가 반영되는 기준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경기 성과평가제도가 해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보며, 계속해서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한 창발적인 지원방안을 보다 풍성히 내올 수 있도록 평가제도가 견인력을 가졌으면 한다.

강원 현재 같은 기금배분 방식이라면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는 무의미하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적극(상향)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충북 현행 제도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극단적 제도이므로 시정돼야 한다. 재단 미설립 시·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는 의도는 이해하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불쾌한 점이었다.

충남 성과평가체제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리적인 환류제도로 판단될 것이다.

전북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결과보고서 양식 간소화와 보고서 제출시기를 3월 정도로 조절이 필요하다.

전남 인원이 부족하고 설립연도가 짧은 재단을 배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평가결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차기 연도 배분기준 20%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북 현행 성과평가제도는 보고서 작성도 어렵고 평가과정도 힘이 듬. 문화재단이 없어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각종 회의, 워크숍, 평가과정, 보고서 등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으면 함.

경남 성과평가제도가 해를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보며, 계속해서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반영한 창발적인 지원방안을 보다 풍성히 내올 수 있도록 평가제도가 견인력을 가졌으면 한다.

제주 차차기 연도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차기연도 반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배분 20% 반영은 지극히 형식적이며 사업별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 또한 지역별 추진사업의 장점을 살리고 격려할 수 있는 방식의 평가가 이뤄지고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되어야 한다(제주).

■ 지역문화협력관제

〈14〉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지역문화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운영 규모(3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예술위원회의 지역문화협력관제 운영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관할 지역문화협력관에게 바라는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규모) 현재의 운영 규모가 적절하며, (역할) 관할지역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시·도를 초월하여 큰 틀의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특정지역에 불이익이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협력관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여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

부산 부산지역은 협력관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다. (효과) 협력관들 대부분이 관성적·자기중심적이고 사업모델의 관점(수도권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의사결정그룹의 개혁과 변화의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과정에서 인성적인 소통이 매우 권위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 (규모) 업무가 과중해 보이므로 협력관 수를 확대하는 것은 반가운 일로, (효과) 협력관제는 지역의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인천 대다수 협력관의 역할을 존중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일부 심의에 참여한 경우는 있으나 해당사항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다.

광주 (효과) 지역예술인들에게 중앙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직접 청취 기회부여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중앙의 입장 직접 전달, 협력관의 직접 현장점검 증가에 따라 사업운영에 대한 긍정적 긴장감 조성, (역할) 지역민 대상 컨설팅 지원, 시·도 지원사업 확대의 견인차 역할, (경계사항) 특정 예술인·단체와의 밀착에 의한 지원사업 관여 및 재단 고유권한 관여 우려

대전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의 경우 지역문화협력관제는 그 실효성이 매우 크며, 지역예술계(예술인 및 기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 지역문화협력관제의 정착에 따라 폭주하는 컨설팅 요구로 협력관 업무가 날로 가중되고 있어 5개 권역 정도로 확대가 필요하며, 예를 들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예술위의 전남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시행), 중부권(충북, 대전, 충남, 세종), 동부권(강원, 경북, 대구),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서남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임(대전).

울산 (규모) 긴밀한 협의와 컨설팅을 위한 시간·공간적 제한이 많아, 협력관제의 확대가 요구된다.

경기 (규모) 협력관 역할을 예술교육, 문화복지까지 확대하고 협력관 수도 활동영역 확대에 따라 증원했으면 한다. (역할) 문화재단 설립 3년차 이하 지역에서는 길눈이 역할, 설립 4~5년차 문화재단은 수평적 협력 관계 유지, 설립 5년차 이상 문화재단은 자율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강원 (규모) 권역별 협력관 수의 증원이 필요하며, (역할) 타 업무가 과다하므로 지역과 중앙간의 의사소통,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컨설팅 등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충북 (효과) 시행 초기와 달리 지금은 지역의 입장에서 위원회와의 조율을 이루는 협력관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역할) 위원회 입장 전달보다는 지역 사정을 위원회에 전달·관철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충남 (규모) 권역별이 아닌 시·도별로 1명씩 배정하여 전문가로서의 역할 보강이 필요하다.

(효과) 지침 및 사업에 대해 학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은 다소 부족한 듯하다.

전북 (효과) 재단이 있는 곳과 없는 곳과는 효과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지역에서 협력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경북 우리 도의 경우 지역협력형사업에 전적으로 치중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고 사료됨.

전남 (효과) 지방의 경우 중앙과의 의사소통의 부재가 크게 문제될 수 있으나 협력관제는 중앙과의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며, 사업 추진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기존활동에 크게 만족한다.

경남 (규모) 협력관 역할을 예술교육, 문화복지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 (효과) 제주의 경우 물리적 거리감 때문인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현실적인 카운슬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전문적이고 기획력 있는 협력관제도가 운영되길 희망한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

〈15〉 정부 방침에 따라 예술위원회는 2014년 상반기에 전라남도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의 지역 이전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지역협력형사업)의 운영체계나 위원회-지역 간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개편,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서울·경기지역 협력관이 배치되겠지만 한지협 사무국은 서울지역에 잔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서울지역 예술인들의 심리적인 위축, 문예진흥기금 지원 축소와 소통창구 실종이 우려된다.

※ '대학로 연극센터', '예술가의집' 을 중심으로 분야별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 마련 필요(서울)

부산 국가 장래를 위해 모든 구성원과 공간이 이동 및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업의 지역 이관이 선행된다면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

대구 이전 시 왕래에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며, 위원회가 각 시·도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해 주기 바란다.

인천 예술위원회가 서울 혹은 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광주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 위원회와 지역재단 간의 유기적 협력을 위하여 기본적인 지원 심의, 회의 등 서울 중심 활동거점이 필요함. 예를 들면,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 지역문화재단 사랑방 상설 운영 등 검토

울산 지역협력형사업의 운영체계나 위원회-지역 간 네트워크는 각종 정책 워크숍 등 개최지가 나주일원에서 개최되지 않는 한, 크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경기 서울에 예술위원회의 분사무소가 있기를 희망하며, 한지협을 통한 지역협력형사업의 기조가 유지되었으면 한다.

강원 권역별 개념을 도입,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권역별 대표 재단 선정 등)하여 지역협력형사업 운영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충북 이전을 계기로 한지협이 제 역할을 해야 하며 협력관도 그 차원에서 배치해야 한다. 사옥 이전과 함께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지역과 중앙의 개념도 이전해야 하며, 지역문화에 대한 위원회의 확고한 의지와 분권적 사고가 필요하다.

충남 (의견 없음)

전북 물리적·심리적의 거리가 가까워져 전북과는 회의 체계나 사업의 공동추진이 훨씬 용이해 질 것 같다. 네트워크가 공고해 질 것으로 보며 연대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남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협력관제 확대 운영과 지역 거점을 설정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북 지역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음.

경남 예술위원회의 권역별 분소가 있기를 희망하며, 한지협을 통한 지역협력형사업의 기조가 유지되었으면 한다.

제주 이전으로 인해 사업운영체계나 위원회-지역 간 네트워크가 개편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나, 예술위의 역할 유지를 위해 문화부-예술위-지역 간 원활한 협력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 2.0'에 관한 의견

〈16〉 '지역 2.0'이라 부르는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2014~2018) 전략」에서 꼭 다루어 져야 할 항목이라든가 중점적인 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 또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빠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서울형 예술지원정책의 특성화 방향관 관련, '지역 2.0'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사항은, ① 시민의 직접적인 체험·참여를 통한 창의성 개발 ②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산 ③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보급 ④ 지역공동체 문화 복원 등이다.

부산 재원조성계획, 유효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계획, 문화나눔 체계 마련,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한 법령과 제도 정비, 문화관련 기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 등

대구 문화예술 지원방식 개선의 중요부분은, 기존의 사업별 지원방식 외 예술가나 기획자 개인을 육성하는 지원 방식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인천 지역의 자율성 부여 혹은 지역 문화재단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전략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광주 ① 예술위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② 예술위원회는 중앙정부의 주요 문화예술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대전 ① 향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의 연관성에 대한 깊은 검토 필요 ②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지역 특성화 강화전략 필요, 보조금 지원에서 지역 문화 인프라 지원 방안 모색 ③ 지역문화재단의 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 문화정책의 일대 전환 필요(지역문화재단의 안정적 · 지속적 재원 확보 방안 강구 : 재단 기금조성의 표준 규모 및 기준 마련 후 중앙정부 매칭 지원 방안 검토 필요, 새 정부 들어선 후 중앙문예진흥기금 세입 규모가 확대될 경우 그 일정액을 지역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 지원(지방비 매칭 의무) 가능)

울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 신설을 제안한다.

경기 마을과 동네 단위 문화예술 공간(공연예술연습실, 문학 북 카페, 마을 소극장, 커뮤니티 아트 센타, 예술교육센터 등) 조성 지원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강원 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일관된 지원정책 마련 ② 문화부-예술위-지역재단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③ 지원사업에 대한 자율성 확보 방안

충북 ① 중앙 및 시·도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대 방안 ② 문화분권 시대에 지역문화재단의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범적 근거

충남 ① 전국 시·도별 예술인 현황, 인프라 구축 현황, SWOT 등을 분석 판단할 수 있는 연구용역 사업 ② 이를 통한 중기전략에 의한 신규사업(전문가 분석의견이 반영된)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방안

전북 (의견 없음)

전남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나왔으면 하며,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1~2년의 성과중심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북 예산의 시·도 매칭비율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경남 마을과 동네 단위 문화예술 공간(공연예술연습실, 문학 북까페, 마을 소극장, 커뮤니티 아트센타, 예술교육센타 등) 조성 지원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제주 (의견 없음)

■ 문화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17〉 기존에 발간된 많은 연구보고서가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도, 지역문화재단, 민간지원단체 간에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와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방안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기존에 예술위원회가 자체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수행했던 역할 중 일부를 지역재단들에게 이관하여 재단의 재량권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 한다.

※ 예컨대, ① 예술창작지원사업의 지역별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사업 일괄위탁방식도 적극 검토 ② 예술위원회는 지역 간 우수공연 교류사업 기획·운영과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주력

부산 중앙정부 주도로 '문화예술지원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대구 문화부나 위원회는 정책 가이드라인과 성과달성 환류체계를 제시하고, 세부선정과 지원방법, 평가지표 등은 지역재단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인천 예술위원회는 최대한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광주 시·도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기부금 확충과 메세나 사업, 지원사업과 지원단체 홍보, 우수지원사업 또는 예술인·단체 시상제도 운영, 기타 간접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담당해야 한다.

대전 위원회는 지역예산 및 사업 지원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등 플랫폼 역할을 하고, 지역재단은 사업 추진 및 우수 기획사업, 신인예술가를 발굴하여 위원회와 협력으로 전국적, 국제적 공동 육성

울산 실정에 맞는 지역단체와 시·도 지역문화재단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 ① 예술위원회는 예술가·예술단체의 해외소개와 국제교류, 해외 한국학 연구분야 중 문화예술 연구부문을 뒷받침하고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노력에 중점, ② 광역재단은 전문예술가·교육자, 전문예술·교육단체 지원에 중점, ③ 기초재단은 문예동아리 발굴과 간접지원, 문예동아리와 전문예술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동네 예술생활협동조합 생성 촉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강원 사업방침 수립, 예산편성은 문화부와 예술위원회가 담당하고, 지역문화재단과 민간예술단체는 사업시행 주체로서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 편성으로 시·도 매칭 등 자율성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

충북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문화재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적 장치를 마련한 후, 기업들과의 협력을 이뤄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 지원과 기부문화에 공감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충남 (의견 없음)

전북 (의견 없음)

전남 광역재단 등은 중앙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예술위원회는 재단의 이러한 역할 수행에 협조

경북 지금의 지역협력형사업은 중앙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사업비를 지역에 분배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평가 없이 실링만 정해주어 지역특성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

경남 광역재단은 전문예술가·교육자, 전문예술·교육단체 지원에 중점, 기초재단은 문예동아리

발굴과 간접지원, 문예동아리와 전문예술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동네 예술생활협동조합 생성 촉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제주 (의견 없음)

■ 기금 수요 규모

〈18〉 만일 지역문화 지원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1:1 매칭을 전제로 귀 시·도나 지역문화재단의 요구액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문예진흥기금(단, 1:1 매칭을 전제로 함)을 요구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서울 최근 4년(2009~2012)간 서울시 배분금액의 평균금액인 45억 원 수준이 적합하다고 본다.
※ 이 금액은 서울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의가 본격화 되기 직전인 2010년도 당시 서울시 배분금액(47억 4,9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금액이 최고였던 2009년도와 2012년도의 대략 평균금액임.

부산 50억 원(기금) + 50억 원(시비)

대구 (의견 없음)

인천 다다익선이다.
※ 2012년도 인천광역시 1년 총예산은 7조원 정도로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총 예산의 1% 미만이며, 그나마 상당부분이 인천시 주무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다. 인천에서 실질적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간, 인프라, 사람, 콘텐츠 등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인천시 주무국 예산을 포함한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5% 정도인 약 3,500억 원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중 재단에는 약 100억 정도 수준이 지원 될 수 있으며, 1:1 매칭을 전제로 했을 경우 200억 수준이 된다.

광주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은 500억 원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 규모가 연간 10~30%수직 상승 중이다.

대전 희망 요구액 : 2,000백만 원. 1:1 매칭으로 할 경우 지역의 수요를 고려할 때 웬만한 지원사업 추진 가능

울산 지역문화 지원기금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 현재 1:1이 매칭비율 기준 준수에도 어려운 실정

경기 현재 배분된 지원금의 1.5배를 요청하겠다.

강원 2013년도 기금배분 현황은 기금 11억 4백만 원 : 시·도 매칭 21억 3,300만원으로, 위 상황이라면 기금요구액은 20억 원 수준이다.

충북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한 지역 당 한 백억씩만 내려 보냈으면 좋겠다. 요구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충남 5억 원 수준

전북 주시는 대로 매칭 가능함.

전남 현재 수준 유지

경북 예산부족으로 1:1도 무리가 따르며 그 이상의 비율로 갈 경우 사업포기의 우려가 있음.

경남 현재 배분된 지원금의 1.5배를 요청하겠다.

제주 (의견 없음)

■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

〈19〉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한지협 사무국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언급하는 분야나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별 답변 요지

광주 지역문화협력관제에 대한 의견 중 '경계사항'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조심 하자는 의도임.

대전 ① 예술나무 운동의 전국적 확대 방안 주도 : 대전문화재단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 사업 추진 중이며, 13년부터는 예술위의 예술나무 운동과 연계 추진 기대 ②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통합 후 지역재단에 대한 예술경영컨설팅 지원 대폭 활성화 기대 ③ 한지협, 광역문화재단협의회('11.10, 문화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12.4, 일부 기초재단만 참여), 전국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12.10.26, 광역재단 대상) 등의 통합 운영 전략을 예술위(한지협) 주도로 마련.

울산 ① 사업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 반영을 위한 워크숍 및 회의가 연말에 집중돼 있어, 행사일정 분산 개최, 권역별 이동 개최 필요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및 기능추가를 위한 적극적 총괄관리자 역할 수행, 시스템 오류 및 문의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치를 위한 상담원 증원

경기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2% 미만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를 3%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고, 문화복권 발행 여론을 조성하는데 예술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충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지역협력형사업 지침, 시·도별 의견, 공모사업 현황 등을 담을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해 주면, 온라인 상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남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예산 비율은 2% 미만으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에 이를 3%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부산/대구/전북/경북/제주(6) 의견 없음.

인천/강원/충북/전남(4) 예술위원회 및 한지협 활동에 대한 감사

부록

시·도 및 지역문화재단 2차 설문 결과

○ 2012.12.26~2013.1.4 4개 시·도(울산·충남·전북·경남, 세종시 제외)와 12개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8개 분야 10개 문항의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접수하였으며, 설문 문항 내용, 집계결과 및 시·도별 상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예술위원회와 지역사업 운영방안	현재 지역협력형사업 형태는 적절하다. (기금배분-지방비매칭-운영방안제시-지역사업수행-지역협력활동-사업성과보고-사업평가환류)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8	6	2

2-1. 지역의 재량권 문제	탑다운 방식의 지역협력형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에 큰 폭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0	5	1

2-2. 지역의 재량권 문제	현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1+4의 형태는 합리적이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	3	12

3. 지역사업제안-3년간 동일예산 규모 지원-평가방식에 관한 의견	예술위 제시의 매년 지원규모가 변동되는 '기금지원-협력-평가방식'을 탈피하여 〈지역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사업 및 성과목표 제안 - 예술위원회, 지역전문가 공동검토-예술위와 지역의 MOU체결-사업시행-협력-예술위평가시행〉의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6	5	5

4. 기금배분 방안	2013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서울 12.5% 배정 후 15개 시 · 도 한지협 배분기준 적용)과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배분기준이 적절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8	4	4
5.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현행성과평가제도와 환류제도 (차차기연도 기금배분기준 20% 반영)이 바람직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7	7	2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이전	2104년 예술위원회 나주 이전(예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운영체계와 위원회-지역간의 네트워크에는 권역별사무소(거점)가 필요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9	1	6

7-1. 사도매칭 시스템	기금배분 매칭비율 - 재정자립도 70% 기준으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1:1 혹은 1:2 은 적정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0	3	3

7-2. 사도매칭 시스템	기금배분 매칭비율 – 공연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수도권 50:50, 비수도권 70:30 은 적정하다.		
	그렇다 ①	보통이다 ②	아니다 ③
	13	2	1

8. 기금수요 규모	만일 지역문화 기금이 충분하여 1:1 매칭 전제로 요구한다면, 어느 규모로 요구하시겠습니까?	
	① 현재 이하	1 (경북)
	② 현재 수준	8 (서울,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③ 현재 × 2	5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경남)
	④ 현재 × 3	
	⑤ 현재 × 3배 이상	2 (인천, 강원)

○ **시·도별 상세 답변 내용**

1-①

광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도-각 재단-지원사업자 등의 로드가 읽혀지는 운영방식은 적합하다고 봄. 문화예술진흥기금 : 시비 매칭의 형태는 다소 각 기관별 역할분담의 혼선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음. 특히 예술위와 시·도의 통제만을 받고 있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지역협력형사업 이전 문예진흥기금사업형태가 추진체의 구심점이 있었다고 판단됨.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 구성 시 현 장르별 전문가 위주 + 지역 할당제 추진 요청

전남 사업운영 형태에 대한 의견이 없으며, 현재 형태에 대해 만족함.

1-②

서울 사업별 예산액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별 전체 사용예산을 배분하고 각 지역이 사업별 수요에 따라 예산을 안배하여 사용하도록 자율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제주 운영방안에 대한 제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함. 매년 거론되지만 연말에 형식적인 의견수렴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1-③

부산 팔길이원칙이 사업체계에도 적용되어야 함.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사업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함. 평가효율을 전제로 한 일률적 사업운영은 지양하고 문화다양성 확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경북 평가과정이 너무 복잡(평가서식)하고 힘 든다. 문화재단이 없는 시·도에서는 업무량 과다로 지역협력형사업에만 집중하기 어려우며 회의, 워크숍 등이 너무 많아 형식적으로 대처하기도 벅차다.

2-1-①

서울 각 시·도별 기획·추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추진방향의 큰 기준은 예술위가 제시하고 시·도가 사업과 예산 운영의 자율권을 좀 더 확보하여야 함. 현재 지원형태를 크게 이분화하고 각 사업군 안에서는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세부사업의 예산을 해당 지역이 자유롭게 배분·집행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울산 시·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예산편성권을 주어야 함.

경기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사업 배정 예산이 크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사업 예산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예산배분 권한을 지역 재량에 맡겨주면 좋겠다.

충북 장기적 차원으로는 지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그러나 조직 운영이 안정화 되지 않거나 기타 여건상 추진역량이 약한 문화재단 또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업방향 등 추진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전남 재량권 강화는 현재 시대적 추세로 판단되며, 각 지역마다 특성과 환경이 다르므로 지역의 재량권 확대에 의견을 같이 함.

경북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 실링만 정해놓고 세부사업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주 사업내용에 따라 단기, 장기사업이 있을 수 있음.

2-1-②

대구 현재의 지역협력형사업 형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광주 지역협력형사업의 기본지침과 지역의 선택권 부여 방식 필요. 현재는 자율 선택권이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이지 않음으로 시·도의 경우 지침의 5개 사업을 전체예산 내에서만 무조건 추진을 요청함. 중앙기금 사업과 시비기금 사업의 이원화 추진 : 중앙기금의 집중선택 사업의 의무화와 시비사업의 지역적 자율성이 확보된 자율 사업으로 이원화

충남 총액을 지역별로 배분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량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2-2-①

- 상세 답변 내용 없음.

2-2-②

충남 특히,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수요가 적은 편임.

2-2-③

부산 상주단체지원사업의 경우 현재처럼 국공립 공연장 지원에 한정한다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로 지원할 성격의 사업이며, 위원회의 현재 역할과 기능면에서 위원회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

인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하 상주단체지원)의 예산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수의 공연단체 및 공연장이 형성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되는 상주단체지원 예산은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각 재단의 재량에 따라 상주단체지원사업을 포함한 예산까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바람.

충북 상주단체육성지원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배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전북 특성화 사업과 시군 기획지원 사업간 탄력성 부여, 공연장 상주는 지역형편에 맞게 조정

전남 지원 형태인 1+4 형태 보다는 공연장 사업과 지역특성화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주 제주의 경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사업 보다는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시·도기획사업이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되어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인 경우 많은 전문가(평가위원, 협력관 등) 들이 제주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함. 하지만 중앙지침에 의해 추진되어옴. 3년간 추진 결과에 제주지역에 어떤 성과를 남겼는지 의문이 듬.

3-①

부산 더 이상 미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2014년부터 즉시 전환 시행 필요함.

인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주는 방식은 바람직한 방향임.

강원 절차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상황을 고려해 볼 때 3년간의 동일예산규모의 지원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3-②

서울 장기적으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성과목표를 제안한 후 이에 따른 적정 예산을 중앙에서 배분할 필요 있으나, 지역의 문화사업 기획 및 추진 역량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예술위에서 사업유형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현재의 형태를 당분간 유

지할 필요가 있음.

광주 지역협력형사업처럼 매년 지속되는 지원사업 유형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함. 매년 지원규모와 지원사업의 내용, 형식 등이 변화하고 계획에서 평가까지 예술위원회와 협약의 형태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각 재단의 기획팀 또는 사업팀으로 업무가 넘어갈 수 있으며, 일정정도 포지션 안에서 17개 시·도가 경쟁 구도라는 환경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어 보임. 기금지원 이외 특화지원의 형태가 맞을 것으로 판단됨.

충남 문화재단이 미형성되거나 초기 형성된 지자체로서는 아직 기획단계는 무리수가 있고, 다만 중앙에서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공모사업을 1~2개 정도로 선정·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임. 시범사업이 효과적이면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예산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전남 현재 추진하는 평가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병행이 필요함.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재단들의 평가방식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③

경기 기존의 기금배분 형태의 보완책으로 총사업비 내에서 예산배분의 재량권만 주어도 충분할 듯하다.

전북 지역자율사업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가능, 기존방식 유지 필요(순수 예술진흥 저하 우려)

4-①

서울 예술인, 문예활동이 밀집된 서울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분기준에 '예술인수', '문예활동 건수', '문예활동 활성화지수'를 반영하거나 서울에 일정 배분액을 할당함으로써 서울지역의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음.

경기 배분기준은 올해 보완된 방안으로도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공연장상주단체예산은 조금 줄이고 줄인 만큼 지역특성화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전남 다른 의견 없으며, 한지협에 일임.

4-②

광주 지원사업의 집중과 선택이라는 방향에 맞춰 보자면 적절하다고 보이나 지역적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한 하드웨어(공공 공연장)의 부족에 의한 사업의 추진이 힘든 지역을 고려한 대안마련이 필요.

제주 전체 인구수, 예술인 수 비례 적정하다고 판단됨.

4-③

부산 지역문예지원사업 배분기준을 상주단체지원사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울산 전 시·도가 동일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하여야 함.

충북 서울지역은 문화시설 등 문화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재원도 많음. 반면, 지역은 문화인프라 및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 열악한 지역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경북 지역의 특성상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단체가 소수에 집중되므로 사업선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비중을 줄이고 지역특성화사업 비중을 늘려 지역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배분기준을 전체적으로 위원회:지역(7:3)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①

서울 제도의 전국적인 운영현황과 평가일정 등을 감안할 때 성가평가 결과의 차차기 연도 반영은 적당하며, 기금 배분기준에 20% 반영하는 것 또한 적당한 수준으로 생각됨.

5-②

대구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이 평가결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인센티브에 대한 적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광주 년간 사업 진행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다고 판단됨. 20%이상의 상향 조정 필요

충북 공통지표(공연단체수, 공연회수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통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 됨.

충남 평가기준을 상반기에 제시하고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보완한다면 평가한다면 불만이 어느 정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전북 차기년도에 반영 필요.

전남 인원이 부족하고 설립연도가 짧은 재단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또한 차차기 연도 배분기준 20%를 10%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5-③

경북 평가는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형 평가에는 문화재단 설립과 같은 조직의 설치문제를 평가항목에 넣으므로 지역의 특성상 설치를 할 수 없는 시·도는 매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제주 평가 환류방식은 평가 결과 공개, 컨설팅, 우수기관 선정 등으로 진행되었으면 함. 평가결과로 인해 안정된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굳이 반영을 해야 한다면 10%정도가 적정선이라 판단됨.

6-①

- 상세 답변 내용 없음.

6-②

- 상세 답변 내용 없음.

6-③

부산 대한민국은 좁다. 거점이 필요하지 않다. 지역거점은 이미 지자체와 광역문화재단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7-1-①

인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매칭비율을 설정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음.

강원 지방비 매칭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전북 매칭비율 5:5로 의무화 필요

전남 현재 매칭 비율 적정

7-1-②

광주 기금 매칭비율의 1:1의 기준 자체가 시·도의 자율 의지를 낮추는 경향으로 판단됨.

제주 지역의 입장은 기금 매칭 비율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함.

7-1-③

서울 기금 배분기준에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 역산)를 30%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 70% 이상의 경우 1:2 매칭을 의무화하는 것은 동일 사항에 대한 이중평가며, 서울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임. 서울의 재정악화를 고려하여 타 시·도와 같이 매칭비율을 1:1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요청드림. 참고로 문화바우처사업 경우 서울시의 재정여건·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64(중앙):36(서울시)을 적용함.

대전 지역 특성화사업의 매칭 비율은 1:2가 적정함.

경기 지역문화특성화 매칭은 재정자립도 기준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1:1과 1:2는 격차가 너무 크다) 예) 60%이하 1:1, 60~70% 1:1.5, 70%이상 1:2 ⇐ 1.5 매칭 추가

경북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도 매칭비율을 70:30으로 조정 필요

7-2-①

강원 지방비 매칭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전북 매칭비율 5:5로 의무화 필요

전남 현재 매칭 비율 적정

제주 최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70:3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1:1이 적정선이라고 생각됨.

7-2-②

광주 공연장상주단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없이 동일하게 해야 함.

7-2-③

인천 상주단체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은 서울·경기와 동일시하기 보다는 타 광역시와의 형평에 맞춰 매칭비율을 설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함.

8번 문항

서울 서울의 경우 최근 4년(2009~2012)간 서울시 배분금액 평균액인 4,500백만 원 수준이 적당함. 이 금액은 서울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직전인 2010년도 당시 서울시 배분금액(4,749백만원)을 회복하는 수준임.

인천 다다익선임.

광주 광주의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종자돈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함. 재단 내 자체사업으로 지원사업을 포함 또는 확장에 대한 계획 없음. 지원사업의 경우 1:1 매칭 이상을 만들어 낼 재원이 없음으로 1 : 2~3으로 시비의 포지션이 커질 수 있기를 희망

충북 재정자립도에 따라 매칭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강구

제주 현재의 규모보다 축소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현재수준이 적정하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고 또는 지방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음.

부록

'지역 2.0' 워크숍 발제문 Ⅰ

한지협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1. 지역협력형사업 운영 방향

○ 지역협력형사업 가운데 육성지원사업은 기금의 지역 배분 후 세부 운영은 지역문화재단(광역)의 자율성 보장
- 16개 광역단위에서 공통으로 시행해야 하는 보편적 사업이므로 지역재단의 자율에 맡김.
- 한지협 사업이 아니라 광역문화재단 사업이며, 현재는 이행기(지역문화협력관)
-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 지원
- 온라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
- 신진예술가 및 원로예술인 특별 트랙 설정
- 지원 방식, 심의 방식 등을 자율에 맡김.
- '지원 선정률'도 자율에 맡김.
- 기금 배분 및 매칭 비율만 한지협을 통해 결정
- 최근 3년간 자료를 토대로 정액제도 전환(최소 배분액 유지, 이를 위해서는 기금 전액 배분지역도 가능하게 해야)
- 2014년도 배분액 결정하면서 2015, 2016년도 배분예정액을 잠정 결정, 공유
- 단계적 자율화 시행의 경우, 광역문화재단(지자체)를 자율 그룹과 비자율 그룹으로 구분

○ 기획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기획사업에 지원하되, 광역/기초 지역문화재단에서 사업 신청을 하고, 한지협에서 직접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비를 광역재단에 보내고, 광역재단에서 사업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역배분 방식이 아니라 기획사업의 질적 측면을 핵심 요소로 보고 사업 지원을 결정해야 함.
- 해당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전국가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우선 지원
- 역대응보조 프로그램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 전년도에 기획안 초안 단계에서 아이템이 좋으면 컨설팅 과정을 거쳐 기획단계에서부터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
- 사업 기획, 홍보, 재원 마련 등등 컨설팅
- 지역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년 지원 체계 유지(특히 재원 플랜 작성)
- 1차년 사업 이후 사업성과 공유하는 국내외 워크숍 등을 한지협 주최로 개최

○ 레지던시 지원사업은 국내외 창작공간과 예술인의 매개를 통해 창작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이므로 지역 간 기계적 균형 배분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부합하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
- 육성지원사업과 달리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만들어 방향성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
- 시각예술분야만이 아니라 공연예술분야로 확대(한문연 연계)
- 레지던시, 예술인 사이 교류 기능 활성화
- 레지던시 연계 국내외 워크숍, 교류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는 한지협 사업으로 별도 운영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공연단체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그 정책 목적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함.
- 지역간 기계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는 사업
- 개별 사례 관리가 중요한 사업
-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연장 중심으로 볼 것인지 공연단체 중심으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음.
-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
- 공연장 중심이 바람직하나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평가제도 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공연장이나 공연단체가 서로 정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것임.

○ 공공미술, 문화예술동아리 등도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운영

○ 지역협력형사업 추진에서 한지협, 아르코,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역할 체계를 분명히 설정하여 운영

2. 지역문화재단의 발전과 한지협의 위상

○ 12개 광역문화재단이 설립, 운영 중

○ 최근 광역 지역문화재단 '협의회'와 기초문화재단 '연합회'가 출범하였고,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가 발족하는 등 지역문화재단 사이의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문화분권화가 가속화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경우 광역문화재단 사이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가 지역문화정책 추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예술지원체계에서 보면, 광역문화재단은 아르코와 기초문화재단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며, 아르코가 담당하던 일부 사업을 이관 받아 운영하게 되면서 한지협과 같은 협의체 기구가 발족하게 됨.

○ 재원면에서도 지역문화재단들이 공동의 별도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아르코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일종의 지역문화재단 공동기금의 기능을 하게 되며, 그 경우 필연적으로 아르코와 광역문화재단의 관계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표적인 통로가 한지협으로 나타남.
- 현재는 중앙의 문예진흥기금과 각 지자체별 문예진흥기금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공통의 지역문예진흥기금은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이를 별도 관리·운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한지협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협력형사업 기금 배분액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여 사실상 공동기금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기금의 배분은 한지협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결정
- 지역기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곳은 '공동기금'의 수혈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사례도 나와야 함.

○ 한지협은 지역협력형사업을 기반으로 출범하였지만, 아르코와 지역문화재단 사이의 정책 협의 채널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는 아르코와 지역문화재단의 연계 강화, 지역의 문화예술지원역량 강화 등에 실제적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아르코 나주 이전 시점부터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명으로 확대 필요 공감
- 서울경기인천지역, 호남권에도 배치 필요
- 지역문화협력관의 역할 재규정(한지협 지회 성격 가미하여 협력관 밑에 스태프 보강하여 지역문화재단과 아르코 사이의 상시 채널로 가동)
- 지역문화협력관의 외부 전문가 채용, 특히 지역문화재단에서 활동경력 있는 분들의 배치도 가능

○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각 재단의 의견을 보면 한지협의 위상 및 기능 확대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지협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지협은 예술지원기구 협의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지원의 범주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므로 한지협의 실제 기능은 확대 가능함.
-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를 포함할 수도 있음.
- 그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한지협 구성단체로 들어올 수 있으며, 한지협 산하에 문화예술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
- 이렇듯 한지협 산하에 다양한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임.
- 한지협은 예술지원에 관한 대한민국 유일 전문 협의체가 되어야 함.
- 그렇지만 지역문화재단은 예술지원기구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지역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재단의 존재성을 반영하는 의사결정구조 및 협의체는 한지협과 별개로 존재하는 바람직함.
-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다양한 협의체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자리를 잡아 나갈 것임.
- 그러나 한지협 예술지원과 관련 중앙의 문화예술기관들과 지역문화재단이 대등한 회원단체로

참여하는 실행력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아르코가 나주시로 이전하면 한지협 사무국은?
- 서울에 남기자는 제안이 있지만, 나주시에 두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함.
- 아르코와의 협력관계를 생각하면 나주시(광주시)가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면 세종시(오송)가 적정

3. '지역 2.0'에 대하여

○ '지역 2.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계획의 범위나 방식 면에서 지금까지(지역 1.0)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

○ 아르코의 지역협력형사업, 한지협 자체의 발전 경과, 지역문화재단의 발전 정도, 문화체육부 및 아르코 지방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의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본다면, 사업, 재정, 운영체계 등의 면에서 고객에게 던지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계획의 범위가 한지협을 넘어 지역문화예술 전반으로 확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 2.0'이라는 표현에 맞는 변화를 담은 계획이 되게 해야 함.

부록

'지역 2.0' 워크숍 발제문 II

지역문화예술지원 2.0에 대한 단상

안이영노 (기분좋은QX(주))

1. 방향성

○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은 광역지자체 담당과에서 관리하는 곳보다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이 집중적으로 지원제도를 발굴할 수 있으며 성과관리의 내실을 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의 예술단체, 예술가 등도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에, 섬세한 사업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제도적 건의를 할 통로를 갖추게 됨.

○ 광역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지원금을 분배하는 공모지원사업을 중심에 두고 지원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1순위를 두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지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 역시 큰 비중을 두어야 하지만, 자체적인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함.

○ 광역 문화재단들이 지역인력 발굴, 평가 및 교육, 사업설명회 등 관리체계에 있어 많은 발전을 하였으나 이러한 지원관리 시스템의 수준이 양극화되어 있으므로, 워크숍을 통해 관리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 후 과정관리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독자성을 갖춘 사업을 추진하려면 꾸준히 의견을 수집하는 지역예술단체 간담회 등의 마련되어야 하는 동시에, 즉각 반영하기보다 지역외부 객관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와 한지협이 참여하는 토의를 통해 걸러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정책환경 및 문화예술계 여건변화 관련

○ 기초지자체의 지방문화재단이 증가추세이며, 예술위 뿐 아니라 문화체육부의 지역민족문화과 역시 문화원, 문화의집과 더불어 주요 사업대상(파트너)로 파악하고 있음.

○ 지방문화재단의 재원부족으로 지원금 배분보다 자체적인 기획사업을 하는 것이 지역 내에서 문제로 인식되는 한편, 문화원, 문화의집 등과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도모해야 하므로 광역단위 문화재단이 이를 위한 논의를 도와주어야 함.

○ 우수한 인적자원이 민간단체와 사업체에 남기보다는 정부산하기관 및 지방문화재단에 채용되기를 원하는 마당에서 지역예술가, 기획자, 사업가와 지방문화재단의 관계에서 균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민간인력 양성을 위한 간접지원 및 임시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사업을 마련해야 함.

3. 지역특성화 혹은 특화사업

○ 기본적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은 문화재단이 기획하기보다는, 지역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공모, 특히 예술가단체보다는 주민공모를 통해 우리지역의 브랜드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볼 필요가 큼.

○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16개 지자체 담당자와 지방문화재단 책임자들 간의 상호교류 및 기획워크숍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의 특화사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함께 연구하여 자신들의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기획에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지역 간 특성화사업에 대한 사례발표와 같은 전국단위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역고유성을 가진 기획사업 구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간 교류협력의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임.

○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을 진흥할 경우 그 지원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예술가들 간의 연대사업 기회 확대, 예술단체간의 상호학습을 통한 성장 같은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지역 간 사업에서 더 많은 예술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획사업인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사업선정을 하는 것이 유용함.

4. 재원계획

○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수요규모를 추정하는 공식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계획이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지방문화재단 및 광역지자체가 중기재원 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자치단체장의 중기재원 계획에 대한 의지를 세운 후 이 계획을 예술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계획달성의 불투명성을 줄이는 것이 낫겠음.

○ 지역활동 성과에 따른 차등적 기금배분방식으로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함.

○ 매칭시스템 개혁의 경우, 매칭비율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가 약속한 매칭을 하지 못 하는 경우 지역예술 발전을 장애하지 않도록 지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발생하므로 차선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 가이드라인과 몇 가지 선택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2.0 버전의 인력

○ 예술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원제도가 아니라 지역현장의 창조활동이 왕성한 사례를 찾아 사후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신규예술 및 청년예술가 지원, 아마추어 주민예술활동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을 늘일 필요가 있음.

○ 예술가 창작지원, 예술인 수혜 프로그램(교육, 레지던시, 연습장 시설제공 등 간접지원), 그리고 예술을 통한 문화복지와 사회공헌을 나누어 지원함으로써 각각 창조역량, 생산적 복지, 지역사회적 참여 세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구조를 새롭게 구분해볼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기획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 지원, 주민문화향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분간하는 지원방식보다, 인적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창작자 외에 기획자(매개, 유통, 홍보촉진)를 위한 지원사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며, 사업지원이 아니라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장학연구 성격의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이 연구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6. 효율적 운영체계

○ 외부네트워크 중 예술위와 시·도, 지역문화재단간 역할분담은 분명하지만 한지협과 문화재단의 연합체 사이의 역할분담에 대해 기정사실화하고, 한지협은 지원정책 및 예술제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역할, 문화재단의 연합체는 상호연구를 통한 문화재단 지원사업과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로 나누어 시너지 효과를 찾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 문화재단이 기초지자체 문화재단들과의 협의체 혹은 간담회를 운영하는 것이 강화되어야 하고, 문화재단의 운영방향,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해 광역권(수도권, 대경권 등) 단위 문화재단간에 상의하는 자율적인 모임이 더욱 촉진되어야 하나, 이것을 한지협 차원에서 모아서 공유하고 지원정책에 반영하는 포럼을 갖는 것이 필수적임.

○ 지역사업 운영체계는 자율과 재량권을 강화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전체모임에서 발표하여 문화재단 스스로 비전과 전략을 결정하여 의견을 듣고 확인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예술위 혹은 한지협 차원에서 보완사항 및 대안에 대한 권고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한지협사무국은 평가와 교육에 있어서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를 잘 활용하기 바람.

○ 성과평가체계가 자리 잡았으나 최종평가가 나기 전인 9월 무렵 다음 해 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위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문화재단 및 지자체 수행내용의 평가 중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도록 도와야 함.

부록

‘지역 2.0’ 워크숍 발제문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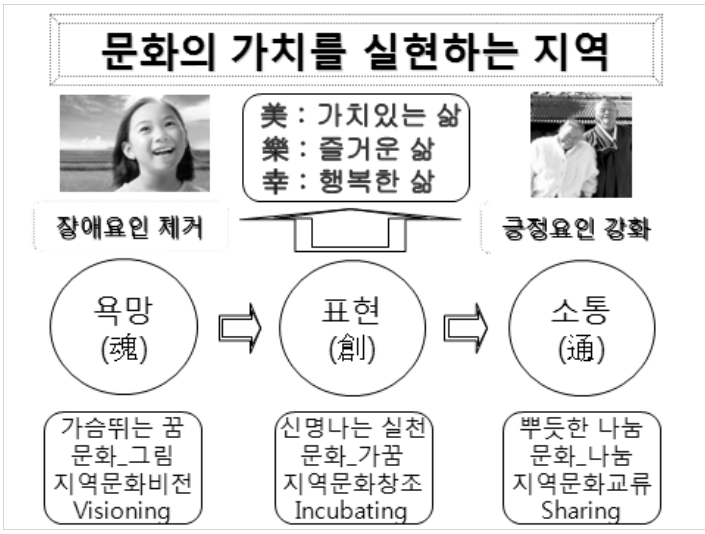
‘지역2.0’ 시대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이무용(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기 위원)

1.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세 가지 관점 제안

1) 지역문화=문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복지역

○ 주민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지역
– 국가경쟁력=지역경쟁력=문화가치(사회, 경제, 정신가치) 경쟁력
○ 욕망의 지역: 가슴 뛰는 꿈, 희망, 비전을 심어주는 혼(魂)의 지역
–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문화비전(문화그림) 만들기
○ 표현의 지역: 신명나는 실천, 계발, 창조를 도와주는 창(創)의 지역
– 주민들이 꿈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문화창조(문화가꿈) 하기
– 핵심요소: 〈경제+시간+건강+정보+사람〉 영역의 제약 극복
○ 소통의 지역: 뿌듯한 나눔, 소통, 교류를 도와주는 통(通)의 지역
–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문화교류(문화나눔) 하기
– 핵심요소: 〈복지+환경+교육+지역+예술〉영역의 사회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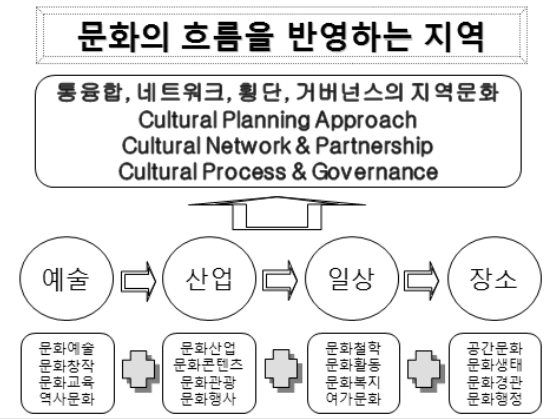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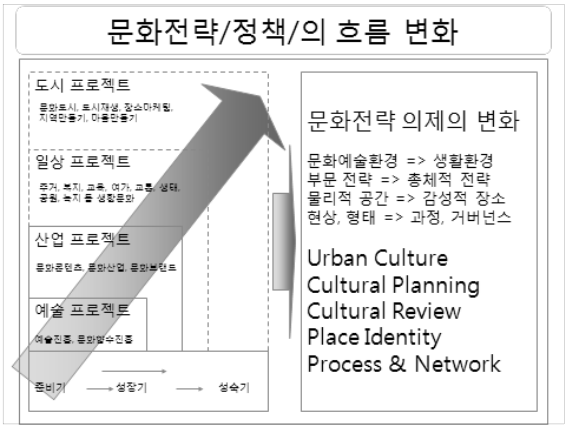
2) 지역문화 =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융합지역

○ 〈예술 ▸ 산업 ▸ 일상 ▸ 장소〉로 확대되는 문화흐름을 반영하는 지역문화
- 문화예술 지역만들기: 지역예술창작진흥과 지역문화예술향유
- 문화산업 지역만들기: 지역문화콘텐츠와 지역문화브랜드가치 창출
- 일상문화 지역만들기: 문화생활환경(주거, 복지, 교육, 여가 ,생태 교통) 조성
- 도시, 지역, 공간, 장소정책: 문화·창조도시, 공간문화· 공간디자인, 도시재생, 장소마케팅·지역브랜딩 전략 도출

○ 〈통융합, 네트워크, 횡단,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지역문화
- 예술, 역사, 산업, 일상, 경관 등 지역정책 전반을 가로지르는 지역문화
-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문화거버넌스와 과정지향의 지역문화

○ 〈지역 2.0 시대〉를 실현하는 지역문화
-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지역문화창조담론 등 지역 고유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대
- 문화정책기관들의 지역이전 시대에 따른 지역의 의미와 가치 재편시대
  세종시(문화부), 광주전남(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부산(영화진흥위, 영상물등급위, 게임물등급위), 원주(한국관광공사), 전주(출판문화진흥원), 진주(저작권위원회) 등





3) 지역문화 =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조지역

○ 문화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하는 지역
- 꿈의 사회(Dream Society): 소프트파워(감성, 즐거움, 재미, 이야기, 여성성)와 하이터치로 혼이 깃든 고부가가치 지역을 만드는 지역컬처노믹스
- 하이브리드(Hybrid): 통융합으로 다문화(관용·다양성·개방성)와 글로컬(지역문화의 세계화) 문화를 만드는 지역하이브리드

- 정체성(Identity): 가치추구적 삶의 질(생태휴머니티), 여가, 건강, 슬로라이프(slow life), 실버, 장소 만들기 시대에 걸 맞는 지역정체성

○ 창조성과 장소성이 결합된 지역문화
- 전통(Original): 역사·전통 요소를 보존·발굴·재창조하는 전통지역
- 감동(Emotional):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지역
- 맞춤(Personal): 주민 개개인의 삶에 밀착된 맞춤지역
- 특화(Special): 차별화된 개성을 지닌 특화지역
- 유연(Flexible): 시대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유연지역
- 고유(Unique):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는 고유지역

○ 산업화(땀) → 민주화(피) → 생명화(눈물)의 시대(출처: 이어령, 2012)
- 공감과 나눔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2. 〈새 정부 지역문화정책〉의 흐름에 걸맞는 문화예술지원 전략 수립

○ 새 정부 지역정책: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

○ 새 정부 문화정책: 지역·계층·연력에 상관없이 다함께 누리는 문화
- 민생·대통합·행복이 핵심 키워드
- 문화복지(예술인복지 포함)와 지역특화문화예술도시 양대 핵심 분야

3. 〈아르코 7대 과제〉에 조응하는 지역문화지원사업 체계 마련

○ 예술나무 심기 캠페인 → 지역문화나무 심기 캠페인

○ 도시예술공원·혁신도시공공미술 → 지역특화공간문화 조성

○ 차세대 예술인력 인큐베이팅 → 차세대 지역 젊은 작가 브랜딩

○ 융복합 예술창작 기반 조성 → 지역융복합 미디어아트 기반 조성

○ 문화바우처 확대 → 지역문화복지, 지역문화인권 사업

○ K-Arts 한류(예술가해외진출 확대) → K-Arts 지역문화 해외교류

○ 1시·도 1문화브랜드 사업 → 지역고유문화브랜드 사업

4. 〈지역협력형사업〉의 재편 방향

○ '지역2.0' 시대의 핵심키워드인 '지역의 개성과 고유성' 강화,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선도해가는 2대 핵심모델사업으로 재편
- 지역협력형 핵심모델 사업(1): 지역문화브랜드 사업
- 지역협력형 핵심모델 사업(2): 지역문화네트워크 사업

○ 이를 위해 한지협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문화협력관 제도를 대폭 강화함
- 한지협은 지역협력형 핵심모델 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브랜딩과 네트워킹 전문인력을 보완하여 지역문화진흥전문기구로 위상을 제고함.
- 지역문화협력관은 '브랜딩협력관'과 '네트워킹협력관'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전국 권역별로 각 2명씩 인원을 확대배치하고, 각 협력관의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매뉴얼화 함.

○ 지역협력형사업 문진기금 배분의 경우, 지역문화브랜드 사업과 지역문화네트워크 사업에 지원하는 기금을 별도로 책정(전체 배분기금의 10%~20%)하여, 지역공모사업으로 추진

5. 〈지역문화혁신도시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아르코의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연계한 '지역문화혁신도시' 혹은 '지역문화중심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인 지역문화혁신 프로젝트를 정립해감.

○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기관과 혁신도시 이전 문화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문화개발원), 아르코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문화재단(전남문화예술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문화산업진흥원) 간의 진정성 있는 협력관계 구축
- 지역문화혁신도시로서 광주전남의 잠재력 인정 → 부단한 대화(지역문화창조포럼 정례화) → 핵심아젠더 설정 →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공동기금 조성 등)

○ 아울러, 광주전남 지역을 사례로 하여 '아르코-광역재단(광주문화기관)-기초재단(전남문화기관)' 간의 역할분담 시범체계 정립. 이를 바탕으로 '중앙-광역-기초' 문화기구 역할분담 체계 정립

6.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 추진

○ 2013년부터 추진예정인 아르코의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함.

○ 중앙(아르코)의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와 연계한 광역도시(광역문화재단 혹은 지역문화전문기관)의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함.
- 광주문화재단과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에서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를 준비중에 있음으로 연계하여 시범사업 추진

7. 〈IFACCA총회 한국 유치〉 사업 전개

○ 2017년 IFACCA(세계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연합) 총회의 한국(광주) 유치를 추진함
- 2014년 칠레 총회에서 2017년 차기 총회 개최지 결정. 2017년은 아시아 국가 개최 유력시
- 새러 가드너(Sara Gardner) IFACCA 사무처장이 최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4기 위원으로 임명되어 교섭에 유리
- '지역 2.0 시대 지역문화'를 대주제로 한 총회 유치 추진

부록

'지역 2.0' FGI 1차

지역문화예술지원중기전략 FGI 1차

1. 일시 및 장소

- 1차 : 2013. 1. 16(수), 14:00~16: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2. 참석자

- 전문가 : 김경욱(문화재단 및 문화재정 전문가, 서울시의회), 신두섭(지역균형발전 전문가, 지방행정연구원), 라도삼(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예술위원회 : 조미숙(예술지원부 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이숙현(간사)
- 연구진 : 이흥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3. 주요 질문

- 예술위원회와 지역사업 운영방안
- 지역의 재량권 문제
- 지역사업제안- 3년간 동일예산규모 지원-평가방식에 관한 의견
- 기금배분 방안
- 성과평가 및 환류제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이전
- 시·도매칭시스템
- 기금수요규모

4. 내용

1) 재량권 문제

고준환(이하 고) : 지역의 재량권 부여 문제가 인수위에서 또 나왔었다.

김경욱(이하 김) : 기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재량권 부여는 점진적 차원에서는 맞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여건이 많이 다르다. 어느 정도는 재단, 지자체 성격에 따라 구분을 해서 전문성에 있는 곳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 앞으로 재단이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자율성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그

림을 그려야 한다.

라도삼(이하 라) : 왜 지역별로 1/n로 나눠서 주나? 할당을 해 놓고 분배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지역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하자. 지역이 창의적 사업계획 제안했을 때 지역문화재단이 기획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고 : 능력 있는 지자체에서 좋은 기획으로 응모해서 서울만 다 채택된다면 균형문제는 어찌되나? 지방 분권은 모든 지방에 골고루 신경 써야 하는 것이다.

라 : 3년째 지방문화 사업심사 중이다. 초창기에는 대학교에서 주로 우수한 사업기획이 나왔지만 3년 정도 지나니까 작은 곳에서 좋은 기획이 많이 나온다. 첫째, 지역과의 협력은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위원회가 전략적 목표로 접근해야 하는 게 맞다. 둘째, 문화재단이 스스로 기획하게 해서 위원회가 방향성 잡아주고 한 2년 지나면 자리 잡힐 것이다. 문화정책이란 것은 광역보다는 점점 작은 재단(기초까지) 가야 한다. 기초가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으면 광역이 컨트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윤성진(이하 윤) :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문제는 매칭 예산인데 매칭을 고려할 때는 파격적으로 주도 하는 게 쉽지 않다. 매칭에서는 100%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가 행정, 정부의 관점에만 집중하게 되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지원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원회는 다른 각도에서 지원해야 한다.

신두섭(이하 신) : 문화분권은 지역에 권한을 넘겨주고 자율성을 확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광역, 기초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을 텐데, 광역단위의 문화재단과 기초단위의 문화재단의 역할문제의 선을 어떻게 그을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분권 차원에서 45개의 재단 나름대로의 현재 3층 구조(중앙-광역-기초)안에서 중첩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비효율적 지출 발생).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역할분담이 먼저다. 광역단위에서는 기획 역할, 인재육성, 기초단위 인프라, 각 부처의 문화관련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김 : 자율 실현은 쉽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현장 집행 상 문제점이 많을 것이고 위원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라 : 지역에서는 수직적 위계차원과 더불어 수평적 네트워크가 더 심각하다. 지역에 내려간 기관은 지역입장에서 보면 혼재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걸 누군가는 조정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도 조정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문화재정은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갈 것이다. 재정계획 세우는 것이 마른수건 짜기와 비슷하다(어려운 상황).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게 조정되어야 지역에서 조정된다.

윤 : 상주단체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작은 공연단체가 우격다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있어 서로 소통이나 도움이 안 되는 경우 있다. 이 사업은 전국지역문화협의회가 아닌 더 큰 단위에서, 전국구 차원에서 조정해야 한다.

라 : 지역에서는 중앙의 움직임에 의문을 갖고 있다. 한지협,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중앙에서 만든 것이다.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종속된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지역재단은 각자 사업이 있으니까 서로 소통 안 될 것이다. 큰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서로 얘기치 않은 상황이 올 것이다. 한지협 세미나는 정보전달의 창고의 역할 밖에 안한다. 이런 방식 말고 권역별로 한다든지, 지역의 자발성을 키울 수 있는 정책기획 방식이 있어야 한다.

이홍재(이하 이) : 그런 부분은 한지협의 운영방향으로 잡아도 가능할 것이다.

신 : 재량권 부여-국고 사업이 대부분이다. 국고보조금이라고 해도 매칭금이므로 보조금 받고, 교부세 받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려운 재정 형편에 엉뚱한 매칭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므로 불만이 많다. 국고보조금은 사업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유사한 사업인데도 이름만 다른 경우 많다. 그런 것들을 원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가 단위에서 재정지출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 보조금사업을 국가 포괄보조금사업 으로 바꿔주면 어떨까? 지자체 나름대로 기획 자율성을 주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은 국가보조금 사업,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업은 국가 포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위원회 사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해서 재정지출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 : 위원회 목적달성 면에서 취약점이 있을 것이다.

신 : 방향성만 주고 책임적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할지 부분은 다시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라 : 문화부 성과 평가의 방식은 잔인하다. 이 사업의 효과성 증명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사실 평가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가 중요하고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데 현재는 자기 살 깎는 느낌이다. 예를 들어 상주단체 사업 했더니 효과가 어땠다 하는 성과평가는 하나도 없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갖고자 하는 이익이 뭔지 정확치 않은 게 문제다.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상태로 성과평가로 가는 것, 사업비, 운영비로 구분하는 게 문제이다. 사업비라면 공모방식으로 가야만 성과관리라는 게 되는 거다. 위원회의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데 평가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위원회는 성과평가가 아닌 과정평가, 관리평가만 하고 있다.

신 : 운영비와 사업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포괄보조금이 채택된다면 아웃풋에 대한 체크가 아닌 아웃컴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한다. 보조금만 주고 알아서 해라 하면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가긴 힘들 것이다. 단계적으로 예산 범위를 짜고, 대상 지역 선정도 시범적으로 시작하면. 문화부 전체 예산이 아닌 위원회 안에서 시범케이스로 하는 게 맞다.

고 : 지역의 자율성이 대세, 방안이 포괄보조금 사업이 좋은 제안 같다. 자율성 주어지는 만큼 책임성(성과관리)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 : 그렇게 되면 협약을 받아야 하므로 계획서 자체가 엄밀한 심사가 된다. 사업이 5년 되어 가는데 어느 정도 정착될 시점이다.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포괄보조금 도입된다면 나중에 평가, 체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신 정성적, 정량적 부분 정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신 : 5년 정도 되었으면 정착단계라고 생각된다. 매뉴얼화이 되어 있으면 포괄보조금 사업은 덧붙여지는 것이지만, 매뉴얼화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더 정치화된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위원회 목표에 대해 신호를 주는 것으로 규율을 없애고 길을 만들어 주자. 목표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목표관리에서 필요한 매뉴얼과 지침).

라 : 지침-가이드라인, 매뉴얼-특정한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 모델-규범 제시이다. 즉, 지침-공통지표이고 매뉴얼-목적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침은 세부적이고 그 위의 매뉴얼은 목표를 주는 것이다. 매뉴얼은 여러 가지 목표체계, 추진체계에서 필요한 조합들을 통제하는 변수이다.

이 : 사업관리방식을 포함한 목표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위원회가 무엇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원회 차원에서 목표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한다면 지역에서 공감대를 갖고 받아들일 것이다. 단, 세부적 규제는 자율성 파괴할 수 있다.

김 : 매뉴얼은 재량권(자율권)과 관련이 없다. 일하는 방식이지 성과평가가 아니다. 따라하면 되는 것이 매뉴얼이다.
라 : 공통지표는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 지표-사업의 협약사항이다. 아웃컴이 중요하다. 위원회가 공통지표와 사업지표를 다 주려고 하는 게 문제다.
신 : 밑그림이 공감되어야 한다. 매뉴얼 자체는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라 : 기관평가는 리더십, 경영을 말하고 사업평가는 기관들이 알아서하는 것이다. 기관평가는 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포괄적 기금을 주면 매뉴얼로서 공통지표로 가는 것이다.

2) 기금 배분 방안

김 : 배분기준이 이전에는 달랐다.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된 것이 지금 수치이며 어느 정도 조율작업 거친 것이다. 서울의 매칭 비율이 1:2 이다. 서울시의 입장은 역차별의 이야기 있고 투자대비 효과 가장 높지 않느냐? 는 논리 제시가 가능하다. 1:1 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 기금 외에 도서관개관연장, 문화유산보존 사업 등 다른 사업들은 거의 1:1 이다.
라 : 서울시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문제다. 서울시에서 수많은 예술가 육성사업을 해야 한다. 서울 클러스터에서 예술가 육성해서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모사업은 조금 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예술가의 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고 : 지역특화, 불균형 해소가 중심이다. 그런데 포괄적 보조금제도를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17시·도 중 5개 시·도가 문화재단이 없다(총 12개 재단). 격차가 분명히 있다. 포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격차가 벌어지면 국가의 지원정책과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
라 : 공모사업 현재처럼 하되 점차 축소하고 개괄사업(경쟁형)을 늘려야 한다. 일반 공모사업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
윤 : 현재 지역 역량 불균형 상태이다. 방향성만큼은 지정해 줘야하지 않나.
라 : 지역이 생각보다 빨리 쫓아온다. 공모사업은 절대 발전이 없다. 줄 세우기로 하면 안 된다. 경쟁에 광역과 기초까지 포함하자. 그러면 지역의 문화재단을 짓는 효과도 발생한다. 지원사업에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정치적, 지역적 배려). 3~4년 지나면 정책의 아이템들이 높아질 것을 보장한다. 문화부가 아닌 예술위라 가능한 것이다. 공모사업은 위원회가 가져갔으면 한다(전국을 다 해야 한다). 지역에서 문제는 심사위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이다(타 지역의 심사위원 터부시).
신 : 서울시 12.5% 따로 떼고 배분되는 배경은 뭔지 궁금하다. 어떤 근거로 비율이 정해졌나? 일단 가장 문제로 재정의존도(재정자립도)는 실제적으로 요즘은 거의 안 쓴다. 재정자주도를 많이 쓴다. 재정 자주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서울, 경기 재정편차가 크므로 7:3 은 무리이다. 구간 세분화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초단위까지 그룹핑을 적용해야 한다. 성과평가지표(2012~2013)에 공연예술인수 등은 빠졌다. 단체육성지원사업인데 그러면 단체마다 소속되어있는 예술인 수가 다른데, 공연예술단체 수의 비율 30%는 상당히 크다. 조정이 필요하다.

3) 예술위원회의 나주 이전

라 : 광역-위원회 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김 : 서울 거점에 남겨놔야 한다.
이 : 딜레마다. 거버넌스의 어려움, 요구사항 늘어나는데 지원금은 없다.
신 : 생활문화공동체-요즘은 더 커진 문화사업도 바운더리 정할 때다.

4) 성과평가

윤 : 3년간 동일 시스템으로 평가를 컨설팅 시행하다보니 시계열 평가-성과를 정리해 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5년간 지역형성과를 집대성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해오니까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 것이다. 평가의 목적이나 기능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 : 평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평가라고 하고 있다. 지역협력형사업평가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고, 이 : 평가방식이 의미가 있으나 아웃컴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이 쉽지 않다.
라 : 아니다. 생각보다 쉽다. 사업시작 전과 종료시점을 평가하면 된다. 홍보만 예산 잡고, 평가, 사후계획은 예산을 안 잡는 게 문제다. 사업종료지점에 설문지 하나 돌리는 식은 얻는 게 없다. 사업 끝나고 백서를 안 만드는 것도 문제다. 문화사업들은 접근방식이 틀린 사업이 많다. 우리 평가 시스템은 처음부터 사업관리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문화사업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는 약하다. 중요한 점은 문화재정은 위기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문화예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한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예 미국문화예술교육의 예를 들어 아이들의 인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더 이상 제공할 필요 없다.). 위원회의 한지협 성과평가제도가 있나? 한지협은 뭘로 평가를 받나? 성과평가는 사업주관 책임자가 평가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목표제도를 평가하고 있는가? 한지협의 성과평가가 잘못되어있다면 밑에 단계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가 없다. 성과지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의 4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 문화사업은 투입, 과정지표만 측정한다. 산출, 성과지표까지 측정해야 한다.
신 : 매뉴얼이 중요하다. 위원회-협의외-지자체가 함께 밑그림을 공유해야 한다.

부록

‘지역 2.0’ FGI 2차

지역문화예술지원중기전략 FGI 2차

1. 일시 및 장소

- 2차 : 2013. 1. 17(목), 15:00~17: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 2실)

2. 참석자

- 전문가 : 이정덕(전북문화재단 설립준비위, 전북대 교수), 신동호(코뮤니타스 대표, (사)인문사회연구소 소장), 임학순(가톨릭대학교 문화컨텐츠학과 교수), 권순석(춘천 바라 대표)
- 위원회 : 조미숙(예술지원부 차장)
- 한지협 : 고준환(사무국장)
- 연구진 : 이흥재(공동연구원), 윤성진(공동연구원), 박연진(보조연구원)

3. 주요 질문

- 1차와 동일함.

4. 내용

1) 재량권 문제

이정덕(이하 이a) : 전북에는 문화재단이 없고 공무원의 자체적인 기획력이 없다. 위원회가 큰 틀(가이드)을 결정하면 자체적으로 유지된다. 지역에서 사업정신에 맞게 설정, 평가, 활용하는 시스템이 괜찮은 것으로 생각된다.

권순석(이하 권) : 100점은 안되더라도 재량은 넘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이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넘겨주겠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본다. 지역에서의 사용계획이나 지역적 원칙들에 대해 향유안을 갖고 보안책으로 갖고 가야 한다.

신동호(이하 신) : 정확한 지침과 차등된 기준을 가지고 지역에게 이관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잘하는 곳은 최소단계의 지침을 제시하고 아직 부족한 곳은 위원회가 가이드를 강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 재량권의 내용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어떤 부분인가? 사업예산인지? 독자적으로 완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인지? 시·도별 재단 담당자 지침, 기준, 원칙이 명확했으면 한다. 심사위원 구성 및 어떤 부분에서 지원하면 안 되는지 배제의 원칙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고준환(이하 고) : 기획사업의 비중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a : 그 부분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재량권이 있어야 한다.
고 : 경쟁을 유도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신 : 기준과 지침이 적용된다고 하면 일정 범위를 주는 게 맞다. 자체 기획역량에 차이가 있는데 다 풀어버리게 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는 고민스럽긴 하다. 기준과 지침의 문제라고 생각되며 기준과 재량권의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이a : 평가에 의해 관리역량이 있는 지역과 아닌 지역 그룹핑 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하자.
임학순(이하 임) : 지역협력형사업이 정착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경쟁보다는 가급적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고, 특성화 차별화로 유도하는 것이 경쟁을 해서 가는 것은 신규 사업초기 모델을 세팅할 때 쓰는 방법이다. 자치단체에서 쓰는 사업, 국고에서 내려가는 사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되어서 지역문화를 조성할지가 중요하다. 위원회에서는 과감히 분권모델로 가되,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워크숍 등)을 만들어야한다. 중간 소통 매개체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역이 자발적인 걸 추구하는 것 같다. 지역에서는 국제교류 쪽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 위원회가 선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와 연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재단이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지가 과제다. 돈에 대한 지원은 기본으로 가므로 컨설팅, 혁신역량, 지원으로 가야 한다. 사업형 틀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 안에서 지원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도보다는 서포트 개념이 맞다.
이a : 자율권을 나눠본다면 관리역량에 따라 등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 대해 피드백을 관리규제 한다고 한다면 어떤 정도 지표만 갖고 관리해도 될 건지? 매뉴얼이 필요한 것인지? 위원회에서는 전면적 일시적 동일한 분권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성진(이하 윤) : 관리역량 부분은 편차가 아직은 재단이 있는 곳, 없는 곳, 재단이 3년차 되는 곳, 신규재단, 광역도재단, 광역시재단 등 편차가 너무 심해서 16개 시·도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 재량권도 편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걸 오히려 지역에서 원하고 있다.
신 : 기술적으로 평가라는 용어보다는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용어를 써서 기준과 지침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임 : 지역에 권한을 줄까 안 줄까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접근할 건지 확실히 해야 한다. 인력 부분이 별로 없고 자꾸 바뀐다. 그런 부분(인력)을 지원해 주어 역량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 평가에서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서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윤 : 육성의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궁극적 방향성은 지역재단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a :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적용은 위원회가 고민해야. 재량권의 내용까지 할 수는 없다.

2) 기금배분방안과 기준

고 : 서울의 역차별 이야기가 많다.
이a : 서울의 과도한 요구다.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예술가들이 자체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을 고

려하지 않고 예산을 배분할 수 없다.

신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빼놓고 생각하자. 지역의 인프라가 워낙 달라서 세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 완전히 다르다. 인구수 기준은 장기적으로 줄여가야 한다. 그것보다는 문화지표나 오히려 문화기반시설이거나, 예술인 수, 다른 지표들을 끌어들이는 게 낫지 않나? 인프라가 약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주는 게 맞다. 예술가와 예술단체 등.

임 : (성과평가 기준에) 인구수 기준은 줄이는 게 맞다.

윤 : 위원회 예산집행의 목표가 지역균형적 발전인가? 예술적 역량의 육성 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신 : 위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가 예술인 중심의 정책으로 가고 나머지 지역재단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윤 : 위원회의 입장이 고르게 분배하고 더 열악한 인프라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수도권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a : 수월성 사업은 수도권 쪽에서 지역 쪽은 비수도권 쪽으로 가야 한다.

윤 : 예산은 고르게 분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서울에서 개별예술인이 접하는 시장은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보통 이하의 단체들은 계속 불이익을 받으므로 문제제기 가능하다고 본다.

이a : 예술인들에게 기회성은 서울이 훨씬 많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볼 때,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윤 : 서울 예술인들은 전업예술인은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야 먹고 산다. 오히려 지방예술인들은 지원금으로 살고 있지 않나?

이a : 지원금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보충되는 것은 아니다.

윤 : 서울예술인들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

권 : 전체적으로 일정기준을 넘어서게 하는 게 문제이고 서울과 지역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서울 예술인의 현실을 일정부분 인정한다.

이a :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로 생존이 불가능하다.

임 : 예술가들의 지원은 균등배분 내지는 매칭 비율대로 가자.

이a : 결론은 배분기준이 객관적 기준 없이 상황적인 기준에 따라 표류하는 것이 문제다.

윤 : 합의적 개선안이 필요하다.

신 : 예전에는 인구수 기준이 굉장히 컸는데 많이 줄인 것이다. 예술인수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인구수 계산 방법 중 제곱권 비례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과대 과소가 확 준다.

임 : 획기적인 사업계획일 때는 공모형(경쟁형)으로 하는 게 맞다.

윤 : 광역참여 대상이 광역 시·도로 나누면? 공모의 경우에도 재량권의 문제처럼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거의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역량을 늘리겠다고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 같이 가야 한다.

이a : 예산 규모가 인구에 따라서 정해지기에 지역에서 좋은 인력을 스카우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평균화되기 힘들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있다.

신 : (지역문화협력관제) 필요한 걸 잘 모르겠다. 지역에서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분이 가서 많은 일을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신설재단에 가서 전반적인 사무 행정을 인큐베이팅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또한 한지협의 기능을 잘 모르겠다. 한지협이 강화되고 전문인력 풀이 운영되는 것이 옳다.
윤 : 협력관 제도의 한계가 여러 가지 있다. 위원회가 초창기부터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지역과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러나 위원회가 지역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협력관이 지역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권 : 3명의 협력관이 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 컨설팅, 모니터링 하는 기능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왜 꼭 협력관 제도이어야 하는지?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 협력관이 실기능을 하게 보강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는 문제가 있다.
신 : 협력관 풀이 있고 요청하면 가는 그런 구조도 좋겠다.
임 :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능의 프로젝트도 중요하다(지역협력 하는 프로젝트를 중앙에서 관리). 내부인력이 굳이 하는 것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홍재(이하 이b) : 위원회가 나주 이전하면서 지역문화협력관수와 역량을 강화해서 지역의 대상수를 늘리는 것은 필요하나,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부분이 섬세하게 요구된다. 협력관 풀을 만들어 기능별 컨설팅(프랑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 사업에 따라서 서울에 국제사업 등을 위해 서울에 두는 것을 제안한다. 한지협 기능을 강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

3) 시·도 매칭부분

이a : 매칭은 하긴 해야 한다. 그것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압력이 되기도 한다.
고 : 어떤 시·도는 매칭을 강화해달라는 곳도 있다.
이b : 매칭 때문에 문화예술이 역진화 된다. 매칭의 비율을 세분화 시켜서 사업별로, 결국은 사업논리로 가는 거 같다.
윤 : 경쟁을 하는 공모사업도 필요하다.
이a : 지방재정에서는 엄청 부담이 된다.
이b : 매칭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건이 무척 많다. 문화복지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임 : 매칭이 되려면 사업 속도가 엄청 빨라야 한다. 따라서 지역에서 불만이 있다.

4) 기타문제(평가, 환류)

이a : 평가해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으나 평가할 때와 안했을 때 확실한 차이가 난다. 20%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1년 단위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연속성이나 효과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길어졌으면 한다.
윤 : 환류가 되었을 때 반응이 확 다르다. 환류는 정확하게 필요하다.
임 : 컨설팅 및 평가 기능이 중요해진다(위원회). 평가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평가할 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식과 예를 들어 문화재단 별 사전에 평가지표에 대한 협의를 해

서 일정기간 동안에 잘 했는지에 대해 보는 방법 있다. 사전에 협약이 미리 세팅 되어야 한다.

이b : 평가제도에 대한 피로감이 대단하다. 평가제도의 졸업제도가 필요하다.

임 : 초기 3년 관리평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영향평가가 가야 한다. 영향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효과가 다르다. 대상 모집부터 고민하고 짜기 때문인데 그런 곳이 훨씬 성과가 좋다.

윤 : 아직까지는 관리역량의 평가이다. 지역편차가 심해서 관리평가와 역량평가를 넘어서야 되는데 지역에서는 아직 버겁다. 상위 30%는 평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간다.

임 : 지역은 중앙이 자신들을 객체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는 불만이 있다.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 창의적 혁신자 역할이 진짜 예술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 사업관리는 과감하게 지역으로 넘기고, 국제적인 것을 이슈별로 다른 관점에서 보려는 기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위원회는 국제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발행일 2013년 4월 15일
발행처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디자인 · 인쇄 ㈜인디엔피 www.indnp.com



152-83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120(구로동26-1)
전 화 02-760-4842
팩 스 02-760-4589
홈페이지 www.karaa.kr

※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역 2.0 연구

지역 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Arts Agencies